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 총서 11-01-01(3)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III): 공정사회지표

20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 총서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Ⅲ): 공정사회지표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11-01-01(3)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Ⅲ) – 공정사회지표

2. 참여연구진

성명	소속 및 직위
장 용 석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영 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 명 호 (연구책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 완 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 상 범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 연구 보조원

성명	소속 및 직위
김 보 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신 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조 희 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목 차

제1장 서론	1
1. 공정사회의 개념	1
2. 공정사회지표의 필요성	2
제2장 공정사회지표의 구성	5
1. 기준의 연구 검토	5
2. 공정사회지표의 구성 체계	8
3. 데이터 설명	15
제3장 글로벌 트렌드 분석	22
1. 영역별 분석	22
2. 변동계수 및 분포 분석	24
3. 국가군별 분석	27
제4장 국가별 특성 분석	30
1. 절차적 공정성(제도) 부문	30
2. 결과적 공정성(상태) 부문	34
제5장 공정사회 국민의식: OECD 국가 비교 분석	40
1. 공정사회의 의식 분야	40
2. 정치공정성 분석	53
3. 행정공정성 분석	61
4. 경제공정성 분석	71
5. 사회공정성 분석	80
6. 소결	92
제6장 공정사회의 제도/상태와 의식 비교 분석	97
1. 정치제도와 정치공정성 비교	98
2. 사법제도와 행정공정성 비교	100

3. 관료제도와 행정공정성 비교	103
4. 기회균등 제도와 경제공정성 비교	105
5. 자유보장 상태와 사회공정성 비교	110
6. 기회균등 제도와 사회공정성 비교	112
7. 소결	117
 제7장 한국의 공정사회 위상	120
1. 한국의 공정사회 제도 및 상태	120
2. 한국의 공정사회 의식	124
3. 소결	144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48
 참고문헌	154
 부표	157
[부록 A] 세계가치관조사 설문 내용	157
[부록 B] 공정사회 의식 국제 비교 분석 세부내용	161
[부록 C] 1인당 GDP 대비 인식 비교 분석 세부내용	209
[부록 D] 공정사회의 제도/상태와 의식 비교 분석 세부내용	243
[부록 E] 공정사회 의식 총 데이터	259

〈표 차례〉

<표 2-1> 공정사회지표의 구성 체계	9
<표 2-2> 지표 세부내용별 데이터 출처	10
<표 3-1> 전체평균 및 변화율 추이	23
<표 3-2> OECD회원국 중 G20와 non-G20의 지수별 성장속도	28
<표 3-3> OECD회원국 중 G20와 non-G20의 지수별 격차 변화	29
<표 4-1> 국가별 제도 수준 및 변화율	30
<표 4-2> 국가별 법질서 수준 및 변화율	32
<표 4-3> 국가별 기회균등 수준 및 변화율	33
<표 4-4> 국가별 상태 수준 및 변화율	34
<표 4-5> 국가별 자유보장 수준 및 변화율	36
<표 4-6> 국가별 형평 수준 및 변화율	37
<표 4-7> 국가별 사회안전망 수준 및 변화율	38
<표 5-1> 공정사회의 의식 분야 및 구성요소	52
<표 5-2> 정치공정성 중 정당에 대한 신뢰 국제 비교	55
<표 5-3> 정치공정성 중 의회에 대한 신뢰 국제 비교	56
<표 5-4> 세계 가치관 조사의 정당 및 의회에 대한 질문 내용 및 척도	56
<표 5-5> 세계 가치관 조사의 반부패에 대한 질문 내용 및 척도	58
<표 5-6> 반부패에 대한 인식 OECD 국제 비교(1994~1999wave)	59
<표 5-7> 정치공정성 OECD 국제 비교	61
<표 5-8>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정부 역할 1994~1999년/ 2005~2007년	63
<표 5-9>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67
<표 5-10> 정부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68
<표 5-11>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70
<표 5-12> 행정공정성 OECD 국제 비교	71
<표 5-13> 탈세에 대한 의식 변화(1994~1999년/2005~2007년)	72
<표 5-14>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 국제비교	75
<표 5-15>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OECD 국제 비교	77
<표 5-16> 경제공정성 OECD 국제 비교	79
<표 5-17> 성 격차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81
<표 5-18>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성별 적합성에 대한 인식 비교	82

<표 5-19> 세계 가치관 조사의 질문 내용 및 척도	83
<표 5-20> 언론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 비교	84
<표 5-21>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87
<표 5-22>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 비교	89
<표 5-23> 일반인 신뢰와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 비교(2005-2007)	90
<표 5-24> 사회공정성 OECD 국제 비교	92
<표 5-25>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국제비교	95
<표 6-1> 부패인식지수(CPI)와 반부패에 대한 인식 비교	99
<표 6-2> 사법시스템 제도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비교	101
<표 6-3>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비교	104
<표 6-4>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비교	107
<표 6-5>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비교	109
<표 6-6>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1
<표 6-7>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3
<표 6-8> 남녀 성 격차와 성별 정치리더 적합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5
<표 7-1> 한국의 제도 및 상태영역 지수 연평균 변화율	121
<표 7-2> 공정사회 제도 및 상태 영역 한국의 위상	124
<표 7-3>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5대 추진방향별 세부 실천과제	127
<표 7-4> 정부 주관부처별 추진 정책	129
<표 7-5> 한국의 공정 의식 수준 및 변화율	131
<표 7-6> 제도 및 상태와 의식의 비교	139
<표 7-7> 한국의 위상(종합)	141
<표 7-8> 한국의 위상(영역별)	143

<그림 차례>

<그림 3-1> 글로벌 평균의 추이	23
<그림 3-2> 변동계수 추이	25
<그림 3-3> 1인당 GDP의 분포	25
<그림 3-4> 제도영역 지수의 분포	26
<그림 3-5> 상태영역 지수의 분포	26
<그림 3-6> OECD회원국 중 G20와 non-G20 비교	28
<그림 5-1> 정당에 대한 신뢰와 의회에 대한 신뢰 비교	57
<그림 5-2> 1인당 GDP 대비 분석 : 반부패	60
<그림 5-3> OECD 국가별 거주 외국인 수 증가율	64
<그림 5-4> OECD 회원국 외국인 노동자 현황	64
<그림 5-5> 1인당 GDP 대비 분석 :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인식	65
<그림 5-6> 1인당 GDP 대비 분석 : 탈세에 대한 인식	74
<그림 5-7> 1인당 GDP 대비 분석 :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76
<그림 5-8> 1인당 GDP 대비 분석 :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78
<그림 5-9> 1인당 GDP 대비 언론 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 비교	85
<그림 5-10> 1인당 GDP 대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88
<그림 5-11> 일반인 신뢰와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 비교(2005-2007)	91
<그림 6-1> 부패인식지수(CPI)와 반부패에 대한 인식 비교	100
<그림 6-2> 사법시스템 수준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비교	102
<그림 6-3>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비교	105
<그림 6-4>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비교	108
<그림 6-5>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비교	110
<그림 6-6>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2
<그림 6-7>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6
<그림 6-8> 남녀 성 격차와 성별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6
<그림 7-1> 제도 및 상태영역 지수와 1인당 GDP 지수 변화 추세 비교	122
<그림 7-2>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5대 추진방향 및 8대 중점과제	126

<부표 차례>

<부표 B-1> 정당에 대한 신뢰(1990년대와 2000년대)	162
<부표 B-2> 정당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163
<부표 B-3> 정당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163
<부표 B-4> 정당에 대한 신뢰 1994~1999년/2005~2007년	164
<부표 B-5> OECD국가 데이터	164
<부표 B-6> 의회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166
<부표 B-7> 의회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167
<부표 B-8> 의회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167
<부표 B-9> 의회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168
<부표 B-10> OECD국가 데이터	168
<부표 B-11> 반부패 인식 정도 1994~1999년 wave	169
<부표 B-12> 정치부패 정도 1994~1999 wave	170
<부표 B-13> OECD국가 데이터	170
<부표 B-14>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2005~2007년	171
<부표 B-15>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wave	172
<부표 B-16>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172
<부표 B-17>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2005~2007년	173
<부표 B-18> OECD국가 데이터	173
<부표 B-19>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174
<부표 B-20>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175
<부표 B-21>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175
<부표 B-22>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176
<부표 B-23> OECD국가 데이터	176
<부표 B-24> 정부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177
<부표 B-25> 정부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178
<부표 B-26> 정부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178
<부표 B-27> 정부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179
<부표 B-28> OECD국가 데이터	179
<부표 B-29>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180
<부표 B-30>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181
<부표 B-31>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181
<부표 B-32>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182
<부표 B-33> OECD국가 데이터	182

<부표 B-34> 세금형평 : 탈세에 대한 의식 1994~1999년/2005~2007년	183
<부표 B-35> 탈세에 대한 인식 1994~1999 wave	184
<부표 B-36> 탈세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184
<부표 B-37> 세금형평 : 탈세에 대한 의식 1994~1999년/2005~2007년	185
<부표 B-38> OECD국가 데이터	185
<부표 B-39>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186
<부표 B-40>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1994~1999 wave	187
<부표 B-41>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187
<부표 B-42>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188
<부표 B-43> OECD국가 데이터	188
<부표 B-44>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1994~1999년/2005~2007년	189
<부표 B-45>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wave	190
<부표 B-46>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190
<부표 B-47>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1994~1999년/2005~2007년	191
<부표 B-48> OECD국가 데이터	191
<부표 B-49>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1994~1999년/2005~2007년	192
<부표 B-50> 성 격차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1994~1999년 wave	193
<부표 B-51> 성 격차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2005~2007년 wave	193
<부표 B-52> 성 격차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1994~1999년/2005~2007년	194
<부표 B-53> OECD국가 데이터	194
<부표 B-54>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적합성 1994~1999년/ 2005~2007년	195
<부표 B-55>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적합성 1994~1999년 wave	196
<부표 B-56>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적합성 2005~2007년 wave	196
<부표 B-57>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적합성 1994~1999년/ 2005~2007년	197
<부표 B-58> OECD국가 데이터	197
<부표 B-59>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2005~2007년	198
<부표 B-60>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wave	199
<부표 B-61>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199
<부표 B-62>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2005~2007년	200
<부표 B-63> OECD국가 데이터	200
<부표 B-64> 인권보호 :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99~2004년/ 2005~2007년	201
<부표 B-65> 인권에 대한 인식 1999~2004 Wave	202
<부표 B-66> 인권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202
<부표 B-67> 인권보호 :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99~2004년/ 2005~2007년	203
<부표 B-68> OECD국가 데이터	203

<부표 B-69> 일반인에 대한 신뢰 1994~1999년/2005~2007년	204
<부표 B-70> 일반인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205
<부표 B-71> 일반인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205
<부표 B-72> 일반인에 대한 신뢰 1994~1999년/2005~2007년	206
<부표 B-73> OECD국가 데이터	206
<부표 B-74> 사회 구성원 신뢰 : 외국인들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207
<부표 B-75> 외국인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208
<부표 B-76> OECD국가 데이터	208
<부표 C-1> 1인당 GDP 대비 분석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209
<부표 C-2> 1인당 GDP 대비 분석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210
<부표 C-3>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치 리더의 적합성	211
<부표 C-4>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치 리더의 적합성	212
<부표 C-5> 1인당 GDP 대비 분석 :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213
<부표 C-6> 1인당 GDP 대비 분석 :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214
<부표 C-7>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인권에 대한 인식	215
<부표 C-8>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인권에 대한 인식	216
<부표 C-9>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일반인에 대한 신뢰	217
<부표 C-10>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일반인에 대한 신뢰	218
<부표 C-11> 1인당 GDP 대비 분석 : 외국인에 대한 신뢰	219
<부표 C-12> 1인당 GDP 대비 분석 : 외국인에 대한 신뢰	220
<부표 C-13> 1인당 GDP 대비 분석 : 외국인 노동자 규제	221
<부표 C-14> 1인당 GDP 대비 분석 : 외국인 노동자 규제	222
<부표 C-15> 1인당 GDP 대비 분석 :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223
<부표 C-16> 1인당 GDP 대비 분석 :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224
<부표 C-17> 1인당 GDP 대비 분석: 정부에 대한 신뢰	225
<부표 C-18> 1인당 GDP 대비 분석: 정부에 대한 신뢰	226
<부표 C-19> 1인당 GDP 대비 분석: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227
<부표 C-20> 1인당 GDP 대비 분석: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228
<부표 C-21> 1인당 GDP 대비 분석 : 탈세에 대한 인식	229
<부표 C-22> 1인당 GDP 대비 분석 : 탈세에 대한 인식	230
<부표 C-23> 1인당 GDP 대비 분석 :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231
<부표 C-24> 1인당 GDP 대비 분석 :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232
<부표 C-25> 1인당 GDP 대비 분석 : 성별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233
<부표 C-26> 1인당 GDP 대비 분석 : 성별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234

<부표 C-27> 1인당 GDP 대비 분석 :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235
<부표 C-28> 1인당 GDP 대비 분석 :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236
<부표 C-29>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당에 대한 신뢰	237
<부표 C-30>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당에 대한 신뢰	238
<부표 C-31>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의회에 대한 신뢰	239
<부표 C-32>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의회에 대한 신뢰	240
<부표 C-33>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치부패 인식 정도	241
<부표 C-34>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치부패 인식 정도	242
<부표 D-1> 정치시스템 부패와 정치부패 정도 인식 비교	243
<부표 D-2> 정치시스템 부패와 정치부패 정도 인식 비교	244
<부표 D-3> 사법시스템 수준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비교	245
<부표 D-4> 사법시스템 수준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비교	246
<부표 D-5>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비교	247
<부표 D-6>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비교	248
<부표 D-7>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비교	249
<부표 D-8>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비교	250
<부표 D-9>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비교	251
<부표 D-10>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비교	252
<부표 D-11>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253
<부표 D-12>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254
<부표 D-13>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255
<부표 D-14>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256
<부표 D-15> 남녀 성 격차와 성별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비교	257
<부표 D-16> 남녀 성 격차와 성별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비교	258
<부표 E-1> 공정사회 의식 총계(2005~2007)	259
<부표 E-2> 공정사회 의식 총계(1994~1999)	259
<부표 E-3> 공정사회 의식 분야별 총계(2005~2007)	260
<부표 E-4> 공정사회 의식 분야별 총계(1994~1999)	260
<부표 E-5> 정치공정성 OECD 국가 간 비교	261
<부표 E-6> 행정공정성 OECD 국가 간 비교	262
<부표 E-7> 경제공정성 OECD 국가 간 비교	263
<부표 E-8> 사회공정성 OECD 국가 간 비교	264
<부표 E-9> 공정사회 의식 총합 2005~2007 wave	265

<부표 E-10> 공정사회 의식 총합 2005~2007 wave(변환)	267
<부표 E-11> 공정사회 의식 총합 1994~1999 wave	269
<부표 E-12> 공정사회 의식 총합 1994~1999 wave(변환)	271

제1장 서론

1. 공정사회의 개념

공정사회의 핵심 개념인 ‘공정’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치우침이 없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 바르고 옳아서 사사로움이 없는 것 등의 의미가 포함된다(김안제, 2011). 공정은 많은 경우 정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공정이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하고 사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곧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보다는 포괄하는 범위가 협소하지만, 상황에 따라 공정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개념들로 정당성, 합리성, 평등, 형평, 인간다움 등을 들 수 있다(좌승희, 2011).

따라서 공정사회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써 구성원 모두가 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의미한다(김안제, 2011; 김주성, 2010). 다시 말하면, 공정사회는 불합리와 불공정을 극복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기회가 균등히 보장됨으로써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차별과 불신을 없애는 사회를 의미한다(공감코리아 공정사회 홈페이지).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로 이 개념을 제시하면서 공정사회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Michael Sandel의 저서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2009)’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반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로부터

공정사회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장동진, 2011).

2. 공정사회지표의 필요성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각종 부정부패, 비리, 탈법, 탈세 등의 상황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불신이 양산되었다. 그 예로,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나타난 대기업과 국가 간의 유착 관계를 들 수 있다. 또한 경제 활동의 각 부분에서 소수의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김주성, 2010).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불신 및 이로 인한 갈등이 침예하게 대립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도 확립이나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되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세계화,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불공정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확대, 근로 빈곤층의 증가, 교육 기회의 불균등,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의 감소,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 양극화 등의 문제가 갈수록 고착화되어 가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등장했다(노세극, 2009). 이러한 상황들은 가치 갈등, 소통 갈등, 이해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면서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적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김세원 외,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 이는 법·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행정, 정치 등 전 부문에 걸친 불공정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최고의 속도로 경제 발전의 신화를 기록한 한국은 여타 개도국과 후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선진국의 위치에 올랐다. 2010년에 조사된 한반도 선진화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008년 33위, 2009년 32위, 2010년 31위로 선진화 순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부문 순위의 상승이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부문의 순위

는 2010년 19위를 차지하였으나 정치 부문은 32위, 그 중에서도 법의 공정성은 27위, 정치적 안정성은 32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회 부문 역시 전체 평균 27위, 세부적으로 사회안전망은 35위, 부패인지지수는 28위로 나타나 사회 부문의 선진화 수준도 낮음을 알 수 있다(김주성, 2010). 이러한 수치들은 경제·사회·정치 각 부문의 선진화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부문의 선진화를 구성하는 공정성의 내용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선진국을 추격하고 따라잡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창의적인 발전 방향을 확립함으로써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정치 각 부문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이를 구성하는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거나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등의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행정체제 및 사회 전 분야에 대한 불신이 축적되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공정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율, 의욕 및 창의력을 제고시켜 경제·사회 발전에도 일조하게 된다. 또한 공정사회의 구현을 통해 선진 일류 국가의 사회적 기초 및 윤리적 기초를 다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김세원 외, 2011)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감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더욱이 공정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함으로써 소득 격차로부터 야기되는 상대적 빈곤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장용석 외, 2010). 이와 같이 공정사회를 실현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이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적절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실상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공정사회를 정치철학적 측면, 시장경제적 측면, 복지 측면, 교육 측면

등 일부에 치우쳐 살펴보았고 이 경우에도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이의 현황이나 공정사회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강원택, 2011; 김병관, 2011; 임혁백, 2011; 장동진, 2011; 좌승희, 2011; 최정표, 2011).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공정사회를 구성하는 요건들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개별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한 국가의 공정한 정도를 나타내는 총괄지표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불공정을 비판하는 것은 쉬우나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공정사회가 될 수 있느냐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행해질 공정사회 연구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공정사회의 총괄지표를 구성함으로써 이에 관한 전 세계적 추이 및 세계 각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에 앞서 본 연구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개별 지표로 구성하고 이의 개념 및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사회지표체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공정사회의 총괄지표를 통한 국가 간 비교뿐만 아니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를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공정사회 의식 수준을 도출하고 향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공정사회의 제도 및 상태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사이의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사회의 제도 대비 의식, 상태 대비 의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공정사회의 국가 간 비교분석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제도)과 결과적 공정성(상태)을 종합하는 총괄지표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에 더해, 정치·행정·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 의식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¹⁾

1)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010년도에 진행한 『한국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II) 경제사회발전 트렌드 분석: 지표연구』의 연속과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3장, 4장 내용 중 일부는 2010년도 보고서와 구성이 유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사회지표의 구성

1. 기존의 연구 검토

본 연구의 핵심 목표인 공정사회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공정사회의 개념 및 필요 요건들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그리고 실증적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공정사회 자체에 대한 논의가 극히 최근의 일이라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최근에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인 논의에 국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표작업에 필요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정사회를 크게 절차적 공정성, 호혜의 원칙, 사전적 기회의 균등, 공동체적 사회통합의 네 가지 축으로 설명하였다. 즉, 공정한 사회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자유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지며 출발과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여 사회구성원의 능력을 공정하게 배양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으로 보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의 신뢰성 제고, 행정체제 개선,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이행, 공평조세 실현,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성차별 해소, 직업능력 개발, 사회기반 및 인프라 접근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장질서 확립,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 개방과 보호의 균형 유지,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 가족 돌봄의 사회화, 사회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과 같은 15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주성(2010)은 공정사회를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이 확보된 사회라고 제시하였다. 즉, 공정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자 기회균등의 사회이며 사회안

전망이 갖추어진 사회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공정사회의 정책 과제는 사회적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법 절차 및 사회적 관행체계를 정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세원 외(2011)는 공정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로 법치, 기회균등, 조화로운 분배를 포함하는 사회적 유대를 꼽았다. 이 연구는 10인의 전문가가 각자의 분야에 맞는 공정성을 집필한 후 수 차례의 종합 토의를 거쳐 완성되었다. 공정에 관한 이론적·사상적 논쟁을 정리하면서 법치, 기회균등, 사회적 유대라는 공정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공정사회를 구축하는 체계로써 정치질서, 행정, 법 제도의 공정성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지, 교육, 노동, 언론에서의 공정성 관점을 토대로 현상을 진단하고 각각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장동진(2011)은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공정사회 담론을 설명하였다. 공정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시장주의적 배분구조를 지녀야 함과 동시에 최저생존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공동체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 마디로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기반한 평등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임혁백(2011)은 공정사회를 복지문제와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에 나타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문제로 인해 복지에 관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복지민주주의 발전이 지체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복지를 제공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당파성과는 관계없이 복지지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세계화, 경제성장과 양립 가능한 복지정책을 디자인하여 민주주의, 경제발전, 공정한 사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원택(2011)은 정치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정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이것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은 이에 대한 추진 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 현실 속에서 공정사회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치 과정에서의 개혁 과제는 대부분 당파적 이해관계가 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공정사회의 실현에의 의지가 뚜렷해야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정표(2011)는 공정사회를 공정거래정책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현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병관(2011)은 교육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발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신뢰 체계 역시 구축되기 어려워져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 체계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교육의 공정성 문제는 크게 교육 기회의 공급과 교육 과정의 관리로 귀결된다. 공정성의 가치 하에 참여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 조화롭게 적용될 때 교육의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입법과 사법, 행정 전 영역에 교육 공정성이 핵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공정사회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해외 연구들은 공정사회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이 많지 않은 편이었다. 물론, 공정사회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에서도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공정사회의 개념이나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고 현황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공정사회를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정 부문에서 나타나는 공정성의 문제, 불공정성의 원인 등을 살펴보는 경우에도 대개 현황 설명에 그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끝을 맺는다. 셋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의 연구처럼 공정사회의 측면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더라도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공정사회에 관한 부분적 이론 검토 및 정책 제시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제 비교 관점의 부재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2. 공정사회지표의 구성 체계

가. 공정사회지표의 분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사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본 연구의 기본 목표, 즉 국제 비교가 가능한 공정사회의 총괄지표를 구성해 이에 관한 전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사전적 공정성 및 사후적 공정성이라는 각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개별적 요건들을 지표로 설정하여 한 국가의 공정사회 실현 정도를 의미하는 공정사회 총괄지표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 지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정사회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를 가지고 한국의 공정사회 위상을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공정의 개념은 대체로 ① 법의 공정성 ② 기회의 공정성 ③ 결과의 공정성 등 세 가지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법의 공정성은 누구든지 법 앞에서는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대우받고 인간다움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회의 공정성은 누구든지 규정된 원칙에 따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공정성은 사회활동에 대해 동일하게 기여한 경우 동일하게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기회의 공정성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았다고 할지라도 역량, 노력, 혹은 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결과적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세 가지 개념 중 법의 공정성 및 기회의 공정성은 사전적인 의미의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고, 결과의 공정성은 사후적인 의미의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정사회의 지표를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정성으로 나누어 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절차적 공정성은 법질서, 기회균등 등 제도(institution)적인 측면에서 사전적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들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결과적 공정성은 사후적으로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태(state)를 의미한다.

공정사회지표의 세부적인 구성체계는 다음 <표 2-1>과 같으며 지표 세부내용별 데이터 출처는 <표 2-2>에 나타나 있다.

<표 2-1> 공정사회지표의 구성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세부내용
제도 (절차적 공정성)	법질서	법치	사법시스템 수준 법치지수
		정부 역량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
		반부패	정치시스템 부패 부패지수
			남녀 성 격차
	기회 균등	사회	노동의 자유
		근로	기업환경
			재산권 보호
			금융자유
상태 (결과적 공정성)	자유 보장	정치	정치 체제 민주성
		언론	언론자유지수
	형평	교육	공교육 지출비율 교육 년수
		고용	남녀 고용 격차
		소득	지니계수
	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	사회보장지출 비율 노령자 대상 사회 지출
			보건의료지출
		보건의료	천명 당 의료시설 침상수

<표 2-2> 지표 세부내용별 데이터 출처

지표 세부내용	데이터 출처

지표 세부내용	데이터 출처
사법시스템 수준	PRS(Political Risk Services) Group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ndicator of quality of government
법치지수	The World Justice Forum Governance Indicator(World Bank)의 Rule of Law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	Governance Indicator(World Bank)의 Regulatory Quality
정치시스템 부패	Governance Indicator(World Bank)의 Control of Corruption
부패지수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남녀 성 격차	WEF의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Gender Gap Index (2006–2010)
노동의 자유	Heritage Foundation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중 Labor Freedom
기업환경	Heritage Foundation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중 Business Freedom
재산권 보호	Heritage Foundation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중 Property Rights
금융자유	Heritage Foundation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중 Financial freedom
정치체제 민주성	Freedom house의 Freedom in the World
언론자유지수	Freedom house의 Freedom of the Press
공교육 지출비율	UNESCO, WDI
교육 년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남녀 고용 격차	OECD Factbook 2010, OECD stats의 LFS by sex and age
지니계수	UNU-WIDER, CIA factbook, 유경준(2009) 자료를 종합
사회보장지출 비율	OECD Stats의 Public Social Expenditure
노령자 대상 사회 지출	OECD Stats의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Old Age
보건의료지출	OECD Stats의 Public Health Expenditure
천명 당 의료시설 침상수	OECD Stats의 Dataset: Health Care Resources

나. 지표 내용 설명

(1) 절차적 공정성 (제도)

절차적 공정성은 어떠한 원칙이나 정책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김주성, 2010; 장동진, 2011) 크게 법 질서와 기회 균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법질서

법질서에는 법치, 정부 역량, 반부패를 포함시킬 수 있다. 공정사회는 법 질서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확립됨으로써 법의 절차가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치는 법이나 규칙을 차별이나 편견 없이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법 앞의 평등, 법·질서의 준수 등을 통해 국가·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즉, 법·제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기본권을 공평하게 적용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김세원 외, 2011; 김주성, 2010).

정부 역량은 사회적 갈등 및 위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정책 이슈로 인식하여 이를 정책 의제로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불공정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처방하는 단계에 이르는 정부의 역량이 충분할 때 비로소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량이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인 정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가 측적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충분한 공감이 형성될 수 있다.

불공정으로 대변되는 각종 비리, 부정, 탈법 및 위법 등의 부패 현상은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공적 기관들은 그들이 가진 권한과 자원을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회의 경우 국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김세원 외, 2011). 이는 국민들의 신뢰 저하를 야기하므로 공정사회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관들의 반부패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절차적 공정성은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하므로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정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② 기회균등

앞서 살펴보았던 절차적 공정성의 정의에 의할 때 교육 및 근로 측면에서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회균등이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토대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Rawls의 [정의론]에서 설명하는 기회균등은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 출신 계급 등 사회적 조건에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능력과 의지를 지녔다면 비슷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Rawls, 2001). 즉,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주성, 2010). 실질적으로 문화일보 2010년 9월 7일자에 의하면, ‘공정한 사회가 기회균등을 의미한다’는 문항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58.9%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회균등의 보장이 공정사회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회균등의 보장을 바탕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은 일을 통해 보람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제고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다(김세원 외, 2011).

(2) 결과적 공정성 (상태)

결과적 공정성은 결과가 공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김주성, 2010) 그 사회가 공정한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자유보장, 형평,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그 반대 집단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장동진, 2011). 따라서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정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① 자유 보장

결과적 공정성을 구성하는 항목 중 Rawls의 [정의론]으로부터 그 중요성을 설명 할 수 있는 자유보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Rawls의 정의의 제 1 원칙에 의하면 기본적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장동진, 2011). 자유는 사회

적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킨다. 특히, 민주적 수단을 통한 경제, 정치, 언론 자유의 보장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경제, 정치, 언론의 자유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되나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이를 무참하게 억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는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 갈등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조대엽, 2006). 이로부터 경제, 정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정치 및 경제 활동에의 참여 등을 통해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고 자유로운 소통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② 형평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전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공정성이 사후적으로 나타날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결과적 공정성 측면에서 공정사회의 요건을 본다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결과 고용, 소득 등에서 차별이 줄어들고 형평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 공정성은 교육, 고용, 경제적 보상 등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고용 및 교육 부문에서의 불공정은 성별에 따른 취업 제한, 특정지역 선호, 자국민 선호, 교육서비스의 보편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차별은 특히 성 격차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Okin(1998)에 의하면 여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충족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성별에 따른 차별이 매우 고착화되어 있어 교육 혹은 고용 및 정치 참여 부분에 있어 여성의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여성의 실력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여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용 및 교육, 정치적 참여에 있어 불공정성이 심할수록, 제도적인 기회균등 보장은 단지 형식적이며 그 사회는 아직 기회균등의 의미가 정착되지 않은 불공정한 사회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이 현실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은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 및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별 차이 때문에

혹은 출신지역 차이 때문에 능력발휘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공정 사회의 기본 토대에 해당하는 기회균등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줄이고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 실질적으로 정착되어야만 공정사회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공정사회 구현의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개인의 능력, 노력 등을 반영하여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면 이를 단순한 개인 능력 차이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인식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의 봉사를 정당하게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클수록 빈곤층을 양산함과 동시에 이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 및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즉, 저소득층의 근로 저하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사회 구조를 양산하면서 전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채구묵, 2007). 따라서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③ 사회 안전망 구축

Miller는 사회 정의의 세 요소로 ‘권리’, ‘보상’, ‘필요’를 꼽았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사회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Miller, 1976; Barr, 2004에서 재인용). ‘권리’는 정치적 자유나 법 앞의 평등과 같이 자유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상’은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기회균등에 대한 것이다. 이 두 요소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지만 이 둘이 완전히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공정한 사회라고 단언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일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가 중요해지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김세원 외, 2011; 김주성, 2010). 특히나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건강한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Sen, 2009).

3. 데이터 설명

가. 절차적 공정성(제도) 부문

(1) 사법시스템 수준

사법시스템 수준은 The PRS(Political Risk Services) Group에서 제공하는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의 Law and Order를 사용하였다. The PRS Group은 1979년 이래로 정치적 위험을 측정하고 계량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ICRG는 140여 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재무적 위험 정도에 대한 1984년부터의 지수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지수들 중 Law and Order는 정치적 위험 지수를 구성하는 12개 세부지수 중 하나로서, 사법시스템의 힘과 공명정대성에 대한 평가이다. 즉, 이 지수는 한 국가에서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는가에 대해 측정하였다. 점수가 0점에 가까울수록 한 국가가 높은 범죄율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한 국가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연도별 수치가 결측인 경우 1995, 2000, 2005, 2009년에 대해 각 국가별 최근 값은 사용하였으며, 이하 변수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2) 법치지수

법질서의 제도적 공정성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써 세계은행에서 매년 공표하는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를 사용하였다. WGI는 거버넌스의 일면을 보여주는 6개의 단일지표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통제의 6개 부문에 대해 각각의 단일지표를 발표한다. WGI는 전 세계 212개국의 거버넌스 현황을 조사·발표하며,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격년으로 발표하다가 2002년 이후부터는 매년 공시하고 있다.²⁾ 조사방법은 각 국의民間기업, 개인, 신용평가기관, NGO, 공공부문기관 등 33개 조직을 대상으로 한 35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중 법치지수는 각 국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규칙을 신뢰하고 준수하는 정도를

2) www.worldbank.org/wbi/governance

계약집행과 재산권의 보호, 경찰 및 사법부의 활동, 범죄 또는 폭력의 발생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측정한 지표이다. 수치는 국가별로 대개 -2.7에서 +2.1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값이 클수록 법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장용석 외, 2010).

(3)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은 WGI의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지수를 사용하였다. 규제의 질 지수는 WG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하나로서 정부가 민간부문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지수는 -2.5점에서 2.5점으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정치시스템 부패

정치시스템의 부패는 경제 및 금융 환경에 해를 입히고, 능력보다는 부패한 힘이 정치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게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등을 방해한다. 정치시스템 부패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The PRS Group에서 발표하는 ICRG를 구성하는 12개 세부지수 중 부패지수(Corruption)를 사용하였다. IC RG의 부패지수는 정치 시스템 내의 부패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며, 0점에서 1점 사이로 측정하여 점수가 0점에 가까울수록 정치시스템의 부패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5) 부패지수

정치시스템의 부패를 나타내는 지표와는 별도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³⁾ 발표하는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CPI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전 세계 178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CPI는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식을 측정한 지표로써 하나의 복합지표로 발표되며 대개 국가별로 +1.0에서 +10.0까지의 수치를 보이고, 그 값이 클수록 부패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장용석 외, 2010).

(6) 남녀 성 격차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2006년부터 매년 115개국을 대상으로 측정되

3)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

고 있다. 본 지수는 0~1의 척도로 측정하며, 1점에 가까울수록 남녀평등 수준이 높고 0점에 가까울수록 남녀평등 수준이 낮음을 나타낸다(장용석 외, 2010).

(7) 노동의 자유

노동의 자유는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중 노동자유지수(Labor Freedom)를 사용하였다.⁴⁾

경제자유지수는 2011년 기준 183개국을 대상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통제 및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경제적 자유'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은 기업자유, 무역자유, 재정자유, 정부규모, 통화자유, 투자자유, 금융자유, 재산권, 부패로부터의 자유, 노동자유의 10개 영역이다. 각 영역별 지수는 0~100점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자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중 노동자유지수는 국가별 노동시장의 법과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의 자유를 평가한 것으로써 근로자당 부가가치 대비 최저 임금 비율, 고용확대 저해요소, 근로시간의 경직성, 잉여인력(redundant employees) 해고의 어려움, 법정 공시 기간, 법정 퇴직금의 6개 영역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한 수치이다. 노동자유지수는 2005년부터 작성되고 있다(Heritage Foundation, 2011).

(8) 기업 환경

기업 환경의 기회균등 정도는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중 기업자유지수(Business Freedom)를 사용하였다. 기업자유지수는 기업의 창업, 운영, 폐업 등의 절차에서 규제에 따른 부담과 정부 규제의 효율성 등을 수치화 한 것이다. 기업자유지수의 세부 평가항목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 면허취득, 폐업 각각의 소요절차수, 소요일수, 소요비용과 창업시 필요한 최소자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자유지수는 1995년부터 작성되었으며, 일부 OECD 국가는 1996년부터 작성되었다(Heritage Foundation, 2011).

(9) 재산권 보호

재산권 보호를 통한 기회균등 정도는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중 재산권지수(Property Right)를 사용하였다. 재산권지수는 개인이 사적 재산권을 축적하고,

4) <http://www.heritage.org/index/>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 받을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사적재산권을 위해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정도와 정부가 이를 강제하는 정도를 평가하며,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패나 재산권의 도용(expropriate) 정도도 함께 평가한다. 재산권지수 역시 1995년부터 작성되었으며, 일부 OECD 국가는 1996년부터 작성되었다(Heritage Foundation, 2011).

나. 결과적 공정성(상태) 부문

(1) 금융 자유

금융분야의 자유보장 정도는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중 금융자유지수 (Property Right)로 측정하였다. 금융자유지수는 은행권의 효율성과 함께 금융부문의 정부 독립성을 평가한 지표이다. 금융자유지수는 총 5개 영역 - 금융 서비스분야의 정부규제 정도, 직접 혹은 간접 소유를 통한 은행권에의 정부 간섭 정도,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 신용배분(allocation of credit)에 대한 정부의 영향, 대외 개방도 - 으로 10개 척도로 구분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금융자유지수는 1995년부터 작성되었으며, 일부 OECD 국가는 1996년부터 작성되었다(Heritage Foundation, 2011).

(2) 정치체제 민주성

한 국가의 정치체제 민주성은 정치적 자유로 측정했는데, 이를 위해 Freedom House가 1972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Freedom Index 중 Freedom in the World 지표를 사용하였다. 본 지표는 정치체제의 민주성을 7점 척도로 측정하여 1이면 완벽한 자유국가를 의미하고, 7이면 비자유국가를 의미한다. 본 지표상에서의 자유국가와 비자유국가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유국가’란 정치적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민적 자유가 존중되며, 유의미한 독립적 시민활동과 독립적 언론활동이 보장되는 나라로 정의된다. 반면, ‘비자유국가’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나 시민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또한 자유국가와 비자유국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적 자유국가’는 정치적 권리나 시민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부패나 법치의 부족으로 인해 인종적·종교적 갈등이 상존하며, 단일 정당이 지배하여 실질적인 다원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⁵⁾(장용석 외, 2010).

(3) 언론 자유 지수

언론의 자유는 Freedom House가 발표하는 Freedom Index 중 Freedom of the Press 지수로 측정하였다. 본 지표는 민주성, 책임성, 좋은 정부, 경제발전 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1980년부터 195개 국가의 언론독립성을 측정한 자료이다. 본 지표에서 언론이라 함은 출판, 방송, 인터넷 자유 등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언론과 관련된 법적 환경(0~30점), 언론발표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압력(0~40점), 경제적 요소(0~40점) 등을 측정·합산한 후 언론의 독립성, 자유 수준에 따라 국가를 순위화·등급화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이 때 총점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자유의 수준이 낮고, 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자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론자유 점수에 따라 국가를 등급화할 경우 "Free(0~30점)," "Partly Free(31~60점)," "Not Free(61~100점)"로 분류되기도 한다. 1994년 이후부터 계량점수와 등급을 같이 발표하였으며 이전 자료는 등급만 발표되었다. 단, 2003년 이전 자료는 유료화되어 있어 본 보고서의 분석에는 2004~2009년 자료만 포함하였다(장용석 외, 2010).

(4) 공교육 지출 비율

공공 교육 지출 비율은 GDP 대비 교육부문 정부지출의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⁶⁾,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⁷⁾에서 제공하는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GDP"를 사용하였다.

(5) 교육 년수

교육 분야에서 기회균등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교육 년수를 사용하였다. 교육 년수 자료는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제공하는 "School life expectancy(years): Primary to tertiary, Total"를 사용하였다.

(6) 남녀고용 격차

남녀고용 격차는 World Bank의 WDI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남자고

5)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15>

6) <http://stats.uis.unesco.org>

7) <http://databank.worldbank.org/>

용율 - 여자고용율) / 여자고용율”로 계산하였다. WDI는 세계 각 국가의 개발정도와 삶의 질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고용율 자료는 15세 이상의 전체인구 대비 15세 이상 고용이 되어 있거나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간의 비율을 나타낸다. 한 국가의 남녀고용 격차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면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정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7) 지니계수

소득 측면의 균등 분배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지니계수나 상위계층의 소득 대비 하위계층의 소득을 계산한 십분위 분배율 등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는 UNU(United Nations University)와 WIDER(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가 계산한 지니계수를 사용하였고, CIA Factbook 각년도 및 유경준(2009) 자료로 보완하였다. 지니계수란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장용석 외, 2010).

(8) 사회보장 지출 비율

사회 안정망 구축 정도 특히 복지 수준을 광범위하게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가 바로 GDP 대비 사회보장 부문 정부지출 비중이다. 사용한 통계자료는 OECD Stats⁸⁾의 “Public Social Expenditure per GDP”자료를 사용하였으며, OECD에서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지표가 측정한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일반적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의 사회, 경제, 교육, 의료 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가리킨다. 즉, 정부가 국가 재정 자원 중 사회보장에 할애하는 비중을 나타냄으로써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사회 보장의 수준을 대략적으로 보여준다는 의의를 가진다(장용석 외, 2010).

(9) 노령자 대상 사회보장 지출

복지 수준을 보다 세분화 하여,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노령 인구에 대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써 GDP 대비 노령자 대상 공공 사회보장 지출 비율을 함께 고려하였다. 해당 자료는 OECD Stats에서 제공하는

8) <http://stats.oecd.org/>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Old Age per GDP”통계를 사용하였다. 총 사회보장 지출과 마찬가지로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0) 보건의료 지출

공공보건의료 지출은 OECD(oecd.stats.org)에서 제공하는 GDP 대비 공공 보건의료 지출액을 나타낸다. 공공 보건의료 지출에 대한 지표는 한 국가의 의료체계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OECD Health Data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지출이 높을수록 그 국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11) 의료시설 침상 수

의료시설 침상 수는 OECD Stats의 Health Data: Health Care Resources에서 제공하는 “Total hospital beds, Per 1,000 population”자료를 사용하였다. 의료시설 침상은 관리가 잘되어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의료시설 침상 수가 많을수록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제3장 글로벌 트렌드 분석

1. 영역별 분석

개별국가 또는 국가군에 따라 공정사회 수준 및 발전정도를 비교하기 전에 전 세계적 추세를 파악해 보기로 하였다. 각 영역별 지표를 정규화한 후 평균과 변동 계수를 통해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1990년대, 2000년대, 전 기간으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전체적 제도영역, 상태영역, 1인당 GDP 각각에 대해 전체 평균과 그 변화율 추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표 3-1>, <그림 3-1>과 같이 나타난다.

공정사회지표의 연도별 평균을 전 세계 국가 및 지표산정대상 31개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 평균의 시계열 추이와 비교했다. 세계 1인당 GDP(global GDP per capita)는 World bank WDI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1995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전세계 각국의 1인당 실질 GDP 자료를 본 연구에서의 자료변환 방법인 LSM(Least Squares Method)으로 변환한 후 연도별 평균을 구하였다(장용석 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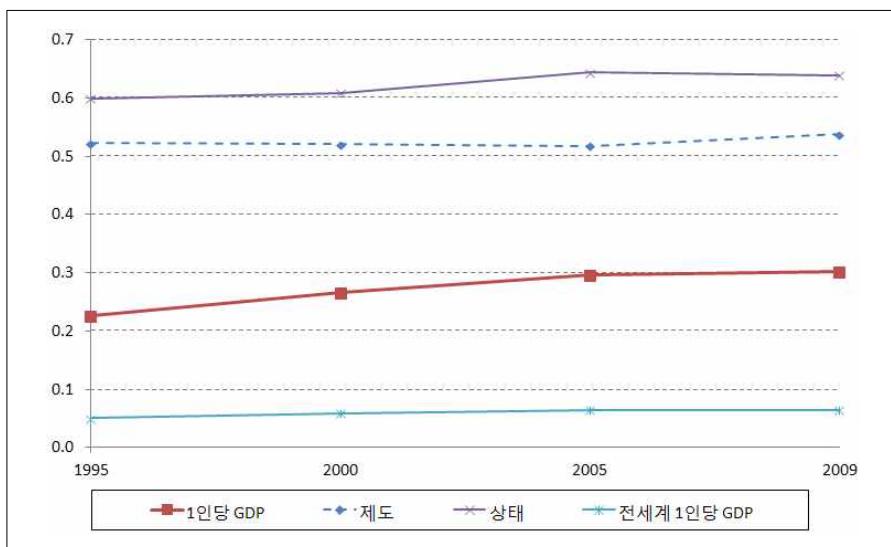
<표 3-1>과 <그림 3-1>을 보면 제도영역과 상태영역의 발전 속도가 경제 성장 발전 속도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경제 성장 발전 속도의 둔화에 비해 제도영역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대비 2009년에 1인당 GDP 지수는 0.27에서 0.35로 약 29.6% 증가한 반면(연평균 변화율 2.0%), 제도영역 지수는 0.52에서 0.54로 약 3.8% 증가(연평균 변화율 0.2%)에 그치고 있으며 상태영역 지수는 0.60에서 0.64로 약 6.7% 증가(연평균 변화율 0.5%)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인당 GDP는 90년대 후반 3.4%, 2000년대

초반 2.0%, 2000년대 후반 0.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점차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인당 GDP역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3.3%, 1.8%의 연평균 증가율로 전세계 평균임을 감안할 때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0.3%로 크게 둔화되었다. 반면 제도영역 지수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모두 연평균 -0.1%의 증가율을 보이며 거의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 연평균 0.9%의 증가율로 제도영역의 발전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상태영역 지수는 각각 0.3%, 1.1%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발전 속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 -0.2%로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전체평균 및 변화율 추이

	평균값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제도영역 지수	0.52	0.52	0.52	0.54	-0.1	-0.1	0.9	0.2
상태영역 지수	0.60	0.61	0.64	0.64	0.3	1.1	-0.2	0.5
1인당 GDP	0.27	0.31	0.35	0.35	3.4	2.0	0.3	2.0
전세계 1인당 GDP	0.05	0.06	0.07	0.06	3.3	1.8	-0.1	1.8

<그림 3-1> 글로벌 평균의 추이



2. 변동계수 및 분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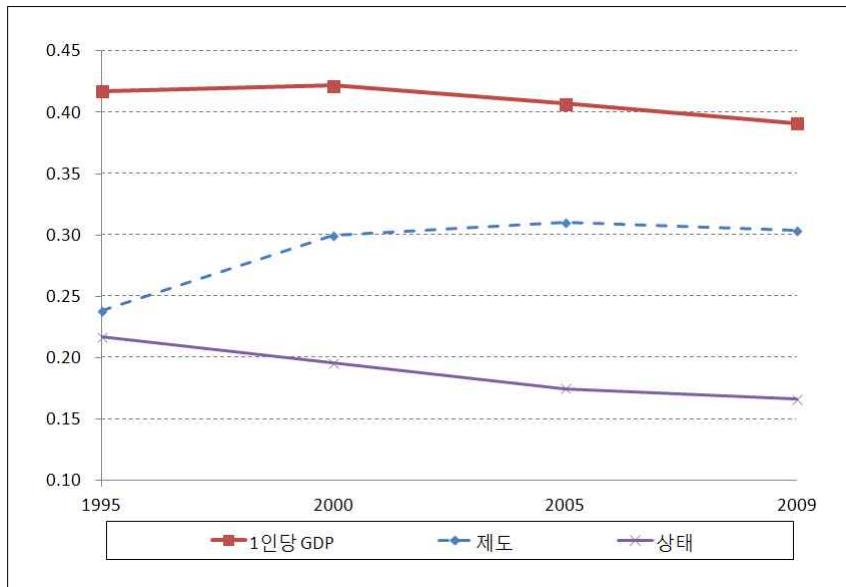
공정사회지표를 구성하는 각 영역별 발전의 국가 간 격차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각 연도별로 국가별 지수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계산하고 동시에 그 분포를 구하였다. 변동계수는 어떤 변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분포하고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산 및 표준편차처럼 표본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그러나 분산과 표준편차는 자료의 산포도의 절대크기를 나타내는 반면,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구하기 때문에 변수의 산포도를 평균에 대비해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unit free) 보여주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계수 값이 감소하는 경우 그것은 해당 지수에 있어서 국가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든다고 해석된다. 변동계수 추이분석을 통해서 <그림 3-2>가 도출되었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국가 간 경제적 격차에 비해서 제도영역 및 상태영역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에서 2009년 사이에 1인당 GDP의 변동계수는 0.39~0.42의 값을 지니는 반면 제도영역 지수의 변동계수는 0.24~0.31, 상태영역 지수의 변동계수는 0.17~0.22의 값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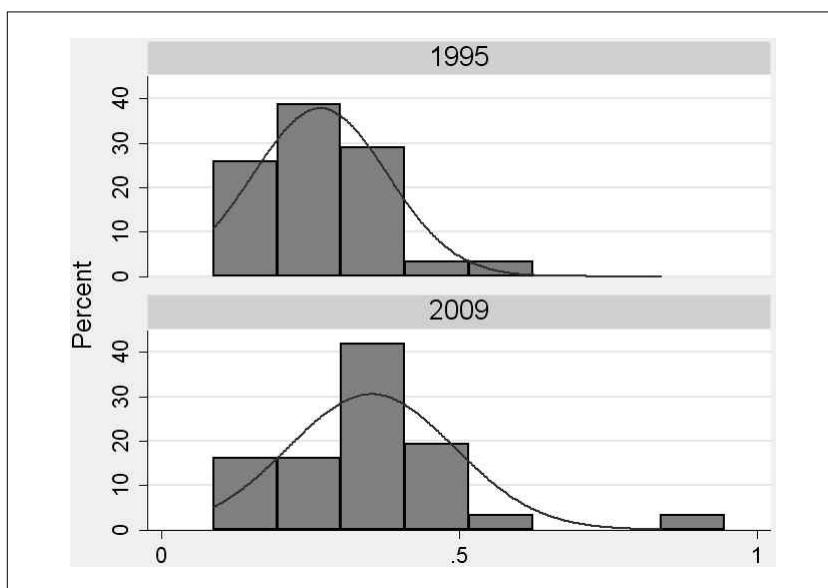
둘째, 1인당 GDP 및 상태영역의 국가 간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제도영역의 국가 간 격차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1995년에 비해 2009년에 1인당 GDP의 변동계수는 0.42에서 0.39로 감소하였고, 상태영역의 변동계수는 0.22에서 0.17로 감소하였다. 반면, 제도영역의 변동계수는 1995년 0.24에서 2000년 0.30으로 증가한 이후 2009년까지 거의 정체된 모습이다.

1995년과 2009년의 각 영역별 히스토그램을 비교한 <그림 3-3>부터 <그림 3-5>를 보아도 이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1인당 GDP의 분포를 보면 평균값도 높아지고 분포도 넓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성장과 함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영역의 지수도 1인당 GDP와 유사하게 중앙값이 다소 높아지고 분포도 완만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태영역 지수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중앙값은 다소 높아지면서 국가 간 분포도가 중앙값을 중심으로 더 조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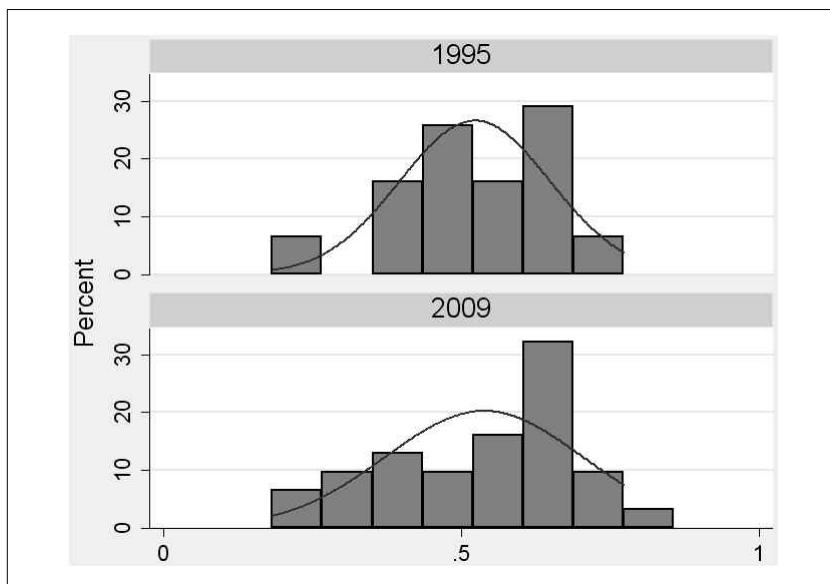
<그림 3-2> 변동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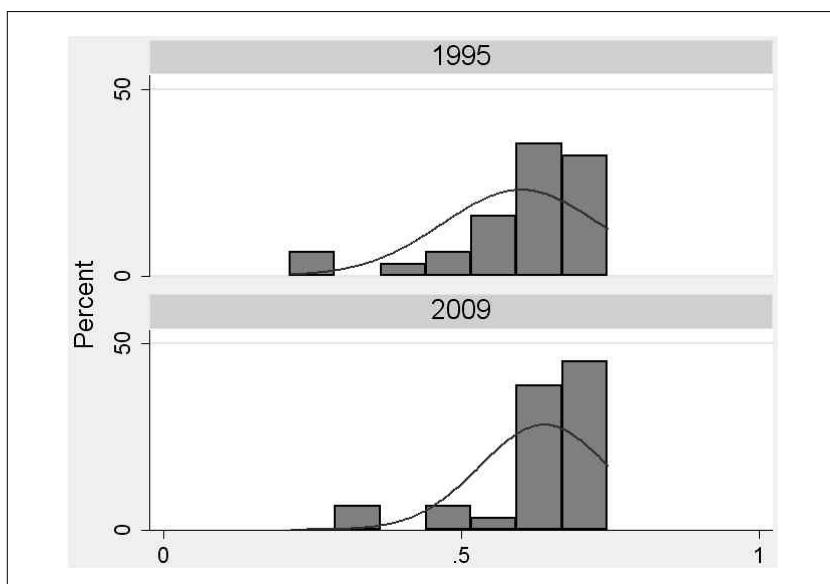
<그림 3-3> 1인당 GDP의 분포



<그림 3-4> 제도영역 지수의 분포



<그림 3-5> 상태영역 지수의 분포



3. 국가군별 분석

분석 대상인 OECD 30개국을 G20국가와 non-G20 국가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공정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영역과 상태영역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G20은 ‘주요 20개국의 모임’으로 번역되는데 1974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모인 선진 6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에 캐나다(1976년)가 합류한 G7에 이어 1997년 이후 러시아의 정식 가입으로 G8이 되었고 아시아의 외환위기 직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G7 국가와 브라질·인도·중국·한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재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열고 G20 국가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20개 회원국을 선정하는 데는 국내총생산(GDP)·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이후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로서 2008년에 비로소 제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1995년~2009년 기간 동안 G20국가와 non-G20국가의 발전정도 차이를 비교하면 G20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OECD 국가 중에서는 non-G20이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을 보면 1인당 GDP가 1995년에는 G20이 0.269, non-G20이 0.265로 non-G20이 근소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G20이 0.334, non-G20이 0.362로 non-G20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non-G20 국가들이 규모는 작지만 발전 정도가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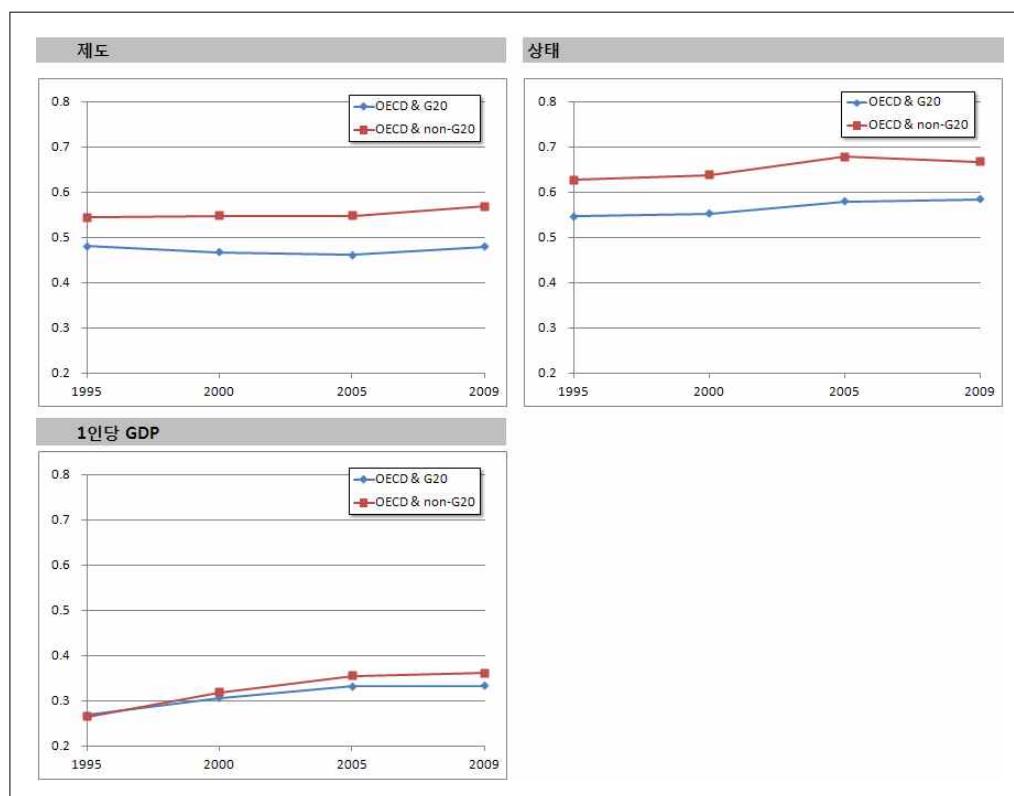
둘째, 경제적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제도영역의 발전 속도 역시 non-G20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를 보면 G20의 1인당 GDP 지수는 1995년 대비 2009년에 약 24.1%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non-G20은 약 36.6%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도영역 지수의 변화율을 보면 non-G20이 4.5%로 -0.4%를 기록한 G20에 비하여 변화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상태영역에서도 역시 non-G20이 G20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발전 속도 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표 3-2>를 보면 G20의 상태영역 지수는 2009년에 0.585로 1995년 대비 약 6.8% 증가하였고, non-G20은 같은 기간 6.3% 증가한 0.668로 나타났다.

<표 3-2> OECD회원국 중 G20와 non-G20의 지수별 성장속도

		G20	non-G20
1인당 GDP 지수	1995년	0.269	0.265
	2009년	0.334	0.362
	변화율(%)	24.1	36.6
제도 지수	1995년	0.482	0.545
	2009년	0.480	0.569
	변화율(%)	-0.4	4.5
상태 지수	1995년	0.547	0.628
	2009년	0.585	0.668
	변화율(%)	6.8	6.3

<그림 3-6> OECD회원국 중 G20와 non-G20 비교



넷째, 두 국가군의 경제적 격차와 제도 및 상태영역의 공정사회 수준은 격차가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과 같이 1995년과 2009년에 두 국가군 간의 경제적 격차와 공정사회 수준 격차를 비교해 보았다. 두 국가군 간에 1인당 GDP 지수 격차는 1995년에 비해 오히려 역전 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영역 지수 격차는 약 1.42배, 상태영역 지수 격차는 약 1.03배 증가하였다.

<표 3-3> OECD회원국 중 G20와 non-G20의 지수별 격차 변화

	OECD회원국 중 G20와 non-G20의 (non-G20 - G20)		
	1인당 GDP 지수 격차	제도 지수 격차	상태 지수 격차
1995년	-0.003	0.063	0.081
2009년	0.029	0.089	0.083
격차 증가(배)	-8.28	1.42	1.03

제4장 국가별 특성 분석

1. 절차적 공정성(제도) 부문

<표 4-1>은 사전적인 공정성 측면에서 제도 부문의 전체적인 추이를 국가별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미미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부문의 지수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개별국가의 순위를 보면 2009년 현재 덴마크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프랑스,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터키였으며, 한국은 29위에서 26위로 하위권이지만 순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국가별 제도 수준 및 변화율

Country	지 수 級				순 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Australia	0.60	0.64	0.65	0.68	12	9	6	5	1.39	0.42	1.05	0.94
Austria	0.57	0.60	0.62	0.62	15	15	13	13	0.94	0.60	0.06	0.56
Belgium	0.51	0.51	0.53	0.55	17	18	17	17	0.14	0.63	0.88	0.53
Canada	0.63	0.67	0.65	0.68	8	7	7	6	1.44	-0.67	1.19	0.61
Czech Republic	0.46	0.39	0.38	0.41	21	24	24	23	-2.93	-0.76	2.11	-0.73
Denmark	0.70	0.72	0.75	0.77	2	1	1	1	0.43	0.81	0.89	0.69
Finland	0.62	0.71	0.71	0.74	9	2	2	3	2.65	0.06	1.09	1.27
France	0.44	0.40	0.44	0.54	24	22	22	19	-1.92	1.55	5.29	1.34
Germany	0.61	0.58	0.59	0.60	11	16	16	15	-1.19	0.41	0.67	-0.09

Country	지 수 칸				순 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Greece	0.41	0.37	0.30	0.31	25	26	29	29	-2.31	-3.78	0.91	-1.94
Hungary	0.45	0.38	0.39	0.41	23	25	23	24	-3.08	0.54	1.26	-0.56
Iceland	0.58	0.68	0.71	0.67	13	4	3	8	3.13	0.93	-1.38	1.04
Ireland	0.63	0.61	0.62	0.66	7	14	11	10	-0.67	0.55	1.55	0.40
Italy	0.38	0.40	0.35	0.33	27	23	26	28	0.83	-2.65	-1.55	-1.10
Japan	0.49	0.47	0.46	0.47	19	20	20	21	-0.91	-0.14	0.31	-0.29
Korea	0.36	0.32	0.33	0.36	29	28	27	26	-2.62	0.86	1.90	-0.10
Luxembourg	0.57	0.62	0.60	0.59	16	12	14	16	1.73	-0.81	-0.44	0.20
Mexico	0.24	0.17	0.19	0.20	31	31	30	30	-6.23	2.08	1.14	-1.23
Netherlands	0.64	0.68	0.62	0.67	6	6	12	9	1.15	-1.58	1.86	0.37
New Zealand	0.72	0.70	0.71	0.77	1	3	4	2	-0.64	0.33	2.02	0.46
Norway	0.64	0.62	0.65	0.68	4	13	8	7	-0.74	0.97	1.28	0.45
Poland	0.38	0.34	0.31	0.33	28	27	28	27	-2.56	-1.75	1.97	-1.00
Portugal	0.46	0.43	0.44	0.44	20	21	21	22	-1.45	0.47	-0.24	-0.42
Slovak Republic	0.39	0.31	0.35	0.37	26	29	25	25	-4.32	2.62	0.86	-0.41
Spain	0.45	0.48	0.48	0.48	22	19	19	20	1.21	0.19	-0.23	0.43
Sweden	0.64	0.67	0.68	0.72	5	8	5	4	0.92	0.29	1.59	0.89
Switzerland	0.58	0.64	0.60	0.64	14	10	15	11	1.97	-1.32	1.86	0.75
Turkey	0.25	0.19	0.15	0.18	30	30	31	31	-5.20	-5.39	5.53	-2.32
United Kingdom	0.68	0.68	0.64	0.63	3	5	9	12	-0.03	-1.05	-0.34	-0.48
United States	0.62	0.64	0.63	0.61	10	11	10	14	0.46	-0.22	-0.80	-0.14
Chile	0.50	0.53	0.52	0.54	18	17	18	18	1.31	-0.27	0.84	0.61
평균	0.52	0.52	0.52	0.54	-				-0.09	-0.09	0.94	0.20

주) 한국은 진한 흑백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최상위 국가는 밝은 흑백음영으로, 최하위 국가는 밑줄 표시로 나타냄.

가. 법질서

제도 부문 내에서 법질서의 국가별 추이를 보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수가 악화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개선되어 평균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국 순위에서는 2009년 현재 덴마크가 가장 높고, 멕시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칠레,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멕시코였으며, 한국은 27위에서 25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표 4-2> 국가별 법질서 수준 및 변화율

Country	지수 값				순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Australia	0.65	0.74	0.72	0.73	14	11	9	8	2.49	-0.37	0.18	0.80	
Austria	0.65	0.71	0.74	0.70	15	12	7	10	1.63	1.01	-1.29	0.56	
Belgium	0.52	0.53	0.56	0.55	18	19	18	19	0.27	1.21	-0.63	0.35	
Canada	0.67	0.77	0.72	0.75	10	8	11	6	2.61	-1.18	0.98	0.77	
Czech Republic	0.47	0.38	0.39	0.44	24	25	24	23	-3.99	0.58	2.85	-0.44	
Denmark	0.75	0.78	0.80	0.81	2	5	3	1	0.80	0.46	0.62	0.63	
Finland	0.72	0.85	0.82	0.81	5	1	1	2	3.46	-0.87	-0.15	0.86	
France	0.51	0.47	0.54	0.58	20	21	20	18	-1.67	2.59	2.12	0.92	
Germany	0.67	0.64	0.67	0.66	11	15	15	13	-0.92	0.72	-0.05	-0.09	
Greece	0.48	0.39	0.32	0.29	22	24	28	29	-4.10	-4.01	-2.34	-3.57	
Hungary	0.46	0.37	0.40	0.39	25	26	23	24	-4.16	1.09	-0.22	-1.18	
Iceland	0.58	0.78	0.80	0.65	16	4	2	15	5.91	0.61	-5.04	0.79	
Ireland	0.67	0.62	0.66	0.68	12	16	16	12	-1.28	1.06	0.75	0.13	
Italy	0.35	0.43	0.33	0.30	28	23	27	28	3.82	-5.22	-1.92	-1.12	
Japan	0.49	0.44	0.53	0.50	21	22	21	21	-1.85	3.78	-1.39	0.26	
Korea	0.37	0.28	0.37	0.39	27	28	25	25	-5.36	5.32	1.41	0.28	
Luxembourg	0.70	0.80	0.75	0.74	9	3	5	7	2.76	-1.26	-0.37	0.41	
Mexico	0.17	0.10	0.09	0.08	31	31	31	31	-10.72	-0.64	-3.27	-5.10	
Netherlands	0.73	0.85	0.75	0.76	3	2	6	5	2.97	-2.56	0.52	0.27	
New Zealand	0.80	0.75	0.77	0.79	1	10	4	3	-1.17	0.61	0.62	-0.03	
Norway	0.71	0.66	0.72	0.71	8	14	10	9	-1.35	1.78	-0.34	0.05	
Poland	0.44	0.29	0.29	0.36	26	27	29	26	-8.01	-0.06	5.54	-1.45	
Portugal	0.57	0.51	0.53	0.48	17	20	22	22	-2.40	0.80	-2.37	-1.26	
Slovak Republic	0.32	0.26	0.35	0.35	29	29	26	27	-3.84	5.81	0.35	0.72	
Spain	0.48	0.53	0.54	0.51	23	18	19	20	2.25	0.34	-1.39	0.52	
Sweden	0.71	0.77	0.73	0.77	7	7	8	4	1.63	-0.96	1.32	0.61	
Switzerland	0.71	0.77	0.69	0.69	6	6	12	11	1.71	-2.22	-0.12	-0.23	
Turkey	0.25	0.17	0.17	0.21	30	30	30	30	-7.25	0.29	4.59	-1.29	
United Kingdom	0.72	0.76	0.69	0.66	4	9	13	14	1.05	-1.90	-1.26	-0.67	
United States	0.65	0.68	0.67	0.60	13	13	14	17	0.87	-0.41	-2.91	-0.68	
Chile	0.52	0.58	0.61	0.60	19	17	17	16	2.46	0.89	-0.21	1.13	
평균	0.56	0.57	0.57	0.57	-				0.20	0.05	-0.21	0.03	

주) 한국은 진한 흑백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최상위 국가는 밝은 흑백음영으로, 최하위 국가는 밑줄 표시로 나타냄.

나. 기회균등

제도 부문 내 기회균등의 국가별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2009년 현재 뉴질랜드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스위스이며,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터키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기회균등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순위 또한 27위에서 28위로 소폭 하락하고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표 4-3> 국가별 기회균등 수준 및 변화율

Country	지 수 준				순 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Australia	0.55	0.55	0.59	0.64	11	11	9	8	0.00	1.44	2.09	1.11
Austria	0.49	0.49	0.49	0.54	14	15	15	16	0.00	0.00	1.99	0.57
Belgium	0.49	0.49	0.49	0.55	15	16	16	14	0.00	0.00	2.52	0.71
Canada	0.58	0.58	0.58	0.61	7	7	10	11	0.00	0.00	1.46	0.41
Czech Republic	0.45	0.41	0.37	0.39	20	21	23	24	-1.88	-2.07	1.31	-1.05
Denmark	0.66	0.66	0.70	0.73	1	1	1	2	0.00	1.21	1.20	0.77
Finland	0.53	0.57	0.61	0.68	13	10	5	4	1.49	1.39	2.68	1.80
France	0.38	0.33	0.33	0.49	25	29	26	17	-2.26	0.00	9.85	1.88
Germany	0.55	0.51	0.51	0.54	10	12	12	15	-1.52	0.00	1.59	-0.10
Greece	0.34	0.34	0.29	0.34	28	28	30	27	0.00	-3.52	4.19	-0.11
Hungary	0.43	0.39	0.39	0.43	22	22	21	21	-1.96	0.00	2.71	0.06
Iceland	0.58	0.58	0.62	0.69	6	6	4	3	0.00	1.36	2.80	1.28
Ireland	0.59	0.59	0.59	0.65	5	5	8	6	0.00	0.00	2.41	0.68
Italy	0.41	0.37	0.37	0.35	24	24	22	26	-2.05	0.00	-1.24	-1.09
Japan	0.49	0.49	0.39	0.43	16	17	20	22	0.00	-4.32	2.50	-0.87
Korea	0.35	0.35	0.29	0.32	27	27	28	28	0.00	-3.44	2.52	-0.54
Luxembourg	0.44	0.44	0.44	0.43	21	19	17	20	0.00	0.00	-0.56	-0.16
Mexico	0.30	0.25	0.29	0.32	30	30	29	29	-4.01	3.09	2.48	0.32
Netherlands	0.54	0.50	0.50	0.58	12	14	14	13	-1.54	0.00	3.76	0.50
New Zealand	0.64	0.64	0.64	0.74	2	2	2	1	0.00	0.00	3.65	1.03
Norway	0.57	0.57	0.57	0.65	8	8	11	7	0.00	0.00	3.24	0.91
Poland	0.33	0.38	0.33	0.31	29	23	27	30	3.20	-3.10	-1.49	-0.43
Portugal	0.36	0.36	0.36	0.40	26	26	25	23	0.00	0.00	2.67	0.76

Country	지 수 핵				순 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Slovak Republic	0.45	0.36	0.36	0.38	18	25	24	25	-4.67	0.00	1.35	-1.32
Spain	0.43	0.43	0.43	0.45	23	20	19	19	0.00	0.00	1.19	0.34
Sweden	0.57	0.57	0.62	0.67	9	9	3	5	0.00	1.90	1.90	1.22
Switzerland	0.45	0.50	0.50	0.60	19	13	13	12	2.38	0.00	4.41	2.10
Turkey	0.26	0.22	0.12	0.16	31	31	31	31	-3.37	-11.1	6.84	-3.48
United Kingdom	0.64	0.60	0.60	0.61	3	3	6	10	-1.31	0.00	0.69	-0.27
United States	0.59	0.59	0.59	0.63	4	4	7	9	0.00	0.00	1.44	0.41
Chile	0.47	0.47	0.43	0.47	17	18	18	18	0.00	-1.77	2.25	0.00
평균	0.48	0.47	0.46	0.51				-	-0.44	-0.25	2.30	0.40

주) 한국은 진한 흑백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최상위 국가는 밝은 흑백음영으로, 최하위 국가는 밑줄 표시로 나타냄.

2. 결과적 공정성(상태) 부문

<표 4-4>는 사후적인 측면에서 공정성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상태 부분의 전체적인 추이를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태 부문에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순위를 보면 2009년 현재 핀란드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멕시코,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일본이며, 한국은 1995년 0.44에서 2009년 0.51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국가별 순위는 28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표 4-4> 국가별 상태 수준 및 변화율

Country	지 수 핵				순 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Australia	0.63	0.66	0.66	0.65	17	13	17	18	0.74	0.17	-0.40	0.21
Austria	0.73	0.72	0.73	0.73	1	2	4	5	-0.25	0.29	-0.04	0.00
Belgium	0.69	0.71	0.73	0.74	8	3	5	3	0.48	0.69	0.34	0.52
Canada	0.66	0.63	0.63	0.65	11	18	24	20	-0.90	0.04	0.57	-0.15
Czech Republic	0.67	0.67	0.69	0.68	9	12	12	11	-0.09	0.67	-0.48	0.07
Denmark	0.69	0.68	0.76	0.75	7	8	2	2	-0.29	2.14	-0.51	0.51
Finland	0.72	0.68	0.75	0.75	2	9	3	1	-1.13	1.81	-0.01	0.23

Country	지 수 칸				순 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France	0.70	0.69	0.72	0.73	5	5	7	6	-0.06	0.70	0.27	0.30
Germany	0.72	0.69	0.71	0.72	4	4	8	7	-0.64	0.56	0.13	0.01
Greece	0.47	0.50	0.58	0.58	27	27	27	27	1.48	3.06	0.06	1.63
Hungary	0.63	0.65	0.69	0.68	18	15	14	9	0.48	1.22	-0.13	0.57
Iceland	0.65	0.67	0.72	0.68	14	11	6	12	0.80	1.33	-1.44	0.34
Ireland	0.58	0.59	0.65	0.67	24	26	19	15	0.42	1.97	0.69	1.05
Italy	0.54	0.61	0.65	0.62	26	21	21	23	2.38	1.29	-0.81	1.07
Japan	0.64	0.61	0.59	0.62	16	20	26	25	-0.79	-0.76	1.21	-0.21
Korea	0.44	0.44	0.48	0.51	28	28	28	28	-0.25	1.68	1.82	1.03
Luxembourg	0.63	0.64	0.70	0.66	19	17	11	17	0.31	1.80	-1.28	0.38
Mexico	0.21	0.26	0.36	0.32	31	30	30	30	3.96	6.68	-2.93	2.89
Netherlands	0.70	0.68	0.70	0.69	6	10	10	8	-0.59	0.76	-0.43	-0.06
New Zealand	0.67	0.69	0.69	0.67	10	7	13	14	0.35	0.15	-0.66	-0.01
Norway	0.66	0.65	0.66	0.68	12	14	16	13	-0.32	0.54	0.42	0.20
Poland	0.60	0.60	0.65	0.62	21	25	20	24	0.01	1.63	-0.88	0.33
Portugal	0.57	0.62	0.64	0.65	25	19	22	19	1.44	0.81	0.28	0.88
Slovak Republic	0.58	0.60	0.66	0.62	23	24	18	26	0.56	2.08	-1.77	0.42
Spain	0.59	0.60	0.63	0.64	22	23	25	21	0.39	0.89	0.76	0.67
Sweden	0.72	0.74	0.77	0.74	3	1	1	4	0.63	0.89	-1.14	0.22
Switzerland	0.64	0.69	0.71	0.67	15	6	9	16	1.38	0.45	-1.42	0.24
Turkey	0.21	0.25	0.26	0.30	30	31	31	31	3.08	0.85	4.20	2.60
United Kingdom	0.65	0.64	0.68	0.68	13	16	15	10	-0.18	1.12	0.00	0.33
United States	0.61	0.60	0.64	0.63	20	22	23	22	-0.40	1.12	-0.42	0.13
Chile	0.37	0.40	0.46	0.46	29	29	29	29	1.29	3.03	-0.16	1.49
평균	0.60	0.61	0.64	0.64	-				0.29	1.14	-0.20	0.45

주) 한국은 진한 흑백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최상위 국가는 밝은 흑백음영으로, 최하위 국가는 밑줄 표시로 나타냄.

가. 자유보장

상태 부문 내의 자유보장 지수의 국가별 추이를 보면 상태 부문 전체적인 추이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2009년 현재 덴마크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멕시코,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일본이다. 한국의 경우는 1995년 0.65에서 2009년 0.63으로 오히려 퇴보했으며 국가별 순위도

24위에서 27위로 하락하였다.

<표 4-5> 국가별 자유보장 수준 및 변화율

Country	지수 값				순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Australia	0.91	0.91	0.88	0.86	3	4	10	11	0.00	-0.56	-0.72	-0.40	
Austria	0.85	0.76	0.77	0.77	5	15	18	18	-2.27	0.33	0.00	-0.70	
Belgium	0.85	0.81	0.83	0.87	6	11	15	7	-0.87	0.58	1.18	0.23	
Canada	0.81	0.81	0.80	0.83	12	12	16	15	0.00	-0.31	1.04	0.19	
Czech Republic	0.82	0.82	0.86	0.84	11	10	13	13	0.00	1.02	-0.63	0.18	
Denmark	0.85	0.85	0.93	0.93	4	5	3	1	0.00	1.81	-0.17	0.59	
Finland	0.75	0.75	0.85	0.89	18	16	14	4	0.00	2.34	1.16	1.16	
France	0.66	0.66	0.69	0.77	22	24	25	20	0.00	0.90	2.80	1.11	
Germany	0.77	0.67	0.71	0.76	14	21	24	22	-2.54	1.05	1.59	-0.09	
Greece	0.47	0.47	0.60	0.59	29	29	27	29	0.00	4.96	-0.26	1.67	
Hungary	0.65	0.74	0.77	0.77	25	19	18	18	2.70	0.80	0.00	1.24	
Iceland	0.76	0.76	0.94	0.85	15	14	1	12	0.00	4.31	-2.56	0.77	
Ireland	0.80	0.80	0.90	0.90	13	13	8	3	0.00	2.35	0.00	0.83	
Italy	0.57	0.66	0.68	0.62	28	23	26	28	3.06	0.71	-2.41	0.63	
Japan	0.75	0.66	0.56	0.64	17	22	30	26	-2.58	-3.40	3.67	-1.13	
Korea	0.65	0.56	0.59	0.63	24	28	28	27	-3.03	1.27	1.65	-0.18	
Luxembourg	0.83	0.83	0.93	0.87	9	8	4	7	0.00	2.28	-1.45	0.39	
Mexico	0.28	0.38	0.57	0.40	31	30	29	30	6.87	8.13	-8.15	2.77	
Netherlands	0.92	0.92	0.93	0.91	2	3	4	2	0.00	0.14	-0.34	-0.05	
New Zealand	0.93	0.93	0.92	0.86	1	2	7	10	0.00	-0.27	-1.64	-0.57	
Norway	0.75	0.75	0.75	0.79	18	16	22	17	0.00	-0.17	1.51	0.37	
Poland	0.66	0.66	0.78	0.71	22	24	17	25	0.00	3.49	-2.37	0.54	
Portugal	0.72	0.72	0.72	0.76	21	20	23	22	0.00	0.00	1.15	0.33	
Slovak Republic	0.57	0.64	0.86	0.76	27	26	12	21	2.42	6.09	-3.19	2.06	
Spain	0.75	0.75	0.77	0.80	20	18	20	16	0.00	0.46	1.09	0.47	
Sweden	0.76	0.85	0.94	0.88	15	5	1	5	2.32	1.95	-1.60	1.05	
Switzerland	0.85	0.94	0.93	0.87	6	1	4	9	2.10	-0.27	-1.62	0.18	
Turkey	0.29	0.32	0.27	0.35	30	31	31	31	2.39	-3.39	6.64	1.46	
United Kingdom	0.84	0.84	0.88	0.88	8	7	10	6	0.00	0.99	-0.18	0.30	
United States	0.82	0.82	0.89	0.84	10	9	9	13	0.00	1.59	-1.51	0.13	
Chile	0.59	0.59	0.75	0.72	26	27	21	24	0.00	4.85	-1.05	1.40	

Country	지수값				순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평균	0.73	0.73	0.78	0.77	-			0.16	1.37	-0.34	0.45

주) 한국은 진한 흑백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최상위 국가는 밝은 흑백음영으로, 최하위 국가는 밑줄 표시로 나타냄.

나. 형평

상태 부문 내 형평 지수의 국가별 추이도 평균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2009년 현재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칠레,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캐나다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 0.64에서 2009년 0.67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국가별 순위에서는 오히려 20위에서 22위로 하락하였다.

<표 4-6> 국가별 형평 수준 및 변화율

Country	지수값				순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Australia	0.67	0.72	0.76	0.76	16	14	7	7	1.40	1.33	-0.04	0.96
Austria	0.70	0.76	0.75	0.76	11	6	10	9	1.43	-0.07	0.23	0.55
Belgium	0.65	0.74	0.75	0.76	19	9	11	8	2.58	0.43	0.29	1.15
Canada	0.76	0.72	0.72	0.72	5	13	14	16	-1.08	0.08	0.10	-0.33
Czech Republic	0.71	0.69	0.71	0.72	9	18	16	17	-0.51	0.56	0.37	0.12
Denmark	0.76	0.76	0.87	0.83	6	5	2	4	0.01	2.75	-1.24	0.62
Finland	0.81	0.78	0.82	0.81	3	4	5	5	-0.62	1.02	-0.39	0.03
France	0.72	0.74	0.76	0.73	7	8	8	15	0.52	0.59	-1.24	0.04
Germany	0.70	0.72	0.74	0.74	15	11	13	13	0.68	0.53	0.02	0.44
Greece	0.48	0.55	0.61	0.62	28	28	27	26	2.70	1.89	0.76	1.86
Hungary	0.71	0.72	0.74	0.76	10	10	12	10	0.30	0.61	0.42	0.45
Iceland	0.78	0.84	0.87	0.86	4	2	1	1	1.57	0.58	-0.25	0.70
Ireland	0.58	0.66	0.69	0.75	24	21	19	11	2.55	0.82	2.16	1.82
Italy	0.53	0.58	0.64	0.65	27	27	25	25	1.75	1.83	0.39	1.39
Japan	0.61	0.59	0.59	0.59	23	26	28	28	-0.64	-0.23	0.22	-0.25
Korea	0.64	0.65	0.66	0.67	20	22	21	22	0.38	0.50	0.14	0.35
Luxembourg	0.57	0.62	0.67	0.66	25	23	20	23	1.98	1.30	-0.10	1.14
Mexico	0.31	0.32	0.41	0.45	29	29	29	29	0.81	4.78	2.32	2.65

Country	지 수 핵				순 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Netherlands	0.70	0.72	0.76	0.74	12	12	9	12	0.46	1.05	-0.59	0.36
New Zealand	0.72	0.75	0.77	0.76	8	7	6	6	0.82	0.64	-0.23	0.45
Norway	0.83	0.81	0.83	0.84	2	3	4	2	-0.50	0.61	0.30	0.12
Poland	0.66	0.67	0.66	0.67	18	20	22	21	0.08	-0.10	0.45	0.12
Portugal	0.63	0.68	0.66	0.66	21	19	23	24	1.52	-0.55	0.04	0.35
Slovak Republic	0.70	0.72	0.71	0.69	13	15	18	19	0.38	-0.26	-0.43	-0.08
Spain	0.54	0.60	0.65	0.69	26	25	24	20	1.95	1.56	1.77	1.76
Sweden	0.83	0.85	0.85	0.83	1	1	3	3	0.50	-0.04	-0.53	0.01
Switzerland	0.67	0.70	0.72	0.70	17	16	15	18	0.94	0.60	-0.68	0.35
Turkey	0.26	0.28	0.24	0.31	31	31	31	31	1.78	-2.80	5.75	1.22
United Kingdom	0.70	0.69	0.71	0.73	14	17	17	14	-0.20	0.39	0.62	0.24
United States	0.63	0.62	0.61	0.62	22	24	26	27	-0.20	-0.30	0.40	-0.06
Chile	0.28	0.30	0.38	0.42	30	30	30	30	1.55	4.96	2.14	2.93
평균	0.64	0.66	0.69	0.69	-				0.71	0.74	0.23	0.58

주) 한국은 진한 흑백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최상위 국가는 밝은 흑백음영으로, 최하위 국가는 밑줄 표시로 나타냄.

다.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의 국가별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일부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이후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2009년 현재 프랑스가 가장 높고, 멕시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한국,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아이슬란드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 0.05로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2009년 0.24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국가별 순위에서도 31위에서 29위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표 4-7> 국가별 사회안전망 수준 및 변화율

Country	지 수 핵				순 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Australia	0.33	0.35	0.34	0.34	27	26	27	26	1.40	-0.38	-0.41	0.24
Austria	0.64	0.65	0.67	0.66	3	3	3	2	0.43	0.65	-0.40	0.27
Belgium	0.57	0.57	0.61	0.59	5	5	6	6	-0.04	1.17	-0.77	0.18

Country	지 수 칸				순 위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Canada	0.42	0.37	0.38	0.39	19	24	24	24	-2.41	0.73	0.45	-0.48
Czech Republic	0.50	0.51	0.51	0.48	10	9	12	13	0.34	0.24	-1.46	-0.21
Denmark	0.47	0.44	0.48	0.48	12	16	15	14	-1.35	1.71	0.14	0.16
Finland	0.61	0.51	0.57	0.54	4	8	7	7	-3.37	2.19	-1.28	-0.82
France	0.71	0.69	0.71	0.69	1	2	1	1	-0.71	0.62	-0.71	-0.24
Germany	0.69	0.69	0.69	0.66	2	1	2	3	0.03	0.10	-1.31	-0.33
Greece	0.44	0.48	0.54	0.54	17	10	9	8	1.65	2.43	-0.38	1.34
Hungary	0.53	0.48	0.55	0.52	8	11	8	10	-2.26	2.75	-1.07	-0.15
Iceland	0.40	0.42	0.35	0.33	21	19	26	27	0.74	-3.35	-1.51	-1.38
Ireland	0.34	0.30	0.36	0.35	26	27	25	25	-2.54	3.38	-0.50	0.13
Italy	0.51	0.57	0.61	0.60	9	6	5	5	2.26	1.39	-0.33	1.20
Japan	0.55	0.59	0.63	0.63	7	4	4	4	1.33	1.43	-0.15	0.94
Korea	0.05	0.11	0.17	0.24	31	30	30	29	18.53	9.28	8.08	12.14
Luxembourg	0.50	0.47	0.50	0.45	11	12	13	15	-1.20	1.58	-2.60	-0.62
Mexico	0.05	0.06	0.09	0.09	30	31	31	31	5.41	6.97	1.27	4.76
Netherlands	0.47	0.39	0.42	0.42	16	21	19	20	-3.55	1.67	-0.33	-0.79
New Zealand	0.37	0.38	0.38	0.40	24	22	23	22	0.33	0.19	0.76	0.40
Norway	0.39	0.38	0.41	0.39	23	23	21	23	-0.58	1.74	-1.38	0.01
Poland	0.47	0.47	0.50	0.49	15	13	14	12	-0.08	1.29	-0.39	0.32
Portugal	0.37	0.45	0.54	0.53	25	14	10	9	3.92	3.90	-0.62	2.60
Slovak Republic	0.47	0.44	0.42	0.40	13	17	20	21	-1.60	-0.81	-1.24	-1.22
Spain	0.47	0.45	0.46	0.44	14	15	17	17	-0.88	0.68	-1.26	-0.44
Sweden	0.56	0.52	0.53	0.51	6	7	11	11	-1.64	0.60	-1.29	-0.74
Switzerland	0.42	0.43	0.47	0.43	18	18	16	18	0.60	1.73	-2.16	0.20
Turkey	0.09	0.14	0.26	0.25	29	29	28	28	8.24	13.52	-0.25	7.56
United Kingdom	0.41	0.40	0.45	0.44	20	20	18	16	-0.53	2.62	-0.64	0.55
United States	0.39	0.36	0.41	0.42	22	25	22	19	-1.61	2.35	0.65	0.43
Chile	0.24	0.29	0.24	0.23	28	28	29	30	3.93	-3.72	-1.24	-0.33
평균	0.43	0.43	0.46	0.45	-				-0.14	1.37	-0.63	0.26

주) 한국은 진한 흑백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최상위 국가는 밝은 흑백음영으로, 최하위 국가는 매향 표시로 나타냄.

제5장 공정사회 국민의식 : OECD 국가 비교 분석

1. 공정사회의 의식 분야

공정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김세진 외, 2011). 즉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함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이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적 책임과 배려, 관용 등의 덕목을 통해 상호 공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기홍, 2008).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배려, 관용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하여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분야의 여러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법이나 제도를 정비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인 공정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이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정사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공정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지닌 주관적 가치관이나 인식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 따라 공정의 기준이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체감도 역시 달라진다(김세원 외, 2011). 따라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나 불평등 등의 불공정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적 노력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또한 이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공정한 상태를 이루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군부독재 정권 등의

역사적 경험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성이 매우 높았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공정사회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 사회의 공정성 수준이 과거 10년 전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에 이르렀다(현오석, 2011). 이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노력들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던 기존의 정책들을 재고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공정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인식하는 공정사회를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세계 각국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정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시기 변화를 함께 분석한다.

가. 정치 공정성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공정사회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1.2%가 불공정한 사례나 관행이 가장 남아 있는 분야로 정치계를 꼽았다. 또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분야 역시 정치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32.9%에 이르렀다(현오석, 2011). 공정사회의 제도를 정비하고 상태를 개선함에 정치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계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한다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정치공정성 수준이 높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당이나 의회의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정치시스템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각 국가들의 공정사회 의식수준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를 정치공정성으로 구분하고 OECD국가를 대상으로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정치행위자 즉 정당 및 의회에 대한 신뢰와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분석한다.

(1) 정치행위자에 대한 신뢰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치행위자 개인의 사리사욕과 정당의 권력 획득 목표가 대의민주주의의 참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국민의 뜻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 및 의회의 국민 대표성 문제는 정치행위자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처럼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해서는 공정사회를 이룰 수 없음을 자명하다. 공정사회는 한 사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결정하는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여론조사 결과들은 소수의 특권을 해체하여 공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정치’분야에 가장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분야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치에 대해 공정하기를 바라는 의식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정사회의 참된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 정치행위자에 대한 신뢰 수준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의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활용한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는 교회에서부터 사법시스템까지 여러 기관에 대한 신뢰를 설문하고 있는데 그 중 ‘정치행위자의 정당과 의회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질문에 ‘① a great deal ② quite a lot’의 응답비율을 지수화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정치행위자에 대하여 신뢰하여 정치공정성 의식 수준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2) 부패에 대한 인식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인으로 부패 근절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정치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 여길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정책 사안을 두고 경쟁하는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공정하지 않은 로비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로비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권력과 자금 사이의 음성적인 거래는 정책 결정 과정에의 접근성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강원택,

2011).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집단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고 자원이 열악한 집단들은 이의 활용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사회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1년 1월 4일자에 따르면 국민의 약 30%가 부정부패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심각하게 부패되었다고 여겨지는 직업 유형은 공직 분야(37%)였고, 공직 유형으로는 정치인이 79%, 고위 공직자가 66% 순으로 나타났다(김세원 외, 2011). 이처럼 한국의 국민들이 정치 부문에 대한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특히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주요 정치행위자들이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이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의 부패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공정사회의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제도적 혹은 객관적 공정성이 구현된 국가의 경우에도 일반국민들이 여전히 정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정사회는 구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처럼 국민들이 정치의 부패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OECD 회원국 간 비교를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실시하는 설문 내용 중 '그 나라에 뇌물과 부패가 어느 정도 퍼져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항을 활용한다. 이 질문에 '① Almost no public officials engaged in it ② A few are'의 응답비율을 지수화하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일반국민들이 그 나라의 부패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설문에 대한 2005-2007년 조사 기간의 데이터가 뉴질랜드의 한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1990년대와 2000년대 시기를 비교분석하지 못하고 1994-1999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당시기의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만을 분석하였다.

나. 행정 공정성

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공정사회를 제시하면서 '공정사회 실현'이 주요 국정목표가 됨에 따라 정부 주요부처에서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와 더불어 공정사회 실현의 핵심 주체인 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다. 정부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사법시스템은 법 질서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일반국민들의 신뢰는 공정사회 구현의 초석이 되는 요소이다.

정부 기관을 비롯한 행정서비스, 법을 집행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것은 그 국가의 공정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행정서비스,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통하여 일반국민들이 현재의 공정사회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공정사회를 실현함에 있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역시 그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된다. 공정의식 수준이 높은 국민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에 있어 공정해야함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 행정서비스, 사법시스템의 기관에 대한 신뢰와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행정공정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국제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정부 역할

정부는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정치와 더불어 핵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한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공정사회 실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Rawls가 주장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차등의 원칙’(김세원 외, 2011)을 정부가 실현하고자 할 때 국민들은 정부를 공정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록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얼마나 공정하기를 바라는지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항목을 활용한다. 이에 대하여 ‘① Let anyone come who want to ② Let people come as long as there are jobs available’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와 역할에서 차별적이지 않고 공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관 신뢰

정부를 비롯한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정부 기관과 국민들을 연결시키는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정부 기관들의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Evan, 1996). 즉,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정부 기관들은 정책 수행에 힘을 얻음으로써(박희봉 외, 2003) 차별, 불평등 등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진정한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정부 기관을 비롯한 행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것은 사회 및 국가의 공정성이 떨어짐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증가하므로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Zak & Knack, 2001).

이처럼 공정사회의 국민들은 정부를 포함한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행정서비스의 공정의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의 ‘정부(The Government), 행정 서비스(The Civil service), 사법시스템(Justice System)의 각 기관에 대하여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항을 활용한다. 이에 ① A great deal ② Quite a lot의 응답 비율을 지수화하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기관이 신뢰할 만하고 공정한 곳이라 평가한 것임을 의미한다.

다. 경제 공정성

정치, 행정과 더불어 국민들의 공정성 의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경제이다. 국민 삶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특혜, 예외, 불법, 위법, 부정 등과 같은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행태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없다.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얼마인지, 과세의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재벌 기업과 정치의 정경유착 등 국민들이 인식하는 경제공정성 요소들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경제 공정성에 대한 모든 논의의 바탕에는 저마다 ‘정당한 자기 몫’을 누려야 하고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몫’이 있다는 두 원칙이 깔려 있다. 결국 경제공정성은 개인의 몫에 대한 공정성이다. 개인이 자기 몫을 누릴 권리는 재산권 이므로, 경제적으로 공정한 사회는 한마디로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세원 외, 2011).

이에 본 분석에서는 경제공정성의 의식 수준을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관련 문항 중 탈세에 대한 인식, 경제 주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외국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세금 형평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이다. 또한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로 탈세를 들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부과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동시에 탈세자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불공정한 것이지만 특히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다. 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KDI가 실시한 공정사회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조세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축소·은닉 등의 탈세 방지를 46.3%의 비율로 꼽았다(현오석, 2011). 이처럼 탈세 및 체납으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공정한 사회의 국민일수록 탈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설문 문항 중 ‘탈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항목을 활용하여 이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10점 척도의 응답을 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탈세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경제공정성 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경제 주체에 대한 신뢰

발전국가시대의 한국은 소수의 특정 대기업에게 경제력을 집중시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국가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정경유착, 여론 호도, 정책 왜곡 등 국가운영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은 독점력과 영향력을 남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극심해지게 되는 문제들이 파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통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최정표, 2011).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사회로 환원되기 보다는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극심

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기업을 불신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대기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그 사회의 주요 경제 주체를 통한 경제공정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설문 문항 중 ‘주요기업(Major companies)에 대해 신뢰하느냐’의 문항을 활용하여 ① A great deal, ② Quite a lot’의 응답비율을 지수화하였다. 본 항목의 값이 클수록 주요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국민과 외국인의 고용 우선순위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두 가지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노동 시장은 한편으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라는 외부의 ‘역풍’에 휩싸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 노사관계라는 내부의 ‘혼란’을 경험하였다.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와중에 내부적으로 노사관계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면서 세계화는 노동수요 측면에 그리고 노동운동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시장의 확대와 신제품의 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 경쟁의 격화와 기술의 급변은 일자리 붕괴를 수반했다. 이처럼 세계화는 고용 문제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일자리 창출보다는 소멸효과가 크게 작용해 고용 악화를 초래하였다(김세원 외, 2011).

이러한 상황아래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국민들에게 고용이나 승진 등에 있어 기회균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당사자들이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조건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외국인고용 허가제, 여성 고용 할당제 등의 여러 법적 장치 및 정부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고용에 있어서 외국인보다 자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사회는 기득권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지 못하여 제한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공정사회의 기본 토대에 해당하는 기회균등에 위배된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 경제공정성 수준을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

사 (World Values Survey) 자료의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의 설문 문항을 활용한다. 이에 ‘Disagree’의 응답비율을 지수화하여 값이 클수록 국적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고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사회 공정성

사회공정성은 정치, 행정, 경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공정성의 첫 번째는 성 격차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식이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성 격차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 사회의 공정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사회공정성의 두 번째는 언론자유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다. 언론은 권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독립하여 그것을 감시하거나 그러한 환경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율적인 힘의 실체로서 존재해야 한다(Altschull, 1984). 이를 위해서 언론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한 사회일수록 국민들은 언론 자유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공정성의 세 번째는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개인과 공익의 조화, 사회적 연대, 갈등이 없는 상생 등 공정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사회공정성의 네 번째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이다.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품격있는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는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중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 번영의 기반을 만들며 공적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자발적 복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선진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김태종 외, 2006).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충분히 구축되었을 때 다양한 사회적 갈등 및 공적 갈등과 이를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거리감 등을 줄일 수 있어(장용석 외, 2009) 응집력 있는 사

회, 공정사회로 나아가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처럼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 정당 및 의회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인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 및 행정, 경제 주체들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 격차에 대한 인식, 언론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사회공정성으로 보고 이를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1) 성 격차

성 격차의 문제는 교육, 고용 등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는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이다. Okin(1998)에 의하면 여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충족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매우 고착화되어 교육, 고용 및 정치 참여 등 사회 곳곳의 활동에 있어 여성이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여전하다. 2007년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에서의 여성 합격 비율이 각각 35.2%, 49.0%, 67.7%였으며 주요 언론사의 여성 합격 비율 역시 30%를 훨씬 웃돌았다. 하지만 국가별 남녀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살펴보면, 한국은 2007년에 93개 국 중 64위를 기록, 1위를 차지하였던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의회의 여성점유율은 37.9% 대 13.4%, 행정관리직 여성 비율은 30% 대 8%,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은 50% 대 39%, 성별 소득 격차는 0.77 대 0.40으로 나타났다(주재선, 2008). 또한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한국의 성 격차지수(CGI)는 134개 국 중 104위로 성 격차가 매우 심각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함인희, 2011).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고용 및 교육, 정치적 참여에 있어 성 격차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더욱 고착화되는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고등교육이나 정치리더로써 남성이 여성보다 적합하다고 인식할수록 그 사회는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불공정한 사회라 평가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줄이고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을 때 공정사회가 실현될 수 있음을 주지할 때, 국민들의 성 격차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공정사회 구현의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성 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OECD 국가 간 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의 ‘고등교육 수혜에 대한 성별의 차이’와 ‘정치리더 적합성에 대한 성별의 차이’의 설문 문항을 활용한다. 이에 ‘Disagree’와 ‘Strongly Disagree’ 응답비율을 지수화하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성별에 성 격차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언론의 자유 보장

언론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여론형성이나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기회를 가진다. 따라서 언론이 자신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상대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언론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 한편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이 언론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공표되는 상황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언론 매체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김세원 외, 2011). 반면 한국의 경우 독재 정권시절, 정치적 외압에 의해 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처럼 권력의 도구적 존재로 언론이 활용되었던 시대와 달리 민주주의 시대의 언론은 권력을 가진 세력에 대해 비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언론은 권력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공정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의 ‘여러 응답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설문 문항을 활용한다. 본 설문 문항의 여러 응답지 중 ‘언론자유 보호’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하였으며 그 값이 클수록 다른 사안들 보다 언론의 자유를 중요하게 평가한 것임을 의미한다.

(3) 인권 보호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의 갖

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개별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타인의 경험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관용의 정신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사회는 소수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 이들의 가치와 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이미혜, 2008). 그러나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갈등이 없는 상생, 사회적 연대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상호 공감을 통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공정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을 활용한다. 해당 설문에 대하여 ‘① A great deal of respect for individual human rights ② Fairly much respect’에 응답비율을 지수화하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이 많음을 의미한다.

(4)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인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는 사회적 상호관계에 내재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이는 공통된 목적을 향해 함께 행동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한다(박영미, 2009). Coleman(1988)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공통의 목적을 향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결속됨으로써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충분히 구축되었을 때 다양한 사회적 갈등 및 공적 갈등과 이를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거리감 등을 줄일 수 있어(장용석 외, 2009) 응집력 있는 사회,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는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 정당 및 의회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 및 행정, 경제 주체들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 수준을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이느냐’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① Most people can be trusted’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하였다.

<표 5-1> 공정사회의 의식 분야 및 구성요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데이터 출처
정치 공정성	정치 행위자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²	(E069_12) WVS 1989–1993 V285 WVS 1994–1999 V143 WVS 1999–2004 V154 WVS 2005–2007 V139
		의회에 대한 신뢰 ²	(E069_07) WVS 1981–1984 V144 WVS 1989–1993 V279 WVS 1994–1999 V144 WVS 1999–2004 V155 WVS 2005–2007 V140
행정 공정성	정부 역할	외국인 노동자 규제 ³	(E143) WVS 1994–1999 V134 WVS 1999–2004 V146 WVS 2005–2007 V124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²	(E069_17) WVS 1981–1984 V137 WVS 1989–1993 V275 WVS 1994–1999 V137 WVS 2005–2007 V137
	기관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²	(E069_11) WVS 1989–1993 V289 WVS 1994–1999 V142 WVS 1999–2004 V153 WVS 2005–2007 V138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²	(E069_08) WVS 1981–1984 V145 WVS 1989–1993 V280 WVS 1994–1999 V145 WVS 1999–2004 V156 WVS 2005–2007 V141
경제 공정성	세금 형평	탈세에 대한 인식 ³	(F116) WVS 1981–1984 V194 WVS 1989–1993 V298 WVS 1994–1999 V194 WVS 1999–2004 V206 WVS 2005–2007 V200
	경제 주체 신뢰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²	(E069_13) WVS 1981–1984 V146, WVS 1989–1993 V281, WVS 1994–1999 V146, WVS 1999–2004 V157, WVS 2005–2007 V142
	고용	자국민 고용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³	(C002) WVS 1989–1993 V130 WVS 1994–1999 V63 WVS 1999–2004 V79 WVS 2005–2007 V45
사회 공정성	성 격차	고등 교육수혜의 중요성 ³	(D060) WVS 1994–1999 V103 WVS 1999–2004 V119 WVS 2005–2007 V62
		정치리더의 적합성 ³	(D059) WVS 1994–1999 V101 WVS 1999–2004 V118 WVS 2005–2007 V61
	언론 자유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 ³	(E003) WVS 1990: V259, V260 / WVS 1995: V106, V107 / WVS 2000: V122, V123 / WVS 2005 V71, V72
	인권보호	인권의 중요성 인식 ²	(E124) WVS 2000: V173 / WVS 2005 V. 164
	사회 구성원 신뢰	일반인에 대한 신뢰 ²	(A165) WVS 1981–1984 V146 WVS 1989–1993 V281 WVS 1994–1999 V146 WVS 1999–2004 V157 WVS 2005–2007 V142

주¹⁾ 본 자료의 질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에게 현재 각 나라의 국가가 얼마나 공정한 상태인지 물어보는 질문과 더불어 이상적인 공정사회를 위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이를 구분함.

주²⁾ 공정사회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질문임.

주³⁾ 이상적인 공정사회를 위해 기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임.

이와 같이 공정사회의 국민의식을 국제 비교하기 위하여 공정의식의 분야를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1990년대와 2000년대⁹⁾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설문 항목에 따라 1994-1999 wave, 1999-2004 wave, 2005-2007 wave의 응답 국가 수가 매 시기 다르기 때문에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두 시기별로 나누어 시기 변화에 따른 공정의식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때 OECD 국가들의 국제 비교를 위하여 각각의 질문마다 그 응답을 0에서 1사이의 표준화된 값으로 지수화하여 공정의식 수준을 국가별로 순위화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자료는 여러 국가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만 조사한 시기마다 조사에 응한 국가들이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응답 국가의 데이터가 일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순위를 비교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각 시기마다의 순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정의식 순위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에는 주의가 요망되며, 해당 시기마다 평균을 참고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치공정성 분석

공정의식의 분야 중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공정성이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아래 정당 및 의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그 국민들의 공정의식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본 분석을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정치행위자, 정당 및 의회 신뢰에 관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 시기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내용은 1990년대의 데이터만 존재하고 있어 이 시기의 상대적 순위만을 살펴보았다.

9) 인권에 대한 인식 항목만 1990년대의 데이터가 1999-2004 wave이고 다른 항목의 1990년대 데이터는 1994-1999 wave이다.

가. 정당에 대한 신뢰

다음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당에 대한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두 시기에 나타난 순위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는 19개 국가들 중 9위로 평균 이상의 정당 신뢰 수준을 보였지만 2000년대에는 21개 국가들 중 16위로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멕시코 역시 1990년대에는 가장 높은 정당 신뢰 수준을 보였지만 2000년대에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 중위권으로 떨어졌다. 반면 스페인과 핀란드의 경우 1990년대에는 평균 이하의 낮은 신뢰 수준을 나타냈지만 2000년대에는 두 국가 모두 평균 이상의 3위권으로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두 시기 모두 정당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신뢰 수준을 나타냈다.

스웨덴,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정당에 대한 신뢰 수준이 상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폴란드, 독일, 뉴질랜드는 두 시기 모두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정치공정성 중 정당에 대한 신뢰 국제 비교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Mexico	0.35	1	Sweden	0.33	0.05
2	Norway	0.33	1	Turkey	0.33	0.05
3	Sweden	0.28	3	Finland	0.29	0.16
3	Turkey	0.28	3	Norway	0.29	-0.04
3	Switzerland	0.28	3	Spain	0.29	0.10
6	Korea	0.25	6	Switzerland	0.28	0.00
7	Chile	0.24	7	Mexico	0.24	-0.11
8	Slovak Republic	0.23	7	Korea	0.24	-0.01
9	United States	0.22	9	Canada	0.23	.
평균		0.21	9	Netherlands	0.23	.
10	Hungary	0.20	평균		0.21	0.00
11	Japan	0.19	11	Chile	0.19	-0.05
11	Spain	0.19	12	Japan	0.18	-0.01
13	Australia	0.16	12	United Kingdom	0.18	.
14	Czech Republic	0.15	14	Italy	0.17	.
15	Finland	0.13	15	France	0.16	.
15	Poland	0.13	16	United States	0.15	-0.07
17	Germany	0.12	16	New Zealand	0.15	0.09
18	New Zealand	0.06	18	Australia	0.14	-0.02
.	.	.	19	Germany	0.13	0.01
.	.	.	20	Poland	0.07	-0.06

주¹⁾) 해당 wave 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나. 의회에 대한 신뢰

OECD 국가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국제 비교함으로써 공정의식 수준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의 의회 신뢰 수준은 2000년대 들어서도 순위의 변화 없이 최상위권을 유지하였다. 멕시코, 칠레의 경우 1990년대에는 평균 이상의 의회 신뢰 수준을 나타냈으나 2000년대에는 평균 이하로 대폭 떨어졌다. 폴란드의 경우 의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크게 떨어진 국가이다. 반면 핀란드, 뉴질랜드의 경우 2000년대에 의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크게 향상된 국가들이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신뢰수준의 상승폭이 가장 커 21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핀란드는 정당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매우 높아져 정치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3> 정치공정성 중 의회에 대한 신뢰 국제 비교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Norway	0.69	1	Norway	0.62	-0.07
2	Turkey	0.49	2	Turkey	0.60	0.11
3	Switzerland	0.47	3	Switzerland	0.57	0.10
4	Sweden	0.45	4	Finland	0.56	0.25
4	Mexico	0.45	5	Sweden	0.55	0.10
6	Hungary	0.39	6	Spain	0.51	0.14
7	Chile	0.38		평균	0.37	0.01
8	Spain	0.37	7	Canada	0.37	
	평균	0.36	8	United Kingdom	0.36	
9	Poland	0.35	9	France	0.35	
10	Finland	0.31	9	Australia	0.35	0.04
10	Korea	0.31	9	New Zealand	0.35	0.20
10	Slovak Republic	0.31	12	Italy	0.33	
10	Australia	0.31	13	Netherlands	0.29	
14	United States	0.30	14	Chile	0.26	-0.12
15	Japan	0.26	14	Korea	0.26	-0.05
16	Germany	0.23	16	Mexico	0.25	-0.20
17	Czech Republic	0.20	17	Japan	0.23	-0.03
18	New Zealand	0.15	18	Germany	0.22	-0.01
.	.	.	19	United States	0.20	-0.10
.	.	.	20	Poland	0.12	-0.23

주¹⁾ 해당 wave 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함께 분석해보았다. 두 설문 문항의 질문 내용과 응답 척도가 같기 때문에 정당과 의회의 정치 주체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5-4> 세계 가치관 조사의 정당 및 의회에 대한 질문 내용 및 척도

질문: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V 138 The government (in your nation's capital)

A great deal / Quite a lot / Not very much / None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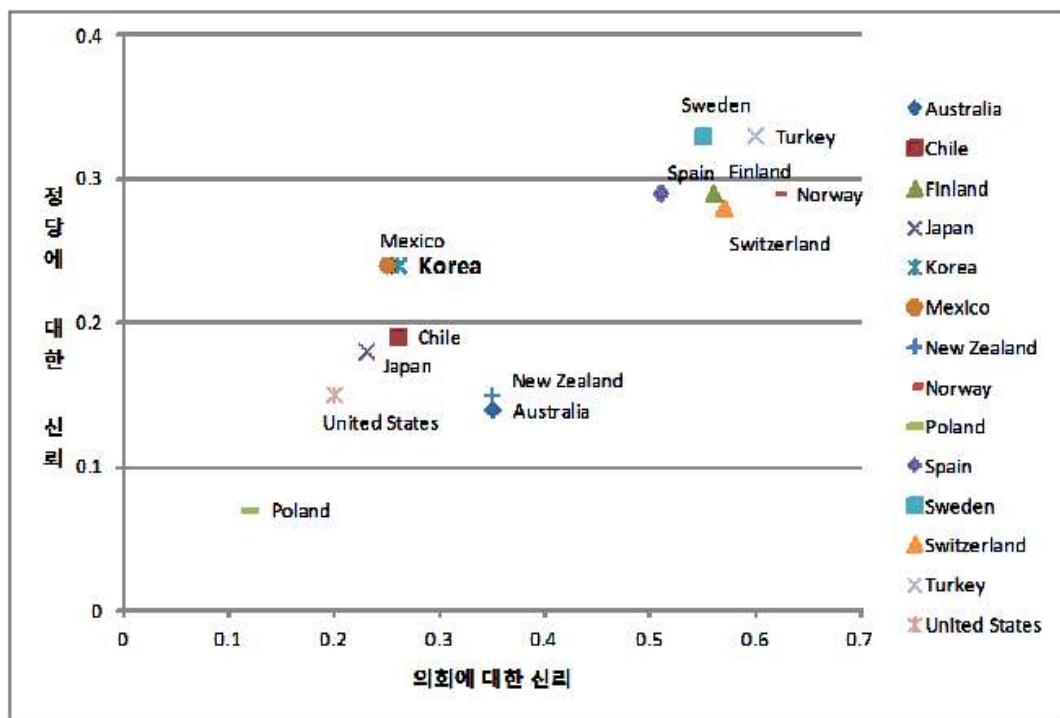
V 141 The Civil service

A great deal / Quite a lot / Not very much / None at all

분석 결과 정당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기관의 신뢰에 대한 질문 내용과 응답 척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관의 신뢰 수준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국민들은 정당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회에 대한 신뢰는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들에서 0.7 수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당에 대한 신뢰는 0.4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나 멕시코의 경우 정당에 대한 신뢰 수준이 비슷한 스위스,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의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현격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수준 격차는 크지 않지만 의회에 대한 신뢰수준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 정당에 대한 신뢰와 의회에 대한 신뢰 비교



주) 정당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다. 반부패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치가 어느 정도 부패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응답 내용을 활용하였다. 본 설문 항목에 대하여 ① Almost no public officials engaged in it, ② A few are’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공정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5-5> 세계 가치관 조사의 반부패에 대한 질문 내용 및 척도

질문 : How widespread do you think bride taking and corruption is in this country?

- ① Almost no public officials engaged in it
 - ② A few are
 - ③ Most are
 - ④ Almost all public officials are engaged in it
-

그러나 반부패에 대한 인식에 관한 데이터가 2000년대의 경우 뉴질랜드만 존재하여 1990년대의 데이터만 가지고 국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국민들은 정치 부패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멕시코 국민들은 정치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6> 반부패에 대한 인식 OECD 국제 비교(1994-1999w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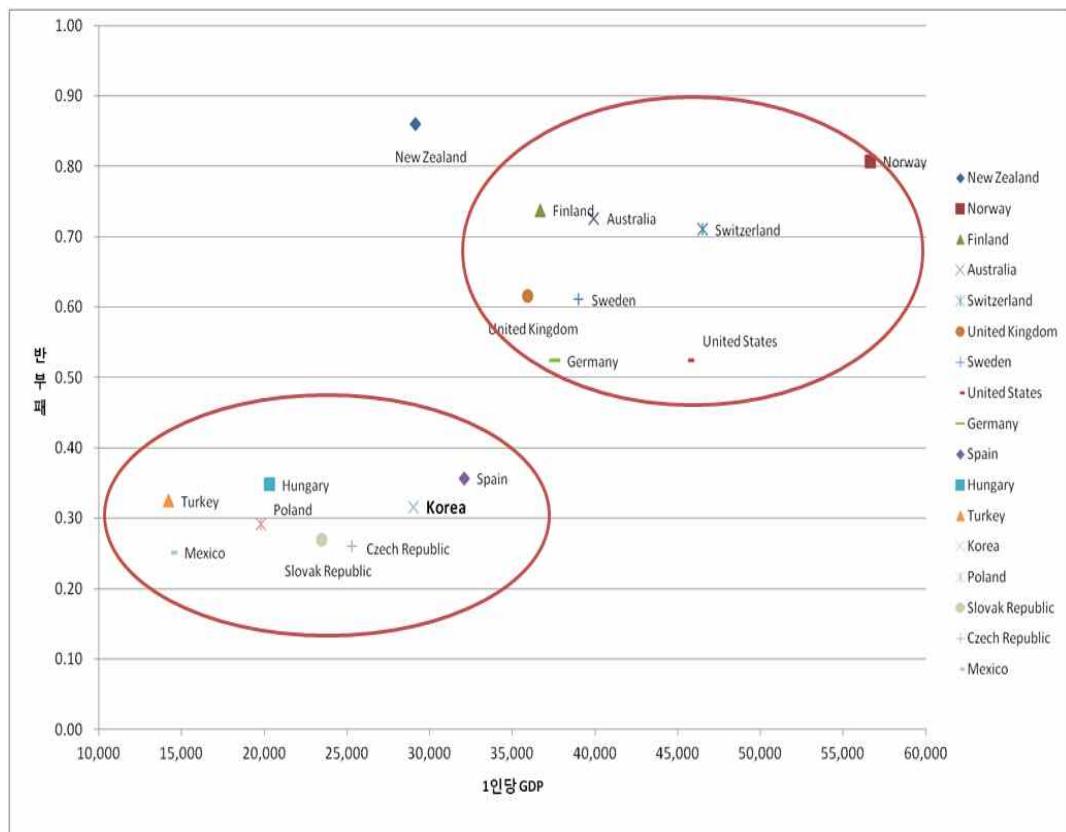
순위	국가명	1994-1999
1	New Zealand	0.86
2	Norway	0.81
3	Finland	0.74
4	Australia	0.73
5	Switzerland	0.71
6	United Kingdom	0.62
7	Sweden	0.61
8	Chile	0.55
9	United States	0.52
9	Germany	0.52
평균		0.50
11	Spain	0.36
12	Hungary	0.35
13	Turkey	0.32
13	Korea	0.32
15	Poland	0.29
16	Slovak Republic	0.27
17	Czech Republic	0.26
18	Mexico	0.25

주) 1994-1999 wave 지수 순

정치부패 정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각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부패 정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데이터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의 2005-2007 wave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시기 2005년 기준 1인당 GDP¹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5-2>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국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치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은 선진국의 국민들보다 정치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0) International Geary - Khamis dollar,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림 5-2> 1인당 GDP 대비 분석 : 반부패



주¹⁾) 반부패는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주²⁾) 반부패에 대한 인식은 2005-2007 wave, 1인당 GDP 2005년 기준

라. 정치공정성 종합

OECD 국가들의 정치공정성에 대한 의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 두 시기 모두 데이터가 있는 총 15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핀란드가 정당 및 의회의 신뢰 수준이 2000년대 들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전체 정치공정성 수준 역시 평균 이하의 하위권 그룹에 속해있었던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평균 이상의 상위권 그룹으로 대폭 상승하게 되었다.

반면 멕시코, 칠레, 미국, 폴란드는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정치공정성의 수준이 낮아졌다. 터키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이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보다 훨

씬 낮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선진국에 벼금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7> 정치공정성 OECD 국제 비교

순위	국가명	1990년대	순위	국가명	2000년대	변동폭
1	Norway	1.02	1	Turkey	0.93	0.16
2	Mexico	0.80	2	Norway	0.91	-0.11
3	Turkey	0.77	3	Sweden	0.88	0.15
4	Switzerland	0.75	4	Finland	0.85	0.41
5	Sweden	0.73	5	Switzerland	0.85	0.10
6	Chile	0.62	6	Spain	0.80	0.24
평균		0.58	평균		0.60	0.02
7	Korea	0.56	7	Korea	0.50	-0.06
7	Spain	0.56	7	New Zealand	0.50	0.29
9	United States	0.52	9	Australia	0.49	0.02
10	Poland	0.48	9	Mexico	0.49	-0.31
11	Australia	0.47	11	Chile	0.45	-0.17
12	Japan	0.45	12	Japan	0.41	-0.04
13	Finland	0.44	13	Germany	0.35	0.00
14	Germany	0.35	13	United States	0.35	-0.17
15	New Zealand	0.21	15	Poland	0.19	-0.29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3. 행정공정성 분석

행정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 국가의 공정사회 수준을 가늠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OECD 국가들의 행정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4가지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분야는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 구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반영하는 질문이다. 두 번째는 기관신뢰로써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파악하여 각 국가들의 행정공정성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는 현재 각 국가들이 공정수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즉, 행정공정성에 관한 국제 비교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인식,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을 분석하였다.

가. 정부 역할 :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인식

행정공정성의 첫 번째 내용은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는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① Let anyone come who want to, ② Let people come as long as there are jobs available' 항목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공정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5-8>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정부 역할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Spain	0.72	1	Switzerland	0.73	0.15
2	Chile	0.62	2	Sweden	0.71	0.29
2	Mexico	0.62	3	Korea	0.62	0.08
4	New Zealand	0.59	4	Australia	0.60	0.03
5	Switzerland	0.58	5	Mexico	0.57	-0.05
6	Australia	0.57	5	Chile	0.57	-0.05
7	Germany	0.56	5	Italy	0.57	.
8	Korea	0.54	5	Norway	0.57	0.10
9	Japan	0.50	9	Canada	0.55	.
평균		0.48	9	Spain	0.55	-0.17
10	Norway	0.47	평균		0.55	0.07
11	Sweden	0.42	11	Turkey	0.51	0.10
12	Turkey	0.41	12	Germany	0.50	-0.06
13	Finland	0.40	13	Finland	0.49	0.09
14	Czech Republic	0.38	14	Poland	0.48	0.14
14	United States	0.38	15	New Zealand	0.47	-0.12
16	Slovak Republic	0.34	16	Japan	0.45	-0.05
16	Poland	0.34	17	United States	0.42	0.04
18	Hungary	0.26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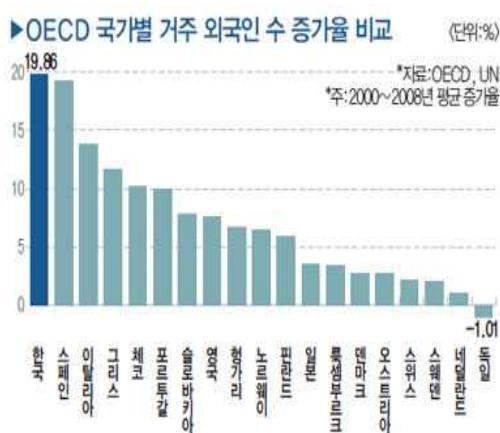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이 분야의 의식 수준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의 순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과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에는 중위권이었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위 그룹으로 상승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대폭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상위그룹에 위치했던 국가들인 스페인과 뉴질랜드는 평균 이하의 하위권 그룹으로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우 큰 순위 상승폭을 보였다. 1990년대에는 18개 국가들 중 8위였지만 2000년대에는 17개 국가들 중 3위를 차지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규제에 대하여 유연하게 사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기보다는 가능한 일하도록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 사회 구성원들의 공정의식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기준으로 198천명의 외국인 노동자(전체 고용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0.8%)가 고용되어 있어 OECD 국가들 중 외국인 고용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의 거주 외국인의 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 역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3> OECD 국가별 거주 외국인 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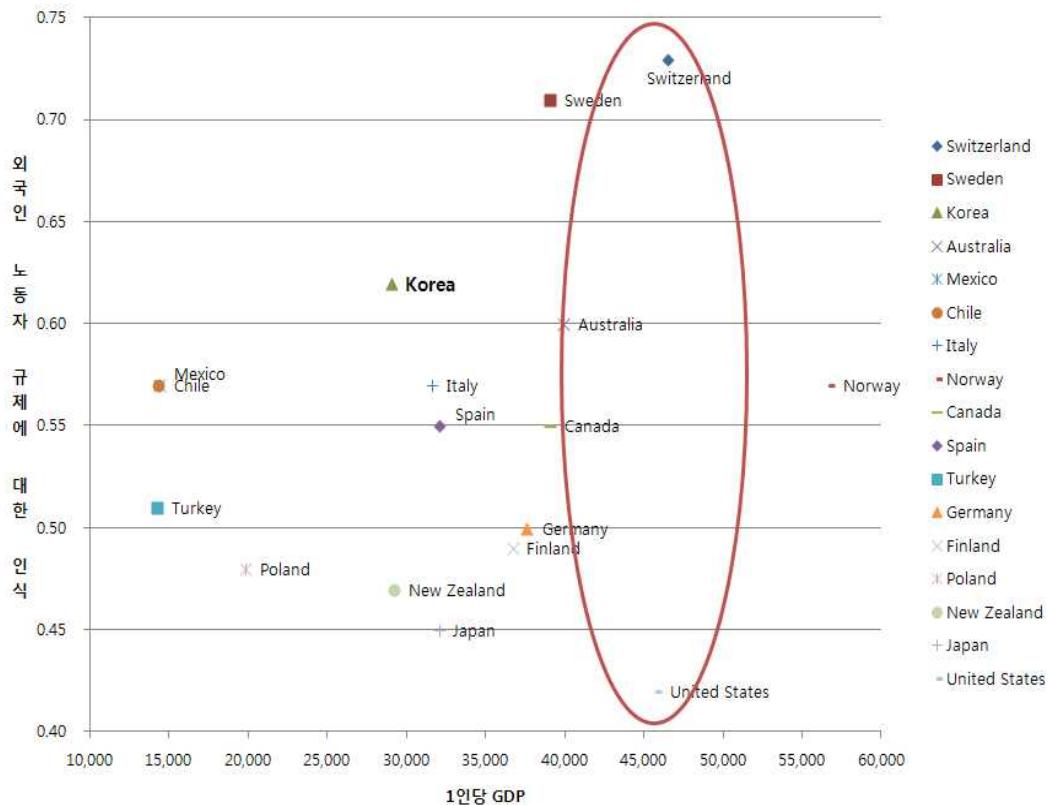
출처: 국내 다문화 사회의 불균형 성장
(매경이코노미 제1585호 2010.12.15일자)

<그림 5-4> OECD 회원국 외국인 노동자 현황



출처: 외국인노동자 비율 OECD최저
(연합뉴스 2008.08.24일자)

<그림 5-5> 1인당 GDP 대비 분석 :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인식



주¹)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주²)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인식은 2005-2007 wave, 1인당 GDP 2005년 기준임.

반면 뉴질랜드, 독일, 일본은 1990년대에는 평균 이상의 공정의식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는 오히려 평균 이하의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다른 분야들에서 주로 하위권을 차지하였던 칠레, 멕시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평균 이상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노르웨이, 캐나다 등 선진국에 버금가는 공정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세계 여러 국가들 중 미국은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즉,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미국과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미국이 가장 낮은 수준의 공정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국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공정의식을 보이는 국가도 있으며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정의식을 보이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관신뢰 :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두 번째로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행정공정성 수준을 국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은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대와 2000년대 상하위권 국가들간의 순위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법시스템에 대해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일본, 노르웨이, 핀란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1990년대에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는 그 신뢰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떨어진 국가들은 한국, 폴란드, 칠레, 멕시코였다. 2000년대의 하위권 국가들을 보면 평균 이하의 하위권이라 해도 1990년대보다는 그 수치가 상승한 국가들이 많았다. 한국, 멕시코, 폴란드, 칠레의 국가들만 예전보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이 하락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평균이상의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평균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이다. 사법시스템은 공정사회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것은 사회 및 국가의 공정성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사법시스템 신뢰 수준이 하락했다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9>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Japan	0.80	1	Norway	0.86	0.16
2	Norway	0.70	2	Japan	0.82	0.02
3	Finland	0.69	2	Finland	0.82	0.13
4	Turkey	0.68	4	Switzerland	0.77	0.09
4	Switzerland	0.68	5	Turkey	0.75	0.07
6	Sweden	0.63	6	Sweden	0.74	0.11
7	Korea	0.59	7	Canada	0.66	.
평균		0.54	8	United Kingdom	0.61	.
8	Poland	0.53	평균		0.60	0.06
9	Spain	0.47	9	United States	0.58	0.21
9	New Zealand	0.47	10	Germany	0.56	0.12
11	Chile	0.45	10	Spain	0.56	0.09
12	Germany	0.44	12	Australia	0.54	0.19
13	Mexico	0.41	13	Italy	0.52	.
14	United States	0.37	14	Korea	0.50	-0.09
15	Australia	0.35	15	New Zealand	0.47	0.00
.	.	.	16	Netherlands	0.44	.
.	.	.	17	France	0.40	.
.	.	.	18	Mexico	0.38	-0.03
.	.	.	19	Poland	0.33	-0.20
.	.	.	20	Chile	0.30	-0.15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다. 기관신뢰 :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을 분석한 결과 노르웨이, 스위스, 칠레, 터키가 상위권에 위치하여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으며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가 1990년대, 2000년대 모두 낮은 정부 신뢰 수준을 보였다.

폴란드의 경우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낮아져 변동폭뿐만 아니라 순위 역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핀란드, 스페인, 뉴질랜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이전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정부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Norway	0.66	1	Switzerland	0.69	0.15
2	Switzerland	0.54	2	Finland	0.64	0.32
3	Chile	0.53	3	Turkey	0.63	0.16
4	Turkey	0.47	4	Norway	0.54	-0.12
5	Korea	0.44	5	Chile	0.48	-0.05
5	Hungary	0.44	6	Korea	0.46	0.02
7	Slovak Republic	0.43	7	Spain	0.45	0.14
8	Sweden	0.42	7	Mexico	0.45	0.03
8	Mexico	0.42	9	Sweden	0.42	0.00
평균		0.39	10	New Zealand	0.41	0.25
10	Poland	0.39	평균		0.41	0.02
11	Japan	0.32	11	Australia	0.40	0.14
11	Finland	0.32	12	United States	0.39	0.08
13	Spain	0.31	13	Canada	0.38	.
13	United States	0.31	14	United Kingdom	0.34	.
13	Czech Republic	0.31	15	Japan	0.31	-0.01
16	Australia	0.26	16	France	0.29	.
17	Germany	0.21	17	Netherlands	0.27	.
18	New Zealand	0.16	18	Italy	0.26	.
.	.	.	19	Germany	0.24	0.03
.	.	.	20	Poland	0.18	-0.21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으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도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 한 채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한국, 칠레의 경우 사법시스템의 신뢰 수준은 매우 낮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라. 기관신뢰 :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함께 살펴보면 한국의 국

민들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뉴질랜드는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2000년대 들어 높아진 것처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매우 높아졌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1990년대에는 18개 국가들 중 17위를 차지하여 최하위권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20개의 국가들 중 5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반면 멕시코는 행정서비스 신뢰 수준에 있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 2000년대에는 20개 국가들 중 19위를 차지하였다. 폴란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하위권에 머물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에 평균 이상의 신뢰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평균 이하로 대폭 하락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 역시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1>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Korea	0.78	1	Switzerland	0.68	0.18
2	Turkey	0.67	2	Sweden	0.66	0.21
3	Hungary	0.52	3	Korea	0.63	-0.15
4	United States	0.51	4	Norway	0.61	0.10
4	Norway	0.51	5	Finland	0.60	0.26
6	Switzerland	0.50	6	Canada	0.56	.
7	Chile	0.46	7	Turkey	0.55	-0.12
	평균	0.46	8	France	0.54	.
8	Sweden	0.45	9	United Kingdom	0.46	.
8	Germany	0.45		평균	0.46	0.00
10	Mexico	0.43	10	New Zealand	0.44	0.15
11	Spain	0.42	11	United States	0.43	-0.08
12	Slovak Republic	0.40	12	Spain	0.41	-0.01
13	Czech Republic	0.39	12	Italy	0.41	.
14	Australia	0.38	14	Australia	0.40	0.02
14	Japan	0.38	15	Chile	0.36	-0.10
16	Poland	0.35	16	Japan	0.33	-0.05
17	Finland	0.34	17	Germany	0.32	-0.13
18	New Zealand	0.29	18	Netherlands	0.31	.
.	.	.	19	Mexico	0.25	-0.18
.	.	.	20	Poland	0.18	-0.17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마. 행정공정성 종합

OECD 국가들의 행정공정성 수준을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총 15개 국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르웨이, 스위스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여 행정공정성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위스의 행정공정성 의식 지수를 보면 1990년대에는 상위권 국가들과의 지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2000년대에는 상위권 국가들과의 지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의식 개선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폴란드, 독일, 멕시코의 경우 1990년대에는 평균에 못 미치는 행정공정성 의식 수준을 보였음에도 2000년대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1990년대에는 상위권 그룹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15개 국가들 중 12위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았으나 사법시스템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최하위권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핀란드는 정치공정성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승한 것처럼 행정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역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도 1990년대보다는 행정공정성의 의식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12> 행정공정성 OECD 국제 비교

순위	국가명	1990년대	순위	국가명	2000년대	변동폭
1	Korea	2.35	1	Switzerland	2.87	0.57
2	Norway	2.34	2	Norway	2.58	0.24
3	Switzerland	2.30	3	Finland	2.55	0.80
4	Turkey	2.23	4	Sweden	2.53	0.61
5	Chile	2.06	5	Turkey	2.44	0.21
6	Japan	2.00	6	Korea	2.21	-0.14
7	Sweden	1.92		평균	2.05	0.14
7	Spain	1.92	7	Spain	1.97	0.05
	평균	1.91	8	Australia	1.94	0.38
9	Mexico	1.88	9	Japan	1.91	-0.09
10	Finland	1.75	10	United States	1.82	0.25
11	Germany	1.66	11	New Zealand	1.79	0.28
12	Poland	1.61	12	Chile	1.71	-0.35
13	United States	1.57	13	Mexico	1.65	-0.23
14	Australia	1.56	14	Germany	1.62	-0.04
15	New Zealand	1.51	15	Poland	1.17	-0.44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4. 경제공정성 분석

경제공정성은 국민 삶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특혜, 불법, 부정 등과 같이 왜곡된 행태들이 정당화될 때 야기되는 국민들의 불만, 불신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공정사회 구현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경제공정성의 내용을 OECD 국가들의 세금형평에 대한 인식, 경제 주체에 대한 신뢰, 고용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구성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가. 세금 형평 : 탈세에 대한 인식

첫 번째, 국민들이 탈세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바탕으로 경제에 관한 공정 의식 수준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 구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반영한다. 값이 클수록 탈세를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므로 공정의식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5-13> 탈세에 대한 의식 변화(1994-1999년/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Japan	9.61	1	Turkey	9.72	.
2	United States	9.47	2	Japan	9.66	0.05
3	Korea	9.41	3	Korea	9.47	0.06
4	Spain	9.30	4	Canada	9.40	.
5	Hungary	9.18	5	Chile	9.26	0.14
6	New Zealand	9.17	6	Australia	9.25	0.08
6	Australia	9.17	6	United States	9.25	-0.22
8	Chile	9.12	8	Switzerland	9.24	0.23
9	Finland	9.10		평균	9.21	0.14
	평균	9.07	9	New Zealand	9.18	0.01
10	Poland	9.01	9	Mexico	9.18	0.47
10	Switzerland	9.01	11	Finland	9.17	0.07
12	Sweden	8.87	12	Spain	9.14	-0.16
13	Norway	8.85	12	Netherlands	9.14	.
13	Germany	8.85	14	Hungary	9.12	-0.06
15	Czech Republic	8.72	15	United Kingdom	9.08	.
16	Mexico	8.71	16	Germany	9.06	0.21
17	Slovak Republic	8.55	17	Sweden	9.03	0.16
.	.	.	18	Norway	9.02	0.17
.	.	.	19	Poland	8.96	-0.05
.	.	.	20	France	8.88	.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

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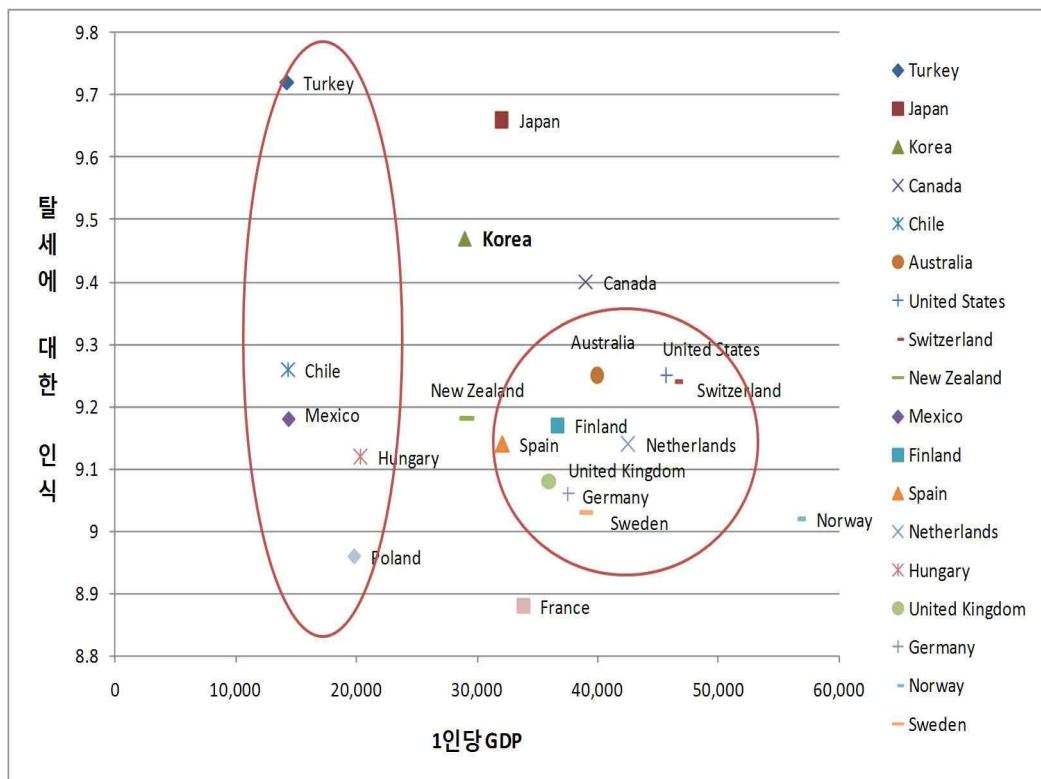
분석 결과 일본과 한국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두 시기 모두 탈세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 높은 공정의식 수준을 보였다. 반면 다른 분야들에서 높은 공정의식 수준을 보였던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탈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두 시기 모두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두 국가는 후술할 경제공정성의 다른 내용 즉,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및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탈세에 대한 의식 수준은 유독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들어 탈세에 대한 의식 수준이 크게 변화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멕시코가 이에 대한 의식 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1990년대에 총 17개의 비교 국가들 중 16위를 차지하여 낮은 공정의식 수준을 보였지만 2000년대에 0.47이라는 가장 큰 변화폭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의식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칠레와 스위스는 1990년대에 평균 이하의 공정의식 수준을 보였지만 2000년대에는 평균 이상의 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이에 대한 의식 수준이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미국이다. 순위의 변화는 2위에서 6위로 평균 이상의 공정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지수의 변화로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 -0.22를 기록하였다. 스페인과 헝가리 역시 1990년대에는 상위권에 위치하여 공정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였지만 2000년대에는 평균 이하로 그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탈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OECD 국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의 분석은 탈세에 대한 의식 수준 데이터가 2005-2007 wave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시기 2005년 기준 1인당 GDP¹¹⁾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인당 GDP가 높지 않은 국가들은 탈세에 대한 인식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11) International Geary - Khamis dollar,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림 5-6> 1인당 GDP 대비 분석 : 탈세에 대한 인식



주¹⁾) 탈세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주²⁾) 탈세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1인당 GDP 2005년 기준임.

나. 경제 주체 신뢰 :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두 번째 경제주체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통하여 경제공정성 수준을 국제비교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주요기업(major companies)에 대한 신뢰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폴란드, 스페인은 1990년대에 평균 이상의 신뢰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는 평균 이하의 신뢰 수준으로 떨어졌다. 칠레, 독일, 멕시코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여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4>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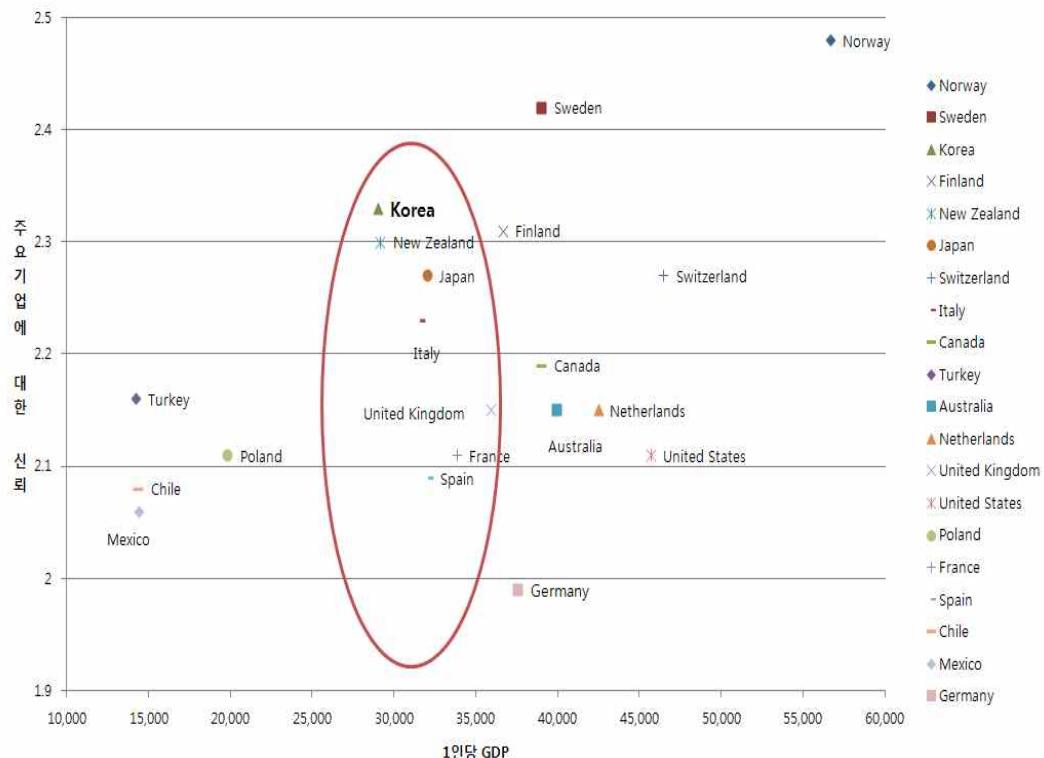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Sweden	2.52	1	Norway	2.48	-0.04
1	Norway	2.52	2	Sweden	2.42	-0.10
3	Australia	2.42	3	Korea	2.33	0.21
4	Finland	2.37	4	Finland	2.31	-0.06
5	United States	2.35	5	New Zealand	2.30	0.01
6	Poland	2.33	6	Japan	2.27	0.02
7	New Zealand	2.29	6	Switzerland	2.27	0.02
8	Spain	2.27	8	Italy	2.23	.
9	Switzerland	2.25		평균	2.20	-0.05
	평균	2.25	9	Canada	2.19	.
9	Japan	2.25	10	Turkey	2.16	0.00
11	Czech Republic	2.20	11	Australia	2.15	-0.27
12	Turkey	2.16	11	Netherlands	2.15	.
12	Chile	2.16	11	United Kingdom	2.15	.
14	Slovak Republic	2.13	14	United States	2.11	-0.24
15	Korea	2.12	14	Poland	2.11	-0.22
16	Hungary	2.05	14	France	2.11	.
17	Germany	2.04	17	Spain	2.09	-0.18
17	Mexico	2.04	18	Chile	2.08	-0.08
.	.	.	19	Mexico	2.06	0.02
.	.	.	20	Germany	1.99	-0.05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크게 향상된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역시 변화폭에 있어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0.01~0.02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었고 한국은 0.21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 경제주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단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7> 1인당 GDP 대비 분석 :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주¹⁾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값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주²⁾ 주요기업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1인당 GDP 2005년 기준임.

다.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 자국민과 외국인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은 고용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을 두는지의 여부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하였다. 값이 클수록 공정 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 구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반영한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그룹의 국가들과 하위권 그룹의 국가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매우 높은 공정의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칠레, 일본, 폴란드, 한국, 멕시코는 2000년대가 되어도 하위권에 속하고 있어 자국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의식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1990년대에는 총 20개의 국가 중 2위로 최상위 그룹에 속해있었는데 2000년대에는 평균이하의 11위로 떨어졌으며 지수 변화 역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독일, 미국 역시 평균 이상의 공정의식 수준을 보였지만 2000년대에는 평균이하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 스페인, 핀란드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OECD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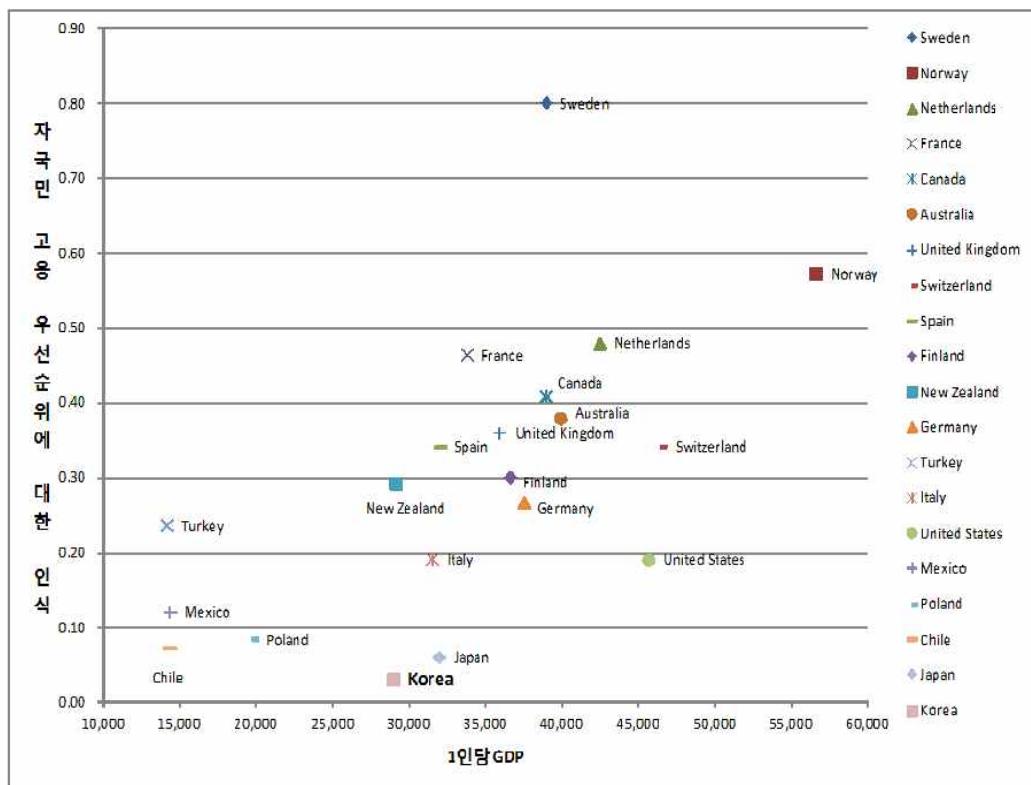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Sweden	0.74	1	Sweden	0.80	0.06
2	Norway	0.51	2	Norway	0.57	0.06
2	New Zealand	0.51	3	Netherlands	0.48	.
4	Australia	0.49	4	France	0.46	.
5	United Kingdom	0.39	5	Canada	0.41	0.02
5	Canada	0.39	6	Australia	0.38	-0.11
7	Germany	0.34	7	United Kingdom	0.36	-0.03
8	United States	0.31	8	Switzerland	0.34	0.12
평균		0.24	8	Spain	0.34	0.21
9	Switzerland	0.22	10	Finland	0.30	0.12
10	Finland	0.18		평균		0.30
10				0.06		
11	Turkey	0.17	11	New Zealand	0.29	-0.22
12	Spain	0.13	12	Germany	0.27	-0.07
13	Japan	0.10	13	Turkey	0.24	0.07
14	Chile	0.09	14	Italy	0.19	.
15	Hungary	0.05	14	United States	0.19	-0.12
15	Poland	0.05	16	Mexico	0.12	0.12
17	Slovak Republic	0.04	17	Poland	0.08	0.03
18	Czech Republic	0.03	18	Chile	0.07	-0.02
18	Korea	0.03	19	Japan	0.06	-0.04
20	Mexico	0.00	20	Korea	0.03	0.00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에서는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공정 의식 수준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5-8> 1인당 GDP 대비 분석 :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주¹⁾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주²⁾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1인당 GDP 2005년 기준임.

라. 경제공정성 종합

탈세에 대한 인식,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OECD 국가들의 경제공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상, 하위권에 있는 국가들 사이의 순위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가 경제공정성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국가들은 10년 이상의 시간 경과

에도 경제공정성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칠레, 폴란드, 한국의 경제공정성 의식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낮은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경제공정성 순위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미국은 2000년대 들어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탈세에 대한 인식,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수준이 2000년대 들어 모두 떨어지고 있어 경제공정성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스위스, 핀란드는 1990년대에는 평균이하의 의식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는 평균이상의 의식 수준을 보였다.

<표 5-16> 경제공정성 OECD 국제 비교

순위	국가명	1990년대	순위	국가명	2000년대	변동폭
1	Sweden	2.26	1	Sweden	2.31	0.05
2	Norway	2.03	2	Norway	2.09	0.06
3	Australia	2.02	3	Australia	1.85	-0.17
4	New Zealand	2.00	4	Switzerland	1.83	0.15
5	United States	1.85	5	Finland	1.80	0.12
평균		1.75	6	New Zealand	1.79	-0.21
6	Germany	1.74		평균	1.75	0.00
7	Switzerland	1.68	7	Spain	1.77	0.14
7	Finland	1.68	8	Germany	1.68	-0.06
9	Spain	1.63	9	United States	1.65	-0.20
10	Japan	1.62	10	Japan	1.60	-0.02
11	Chile	1.54	11	Mexico	1.56	0.18
12	Poland	1.53	12	Korea	1.56	0.06
13	Korea	1.50	13	Chile	1.52	-0.02
14	Mexico	1.38	14	Poland	1.51	-0.02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5. 사회공정성 분석

OECD 국가들의 사회공정성 수준을 국제비교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수혜 및 정치리더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는지, 다른 요소보다 언론 자유 보호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인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일반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다섯 가지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가. 성 격차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정치리더의 성별 적합성에 대한 인식

이는 고등교육을 이수하거나 정치리더를 선출하는데 있어 성별의 차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척도를 평균화하였다. 값이 클수록 공정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 구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반영한다.

OECD 국가들의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치리더의 성별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았을 때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두 분야의 상 하위권 그룹 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도 큰 변화 없이 그 수준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높은 공정의식을 보였다. 반면 일본, 한국은 두 기간 모두 이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 여전히 교육 및 요직 선출에 대하여 성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분야에 있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국가는 스페인이었다. 그 만큼 성 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에 있어서는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의식 수준이 크게 개선된 반면, 성 격차 인식에 있어서는 2000년대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성 격차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Sweden	3.66	1	Norway	3.82	0.22
2	Norway	3.60	2	France	3.65	.
3	Finland	3.45	3	Sweden	3.54	-0.12
4	Germany	3.26	4	Switzerland	3.44	.
5	New Zealand	3.22	5	Spain	3.40	0.36
6	Australia	3.13	6	Canada	3.36	.
평균		3.12	7	New Zealand	3.33	0.11
7	United States	3.07	8	Australia	3.31	0.18
8	Chile	3.06	9	Finland	3.29	-0.16
9	Spain	3.04	9	Germany	3.29	0.03
10	Turkey	2.93	평균		3.26	0.14
11	Mexico	2.77	11	United States	3.23	0.16
12	Korea	2.68	11	Turkey	3.23	0.30
13	Japan	2.64	13	United Kingdom	3.22	.
.	.	.	14	Poland	3.04	.
.	.	.	15	Korea	2.96	0.28
.	.	.	16	Chile	2.89	-0.17
.	.	.	17	Mexico	2.88	0.11
.	.	.	18	Japan	2.85	0.21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표 5-18>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성별 적합성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Norway	3.41	1	Norway	3.45	0.04
2	Sweden	3.33	2	Sweden	3.31	-0.02
3	Finland	3.20	3	Spain	3.24	0.35
4	Germany	3.13	4	Switzerland	3.20	.
5	New Zealand	2.95	4	France	3.20	.
6	Australia	2.90	6	Germany	3.15	0.02
7	Spain	2.89	7	Canada	3.08	.
8	United States	2.76	8	Finland	3.03	-0.17
	평균	2.69	9	New Zealand	2.99	0.04
9	Chile	2.60	10	United Kingdom	2.93	.
10	Mexico	2.56		평균	2.92	0.23
11	Czech Republic	2.43	11	Australia	2.91	0.01
12	Hungary	2.41	12	United States	2.86	0.10
13	Japan	2.35	13	Mexico	2.81	0.25
14	Korea	2.27	14	Chile	2.58	-0.02
14	Turkey	2.27	15	Japan	2.56	0.21
16	Poland	2.21	16	Poland	2.54	0.33
17	Slovakia	2.12	17	Korea	2.44	0.17
.	.	.	18	Turkey	2.33	0.06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정치리더 적합성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 수준 역시 스페인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나타난 국가들의 순위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속하였던 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서도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평균 이하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대에 상위권인 국가들에 1990년대에도 높은 공정의식 수준을 보인 국가들과 2000년대 들어 새로 진입한 국가(스위스, 프랑스, 캐나다)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1990년대에 하위권에 속하였던 국가들의 의식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또한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보다 정치 리더에 있어 성

격차를 두지 않는 인식의 개선이 다소 미비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언론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

언론자유 보호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개념으로 이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정하다고 인식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언론자유 보호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았다. 이는 국가 질서 유지 등 다른 보기보다 '언론 자유 보호'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하였으며 그 값이 클수록 공정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이 질문 역시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 구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반영한다.

<표 5-19> 세계 가치관 조사의 질문 내용 및 척도

질문 : If you had to choose, which one of the things in this card would you say is most important?(Code one answer only under "first choice")

- ① Maintaining order in the nation
 - ② Giving people more say in important government decisions
 - ③ Fighting rising prices
 - ④ Protecting freedom of speech
-

<표 5-20> 언론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Switzerland	0.31	1	Netherlands	0.41	.
2	Australia	0.26	2	Switzerland	0.36	0.05
3	Turkey	0.24	3	Sweden	0.30	0.08
4	Sweden	0.22	4	United Kingdom	0.27	0.10
5	United States	0.21	5	Norway	0.25	0.09
6	United Kingdom	0.17	6	Italy	0.24	.
6	Spain	0.17	7	France	0.21	.
8	Norway	0.16	7	Canada	0.21	.
8	Mexico	0.16	7	Finland	0.21	0.07
8	Germany	0.16		평균	0.19	0.04
	평균	0.15	10	Australia	0.19	-0.07
11	Finland	0.14	11	Mexico	0.18	0.02
11	New Zealand	0.14	11	United States	0.18	-0.03
13	Czech Republic	0.12	13	New Zealand	0.17	0.03
14	Chile	0.08	14	Germany	0.14	-0.02
14	Korea	0.08	15	Spain	0.12	-0.05
16	Japan	0.06	16	Turkey	0.11	-0.13
17	Slovak Republic	0.05	17	Chile	0.10	0.02
18	Poland	0.04	18	Japan	0.05	-0.01
19	Hungary	0.03	18	Poland	0.05	0.01
			20	Korea	0.02	-0.06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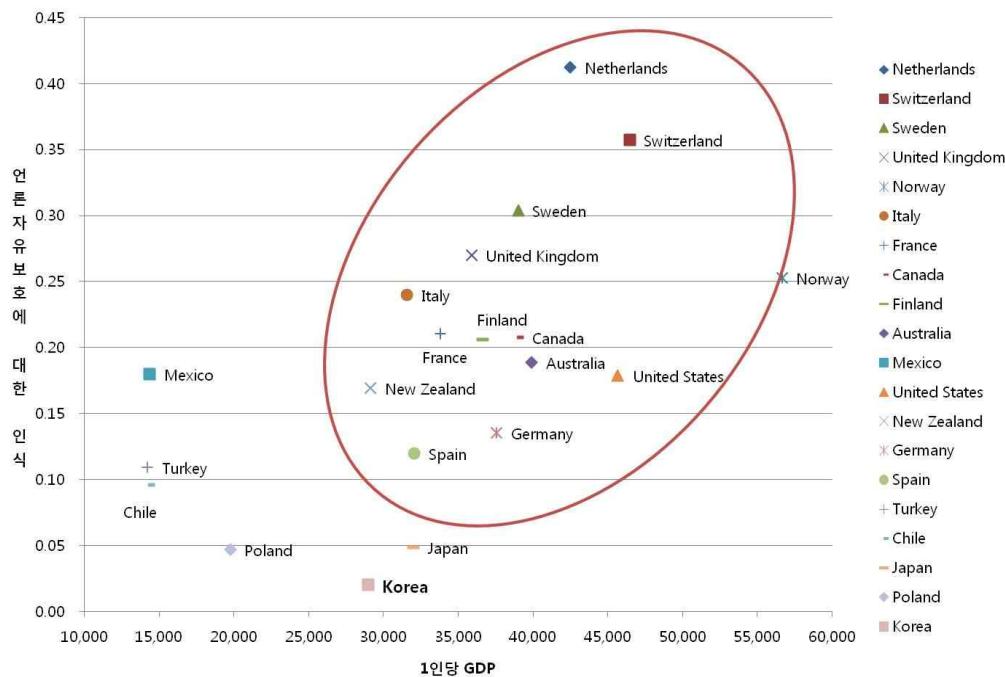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분석 결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터키, 스페인이 언론자유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는 1990년대에 평균 이하의 의식 수준을 보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평균 이상의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1990년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1990년대에 상위권에 속하였던 일부 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 평균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에 평균 이상의 상위권에 속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이 1990년대에도 상위권에 속하였지만 그 이외의

국가들은 새로 진입한 국가들임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에서는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언론 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발전 정도가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5-9> 1인당 GDP 대비 언론 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 비교



주¹⁾ 언론자유보호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주²⁾ 언론자유보호에 대한 인식은 2005-2007 wave, 1인당 GDP 2005년 기준임.

다. 인권보호 :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공정의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지수의 값이 클수록 인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므로 공정 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한국이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평균 이하의 하위권 국가였으나 2000년대에는 평균 이상으로 공정의식 수준이 개선되었다. 반면 미국은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10개 국가 중 3위였으나 2000년대에는 18개 국가 중 평균 이하인 11위로 떨어졌다. 일본 역시 2000년대 들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평균 이하로 대폭 하락하였다.

2000년대에 상위권에 속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평균 이하에 위치하였던 국가가 상위권으로 상승한 곳은 한국뿐이고 나머지 캐나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았던 국가들이다. 그 외의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새롭게 진입한 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이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990년대에 상위권에 속하였던 미국, 스페인의 2000년대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의식 수준이 대폭 개선된데 비하여 이들 국가는 오히려 의식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가 높은 공정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물론 1990년대의 비교 국가가 10개로 한정된다는 점과 2000년대 들어 새로이 진입한 국가들의 1990년대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경제발전 정도와 함께 비교해보았을 때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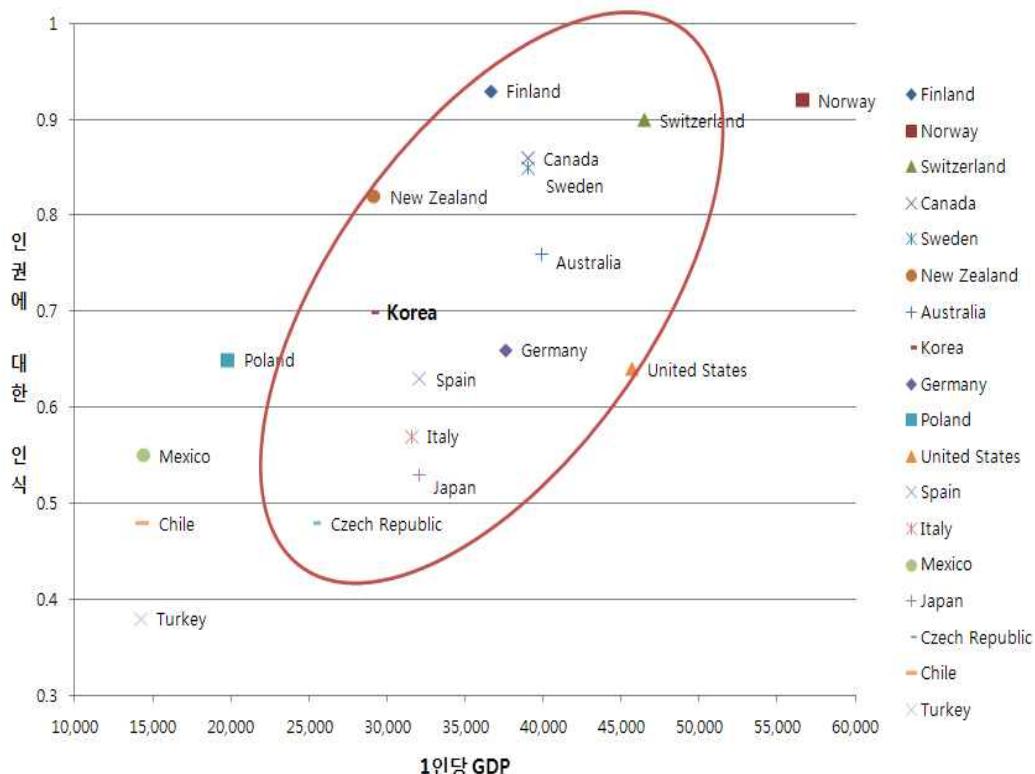
<표 5-21>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1999–2004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Canada	0.82	1	Finland	0.93	.
2	Sweden	0.76	2	Norway	0.92	.
3	United States	0.74	3	Switzerland	0.90	.
4	Spain	0.63	4	Canada	0.86	0.04
5	Japan	0.62	5	Sweden	0.85	0.09
	평균	0.59	6	New Zealand	0.82	.
6	Czech Republic	0.57	7	Australia	0.76	.
6	Chile	0.57	8	Korea	0.70	0.23
8	Korea	0.47		평균	0.68	0.09
8	Mexico	0.47	9	Germany	0.66	.
10	Turkey	0.27	10	Poland	0.65	.
.	.	.	11	United States	0.64	-0.10
.	.	.	12	Spain	0.63	0.00
.	.	.	13	Italy	0.57	.
.	.	.	14	Mexico	0.55	0.08
.	.	.	15	Japan	0.53	-0.09
.	.	.	16	Czech Republic	0.48	-0.09
.	.	.	16	Chile	0.48	-0.09
.	.	.	18	Turkey	0.38	0.11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그림 5-10> 1인당 GDP 대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주¹⁾ 인권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주²⁾ 인권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1인당 GDP 2005년 기준임.

라. 일반인에 대한 신뢰

일반인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OECD 국가들의 공정의식 수준을 국제비교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각 국가별 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즉,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권과 하위권 국가들 내에서의 순위 변동은 있어도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신뢰수준이 상승한 국가는 없었다.

1990년대에 상위권에 속하였던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의 경우 2000년대에도 상위권에 속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권에 있던 칠레, 폴란드, 터키 등은 여전히 일반

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개선되지 못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1990년대에도 평균 이하의 신뢰 수준을 보여 19개 국가 중 10위에 속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제일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17위로 떨어졌다.

<표 5-22>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 비교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변동폭
1	Norway	0.65	1	Norway	0.74	0.09
2	Sweden	0.60	2	Sweden	0.68	0.08
3	New Zealand	0.49	3	Finland	0.59	0.10
3	Finland	0.49	4	New Zealand	0.51	0.02
5	Japan	0.42	4	Switzerland	0.51	0.14
6	Australia	0.40	6	Australia	0.48	0.08
7	Switzerland	0.37	7	Canada	0.42	.
8	United States	0.36	8	United States	0.40	0.04
평균		0.34	9	Japan	0.39	-0.03
9	Germany	0.33	평균		0.36	0.02
10	Mexico	0.31	10	Germany	0.34	0.01
11	Korea	0.30	11	United Kingdom	0.30	0.00
11	Spain	0.30	11	Korea	0.30	0.00
11	United Kingdom	0.30	13	Italy	0.29	.
14	Czech Republic	0.29	14	Spain	0.20	-0.10
15	Slovak Republic	0.27	15	Poland	0.19	0.01
16	Hungary	0.23	15	France	0.19	.
17	Chile	0.21	17	Mexico	0.16	-0.15
18	Poland	0.18	18	Chile	0.12	-0.09
19	Turkey	0.05	19	Turkey	0.05	0.00

주¹⁾) 해당 wave마다 응답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국가 수가 다름.

주²⁾) 변동폭이 공란인 것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데이터가 없어 변동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국민의 신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 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 데이터는 2000년대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분석에서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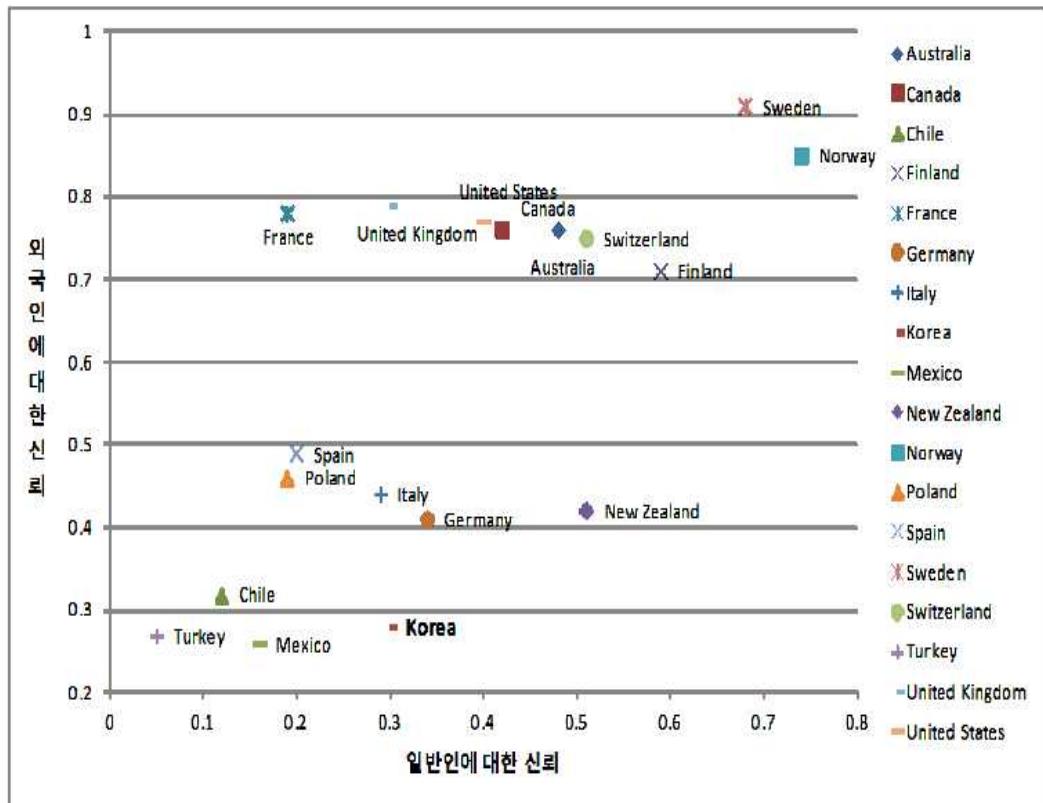
국인에 대한 신뢰를 함께 비교하였다. 그 결과 노르웨이, 스웨덴은 일반인 및 외국인에 대한 신뢰 모두 높게 나타났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평균 이하에 속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은 18개 국가 중 각각 3,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표 5-23> 일반인 신뢰와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 비교(2005-2007)

순위	국가명	일반인 신뢰	순위	국가명	외국인에 대한 신뢰
1	Norway	0.74	1	Sweden	0.91
2	Sweden	0.68	2	Norway	0.85
3	Finland	0.59	3	United Kingdom	0.79
4	New Zealand	0.51	4	France	0.78
4	Switzerland	0.51	5	United States	0.77
6	Australia	0.48	6	Australia	0.76
7	Canada	0.42	6	Canada	0.76
8	United States	0.40	8	Switzerland	0.75
평균		0.36	9	Finland	0.71
10	Germany	0.34	평균		0.58
11	United Kingdom	0.30	10	Spain	0.49
11	Korea	0.30	11	Poland	0.46
13	Italy	0.29	12	Italy	0.44
14	Spain	0.20	13	Netherlands	0.42
15	Poland	0.19	14	Germany	0.41
15	France	0.19	15	Chile	0.32
17	Mexico	0.16	16	Korea	0.28
18	Chile	0.12	17	Turkey	0.27
19	Turkey	0.05	18	Mexico	0.26

주) 값이 클수록 신뢰 수준이 높은 것이고 공정한 것을 의미함.

<그림 5-11> 일반인 신뢰와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 비교(2005-2007)



주) X, Y축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마. 사회공정성 종합

이상으로 살펴본 5가지 내용을 종합한 사회공정성 수준을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 중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총 8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¹²⁾. 그 결과 스웨덴과 미국, 스페인이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높은 사회공정성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수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8개 국가 중 2위지만 1위인 스웨덴과 1990년대에 비해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이상의 상위권 국가들은

12) 인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1990년대 응답 국가 수가 적어서 총 8개의 국가만 남게 됨.

순위의 변동이 없었으나 하위권 국가들의 경우 한국이 여전히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그 수준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사회공정성 OECD 국제 비교

순위	국가명	1990년대	순위	국가명	2000년대	변동폭
1	Sweden	3.33	1	Sweden	3.55	0.22
2	United States	2.77	2	United States	2.75	-0.02
3	Spain	2.58	3	Spain	2.61	0.03
평균		2.44	평균		2.49	0.05
4	Japan	2.35	4	Korea	2.37	0.28
5	Chile	2.28	5	Japan	2.32	-0.03
6	Mexico	2.27	6	Mexico	2.31	0.04
7	Korea	2.09	7	Chile	2.07	-0.21
8	Turkey	1.86	8	Turkey	1.93	0.07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6. 소결

OECD 국가들의 공정의식 수준을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국의 의식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정의식을 구성하는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본 후 이를 종합한 전체 공정의식 순위를 통해 국가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의 공정사회에 대한 의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높은 공정성을 보이는 국가 순으로 순위화하였으나 기존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시기별로 응답 국가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OECD 국가들의 공정의식 수준 변화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해당 시기마다의 평균을 참고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나타난 OECD 국가들의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각각의 의식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정치공정성에 있어서 핀란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핀란드는 1990년대에 평균이하의 하위권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2000년대에는 평균 이상의 상위권 그룹으로 대폭 상승하여 국민들의 정치공정성 의식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터키는 경

제발전 수준이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공정성에 있어서 노르웨이, 스위스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펁란드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칠레는 1990년대에 상위권 그룹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15개 국가들 중 12위를 차지하면서 하위권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정치공정성과 행정공정성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OECD 국가들의 순위 변동폭이 커던 반면 경제공정성의 경우 상하위권 국가들 사이의 큰 변동이 없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가 경제공정성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칠레, 폴란드, 한국은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의식 수준이 개선되지 못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경제공정성 순위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미국은 2000년대 들어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사회공정성에 있어서는 스웨덴과 미국, 스페인이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한국이 2000년대 들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개선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전체 분석 대상 국가들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순위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국가별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할 만큼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공정성 중 ‘탈세에 대한 인식’ 수준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더 떨어졌다.

핀란드는 정치공정성의 전 분야, 행정공정성의 ‘정부에 대한 신뢰’,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분야에 있어 공정의식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사회공정성 중 성 격차에 있어서는 2000년대 들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웨덴은 정치 및 행정공정성, 사회공정성의 성 격차에 대한 인식이 1990년대보다 개선되었지만 경제공정성의 ‘탈세에 대한 인식’,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은 2000년대 들어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의 분야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차지하면서 낮은 공정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공정성의 성 격차에 대한 인식은 다른 분야보다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사법시스템 신뢰’, ‘탈세에 대한 인식’, ‘주요기업 신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인 분야에서 공정의식 수준이 1990년대보다 떨어지고 있다. 칠레의 경우도 '탈세에 대한 인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공정사회 의식 수준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와 터키의 경우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은 하위권에 속해 낮은 공정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은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표 5-25>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국제비교

(단위 : 순위)

공정사회 의식 구성요소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정치 주체 신뢰				정부 역할	기관신뢰								세금형평	경제 주체 신뢰	고용	성격차				언론 자유 보장	인권보호	사회구성 원신뢰					
	정당		의회			외국인 노동자 규제		사법 시스템		정부		행정 서비스		탈세에 대한 인식		주요기업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정치 리더의 적합성		언론자유 보호의 중요성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 90 년 대	20 00 년 대																										
국가명	19 90 년 대	20 00 년 대																										
비교 국가 수	18	20	18	20	18	17	15	20	18	20	18	20	17	20	17	20	20	20	13	18	17	18	19	20	10	18	19	19
Australia	13	18	10	9	6	4	15	12	16	11	14	14	6	6	3	11	4	6	6	8	6	11	2	10	.	7	6	6
Canada	.	9	.	7	.	9	.	7	.	13	.	6	.	4	.	9	5	5	.	6	.	7	.	7	1	4	.	7
Chile	7	11	7	14	2	5	11	20	3	5	7	15	8	5	12	18	14	18	8	16	9	14	14	17	6	16	17	18
Czech Republic	14	.	17	.	14	.	.	.	13	.	13	.	15	.	11	.	18	.	.	.	11	.	13	.	6	16	14	.
Finland	15	3	10	4	13	13	3	2	11	2	17	5	9	11	4	4	10	10	3	9	3	8	11	7	.	1	3	3
France	.	15	.	9	.	.	.	17	.	16	.	8	.	20	.	14	.	4	.	2	.	4	.	7	.	.	.	15
Germany	17	19	16	18	7	12	12	10	17	19	8	17	13	16	17	20	7	12	4	9	4	6	8	14	.	9	9	10
Hungary	10	.	6	.	18	.	.	5	.	3	.	5	14	16	.	15	.	.	.	12	.	19	.	.	.	16	.	
Italy	.	14	.	12	.	5	.	13	.	18	.	12	.	.	.	8	.	14	6	.	13	.	13	
Japan	11	12	15	17	9	16	1	2	11	15	14	16	1	2	9	6	13	19	13	18	13	15	16	18	5	15	5	9
Korea	6	7	10	14	8	3	7	14	5	6	1	3	3	3	15	3	18	20	12	15	14	17	14	20	8	8	11	11
Mexico	1	7	4	16	2	5	13	18	8	7	10	19	16	9	17	19	20	16	11	17	10	13	8	11	8	14	10	17
Netherlands	9		13	16	.	17	.	18	.	12	.	11	.	3	1	.	.	.	
New Zealand	18	16	18	9	4	15	9	15	18	10	18	10	6	9	7	5	2	11	5	7	5	9	11	13	.	6	3	4
Norway	2	3	1	1	10	5	2	1	1	4	4	4	13	18	1	1	2	2	2	1	1	1	8	5	.	2	1	1
Poland	15	20	9	20	16	14	8	19	10	20	16	20	10	19	6	14	15	17	.	14	16	16	18	18	.	10	18	15

공정사회 의식 구성요소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정치 주체 신뢰				정부 역할	기관신뢰						세금형평	경제 주체 신뢰	고용	성격차				언론 자유 보장	인권보호	사회구성 원신뢰							
	정당		의회			외국인 노동자 규제		사법 시스템		정부		행정 서비스		탈세에 대한 인식		주요기업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정치 리더의 적합성		언론자유 보호의 중요성				
	19 90 년 대	20 00 년 대																										
국가명	18	20	18	20	18	17	15	20	18	20	18	20	17	20	17	20	20	20	13	18	17	18	19	20	10	18	19	19
비교 국가 수	8	.	10	.	16	.	.	.	7	.	12	.	17	.	14	.	17	.	.	.	17	.	17	.	.	.	15	.
Slovak Republic	11	3	8	6	1	9	9	10	13	7	11	12	4	12	8	17	12	8	9	5	7	3	6	15	4	12	11	14
Spain	3	1	4	5	11	2	6	6	8	9	8	2	12	17	1	2	1	1	1	3	2	2	4	3	2	5	2	2
Sweden	3	6	3	3	5	1	4	4	2	1	6	1	10	8	9	6	9	8	.	4	.	4	1	2	.	3	7	4
Switzerland	3	1	2	2	12	11	4	5	4	3	2	7	.	1	12	10	11	13	10	11	14	18	3	16	10	18	19	19
Turkey	.	12	.	8	.	.	8	.	14	.	9	.	15	.	11	5	7	.	13	.	10	6	4	.	.	11	11	
United Kingdom	9	16	14	19	14	17	14	9	13	12	4	11	2	6	5	14	8	14	7	11	8	12	5	11	3	11	8	8
United States																												

주) 국가명의 알파벳순으로 정렬함.

제6장 공정사회의 제도/상태와 의식 비교 분석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공정사회를 구성하는 제도(institution)와 상태(state)에 대한 수준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공정사회의 실제 현황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제도(절차적 공정성)와 상태(결과적 공정성)는 공정사회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구성하였던 공정사회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공정사회를 논함에 있어 제도를 통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상태 개선을 통한 결과적 공정성 향상 역시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공정사회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정성 향상과 더불어 공정의식 개선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 및 상태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사이의 불균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공정사회의 제도 대비 의식, 상태 대비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1. 정치제도와 정치공정성 비교

가. 부패인식지수와 반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

먼저 반부패 제도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반부패를 위한 제도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활용하였다. CPI 역시 부패에 대한 인식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정치 부패에 대한 두 지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 부패인식지수(CPI)와 세계가치관조사 데이터를 지수화한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모두 값이 클수록 이상적인 공정사회에 가까운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가치관조사의 경우 1990년대 데이터만 있어 1995년의 부패인식지수(CPI)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의 상위권 국가들은 제도와 의식 모두 높은 공정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멕시코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부패인식지수와 일반국민들이 인식하는 반부패에 대한 인식 모두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었다. 이 그룹들은 공정사회의 제도와 국민들의 의식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은 국가들이다.

반면 칠레의 경우 제도와 의식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칠레는 CPI 지수가 평균 이하로 최하위권에 속하므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정치시스템의 반부패를 위한 제도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시스템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는 부패인식지수에 있어 1위를 차지하여 정치시스템의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최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비교국가 18개 중 10위를 차지하여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국민들은 정치시스템의 부패 수준에 대하여 전문가들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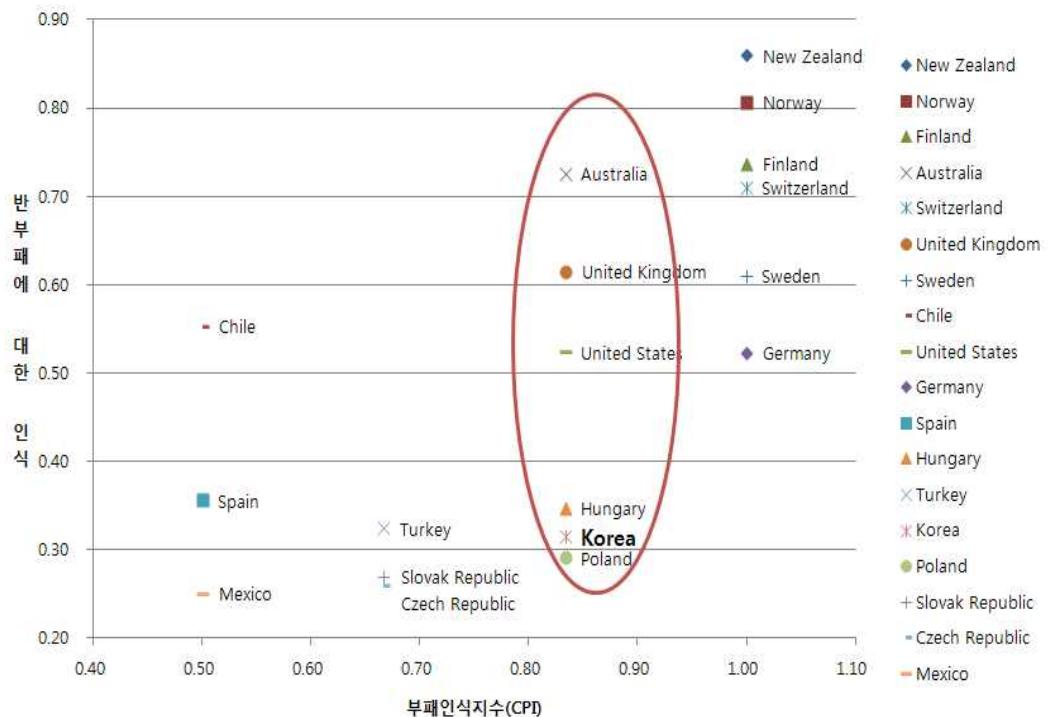
<표 6-1> 부패인식지수(CPI)와 반부패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부패인식지수 (CPI) (1995)	순위	국가명	반부패에 대한 인식 (1994-1999)
1	New Zealand	1.00	1	New Zealand	0.86
1	Norway	1.00	2	Norway	0.81
1	Finland	1.00	3	Finland	0.74
1	Switzerland	1.00	4	Australia	0.73
1	Sweden	1.00	5	Switzerland	0.71
1	Germany	1.00	6	United Kingdom	0.62
7	Australia	0.83	7	Sweden	0.61
7	United Kingdom	0.83	8	Chile	0.55
7	United States	0.83	9	United States	0.52
7	Hungary	0.83	10	Germany	0.52
7	Korea	0.83		평균	0.51
7	Poland	0.83	11	Spain	0.36
	평균	0.81	12	Hungary	0.35
13	Turkey	0.67	13	Turkey	0.32
13	Slovak Republic	0.67	14	Korea	0.32
13	Czech Republic	0.67	15	Poland	0.29
16	Chile	0.50	16	Slovak Republic	0.27
16	Spain	0.50	17	Czech Republic	0.26
16	Mexico	0.50	18	Mexico	0.25

주)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한 제도(질차적 공정성)적 수준과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 상위에 있는 국가들은 공정사회의 제도와 의식 수준이 모두 높은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원 안에 속한 국가들은 동일한 수준의 CPI 지수와 대비하여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반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6-1> 부패인식지수(CPI)와 반부패에 대한 인식 비교



주) X, Y축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임.

2. 사법제도와 행정공정성 비교

가. 사법시스템의 제도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사법시스템의 제도는 'PRS(Political Risk Services) Group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Law and Order'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제 비교 하였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사법시스템의 제도 및 신뢰 수준에 관한 지수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사회에 더욱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사법시스템 제도에 있어 1위의 최상위권에 속한 노르웨이, 핀란드, 스

웨덴, 캐나다의 사법시스템 신뢰 수준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네 국가 모두 평균 이상의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제도에 있어 1위를 차지하여 제일 높은 수준의 공정한 사법시스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신뢰 수준은 총 20개 국가들 중 16위로 사법시스템의 제도 대비 일반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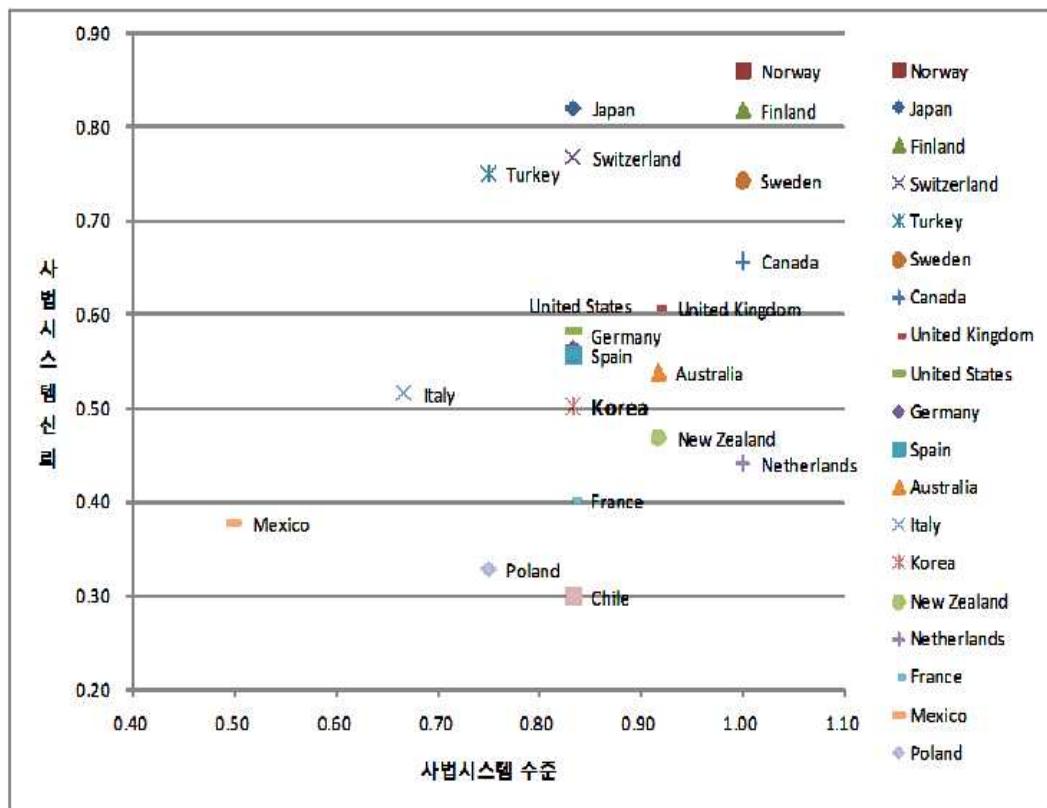
반면 일본, 스위스, 터키, 이탈리아는 제도보다 의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신뢰 수준이 2위로 매우 높은 공정의식 수준을 보였지만 사법시스템 제도는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터키 역시 폴란드와 같은 수준의 공정한 사법시스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뢰 수준에 있어 폴란드는 비교국가 20개 중 19위로 최하위권, 터키는 5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터키의 사법시스템 제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사법시스템 신뢰 수준은 선진국에 벼금갈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 사법시스템 제도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비교

순위	국가명	사법시스템 제도 (2005)	순위	국가명	사법시스템 신뢰 (2005-2007)
1	Norway	1.00	1	Norway	0.86
1	Finland	1.00	2	Japan	0.82
1	Sweden	1.00	2	Finland	0.82
1	Canada	1.00	4	Switzerland	0.77
1	Netherlands	1.00	5	Turkey	0.75
6	United Kingdom	0.92	6	Sweden	0.74
6	Australia	0.92	7	Canada	0.66
6	New Zealand	0.92	8	United Kingdom	0.61
평균		0.85	9	United States	0.58
9	Japan	0.83	평균		0.58
9	Switzerland	0.83	10	Germany	0.56
9	United States	0.83	10	Spain	0.56
9	Germany	0.83	12	Australia	0.54
9	Spain	0.83	13	Italy	0.52
9	Korea	0.83	14	Korea	0.50
9	France	0.83	15	New Zealand	0.47
9	Chile	0.83	16	Netherlands	0.44
17	Turkey	0.75	17	France	0.40
17	Poland	0.75	18	Mexico	0.38
19	Italy	0.67	19	Poland	0.33
20	Mexico	0.50	20	Chile	0.30

주)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그림 6-2> 사법시스템 수준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비교



주) X, Y축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그림 6-2>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한국은 같은 수준의 사법시스템을 갖춘 일본, 스위스, 미국, 독일,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낮은 신뢰 수준을 보여 국민들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공정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법시스템 제도와 이에 대한 신뢰 수준은 각 국가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일반국민들의 신뢰 역시 구축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6-2>에서 왼쪽 상단에 속한 국가가 없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수준은 이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적 수준을 갖추었을 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3. 관료제도와 행정공정성 비교

가.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세 번째는 법 질서 제도 중 정부역량과 정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신뢰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제도와 국민들의 의식 수준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정부역량은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World Bank의 Governance Indicator' 중 Regulatory Quality' 데이터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지수화하여 2000년대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핀란드는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 공정사회를 위한 제도의 구축과 의식 간에 높은 수준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핀란드는 이 분야에 있어 공정사회에 가깝게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은 20개 국가 중 2위를 차지하여 상위권에 속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17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 질서 측면에 있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반면,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네덜란드는 앞서 살펴본 사법시스템 제도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에서도 그랬듯이 제도 대비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처럼 제도 대비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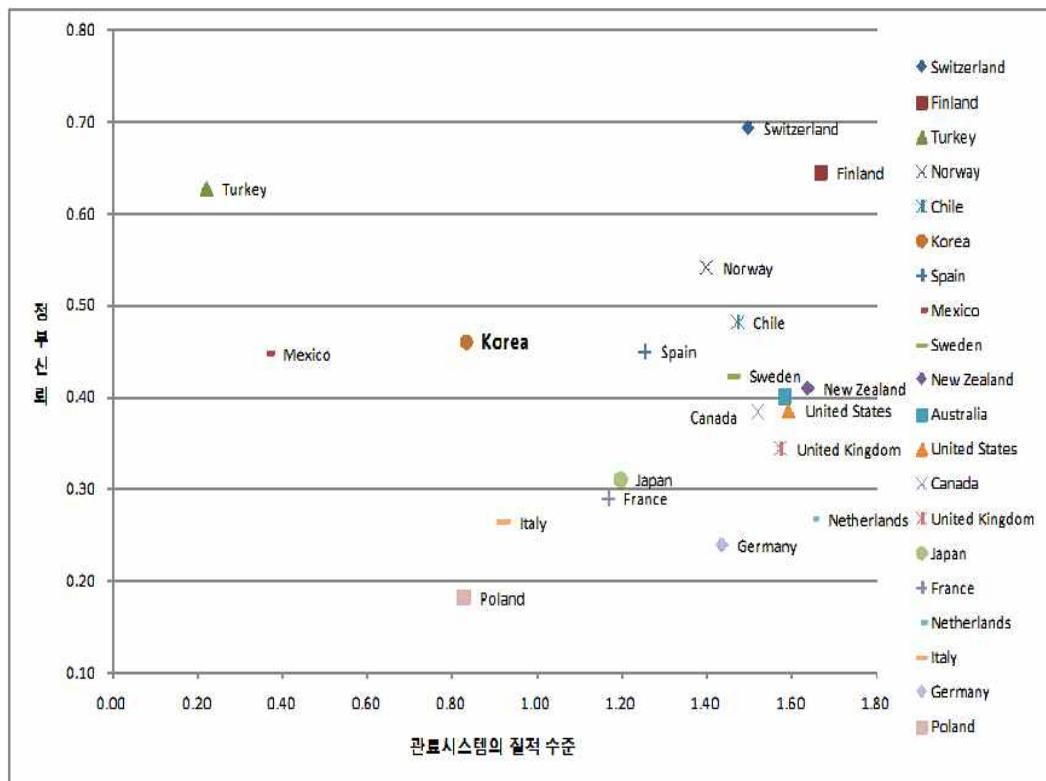
반면 한국과 멕시코, 터키는 관료제도 대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키는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이 비교국가 20개 중 최하위로 공정사회를 위한 법 질서 제도의 구축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3위를 차지함으로써 공정 의식 수준은 선진국에 벼금갈 정도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3>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비교

순위	국가명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2005)	순위	국가명	정부신뢰(2005~2007)
1	Finland	1.67	1	Switzerland	0.69
2	Netherlands	1.65	2	Finland	0.64
3	New Zealand	1.64	3	Turkey	0.63
4	United States	1.59	4	Norway	0.54
5	Australia	1.58	5	Chile	0.48
6	United Kingdom	1.57	6	Korea	0.46
7	Canada	1.52	7	Spain	0.45
8	Switzerland	1.50	8	Mexico	0.45
9	Chile	1.47	9	Sweden	0.42
10	Sweden	1.46	10	New Zealand	0.41
11	Germany	1.44		평균	0.41
12	Norway	1.40	11	Australia	0.40
	평균	1.27	12	United States	0.39
13	Spain	1.26	13	Canada	0.38
14	Japan	1.20	14	United Kingdom	0.34
15	France	1.17	15	Japan	0.31
16	Italy	0.92	16	France	0.29
17	Korea	0.84	17	Netherlands	0.27
18	Poland	0.83	18	Italy	0.26
19	Mexico	0.37	19	Germany	0.24
20	Turkey	0.22	20	Poland	0.18

주)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그림 6-3>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비교



주) X, Y축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4. 기회균등 제도와 경제공정성 비교

가.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회균등과 관련한 제도적 측면과 경제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기업환경지수는 'Heritage Foundation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중 Business Freedom' 데이터로 분석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공정성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공정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데이터의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을 활용하여 지수화하였다. 이 역시 값이 클수록 공정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국가가 기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국가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때 비로소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및 의식 수준을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영국, 미국은 기업환경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은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주요기업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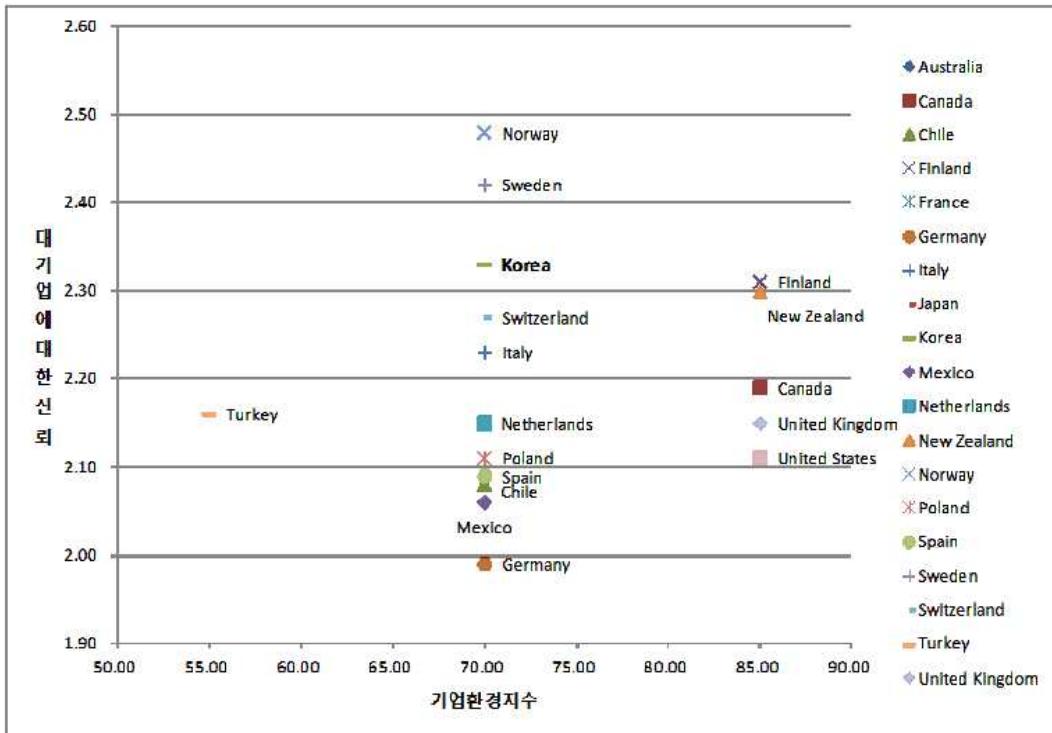
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경제선진국임에도 기업환경지수가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정도는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경제적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제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터키는 1인당 GDP로 보았을 때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은 개발도상국임에도 제도 대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환경지수가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은 평균 이하이기는 하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6-4>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비교

순위	국가명	기업환경지수 (2005)	순위	국가명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2005~2007)
1	Australia	85.00	1	Norway	2.48
1	Canada	85.00	2	Sweden	2.42
1	Finland	85.00	3	Korea	2.33
1	New Zealand	85.00	4	Finland	2.31
1	United Kingdom	85.00	5	New Zealand	2.30
1	United States	85.00	6	Japan	2.27
평균		70.35	6	Switzerland	2.27
7	France	70.00	8	Italy	2.23
7	Germany	70.00	평균		2.20
7	Italy	70.00	9	Canada	2.19
7	Japan	70.00	10	Turkey	2.16
7	Korea	70.00	11	Australia	2.15
7	Mexico	70.00	11	Netherlands	2.15
7	Netherlands	70.00	11	United Kingdom	2.15
7	Norway	70.00	14	France	2.11
7	Poland	70.00	14	Poland	2.11
7	Spain	70.00	14	United States	2.11
7	Sweden	70.00	17	Spain	2.09
7	Switzerland	70.00	18	Chile	2.08
7	Chile	70.00	19	Mexico	2.06
20	Turkey	55.00	20	Germany	1.99

주)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그림 6-4>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비교



주) X, Y축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나.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OECD 각국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기회균등 제도와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재산권 보호 제도와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보호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할수록 공정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의 의무로 세금을 공정하게 납부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탈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공정한 국가의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의식 조건이므로 이 둘을 비교하고자 한다.

재산권 보호의 데이터는 'Heritage Foundation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중 'Property Rights'를 활용하였으며 이의 값이 클수록 재산권보호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높은 공정성 수준을 반영한다. 탈세에 대한 인식은 세

계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탈세는 정당하지 않다’의 응답을 지수화하였다. 값이 클수록 공정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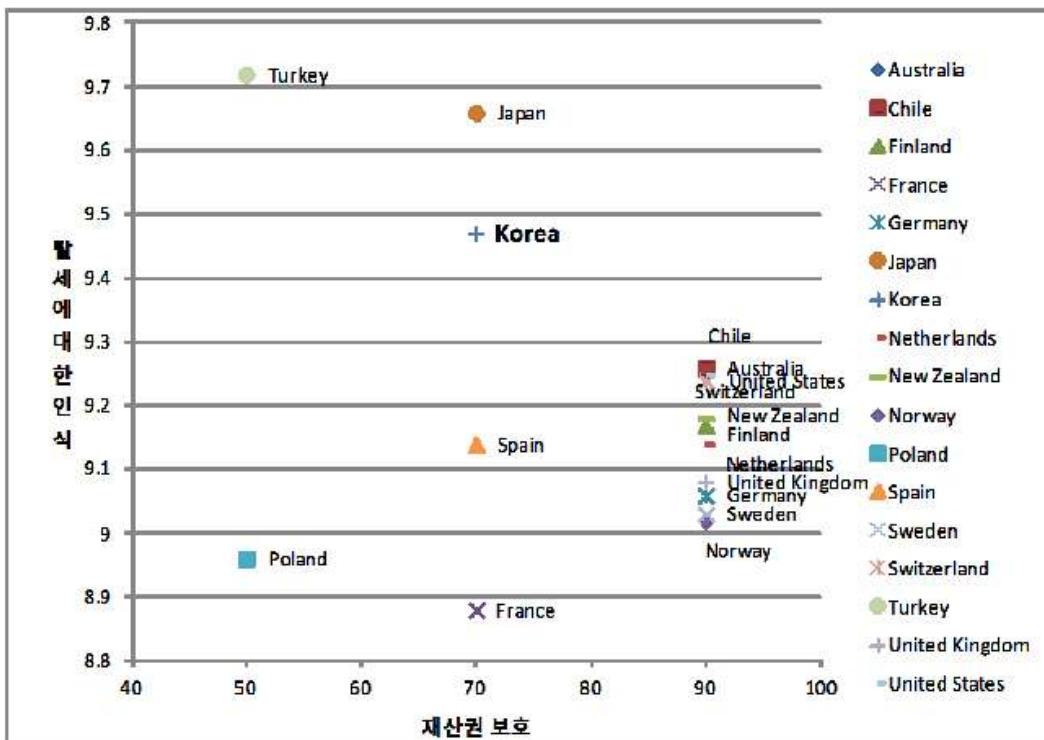
분석 결과 터키는 재산권 보호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임에도 탈세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역시 재산권 보호의 제도 정비 수준은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속하지만 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다른 국가,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보다 훨씬 높은 공정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재산권 보호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상위권에 속한 1위 국가들이라도 탈세에 대한 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폴란드의 경우 제도나 국민 의식 수준 모두 낮아 공정성 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재산권 보호 (2005)	순위	국가명	탈세에 대한 인식 (2005–2007)
1	Australia	90	1	Turkey	9.72
1	Chile	90	2	Japan	9.66
1	Finland	90	3	Korea	9.47
1	Germany	90	4	Chile	9.26
1	Netherlands	90	5	Australia	9.25
1	New Zealand	90	5	United States	9.25
1	Norway	90	7	Switzerland	9.24
1	Sweden	90		평균	9.21
1	Switzerland	90	8	New Zealand	9.18
1	United Kingdom	90	9	Finland	9.17
1	United States	90	10	Netherlands	9.14
	평균	80.59	10	Spain	9.14
12	France	70	12	United Kingdom	9.08
12	Japan	70	13	Germany	9.06
12	Korea	70	14	Sweden	9.03
12	Spain	70	15	Norway	9.02
16	Poland	50	16	Poland	8.96
16	Turkey	50	17	France	8.88

주)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그림 6-5>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비교



주) X, Y축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5. 자유보장 상태와 사회공정성 비교

가.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유보장 상태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언론자유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공정성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언론자유지수는 공정사회지표에서 활용하였던 'Freedom house'의 'Freedom of the Press'의 데이터로 분석하였으며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자유지수의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인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상태와 의식

모두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가진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언론자유 보장의 상태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뉴질랜드, 독일은 평균 이상의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평균 이하에 그치고 있어 상태 대비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상태 대비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평균 이하의 언론자유지수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20개 국가 중 6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향후 상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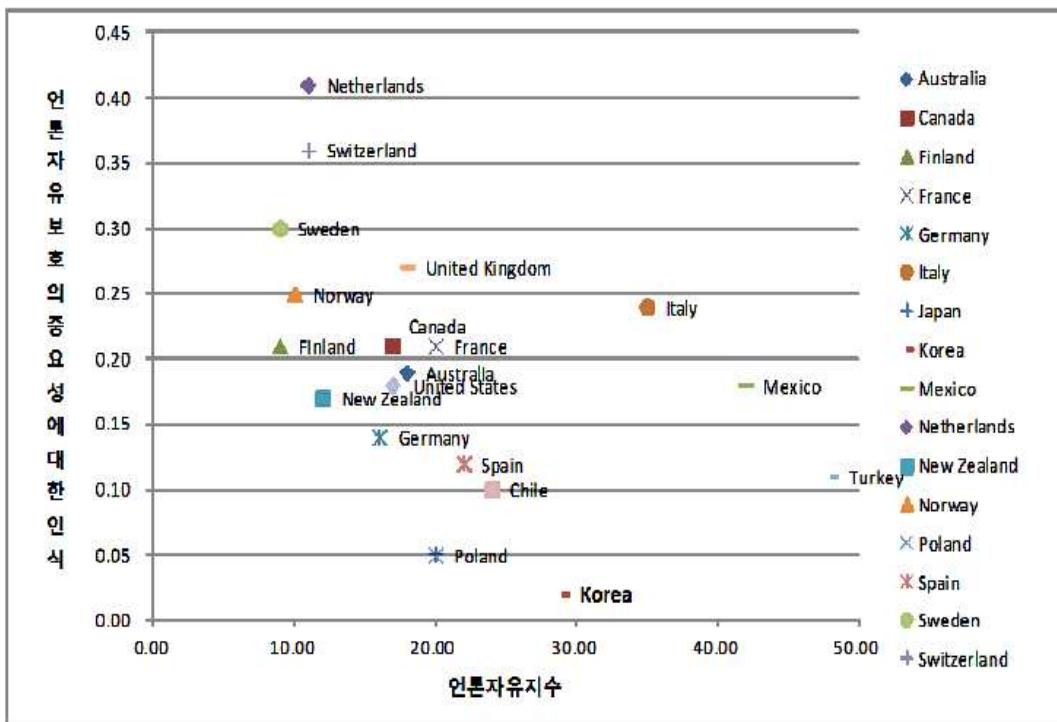
또한 평균 이하의 언론자유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스페인, 칠레, 한국, 터키는 언론자유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언론자유지수 (2005)	순위	국가명	언론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2005-2007)
1	Finland	9.00	1	Netherlands	0.41
1	Sweden	9.00	2	Switzerland	0.36
3	Norway	10.00	3	Sweden	0.30
4	Netherlands	11.00	4	United Kingdom	0.27
4	Switzerland	11.00	5	Norway	0.25
6	New Zealand	12.00	6	Italy	0.24
7	Germany	16.00	7	Canada	0.21
8	Canada	17.00	7	Finland	0.21
8	United States	17.00	7	France	0.21
10	Australia	18.00	10	Australia	0.19
10	United Kingdom	18.00		평균	0.19
12	France	20.00	11	Mexico	0.18
12	Japan	20.00	11	United States	0.18
12	Poland	20.00	13	New Zealand	0.17
	평균	20.40	14	Germany	0.14
15	Spain	22.00	15	Spain	0.12
16	Chile	24.00	16	Turkey	0.11
17	Korea	29.00	17	Chile	0.10
18	Italy	35.00	18	Japan	0.05
19	Mexico	42.00	18	Poland	0.05
20	Turkey	48.00	20	Korea	0.02

주) 언론자유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언론이 자유로워 공정한 것을 의미하며,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그림 6-6>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주) 언론자유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언론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임.

6. 기회균등 제도와 사회공정성 비교

가.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남녀 성 격차 지표와 고등교육 수혜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 구축의 정도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남녀 성 격차는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있는 Gender Gap Index(2006-2010)'를 활용하였고 그 값이 클수록 공정성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계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값이 클수록 공정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스웨덴, 노르웨이는 남녀 성 격차 지수와 고등교육 수혜에 있어 성별

의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의식 수준 역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등은 남녀 성 격차 지수가 상위권으로 상당히 높은 공정성 수준을 보이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는 남녀 성 격차 지수는 평균 이하로 낮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최상위권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는 멕시코, 칠레와 비슷한 경제발전수준을 보이는 국가임에도 이들 국가들 보다 남녀 성 격차 지수는 떨어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인식 수준은 한국, 일본보다도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 6-7>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남녀 성 격차(2005)	순위	국가명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2005~2007)
1	Sweden	0.81	1	Norway	3.82
2	Norway	0.80	2	France	3.65
3	Finland	0.80	3	Sweden	3.54
4	Germany	0.75	4	Switzerland	3.44
5	New Zealand	0.75	5	Spain	3.4
6	United Kingdom	0.74	6	Canada	3.36
7	Spain	0.73	7	New Zealand	3.33
8	Canada	0.72	8	Australia	3.31
9	Australia	0.72	9	Finland	3.29
10	United States	0.70	9	Germany	3.29
11	Switzerland	0.70		평균	3.26
	평균	0.70	11	Turkey	3.23
12	Poland	0.68	11	United States	3.23
13	France	0.65	13	United Kingdom	3.22
14	Mexico	0.65	14	Poland	3.04
15	Chile	0.65	15	Korea	2.96
16	Japan	0.64	16	Chile	2.89
17	Korea	0.62	17	Mexico	2.88
18	Turkey	0.59	18	Japan	2.85

주) 남녀 성 격차,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임.

나. 남녀 성 격차와 성별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남녀 성 격차 지표와 정치리더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의 구축 수준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남녀 성 격차는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있는 Gender Gap Index(2006-2010)'를 활용하였고 그 값이 클수록 공정성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계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그 값이 클수록 공정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남녀 성 격차 지수가 높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리더 적합성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의식 수준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스웨덴, 노르웨이는 남녀 성 격차 지수와 이에 대한 공정의식 수준 모두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은 남녀 성 격차 지수로 볼 때 평균 이상의 중위권에 속하였지만 정치리더 적합성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의식 수준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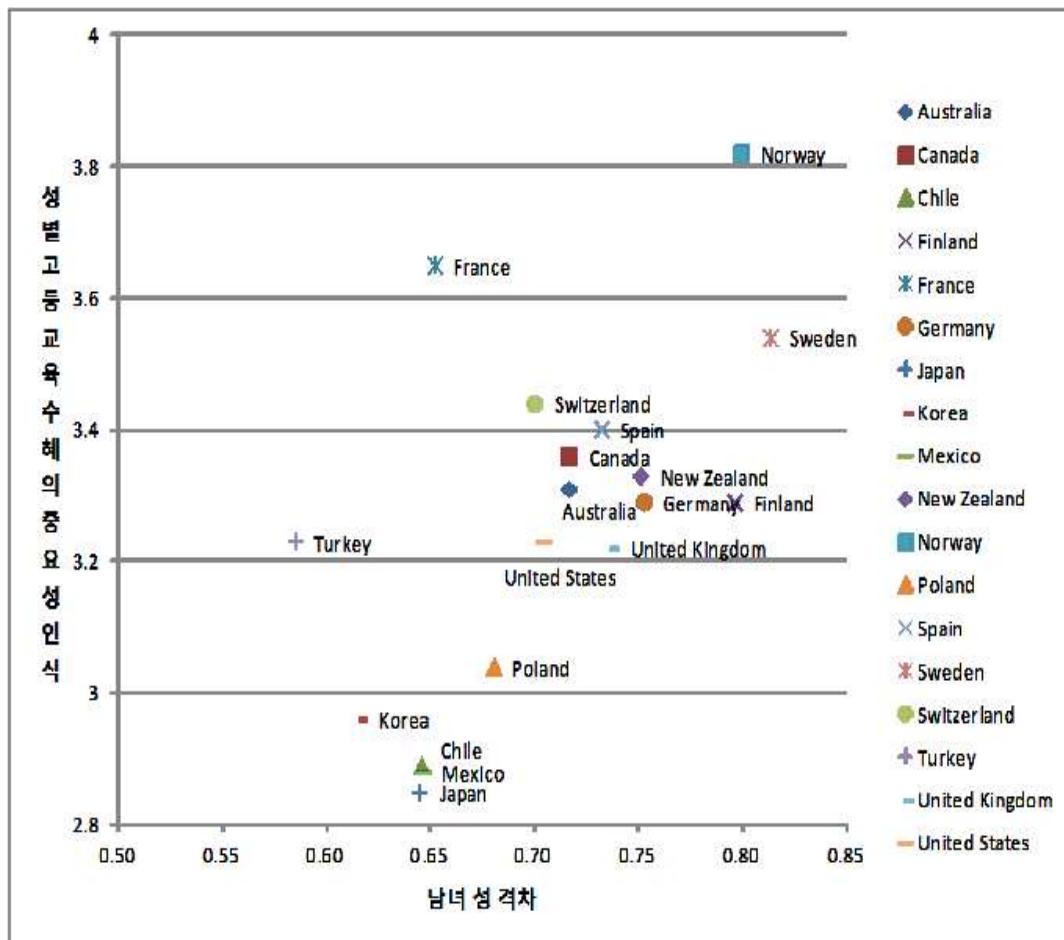
남녀 성 격차에 있어 평균 이하에 속해있던 하위권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 역시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속해있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남녀 성 격차는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속했지만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은 비교국가 18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의 공정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표 6-8> 남녀 성 격차와 성별 정치리더 적합성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남녀 성 격차(2005)	순위	국가명	정치 리더 적합성에 대한 인식 (2005-2007)
1	Sweden	0.81	1	Norway	3.45
2	Norway	0.80	2	Sweden	3.31
3	Finland	0.80	3	Spain	3.24
4	Germany	0.75	4	France	3.20
5	New Zealand	0.75	4	Switzerland	3.20
6	United Kingdom	0.74	6	Germany	3.15
7	Spain	0.73	7	Canada	3.08
8	Canada	0.72	8	Finland	3.03
9	Australia	0.72	9	New Zealand	2.99
10	United States	0.70	10	United Kingdom	2.93
11	Switzerland	0.70		평균	2.92
	평균	0.70	11	Australia	2.91
12	Poland	0.68	12	United States	2.86
13	France	0.65	13	Mexico	2.81
14	Mexico	0.65	14	Chile	2.58
15	Chile	0.65	15	Japan	2.56
16	Japan	0.64	16	Poland	2.54
17	Korea	0.62	17	Korea	2.44
18	Turkey	0.59	18	Turkey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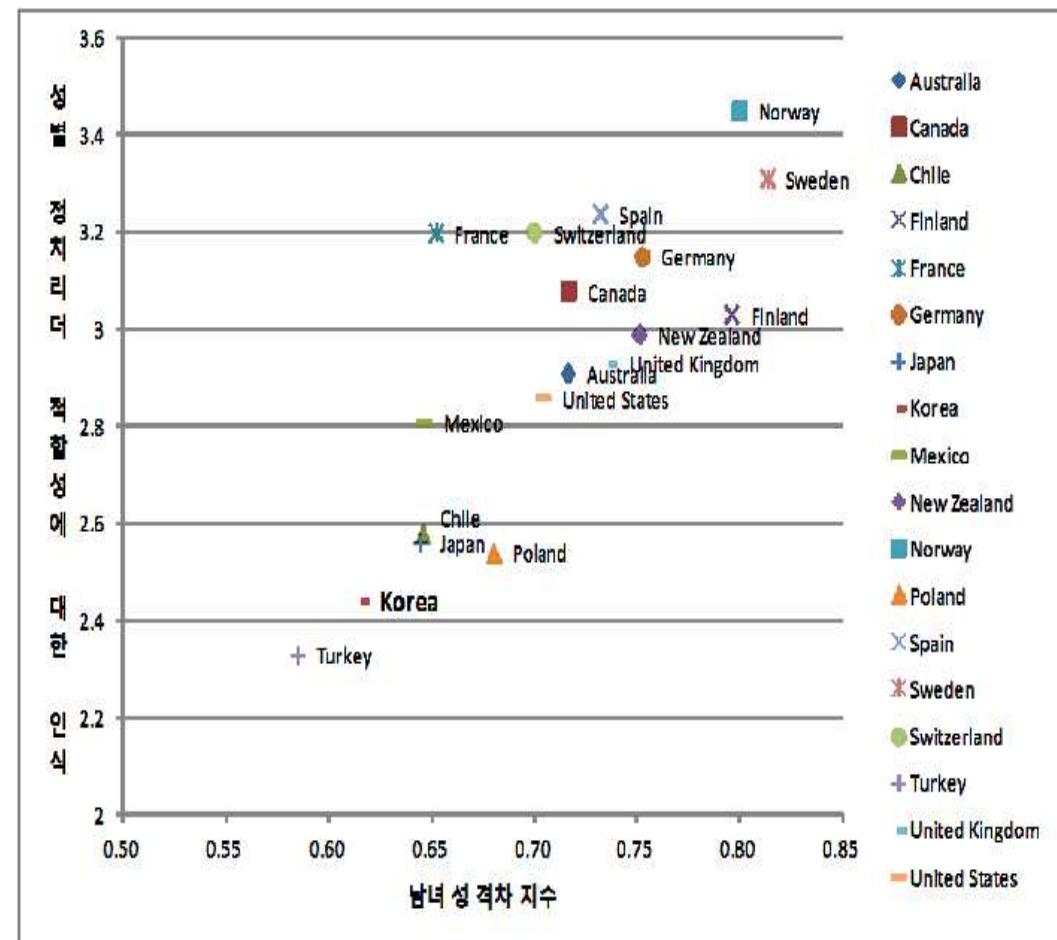
주) 남녀 성 격차, 성별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임.

<그림 6-7>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주) X, Y축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그림 6-8> 남녀 성 격차와 성별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비교



주) X, Y축 모두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7. 소결

본 절은 OECD 각국 국민들의 공정의식 수준과 더불어 제도(institution) 및 상태(state) 수준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공정사회의 실제 현황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정치제도와 정치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부패인식지수와 반부패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함께 검토하였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지수를 활용하였고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는 제도와 의식 모두 높은 공정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멕시코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부패인식지수와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모두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었다. 반면 칠레의 경우 정치시스템의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측면은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속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사법제도와 행정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PRS(Political Risk Services) Group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Law and Order'를 활용한 사법시스템 제도의 데이터와 세계가치관조사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법시스템 신뢰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인 일본의 경우 사법시스템 제도는 비교국가들 중 평균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제도 대비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제도와 의식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제도는 1위로 최상위권에 속하였으나 신뢰 수준은 총 20개 국가들 중 16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어 사법시스템의 제도 대비 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관료제도와 행정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World Bank의 Governance Indicator'를 활용하여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과 세계가치관 조사의 정부에 대한 신뢰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도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핀란드는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OECD 국가들 중 관료제도에 대한 공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은 평균 이하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과 멕시코, 터키는 관료제도 대비 정부

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와 경제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영국, 미국의 경우 기업환경지수는 가장 높았지만 주요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만 국민들이 주요기업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지수가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는 최상위권에 위치하여 그 어떤 국가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터키는 1인당 GDP로 보았을 때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은 개발도상국임에도 제도 대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환경 지수가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기회균등 제도와 경제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재산권보호의 데이터는 'Heritage Foundation'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중 Property Rights'를 활용하였고 탈세에 대한 인식은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터키는 재산권 보호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임에도 탈세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역시 재산권 보호의 제도 정비 수준은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속하지만 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서 선진국인 다른 국가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보다 탈세에 대한 공정 의식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폴란드의 경우 제도와 국민의 의식 수준 모두 낮아 공정성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자유보장 상태와 사회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자유지수가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인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상태와 의식의 공정성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 독일은 평균 이상의 언론자유지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평균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상태 대비 의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평균 이하의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였지만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20개 국가 중 6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평균 이하의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한 스페인, 칠레, 한국, 터키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기회균등 제도와 사회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및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웨덴, 노르웨이는 남녀 성 격차 지수와 고등교육 수혜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의식 수준 역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펁란드, 독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의 경우 남녀 성 격차 지수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는 남녀 성 격차 지수는 평균 이하로 낮은 순위였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최상위권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성 격차 지수와 성별 정치리더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남녀 성 격차가 크지 않은 국가일수록 정치리더 적합성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는 공정의식 수준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스웨덴, 노르웨이는 남녀 성 격차 지수와 정치 리더 적합성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는 공정의식 수준 역시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 격차에 있어 평균 이하에 속한 하위권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 역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남녀 성 격차가 평균 이하의 하위권이었으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비교국가 18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제7장 한국의 공정사회 위상

1. 한국의 공정사회 제도 및 상태

한 국가가 어떠한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한 평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정사회 제도 및 상태영역 지수의 현재 및 과거 수준, 그리고 변화율을 비교하는 한편, 이를 국민소득 변화 추세와도 연관시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것이다. 나아가 각 지수별 한국의 순위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표 7-1>은 한국의 공정사회 수준 및 경제발전 정도를 전반적으로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1인당 GDP와 제도 및 상태영역의 지수값이 모두 전기간에서 분석대상 OECD 30개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GDP의 경우 1995년에서 2009년 사이 한국의 연평균 변화율은 3.75%로 2.01%에 그친 분석대상국 평균에 비해 높아 타 OECD 국가와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태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타 OECD 국가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서 2009년 사이 한국의 상태영역 지수값의 연평균 변화율은 1.03%로 전체평균 0.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타 OECD 국가 평균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반면 한국의 상태영역 수준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영역의 경우에는 1995년에서 2009년 사이 한국의 연평균 변화율이 전체평균보다 낮아 격차가 다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00년대 후반의

연평균 변화율은 한국이 1.90% 전체평균이 0.94%로 제도영역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제도영역의 성적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한국의 제도 및 상태영역 지수 연평균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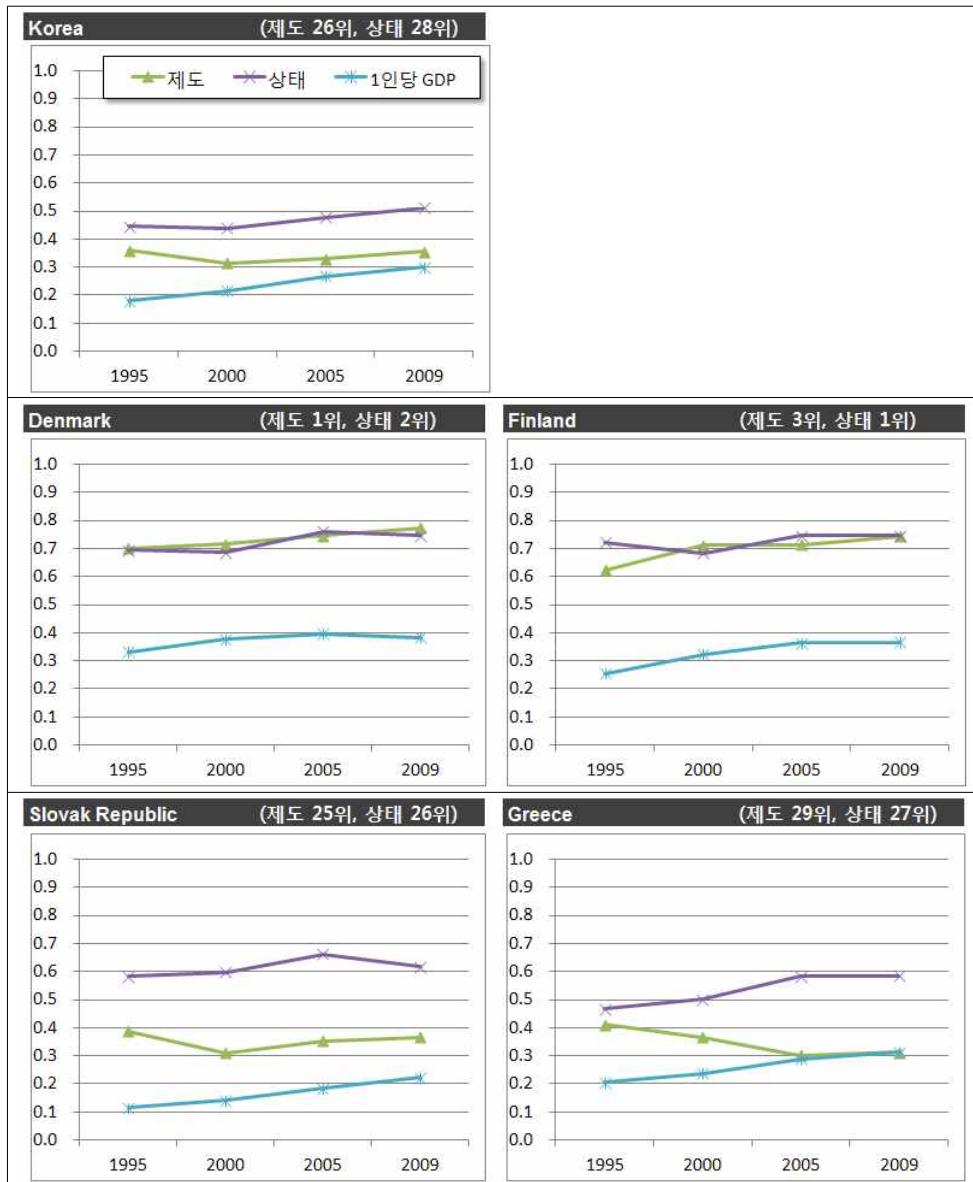
구 분	지 수 값			연평균 변화율 (%)		
	년도	전체평균	한 국	기간	전체평균	한 국
1인당 GDP	1995년	0.267	0.179	95-00	3.39	3.81
	2000년	0.315	0.216	00-05	2.01	4.27
	2005년	0.348	0.267	05-09	0.31	3.02
	2009년	0.352	0.300	전기간	2.01	3.75
제도영역	1995년	0.523	0.360	95-00	-0.09	-2.62
	2000년	0.520	0.316	00-05	-0.09	0.86
	2005년	0.518	0.329	05-09	0.94	1.90
	2009년	0.538	0.355	전기간	0.20	-0.10
상태영역	1995년	0.600	0.444	95-00	0.29	-0.25
	2000년	0.608	0.439	00-05	1.14	1.68
	2005년	0.644	0.477	05-09	-0.20	1.82
	2009년	0.639	0.513	전기간	0.45	1.03

아래의 <그림 7-1>은 한국과 2009년 제도 및 상태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선도국가,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공정사회 지수를 나타낸 국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1>의 한국 그래프에서 지난 14년 동안 가장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연 1인당 GDP이다. 또한 상태영역 지수 역시 상당한 발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영역 지수는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1995년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도 및 상태영역 공정사회 지수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상태영역의 발전 속도는 한국과 비교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1990년대 후반 이후 제도 영역에서 꾸준한 발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핀란드는 1990년대 후반의 발전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다. 제도 및 상태영역의 공정사회 수준이 우리와 유사한 슬로바키아와 그리스를 살펴보면 한국과 유사하게 1인당 GDP 및 상태영역에서는 지난 14년 동안 어느 정

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제도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이후 상태영역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발전을 이룬 반면, 제도영역의 수준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 제도 및 상태영역 지수와 1인당 GDP 지수 변화 추세 비교



다음으로, 공정사회지표의 국가별 순위 변화 추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7-2>는 공정사회 지수의 제도 및 상태 영역을 구성하는 각 항목별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마다 한국의 국가별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맨 오른쪽 2개의 열에는 최초연도(1995년)와 최종연도(2009년)의 상위 30%(상), 중위 40%(중), 하위 30%(하) 그룹으로 나누어 한국이 속한 순위그룹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도 및 상태영역 지수로 본 한국의 공정사회 위상은 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정사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한국의 위상이 현재로서는 타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사회의 제도 및 상태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지수들에서도 많은 경우 순위변동 없이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분류 지수인 제도 및 상태 영역은 1995년과 2009년 모두 각각 하위 그룹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5개의 중분류 역시 형평을 제외한 법질서, 기회균등, 자유보장, 사회안전망 구축은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다. 소분류도 마찬가지로 13개 소분류 지수 중 3개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예외에 속한 3개 지수 역시 순위개선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1995년 상위그룹에 속한 경제(자유보장), 소득(형평)은 2009년 중위그룹으로 오히려 순위가 하락하였다. 그리고 근로(기회균등)의 경우 중위그룹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표 7-2> 공정사회 제도 및 상태 영역 한국의 위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순위			상대수준	
			1995	2000	2005	2009	1995
제도	(30)		29	28	27	26	하
법질서	(30)		27	28	25	25	하
	법치 (30)		29	26	23	23	하
	정부역량 (30)		29	28	28	28	하
	반부패 (30)		23	29	24	24	하
기회균등	(30)		27	27	28	28	하
	사회 (30)		30	30	30	30	하
	근로 (30)		20	16	23	22	중
상태	(30)		28	28	28	28	하
자유보장	(30)		24	28	28	27	하
	경제 (30)		7	19	24	22	상
	정치 (30)		26	27	27	26	하
	언론 (30)		28	28	28	28	하
형평	(30)		20	22	21	22	중
	교육 (30)		25	23	21	19	하
	고용 (30)		23	24	25	26	하
	소득 (30)		7	11	16	17	상
사회안전망	(30)		30	30	30	29	하
	복지 (30)		30	30	30	30	하
	보건의료 (30)		30	29	28	27	하

주¹⁾ 상대수준은 대상국가 중 상위 30%, 중간 40%, 하위 30%를 나타냄

주²⁾ () 안의 숫자는 지표별 대상국가의 수를 나타냄

2. 한국의 공정사회 의식¹³⁾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인식에 따라 '공정'에 대하여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사회, 행정, 경제, 정치적 노력들에 대하여 국

13) 본 절의 일부 내용은 한준 외(2011)의 연구에서 발췌·수정되었음.

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이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경험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특히 한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성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부정부패, 비리, 탈세 등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함과 동시에 국가의 공정성 수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비단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에 실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KDI의 공정사회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 사회의 공정성 수준에 대하여 과거 10년 전과 유사하다고 답한 비율이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행해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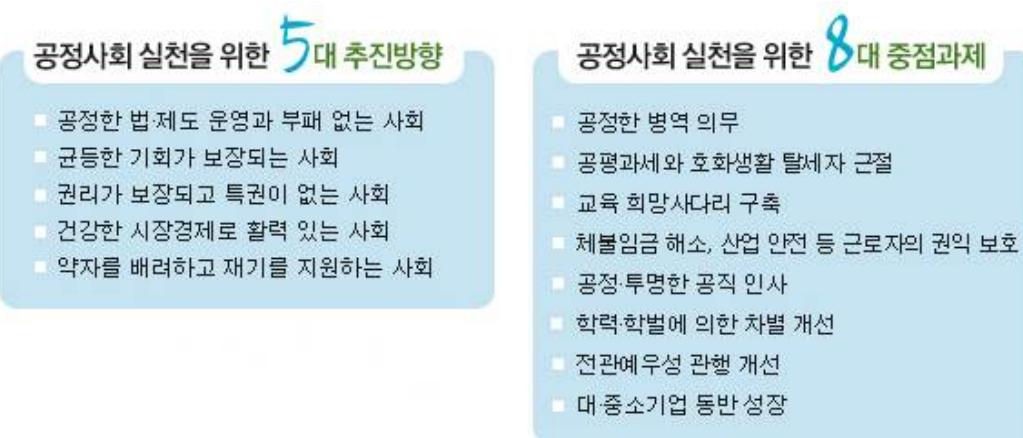
또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의미하는 사회적 연대에 관한 논의가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공정사회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도 중요시 여기므로 이의 구현을 위해 사회적 연대가 꼭 필요하다(김세진 외, 2011). 이는 사회적 책임, 배려, 관용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상호 공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뿐 아니라 정부 및 경제 주체, 정치행위자 등에 대한 공적 신뢰를 포함한다. 사회적 신뢰가 구축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관계에 의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공통된 목적을 향해 함께 행동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증대된다(박영미, 2009; Coleman, 1988).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 및 공적 갈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이 높아지며(장용석 외, 2009) 이를 통해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정책과 공권력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세금 및 소수 재벌 기업과 관련된 경제와 더불어 가장 불공정하고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야로 인식되는 정치에 관한 공정성 의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공정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신뢰를 포함한 정치, 행정, 사회, 경제 공정성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통해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점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민들의 공정 의식 개선 및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

를 제공할 수 있다.

공정사회는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정 과제로 이를 제시하면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주요 부처에서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사회에 대하여 '출발은 물론 경쟁 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즉,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라고 정의하였으며 2011년 2월에 열린 제 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통해 이의 실현을 위한 5대 추진방향 및 8대 중점과제를 확정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관리하고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주관하여 공감코리아 포털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정사회의 실천과제들을 홍보하고 있다(공감코리아 공정사회 홈페이지).

<그림 7-2>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5대 추진방향 및 8대 중점과제



(출처) 공감코리아 공정사회 홈페이지. fair.korea.kr

또한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한 5대 추진방향에 맞추어 총 28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3>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5대 추진방향별 세부 실천과제

5대 추진 방향	세부 실천과제	제도	상태	의식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 공직자 부패고리 차단	○	○	
	✓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구형) 기준 수립	○		
	✓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		
	✓ 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공정성 제고	○	○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 지역인재 선발 확대		○	
	✓ 신입생 구성 다양화 등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	
	✓ 지방 공공부문 인사 공정성 확보	○	○	
	✓ 정부·공공기관 특채 제도 개선	○		
	✓ 3대(성·연령·비정규직) 고용차별 시정		○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 각종 '전관예우'성 관행의 개선	○	○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권익 보호		○	
	✓ 연예산업의 공정 영업질서 조성	○		
	✓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및 병역이 자랑스런 사회분위기 조성	○		○
	✓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	○	○	
	✓ 역외탈세 방지 인프라 구축	○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		
	✓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강화	○	○	
	✓ 건설업체 하도급 관행 개선	○	○	
	✓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 불공정 약관·규정 정비	○		
	✓ 서민금융 피해방지·구제 강화	○	○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벌금 부과		○	
	✓ 소액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	○	
	✓ 일한 대가 제대로 받기 실천 - '3대 고용질서' 확립	○	○	
	✓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	○	
	✓ 중도탈락·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	
	✓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	

출처) 공감코리아 공정사회 홈페이지. fair.korea.kr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상태, 의식의 세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어떠한 원칙이나 정책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절차적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법질서의 구축 및 기회균등을 이를 수 있는 절차의 확립 등이 포함된다. 상태는 그 사회가 공정한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결과가 공정한지, 즉, 결과적 공정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 동일선상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해 성공할 기회가 보장되는 기회 균등한 상태, 자유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적 공정성 및 결과적 공정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서술한 공정성에 대한 의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3>의 내용을 제도, 상태, 의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정부에서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세부 실천과제의 내용이 제도 및 상태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 경제, 행정, 정치 주체에 대한 신뢰 확보를 비롯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 평가 및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던 부정부패를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상태 개선에 관한 정책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공정하게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공직자 및 국민들의 의식 개선에 관한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고소득 공직자 및 전문직들의 탈세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실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KDI의 공정사회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 조세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응답자의 46.3%가 소득축소·은닉 등의 탈세 방지를 꼽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공정 의식의 개선은 권력, 자원 등의 보유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강자와 약자 간의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문화의 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과 불신이 감소됨과 동시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정보소통의 통로로써의 연결망, 개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통제하는 규범, 거래비용의 감소(이재혁, 2006)를 가져오는 신뢰 등을 통해 그 사

회의 공통 목표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므로 각종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 및 번영을 가능케 한다. 이는 경제 성장에 매진한 결과 그 동안 간과되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의 개선을 통해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려는 공정사회의 목표와 일치한다. 따라서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들 중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관련된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공정사회의 수준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준 외(2011)의 연구는 한국의 공정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2009~2010년의 고용노동백서, 경제백서, 공정거래백서, 국민권익백서, 문화관광백서, 보건복지백서, 행정안전백서와 2011년의 업무 계획서, 국정감사 업무보고, 정책보고서 자료에서 나타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들 중에서 사회적 자본 확충과 관련된 37개의 정책들만을 추출하여 이를 제도, 상태, 의식으로 나누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9개의 정부 주관 부처별 추진 정책¹⁴⁾의 제도, 상태, 의식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4> 정부 주관부처별 추진 정책

(단위: 개)

구분	제도	상태	의식	합계
공정거래위원회	3	4	2	9(24.4%)
고용노동부	2.3	2.3	0.3	4.9(13.3%)
행정안전부	1.1	2.4	0.6	4.1(11.1%)
여성가족부	0.5	4	0.5	5(14%)

14)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 여건 개선, 역량강화와 신뢰성 제고를 통한 새로운 위상 정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 실현,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 등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정책으로는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듣는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등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는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 구현,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사회조성,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으로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국격에 맞는 여성 인력 활용, 성숙한 다문화 및 성평등 사회 조성, 온가족 희망 보듬기 등이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정책으로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서민금융 내실화 등이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정책으로는 서민 생활 안정, 공공부문 공정성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건전성제고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는 공정한 틀이 확립된 사회, 공평한 출발기회가 제공되는 사회,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등이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정책으로는 취약계층의 문화권 향유와 민생안정 지원, 공정한 기회와 경쟁, 문화를 통한 행복 체험 등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으로는 국격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렴세상 만들기가 있다.

구분	제도	상태	의식	합계
금융위원회	1	1.5	0.5	3(8.1%)
기획재정부	1.1	1.8	0	2.9(7.9%)
보건복지부	1.5	2.5	0	4(10.8%)
문화관광부	0	2	1	3(8.1%)
국민권익위원회	0	1	0	1(2.3%)
합계	10.5(28.5%)	21.5(58.3%)	4.9(13.2%)	36.9(100%)

주) 하나의 정책이 각 영역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두 영역에 포함되면 '0.5', 세 영역에 포함되면 '0.3'의 비중을 주었으므로 총 정책 수의 합계가 36.9로 나타남.

출처) 한준 외(2011)

위의 결과 역시 제도, 상태에 비하여 의식에 관한 정책이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 및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은 여러 부처에서 상당히 많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평등 문화 확산 등의 의식 전환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 거래 및 중소기업의 경쟁 여건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과 건전성 제고, 시장경쟁질서 확립 등 상태에 관한 정책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 반면, 이의 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경쟁질서 확립 및 경쟁문화 확산,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에 관한 것으로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특히,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경유착의 병폐가 뿌리깊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주요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극심한 격차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각종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요기업을 불공정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하여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고 국민들도 주요기업을 더 이상 불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차별이나 불평등이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상태의 정비에 전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서도 시장경제질서를 포함하는 경제 부문의 제도나 상태에 대한 개선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제도나 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이 상당수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정사회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상태의 정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의식의 개선을 통해 서로 신뢰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타인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며 행정, 정치권의 부정 부패가 자행되지 않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는 등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공정 의식이 조화롭게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적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행정, 정치, 경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OECD 국가와 한국의 공정 의식에 대한 사회, 행정, 정치, 경제 각 분야의 수치 및 변화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7-5> 한국의 공정 의식 수준 및 변화율

구분			OECD 평균	한국의 수치	
정치 공정성	정치공정성		1990년대	0.58	
			2000년대	0.60	
			변화율	3.4% -10.7%	
	정치 행위자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1990년대	0.21	
			2000년대	0.22	
			변화율	4.8% -4.2%	
		의회에 대한 신뢰	1990년대	0.37	
			2000년대	0.38	
			변화율	2.7% -16.1%	
행정 공정성	행정공정성		1990년대	1.91	
			2000년대	2.05	
			변화율	7.3% -6%	
	정부 역할	외국인 노동자 규제	1990년대	0.51	
			2000년대	0.55	
			변화율	7.8% 14.8%	
	기관	사법시스템	1990년대	0.55	
				0.59	

구분			OECD 평균	한국의 수치
신뢰	정부	2000년대	0.59	0.50
		변화율	7.3%	-15.3%
		1990년대	0.38	0.44
		2000년대	0.45	0.46
		변화율	18.4%	4.5%
	행정서비스	1990년대	0.46	0.78
		2000년대	0.46	0.63
		변화율	0%	-19.2%
경제 공정성	경제공정성		1990년대	1.75
			2000년대	1.56
			변화율	4%
	세금 형평	1990년대	9.14	9.41
		2000년대	9.21	9.47
		변화율	0.8%	0.6%
	경제 주체 신뢰	1990년대	2.27	2.12
		2000년대	2.21	2.33
		변화율	-2.6%	9.9%
	고용 우선 순위	1990년대	0.27	0.03
		2000년대	0.29	0.03
		변화율	7.4%	0%
사회 공정성	사회공정성		1990년대	2.44
			2000년대	2.37
			변화율	2% 13.4%
	성 격차	1990년대	3.12	2.68
		2000년대	3.23	2.96
		변화율	3.5%	10.4%
	정치 리더의 적합성		1990년대	2.92
			2000년대	2.44
			변화율	0% 7.5%
	언론 자유 보장	1990년대	0.16	0.08
		2000년대	0.17	0.02
		변화율	6.3%	-75%
	인권 보호	1990년대	0.59	0.47
		2000년대	0.61	0.70
		변화율	3.4%	48.9%
	사회 구성원 신뢰	1990년대	0.46	0.30
		2000년대	0.54	0.30
		변화율	17.4%	0%

주¹⁾ 음영 표시한 부분은 국민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대수준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이며 그 외의 부분은 공정사회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임.

주²⁾ 각 부분에 대한 한국의 수치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을 경우 볼드체로 표시

주³⁾ 각 영역별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동일한 국가 기준임.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성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정치, 행정 공정성의 경우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그 수치가 감소하여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 공정성은 OECD 국가 평균보다 그 수치가 낮으면서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 공정성은 OECD 국가 평균보다 그 수치가 높지만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 공정성은 OECD 국가 평균보다 그 수치는 낮지만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 공정성 역시 OECD 국가 평균보다 그 수치는 낮지만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그 수치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정성에 대한 의식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치에 비하여 한참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정치, 경제 공정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성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비교대상국인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한국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정치 공정성 중 의회 신뢰에 관한 내용, 행정 공정성 중 2000년대의 사법시스템 신뢰에 관한 내용, 경제 공정성 중 90년대의 주요기업 신뢰에 관한 내용,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내용, 사회 공정성 중 성 격차에 관한 내용, 언론 자유 보호에 관한 내용, 90년대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사회 구성원 신뢰에 관한 내용이 해당한다. 반면, 90년대에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가 2000년대에 증가한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경제 공정성 중 경제 주체인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의 내용과 사회 공정성 중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공정성 중 2000년대의 사법시스템 신뢰에 관한 내용과 정치 공정성 중 의회 신뢰 역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그 수치가 감소하여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비슷한 경제규모를 지닌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법시스템의 경우 1990년대에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았다가 2000년대에 이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법시스템이나 의회는 국가기관에 속하는데 이에 대한 신뢰는 기관의 능력에 대한 기대로서의 신뢰와 기관의 의도에 대한 기대로서의 신뢰를 포함한다. 전자는 기관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맡은 책무와 책임을 다하리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김상돈 외, 2007).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기관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승하면서 이들이 사법시스템이나 의회에 대하여 기대하는 수준과 관심 정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으나 실제 이들 기관이 행하는 기능 및 이들의 역량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이 힘 없는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과의 괴리감이 형성되고 있다(남궁근 외, 1991).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을 입안하고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법기관과 의회는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그 역량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불신의 정도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재벌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판사가 조폭과 연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고등법원 판사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였다. 법이나 규칙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 없이 적용될 때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 KDI가 실시한 최근의 공정사회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공정한 사례나 관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야로 응답자의 31.2%가 정치계를 꼽았다. 또한 공정사회 실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야로 응답자의 32.9%가 정치계를 꼽았다. 이처럼 의회를 비롯한 정치계에 대하여 국민들은 가장 먼저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지라고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부터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월드컵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고착화되어 있다. 또한 대의기관으로써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표심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 식의 행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법시스템과 의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배제하기보다는 포용함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고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종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충족될 때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의 확보는 공정사회 구현을 통한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행정서비스, 정당에 대한 신뢰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한국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1994~1999년에 비해 2005~2007년에 수치 및 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OECD 국가 평균의 성장

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와 정당에 대한 신뢰의 경우에는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한국의 수치가 높다 할지라도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가 꾸준히 유지, 향상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한편, 정당에 대한 신뢰와 의회에 대한 신뢰는 모두 정치행위자에 대한 신뢰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정당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은 반면, 의회에 대한 신뢰 수준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정당에 대한 신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당을 고려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이의 수준이 높은 반면, 의회에 대한 신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를 각종 부조리와 비리의 온상인 정치행위자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OECD보다 일관적으로 그 평균의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성별에 따라 고등교육 수혜나 정치적 리더에 차이를 두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비슷한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들(뉴질랜드, 스페인)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성별에 따른 격차 정도가 심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유교를 바탕으로 성립된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게 고착화되어 있어 여성을 무시하는 풍토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력이나 실력 측면에서 여성의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적 장벽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요직에 오를 확률은 매우 낮았다. 실제로 2007년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에서 여성이 합격한 비율이 각각 35.2%, 49.0%, 67.7%였고 주요 언론사에서의 합격 비율 역시 30%를 상회할 정도로 여성들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그러나 2007년 국가별 남녀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93개국 중 하위권인 64위를 기록하였다. 1위였던 노르웨이와 의회의 여성 점유율(37.9% vs. 13.4%) 및 행정관리직 여성 비율(30% vs. 8%),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50% vs. 39%)을 비교해보면(주재선, 2008) 한국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 알 수 있다. Okin(1998)은 생물학적 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써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남녀가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언론의 자유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은 OECD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OECD의 16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1994~1999년에 13위, 2005~2007년에 16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들어 OECD 국가들의 평균이 6.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1위인 스위스와의 격차가 더욱 심하게 벌어졌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환경이나 방폐장 건립 등의 공공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이 원활치 않아 상호 공감의 형성이 어려워짐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에게 언론 자유의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줄이고 차별 없는 소통을 보장하여 각종 사회적 갈등의 정도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신뢰에 있어서도 일반인 신뢰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OECD 16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1994~1999년에는 11위, 2005~2007년에는 10위를 기록하였으며 OECD 국가들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그 평균이 17.4% 정도 증가하였음에 반하여 한국은 수치의 변동이 없었다.

사회 구성원 신뢰는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들에 대하여 갖는 집합적 태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시민들이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들 간의 거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이 더욱 쉽게 이루어져 사회협동과 조정을 촉진시킨다. 즉,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호협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종민 외, 2006). 이러한 과정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것이다(이재혁, 2006). 그러나 Fukuyama(1995)는 신뢰를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과 같이 혈연 집단 등 일차집단의 기준에서 머무는 특정화된 신뢰 즉, 저신뢰 사회와 독일, 미국 등과 같이 연고를 뛰어 넘어 일반적 타자와의 관계까지 확대된 일반화된 신뢰 즉, 고신뢰 사회로 구분한다. Knack & Keefer(1997), La Porta et al(1997)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신뢰가 형성된 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나 연출망으로 표현되는 특정화된 신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한국 사회는 오래 전부터 연고주의가 정착되어 있어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강

한 거부감을 형성하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일반인 신뢰에 대한 수치가 OECD 평균보다도 낮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신뢰 수준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시민의식의 성숙,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연고주의를 철폐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신뢰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정사회의 이념과도 어긋나며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여 공공이익을 위한 협력을 어렵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산성 증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 그 수치가 증가한 부분은 경제 공정성 중 경제 주체 즉,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와 사회 공정성 중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는 1994~1999년에 비하여 2005~2007년에 그 수치가 9.9% 정도 증가하여 OECD 15개 국가 중 13위에서 3위로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OECD 국가의 평균과 이를 국가의 전반적인 수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수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기업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권력을 보유한 주요기업이 자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여 사회 전체에 각종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Gambetta, 1988; 이재혁, 2006). 특히나 한국은 과거부터 주요기업의 권력 독점 문제, 정경유착 문제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 중소기업과 주요기업 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였다. 이는 주요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므로 공정사회 구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정도가 상승한 것은 삼성, LG 등의 주요기업에서 출시하는 각종 제품들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등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의 결과로 국민들이 주요기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권보호에 관한 부분은 개인 인권에 대한 중요도 인식으로 살펴보았는데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OECD 10개국 중 1994~1999년에 8위, 2005~2007년에 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수치를 살펴보면 4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오늘날의

세계사회는 국민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역동성으로 인해 다문화적인 모습으로 재편되고 있다(소병철, 2010). 이에 따라 타인의 경험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 동안의 관행을 살펴보면,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다(이미혜, 2008). 이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1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에 근거하여 핵심적으로 추진 해야 하는 주요 인권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한준 외, 2011). 이외에도 타인의 인권을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식 개선을 추동하는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의식 전환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특히,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에 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도 연 결시킬 수 있다. 이 역시 1990년대에는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OECD 15개 국가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여 3위를 기록하였으며 OECD 국가의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채용 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한국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이는 국민들이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책의 시행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각 영역의 공정 의식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공정사회를 나타내는 척도로써의 상태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이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제도 및 상태와 의식 간의 균형 혹은 불균형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6> 제도 및 상태와 의식의 비교

구분				수치 (OECD 평균)	순위	상대 수준
정치	정치 부패	제도	정치시스템부패(CPI)	0.83(0.81)	7/18	중
		의식	반부패 정도 인식	0.32(0.51)	14/18	하
행정	사법	제도	사법시스템 제도	0.83(0.85)	9/20	중
		의식	사법시스템 신뢰	0.50(0.58)	14/20	중
	관료 시스템	제도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	0.84(1.27)	17/20	하
		의식	정부 신뢰	0.46(0.41)	6/20	상
경제	기업	제도	기업환경지수	70.00(70.35)	7/20	중
		의식	주요기업 신뢰	2.33(2.20)	3/20	상
	재산권	제도	재산권 보호	70(80.59)	12/17	하
		의식	탈세에 대한 인식	9.47(9.21)	3/17	상
사회	언론	상태	언론자유지수	29.00(20.40)	17/20	하
		의식	언론 자유 보호 중요성 인식	0.02(0.19)	20/20	하
	성 격차	제도	남녀 성 격차	0.62(0.70)	17/18	하
		의식	고등교육 수혜 중요성 인식	2.96(3.26)	15/18	하
		의식	정치 리더 적합성 인식	2.44(2.92)	17/18	하

주¹⁾ 상대수준은 대상 국가 중 한국이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에 속하는가로 구분 함.

주²⁾ 정치 영역의 내용은 데이터의 한계로 1990년대로 분석하였으며 나머지 내용은 모두 2000년대의 데이터로 분석하였음.

주³⁾ 언론자유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공정사회의 정도에 가까운 것을 의미함.

제도 및 상태와 의식 영역 중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과 비교하여 본 결과, 사회 부분 중 언론에 관한 내용과 성 격차에 관한 내용은 모두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행정 부분 중 사법에 관한 내용은 중위권 수준으로 제도 및 상태와 인식의 결과가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정치 부분 중 정치 부패에 관한 내용, 행정 부분 중 관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 경제 부분 중 기업에 관한 내용과 재산권에 관한 내용에서 제도와 인식 간의 결과가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부패에 있어서 제도에 해당하는 정치시스템 부패(CPI)에 관한 내용은 중위권 수준이었던 반면, 정치부패 정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데이터 구들의 한계로 인하여 1990년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나 정치시스템 부패(CPI)에 관한 제도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부패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통해 한국의 정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정 부분 중 관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제도에 해당하는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에 비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민간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할 능력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은 매우 높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부 즉, 행정에 대한 권위가 강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설사 정부의 능력이나 역량 수준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따라가려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벼금가도록 정부의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분 중 기업에 관한 내용은 제도(절차적 공정성)에 해당하는 기업환경지수에 비하여 국민들의 의식인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창업, 운영 등의 절차에서 규제에 따른 부담과 정부 규제의 효율성 정도에 관한 것으로 제도적으로 기회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나타낸다.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역시 주요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회균등 정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 둘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업 운영에 대한 기회균등의 정도가 제도적으로 덜 완비되었을지라도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주요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2000년대 들어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요기업의 상품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들 기업이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주요기업 간의 차이가 좀 더 좁혀지고 주요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주요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상응하여 실제 기업 운영에 있어 그 기회균등 정도가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인식 정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체계가 미흡하다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시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 보호 수준은 개인이 사적 재산권을 축적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에 관한 내용으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패나 재산권의 도용 정도도 함께 포함된다. 경제 부분 중 재산권에 관한 내용 역시 제도에 해당하는 재산권 보호 수준에 비하여 탈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낮아 국민들이 탈세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종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탈세 행위가 매우 만연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 외의 행정 부분 중 사법에 관한 내용, 사회 부분 중 언론과 성 격차에 관한 내용은 제도 및 상태와 의식 간의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수준이 거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나 상태, 의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이 치우치지 않도록 제도, 상태, 의식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나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이들 간의 불균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균형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표 7-7> 한국의 위상(종합)

구분	순위		상대수준	
	1994~1999	2005~2007	1994~1999	2005~2007
정치공정성(13)	11	7	하	중
행정공정성(15)	1	6	상	중
경제공정성(14)	13	12	하	하
사회공정성(8)	7	4	하	중

주¹⁾ () 안의 숫자는 각 분야별 비교 대상 국가의 숫자임.

주²⁾ 상대수준은 대상 국가 중 한국이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에 속하는가로 구분 함.

주³⁾ 각 영역별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동일한 국가 기준임.

<표 7-7>은 비교국가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구분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각 분야별 한국의 위상과 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0년대에는 행정공정성을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 공정성 모두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0년대에는 정치, 사회 공정성이 중위권 수준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공정성은 2000년대에도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행정공정성의 경우는 오히려 2000년대에 중위권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8> 한국의 위상(영역별)

구분			순위		상대 수준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치 공정성	정치 행위자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15)	6	7	중	중
		의회에 대한 신뢰(15)	9	9	중	중
행정 공정성	정부 역할	외국인 노동자 규제(15)	8	3	중	상
		사법시스템(15)	7	11	중	하
	기관 신뢰	정부(15)	5	6	중	중
		행정서비스(15)	1	3	상	상
경제 공정성	세금 형평	탈세에 대한 인식(15)	3	2	상	상
	경제 주체 신뢰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15)	13	3	하	상
	고용 우선 순위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17)	16	17	하	하
사회 공정성	성 격차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13)	12	10	하	하
		정치 리더의 적합성(17)	14	17	하	하
	언론자유 보장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16)	13	16	하	하
	인권 보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10)	8	3	하	상
	사회 구성원 신뢰	일반인 신뢰(16)	11	10	중	중

주¹⁾ () 안의 숫자는 각 지표별 대상 국가의 숫자임.

주²⁾ 상대수준은 대상 국가 중 한국이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에 속하는가로 구분 함.

주³⁾ 음영 표시한 부분은 국민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대수준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이며 그 외의 부분은 사회의 상태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임.

주⁴⁾ 각 영역별 19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동일한 국가 기준임.

<표 7-8>은 비교국가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구분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각 분야별 한국의 위상과 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한국의 전반적인 공정 의식 수준은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중,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공정성 중 고용우선순위, 사회 공정성 중 성 격차, 언론 자유 보장에 관한 내용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 공정성 중 정당 및 의회에 대한 신뢰, 행정 공정성 중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 공정성 중 사회 구성원 신뢰의 일반인 신뢰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위권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행정 공정성 중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경제 공정성 중 탈세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표 7-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경우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1980년대 이후로 그 수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탈세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도 2005~2007년에 일본이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위공직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 체납이 성실한 납세자로 하여금 상대적인 불이익을 느끼게 한 경우가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이러한 경험과 관행의 축적이 국민들이 탈세를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행정 공정성 중 외국인 노동자 규제에 대한 인식, 경제 공정성 중 경제 주체인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사회 공정성 중 인권보호에 해당하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중,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외국인들의 인격을 보호하고 이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과 함께 주요기업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빛을 발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정사회 수준 그 중에서도 공정 의식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라 평가 할 수 있다.

3. 소결

본 절에서는 한국의 공정사회 위상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정사회지표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고, 아울러 공정의식에 대한 한국의 위상을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통하여 비교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공정사회지표를 평가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

수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한국의 공정사회 여건이 개선되어 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사회지표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영역인 제도 영역과 상태 영역을 분리해 살펴보면, 상태 영역에서는 개선추이를 감지할 수 있는 반면 제도 영역에서는 뚜렷한 개선추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1995년에서 2009년 사이 한국의 상태 영역 지수값의 연평균 변화율이 OECD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의 상태영역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그 개선 속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OECD 국가와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영역의 경우에는 1995년에서 2009년 사이 한국의 연평균 변화율이 전체평균보다 낮아 격차가 다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년대 후반의 한국의 연평균 변화율이 OECD 전체평균보다 높아 최근 들어 제도영역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비록 한국이 공정사회지표 자체로는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OECD 국가별 순위에서는 별다른 순위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순위 상승을 보이는 경우에도 절대적인 순위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분석기간 중 상대적인 국가별 순위를 보면 제도 영역의 경우 29위에서 26위로 약간 상승했고, 상태 영역의 경우 28위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공정사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타국을 따라잡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한국의 위상이 현재로서는 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수준에 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전체적인 평균에서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분류 5개 항목 중에서도 형평을 제외한 법질서, 기회균등, 자유보장, 사회안전망 구축은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으며, 소분류 13개 항목 중에서도 3개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더더욱 큰 문제는 그래도 순위가 높은 항목들인 경제(자유보장), 소득(형평) 등은 1995년 상위그룹에 속하다가 2009년에는 중위그룹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사회지표에 나타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위그룹에 속하는 항목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사회가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항목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의 공정의식 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과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중심으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공정

의식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공정사회를 나타내는 척도로 써의 상태와 비교해 보았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는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 가능하므로 한국 사회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제도 및 상태와 의식 간의 균형 혹은 불균형이 나타나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상태의 정비에 전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서도 시장경제질서를 포함하는 경제 부문의 제도나 상태에 대한 개선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의식의 변화율을 살펴보았는데 정치, 행정 공정성의 경우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그 수치가 감소하여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행정 공정성은 OECD 국가 평균보다 그 수치가 높지만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고 사회 공정성은 OECD 국가 평균보다 그 수치는 낮지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정치, 경제 공정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성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을 살펴본 결과, 비교대상국인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한국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정치 공정성 중 의회 신뢰에 관한 내용, 행정 공정성 중 2000년대의 사법시스템 신뢰에 관한 내용, 경제 공정성 중 90년대의 주요기업 신뢰에 관한 내용,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내용, 사회 공정성 중 성격차에 관한 내용, 언론 자유 보호에 관한 내용, 90년대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사회 구성원 신뢰에 관한 내용이다. 반면, 90년대에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가 2000년대에 증가한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경제 공정성 중 경제 주체인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의 내용과 사회 공정성 중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제도 및 상태와 의식 영역 중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과 비교한 결과, 사회 부분 중 언론에 관한 내용과 성격차에 관한 내용은 모두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행정 부분 중 사법에 관한 내용은 중위권 수준으로 제도 및 상태와 인식의 결과가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 부분 중 정치 부패에 관한 내용, 행정 부분 중 관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 경제 부분 중 기업에 관한 내용과 재산권에 관한 내용에서 제도와 인식 간의 결과가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교국가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구분

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각 분야별 한국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전반적인 공정 의식 수준은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중,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공정성 중 고용우선순위, 사회 공정성 중 성 격차, 언론 자유 보장에 관한 내용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었으며 정치 공정성 중 정당 및 의회에 대한 신뢰, 행정 공정성 중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 공정성 중 사회 구성원 신뢰의 일반인 신뢰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위권에 속하고 있었다. 반면, 행정 공정성 중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경제 공정성 중 탈세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정사회 수준 그 중에서도 공정 의식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적절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실상 부족하였으며 있더라도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사전적 공정성 및 사후적 공정성이라는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개별적 요건들을 지표로 설정하여 한 국가의 공정사회 실현 정도를 의미하는 공정사회 총괄지표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지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정 사회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를 가지고 한국의 공정사회 위상을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공정사회지표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대분류 그룹은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명명했는데, 여기에는 법질서, 기회균등 등 제도(institution)적인 측면에서 사전적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대분류 그룹은 결과적 공정성으로서 사후적으로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태(state)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도 영역은 다시 법질서 및 기회균등 두 개의 중분류로 그리고 상태 영역은 자유보장, 형평, 사회 안전망 구축 세 개의 중분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분류 내 소분류 항목은 총 13개로 세분화되어 있다.

먼저 글로벌 추세 분석 차원에서 공정사회지표의 연도별 평균을 전 세계 국가 및 지표산정대상 31개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 평균의 시계열 추이와 함께 비교해보았다. 이에 따르면, 제도영역과 상태영역 등 공정사회 여건의 발전 속도가 경

제 성장 발전 속도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경제 성장 발전 속도의 둔화에 비해 제도영역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사회지표를 구성하는 각 영역별 발전의 국가 간 격차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국가 간 경제적 격차에 비해서 제도영역 및 상태영역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인당 GDP 및 상태영역의 국가 간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제도영역의 국가 간 격차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인 OECD 30개국을 G20국가와 non-G20 국가로 구분하여 국가군별 비교를 해보면, non-G20 국가군이 G20 국가군에 비해 경제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공정사회지표를 구성하는 제도 및 상태 영역의 발전 속도에 있어서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 공정사회지표를 살펴보면, 미미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정사회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제도 영역의 지수는 평균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개별국 순위에서는 2009년 현재 덴마크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프랑스,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터키였으며, 한국은 29위에서 26위로 하위권이지만 순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 부분에서도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국 순위에서는 2009년 현재 핀란드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는 멕시코, 가장 많이 악화된 국가는 일본이며, 한국은 1995년 0.44에서 2009년 0.51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국가별 순위는 28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공정사회지표를 평가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수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한국의 공정사회 여건이 개선되어 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사회지표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영역인 제도 영역과 상태 영역을 분리해 살펴보면, 상태 영역에서는 개선추이를 감지할 수 있는 반면 제도 영역에서는 뚜렷한 개선추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상대적인 위상을 살펴보면, 비록 한국이 공정사회지표 자체로는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OECD 국가별 순위에서는 별다른 순위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순위 상승을 보이는 경우에도 절대적인 순위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국

이 공정사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타국을 따라 잡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한국의 위상이 현재로서는 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수준에 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사회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공정사회 여건을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사회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위상과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고자 정치, 행정, 경제, 사회공정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분석을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OECD 국가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한국의 위상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정사회 실현 정책’들을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들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도와 상태의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국민 및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은 그 양과 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9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정사회 관련 추진 정책의 경우 대부분 시장경제질서 등을 포함한 경제 부문의 상태나 제도 개선에 편향되어 있었다.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성 측면의 의식 수준이 여전히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성의 의식 측면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 및 상태의 내용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영역에서는 제도 및 상태와 의식 간의 불균형적인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상을 통해 한국의 공정사회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열악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식 중심의 정책과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부분의 공정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회 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상생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기득권층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한준 외, 2011). 주요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감소를 비롯한 취약 계층 및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은 다양성과 공생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현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득권층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경제 부문에 너무

치우쳐 있어 사회, 행정, 정치 부문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행정, 정치 부문의 부정 부패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부문에 있어 통합, 공생, 협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경제 영역의 활성화 및 공정 거래를 위한 정책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 행정, 사회 부분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기회균등, 반부패, 신뢰 등의 의식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더욱 가치를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행정, 사회, 경제 영역에 대한 균등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공정성 측면의 의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과 고용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학력 여성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각종 고시에서 여성의 합격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 이는 여전히 전통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관련 대책 중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매우 적다는 점은 고용에 대한 성별 차이를 줄이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 없이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교육 및 고용의 기회와 사회적 지위가 동등하게 주어진다고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의 자유가 보호·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175개국 중 한국은 69위(2009년 기준)이며 2005년 이후 매년 그 순위가 하락하고 있고 OECD와 비교할 때에도 한국의 언론 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척도로 언론의 자유가 사용되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사 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라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쉽지 않다. 언론이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특정 사회계층에게만 언론의 기회가 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가 불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언론이 자본, 권력,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되 언론 스스로가 객관적 사실을 중립적인 태도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사법시스템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확충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공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중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현격하게 낮은 원인으로는 용두사미식의 수사와 사법개혁을 들 수 있다. 이는 의회 신뢰 및 정치 부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제식구 감싸기, 정치권력의 결탁 등으로 비춰지는 몇몇 사법처리 사례는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초래했다. 사법시스템은 국가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못한 사법시스템은 그 나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확립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의 적용이 권력과 재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선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대의기관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뿐만 아니라 의회 구성원 자체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부패의 온상지, 권력의 남용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 구성원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충분히 자각해야 하며, 이들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법의 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높은 공정 의식이 확보된 영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권보호, 외국인 노동자 규제,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상승하였다. 세계화에 따라 국경이 사라지고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모두를 포괄하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 역시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 급변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언론매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인권,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 이민 등에 대한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될 수 있었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주요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성장에만 몰두하여 국민 즉, 고객을 배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키워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의 이미지가 곧 경쟁력으로 간주되면서 기업의 실태, 지위와 같

은 기업의 정보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주요기업들은 사회·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들의 주요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영역에서 확보한 공정 의식 수준을 유지하고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권, 다문화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인권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요기업은 이미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표방하는 이미지와 실제 기업의 행보가 동일해야 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 부분 중 정치 부패에 관한 내용, 행정 부분 중 관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 경제 부분 중 기업에 관한 내용과 재산권에 관한 내용에 있어 제도 및 상태와 인식 간의 불균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정치 부패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모두 제도 및 상태보다 의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이를 보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반면, 관료 시스템, 기업, 재산권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제도 및 상태보다 의식의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상태의 개선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 상태, 의식 중 어느 한 부분이 낮게 나타나면 결국 다른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 상태, 의식 간의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는 사회적 갈등을 줄여 공정 사회를 구현하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확보와 유지 및 이를 위한 의식 중심의 정책 실행은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참 고 문 헌 •

- 강원택. 2011. “한국 정치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개혁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학술행사 발표자료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공정한 사회 종합정책연구 요약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 공감코리아 공정사회 홈페이지. fair.korea.kr
- 김병관. 2011.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성: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수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학술행사 발표자료집.
- 김상돈·전계영. 2007. “한국인의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 분석”. *한국사회* 8(2): 171-204.
- 김세원·박길성·이승훈·이우진·김주성·정용덕·오병선·안상훈·허병기·김태기·윤영철. 2011. “페어소사이어티: 기회가 균등한 사회”. *한국경제신문*.
- 김안제. 2011. “공정사회의 논리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지방행정연구* 25(1): 3-14.
- 김주성. 2010. “공정사회의 조건과 정책과제”. 경기개발연구원, CEO Report 35: 1-20.
- 김태종, 박종민, 박정후, 양정호, 장원호, 한준. 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 연구. KDI 국제정책대학원.
- 남궁근·배병용·이시원·김영기. 1991. “의회 신뢰의 차원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언론인에 대한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5(1): 189-206.
- 노세극. 2009. “병 주고 약 주는 이명박 정부: 사회양극화 조장하면서 친서민 정책 운운하는 이율배반”. *새세상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공정사회”.
- 박영미. 2009. “조직성격유형과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3(1): 121-144.
- 박종민·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69.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소병철. 2010. “관용의 조건으로서의 인권적 정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한 옹호론”. *민주주의와 인권* 10(3): 137-161.
- 이기홍. 2008. “사회관계의 변화와 신뢰사회의 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정책연구총서.
- 이미혜. 2008. “[지금 여성계는]인권존중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새가정* 55: 110-111.
-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5): 61-98.
- 임혁백. 201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반발전과 공정한 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학술행사 발표자료집*.
- 장동진. 2011.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공정한 사회 담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학술행사 발표자료집*.
- 장용석·박명호·강상인·오완근·이영섭·한상범·박찬열·정명은·박나라. 2010.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Ⅱ): 통합사회지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장용석·정장훈·조문석.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조사연구* 10(2): 45-69.
- 조대엽. 2006. “한국사회의 전환과 사회통합의 패러다임.” *한국사회* 7(1): 5-39.
- 좌승희. 2011. “한국경제, 새로운 발전모형과 공정한 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학술행사 발표자료집*.
- 주재선. 2008. “2008 여성 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채구묵. 2007. “소득불평등 실패, 원인분석 및 과제: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1): 199-221.
- 최정표. 2011. “공정한 사회와 공정거래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학술행사 발표자료집*.
- 한준·김희정·장미혜·장용석. 2011.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2011년도 특임장관실 학술연구용역.
- 함인희. 2011. “젠더 공정성(Gender Fairness)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학술행사 발표자료집*.
- 현오석. 2011.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제5회 국정과제 공동 세미나 자료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Altschull, J. Herbert. 1984. *Agents for Power : The Role of the News Media in Human Affairs*. New York.
- Barr, N. 2004.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Evan, Peter.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6): 1119-1132.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New York: Free Press.
- Gambetta, Diego. 1988. "Mafia: The Price of Distrust". pp. 158-175 in D.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UK: Basil Blackwell.
- Heritage Foundation. 2011. *2011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 Knack, Stephen & Phili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1251-1288.
-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 Shleifer & R. Vishny. 1997.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7(2): 333-338.
- Miller, D. 1976. *Social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kin, Susan. 1998.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Some Tensions". *Ethics* 108(4): 661-684.
- Rawls, John.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 Amartya. 2009. "The Idea of Justic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Zak, Paul J. & Stephen Knack.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1: 295-321.

부 표

[부록 A] 세계가치관조사 설문 내용

1. 정치공정성

- 정치행위자 신뢰

1) 정당에 대한 신뢰

WVS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Read out and code one answer for each):

Political parties

A great deal	Quite a lot	Not very much	None at all
1	2	3	4

2) 의회에 대한 신뢰

Parliament

A great deal	Quite a lot	Not very much	None at all
1	2	3	4

- 반부패 : 정치부패 정도

WVS. How widespread do you think bride taking and corruption is in this country?

Almost no public officials engaged in it	A few are	Most are	Almost all public officials are engaged in it
1	2	3	4

2. 행정공정성

- 정부 역할

1) 이민정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 규제 필요성 인식

WVS How about people from other countries coming here to work. Which one of the following do you think the government should do?

- ① Let anyone come who want to
- ② Let people come as long as there are jobs available
- ③ Place strict limits on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can come here
- ④ Prohibit people coming here from other countries

• 기관신뢰

1)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WVS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V 137 Justice System

A great deal / Quite a lot / Not very much / None at all

2) 정부에 대한 신뢰

V 138 The government (in your nation's capital)

A great deal / Quite a lot / Not very much / None at all

3)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V 141 The Civil service

A great deal / Quite a lot / Not very much / None at all

3. 경제공정성

• 세금 형평

1) 탈세에 대한 인식

WVS. Please tell me for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whether you think it can always be justified, never be justified, or something in between, using this card. Cheating on taxes if you have a chance

Never
justifiable

1 2 3 4 5 6 7 8 9 10

Always
justifiable

• 경제주체 신뢰

WVS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s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Major companies...

1 A great deal / 2 Quite a lot / 3 Not very much / 4 None at all

• 고용 우선순위

1) 고용 우선순위 인식(자국민 vs 외국인)

WVS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When jobs are scarce, employers should give priority to [NATION] people over immigrants

Agree 1	Disagree 2	Neither 3
------------	---------------	--------------

4. 사회공정성

• 성격차

1)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남자 vs 여자)

WVS A university education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Agree strongly 1	Agree 2	Disagree 3	Strongly disagree 4
---------------------	------------	---------------	------------------------

2) 정치 리더의 적합성(남자 vs 여자)

WVS On the whole,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 than women do.

Agree strongly 1	Agree 2	Disagree 3	Strongly disagree 4
---------------------	------------	---------------	------------------------

• 언론 자유 보장 :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

WVS If you had to choose, which one of the things in this card would you say is most important?(Code one answer only under "first choice")

Maintaining order in the nation/Giving people more say in important government decisions/Fighting rising prices/Protecting freedom of speech

WVS And which would be the next most important?(Code one answer only

under "second choice")

• 관용 :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인권의 중요성: 개별 인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

WVS How much respect is there for individual human rights nowadays in this country? Do you feel there is

- ① A great deal of respect for individual human rights
- ② Fairly much respect
- ③ Not much respect
- ④ No respect at all

• 사회구성원 신뢰

1) 일반인에 대한 신뢰

WVS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1 Most people can be trusted / 2 Can't be too careful

2) 외국인들에 대한 신뢰

WVS. I like to ask you how much you trust people from various groups.

Could you tell me for each whether you trust people from this group completely, somewhat, not very much or not at all?

People of another nationality

Trust completely	Trust a little	Neither trust or distrust	Not trust very much	Not trust at all
1	2	3	4	5

[부록 B] 공정사회 의식 국제 비교 분석 세부내용

- 정치행위자 신뢰 : 정당에 대한 신뢰

이 항목은 정당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것으로 '① A great deal , ② Quite a lot' 항목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하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가 아닌 국민들이 현재의 공정 수준의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E069_12 항목이다.

질문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Read out and code one answer for 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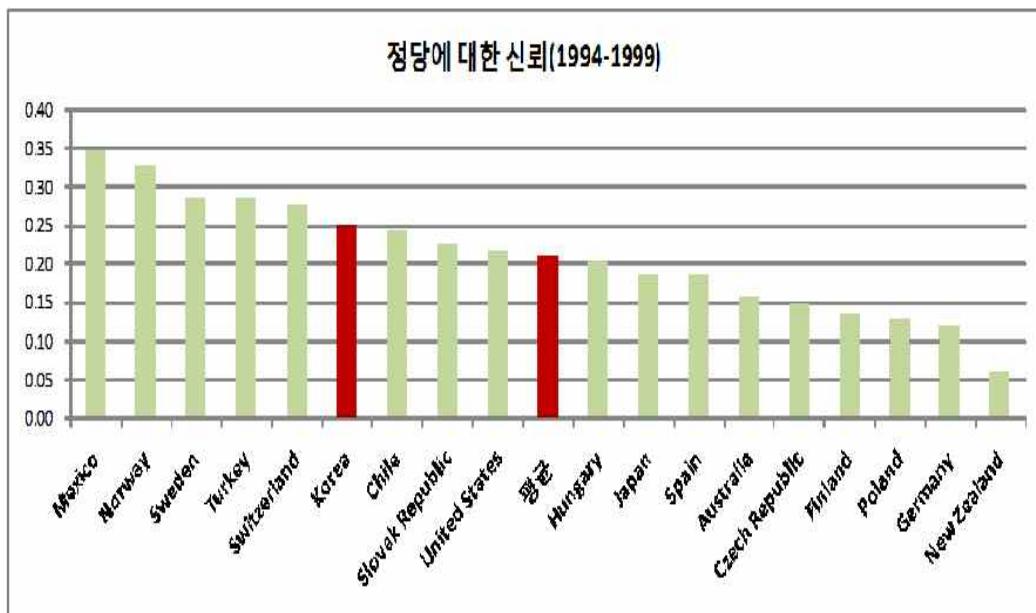
Political parties

- ① A great deal
- ② Quite a lot
- ③ Not very much
- ④ None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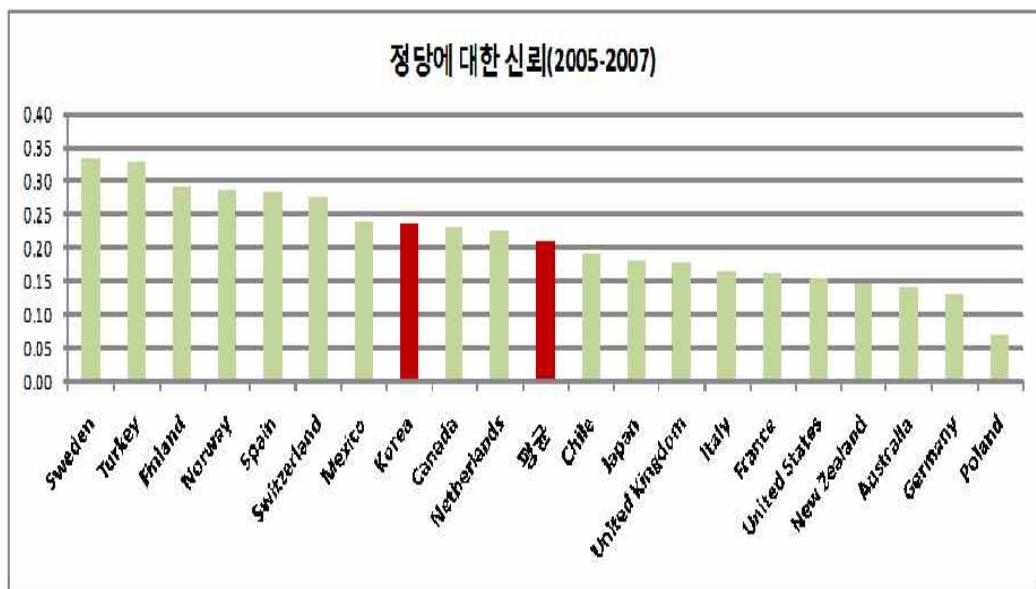
<부표 B-1> 정당에 대한 신뢰(1990년대와 2000년대)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Mexico	0.35	1	Sweden	0.33
2	Norway	0.33	1	Turkey	0.33
3	Sweden	0.28	3	Finland	0.29
3	Turkey	0.28	3	Norway	0.29
3	Switzerland	0.28	3	Spain	0.29
6	Korea	0.25	6	Switzerland	0.28
7	Chile	0.24	7	Mexico	0.24
8	Slovak Republic	0.23	7	Korea	0.24
9	United States	0.22	9	Canada	0.23
	평균	0.21	9	Netherlands	0.23
10	Hungary	0.2		평균	0.21
11	Japan	0.19	11	Chile	0.19
11	Spain	0.19	12	Japan	0.18
13	Australia	0.16	12	United Kingdom	0.18
14	Czech Republic	0.15	14	Italy	0.17
15	Finland	0.13	15	France	0.16
15	Poland	0.13	16	United States	0.15
17	Germany	0.12	16	New Zealand	0.15
18	New Zealand	0.06	18	Australia	0.14
			19	Germany	0.13
			20	Poland	0.07

<부표 B-2> 정당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부표 B-3> 정당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부표 B-4> 정당에 대한 신뢰 1994~1999년/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Mexico	0.35	1	Sweden	0.33
2	Norway	0.33	1	Turkey	0.33
3	Sweden	0.28	3	Finland	0.29
3	Turkey	0.28	3	Norway	0.29
3	Switzerland	0.28	3	Spain	0.29
6	Korea	0.25	6	Switzerland	0.28
7	Chile	0.24	7	Mexico	0.24
8	United States	0.22	7	Korea	0.24
평균		0.21	평균		0.22
9	Japan	0.19	9	Chile	0.19
9	Spain	0.19	10	Japan	0.18
11	Australia	0.16	11	United States	0.15
12	Finland	0.13	11	New Zealand	0.15
12	Poland	0.13	13	Australia	0.14
14	Germany	0.12	14	Germany	0.13
15	New Zealand	0.06	15	Poland	0.07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5>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Sweden	.	0.28	.	0.33
2	Turkey	.	0.28	0.28	0.33
3	Finland	.	0.13	.	0.29
4	Norway	.	0.33	.	0.29
5	Spain	0.61	0.19	0.28	0.29
6	Switzerland	.	0.28	.	0.28
7	Mexico	0.30	0.35	0.25	0.24
8	Korea	.	0.25	0.11	0.24
9	Canada	.	.	0.23	0.23
10	Netherlands	.	.	.	0.23
11	Chile	0.50	0.24	0.27	0.19
12	Japan	.	0.19	0.18	0.18
13	United Kingdom	.	.	.	0.18
14	Italy	.	.	.	0.17
15	France	.	.	.	0.16
16	United States	.	0.22	0.23	0.15
17	New Zealand	.	0.06	.	0.15
18	Australia	.	0.16	.	0.14
19	Germany	.	0.12	.	0.13
20	Poland	.	0.13	.	0.07
21	Czech Republic	0.48	0.15	.	.
22	Hungary	.	0.20	.	.
23	Slovak Republic	0.35	0.23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정치행위자 신뢰 : 의회에 대한 신뢰

이 항목은 정당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① A great deal, ② Quite a lot’ 항목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하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재의 공정 수준의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E069_07 항목이다.

질문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Read out and code one answer for 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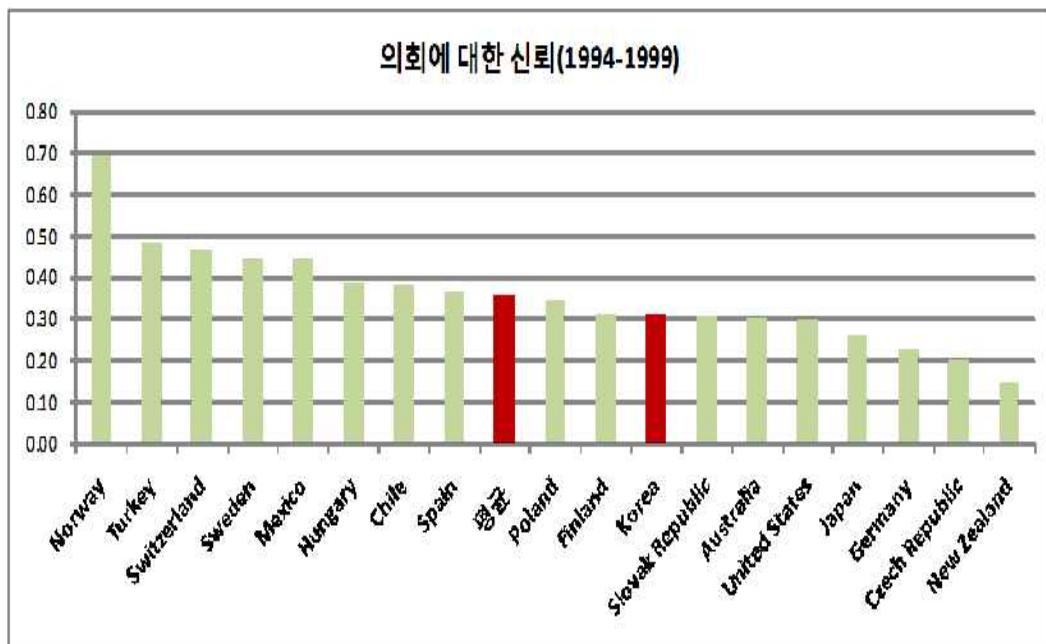
Parliament

- ① A great deal
- ② Quite a lot
- ③ Not very much
- ④ None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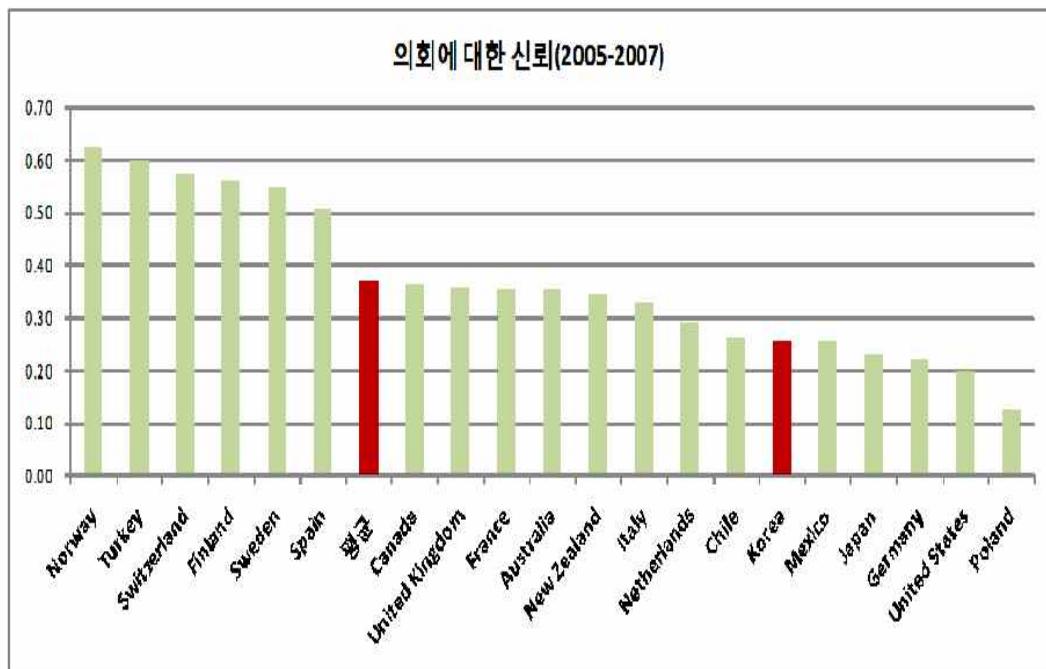
<부표 B-6> 의회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Norway	0.69	1	Norway	0.62
2	Turkey	0.49	2	Turkey	0.6
3	Switzerland	0.47	3	Switzerland	0.57
4	Sweden	0.45	4	Finland	0.56
4	Mexico	0.45	5	Sweden	0.55
6	Hungary	0.39	6	Spain	0.51
7	Chile	0.38		평균	0.37
8	Spain	0.37	7	Canada	0.37
	평균	0.36	8	United Kingdom	0.36
9	Poland	0.35	9	France	0.35
10	Finland	0.31	9	Australia	0.35
10	Korea	0.31	9	New Zealand	0.35
10	Slovak Republic	0.31	12	Italy	0.33
10	Australia	0.31	13	Netherlands	0.29
14	United States	0.3	14	Chile	0.26
15	Japan	0.26	14	Korea	0.26
16	Germany	0.23	16	Mexico	0.25
17	Czech Republic	0.2	17	Japan	0.23
18	New Zealand	0.15	18	Germany	0.22
			19	United States	0.2
			20	Poland	0.12

<부표 B-7> 의회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부표 B-8> 의회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부표 B-9> 의회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Norway	0.69	1	Norway	0.62
2	Turkey	0.49	2	Turkey	0.60
3	Switzerland	0.47	3	Switzerland	0.57
4	Sweden	0.45	4	Finland	0.56
4	Mexico	0.45	5	Sweden	0.55
6	Chile	0.38	6	Spain	0.51
	평균	0.37		평균	0.38
7	Spain	0.37	7	Australia	0.35
8	Poland	0.35	7	New Zealand	0.35
9	Finland	0.31	9	Chile	0.26
9	Korea	0.31	9	Korea	0.26
9	Australia	0.31	11	Mexico	0.25
12	United States	0.30	12	Japan	0.23
13	Japan	0.26	13	Germany	0.22
14	Germany	0.23	14	United States	0.20
15	New Zealand	0.15	15	Poland	0.12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10>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81~1984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Norway	.	.	0.69	.	0.62
2	Turkey	.	0.58	0.49	0.46	0.60
3	Switzerland	.	.	0.47	.	0.57
4	Finland	0.65	.	0.31	.	0.56
5	Sweden	.	.	0.45	0.51	0.55
6	Spain	.	0.30	0.37	0.50	0.51
7	Canada	.	.	.	0.40	0.37
8	United Kingdom	0.36
9	France	0.35
10	Australia	0.55	.	0.31	.	0.35
11	New Zealand	.	.	0.15	.	0.35
12	Italy	0.33
13	Netherlands	0.29
14	Chile	.	0.63	0.38	0.35	0.26
15	Korea	0.68	0.34	0.31	0.11	0.26
16	Mexico	0.27	0.35	0.45	0.23	0.25
17	Japan	0.28	0.29	0.26	0.22	0.23
18	Germany	.	.	0.23	.	0.22
19	United States	.	.	0.30	0.38	0.20
20	Poland	.	0.79	0.35	.	0.12
21	Czech Republic	.	0.48	0.20	.	.
22	Hungary	0.92	.	0.39	.	.
23	Slovak Republic	.	0.35	0.31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반부패 : 반부패 인식 정도

이 항목은 정치부패 상태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① Almost no public officials engaged in it, ② A few are’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 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이 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재의 공정 수준의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E196 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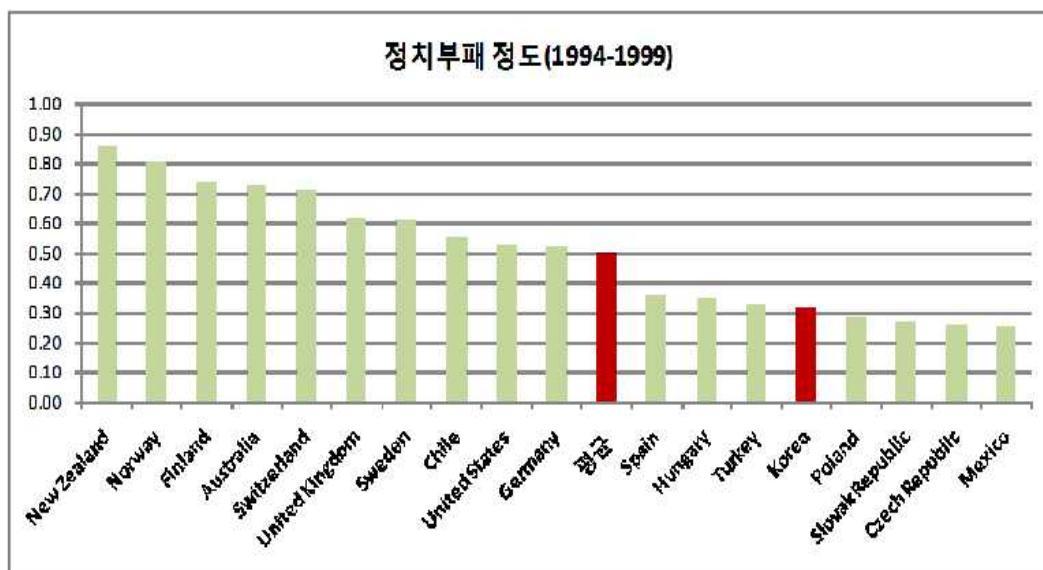
질문 How widespread do you think bribe taking and corruption is in this country?

- ① Almost no public officials engaged in it
- ② A few are
- ③ Most are
- ④ Almost all public officials are engaged in it

<부표 B-11> 반부패 인식 정도 1994~1999년 wave

순위	국가명	1994~1999
1	New Zealand	0.86
2	Norway	0.81
3	Finland	0.74
4	Australia	0.73
5	Switzerland	0.71
6	United Kingdom	0.62
7	Sweden	0.61
8	Chile	0.55
9	United States	0.52
9	Germany	0.52
평균		0.50
11	Spain	0.36
12	Hungary	0.35
13	Turkey	0.32
13	Korea	0.32
15	Poland	0.29
16	Slovak Republic	0.27
17	Czech Republic	0.26
18	Mexico	0.25

<부표 B-12> 정치부패 정도 1994~1999 wave



<부표 B-13>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94-1999	2005-2007
1	New Zealand	0.86	0.89
2	Norway	0.81	.
3	Finland	0.74	.
4	Australia	0.73	.
5	Switzerland	0.71	.
6	United Kingdom	0.62	.
7	Sweden	0.61	.
8	Chile	0.55	.
9	United States	0.52	.
10	Germany	0.52	.
11	Spain	0.36	.
12	Hungary	0.35	.
13	Turkey	0.32	.
14	Korea	0.32	.
15	Poland	0.29	.
16	Slovak Republic	0.27	.
17	Czech Republic	0.26	.
18	Mexico	0.25	.
19	Canada	.	.
20	France	.	.
21	Italy	.	.
22	Japan	.	.
23	Netherlands	.	.

주) 1994-1999 wave 점수 순

- 정부역할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 규제 필요성 인식

이 항목은 정부 역할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가 어느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① Let anyone come who want to, ② Let people come as long as there are jobs available’ 항목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라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와 관련한 질문이다. 이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E143 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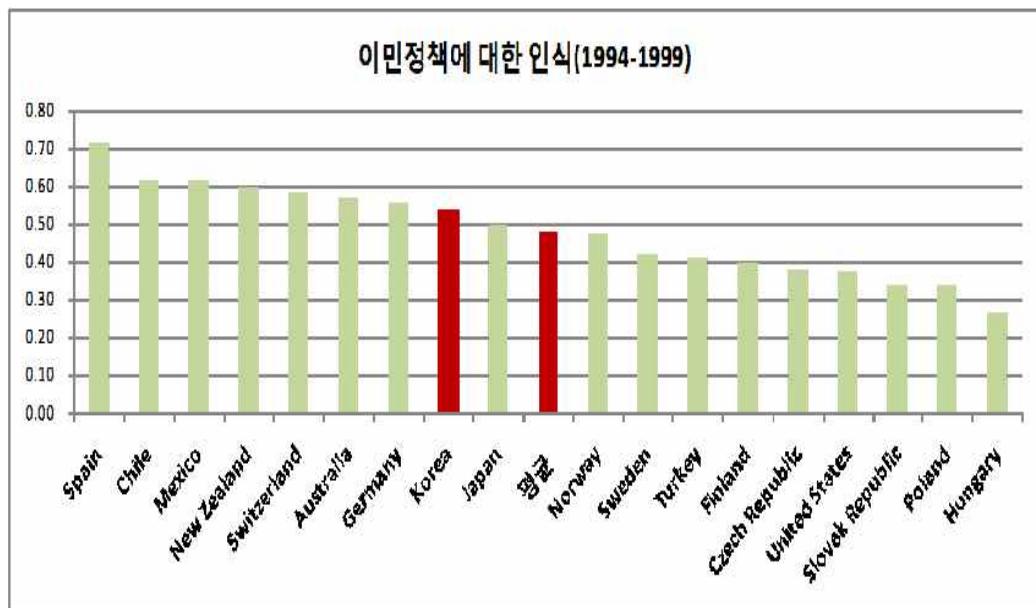
질문 How about people from other countries coming here to work. Which one of the following do you think the government should do?

- ① Let anyone come who want to
- ② Let people come as long as there are jobs available
- ③ Place strict limits on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can come here
- ④ Prohibit people coming here from other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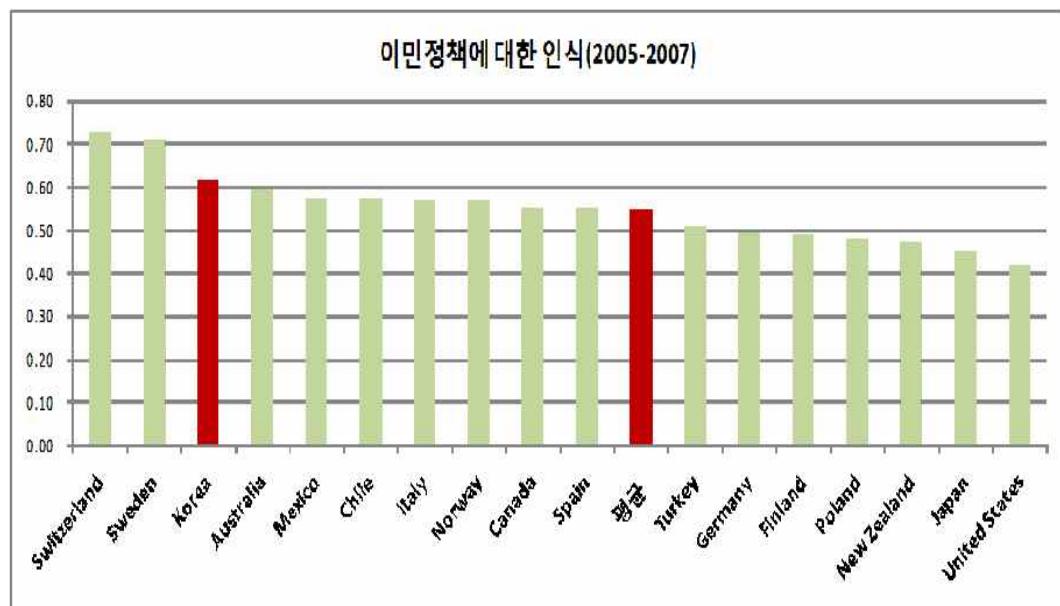
<부표 B-14>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pain	0.72	1	Switzerland	0.73
2	Chile	0.62	2	Sweden	0.71
2	Mexico	0.62	3	Korea	0.62
4	New Zealand	0.59	4	Australia	0.6
5	Switzerland	0.58	5	Mexico	0.57
6	Australia	0.57	5	Chile	0.57
7	Germany	0.56	5	Italy	0.57
8	Korea	0.54	5	Norway	0.57
9	Japan	0.5	9	Canada	0.55
	평균	0.48	9	Spain	0.55
10	Norway	0.47		평균	0.55
11	Sweden	0.42	11	Turkey	0.51
12	Turkey	0.41	12	Germany	0.5
13	Finland	0.4	13	Finland	0.49
14	Czech Republic	0.38	14	Poland	0.48
14	United States	0.38	15	New Zealand	0.47
16	Slovak Republic	0.34	16	Japan	0.45
16	Poland	0.34	17	United States	0.42
18	Hungary	0.26			

<부표 B-15>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wave



<부표 B-16>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부표 B-17>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pain	0.72	1	Switzerland	0.73
2	Chile	0.62	2	Sweden	0.71
2	Mexico	0.62	3	Korea	0.62
4	New Zealand	0.59	4	Australia	0.60
5	Switzerland	0.58	5	Mexico	0.57
6	Australia	0.57	5	Chile	0.57
7	Germany	0.56	5	Norway	0.57
8	Korea	0.54	8	Spain	0.55
	평균	0.51		평균	0.55
9	Japan	0.50	9	Turkey	0.51
10	Norway	0.47	10	Germany	0.50
11	Sweden	0.42	11	Finland	0.49
12	Turkey	0.41	12	Poland	0.48
13	Finland	0.40	13	New Zealand	0.47
14	United States	0.38	14	Japan	0.45
15	Poland	0.34	15	United States	0.42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18>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Switzerland	0.58	.	0.73
2	Sweden	0.42	0.70	0.71
3	Korea	0.54	0.63	0.62
4	Australia	0.57	.	0.60
5	Mexico	0.62	0.60	0.57
6	Chile	0.62	0.57	0.57
7	Italy	.	.	0.57
8	Norway	0.47	.	0.57
9	Canada	.	0.53	0.55
10	Spain	0.72	0.76	0.55
11	Turkey	0.41	0.49	0.51
12	Germany	0.56	.	0.50
13	Finland	0.40	.	0.49
14	Poland	0.34	.	0.48
15	New Zealand	0.59	.	0.47
16	Japan	0.50	0.57	0.45
17	United States	0.38	0.57	0.42
18	Czech Republic	0.38	.	.
19	France	.	.	.
20	Hungary	0.26	.	.
21	Netherlands	.	.	.
22	Slovak Republic	0.34	.	.
23	United Kingdom	.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기관신뢰 :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이 항목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전체 응답자 중 ‘① A great deal / ② Quite a lot’ 항목에 응답한 비율로 지수화하였다. 값이 클수록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재의 공정 수준의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E069_17 항목이다.

질문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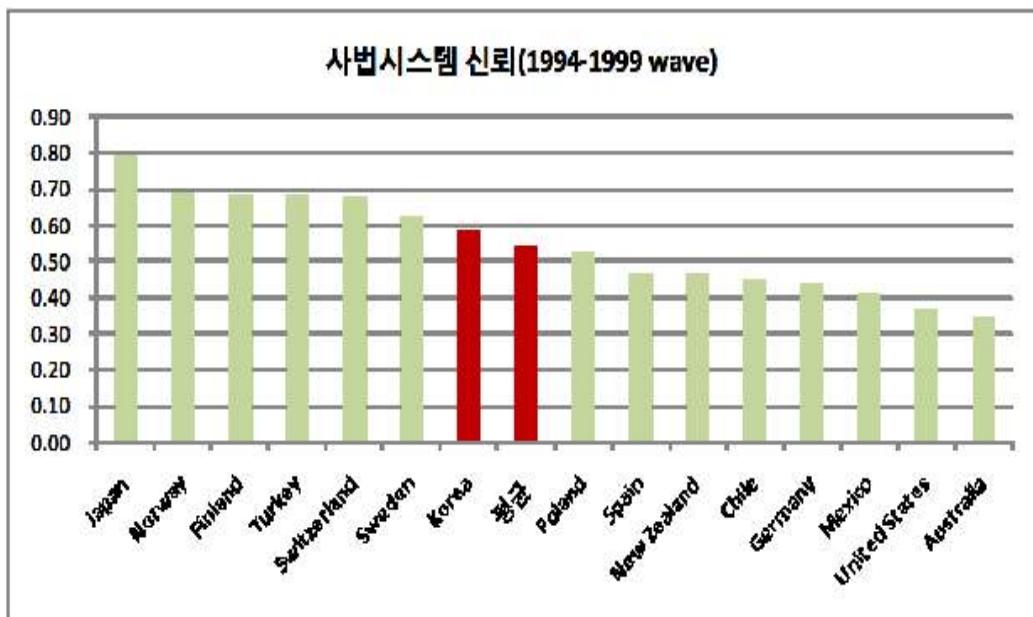
V 137 Justice System

A great deal / Quite a lot / Not very much / None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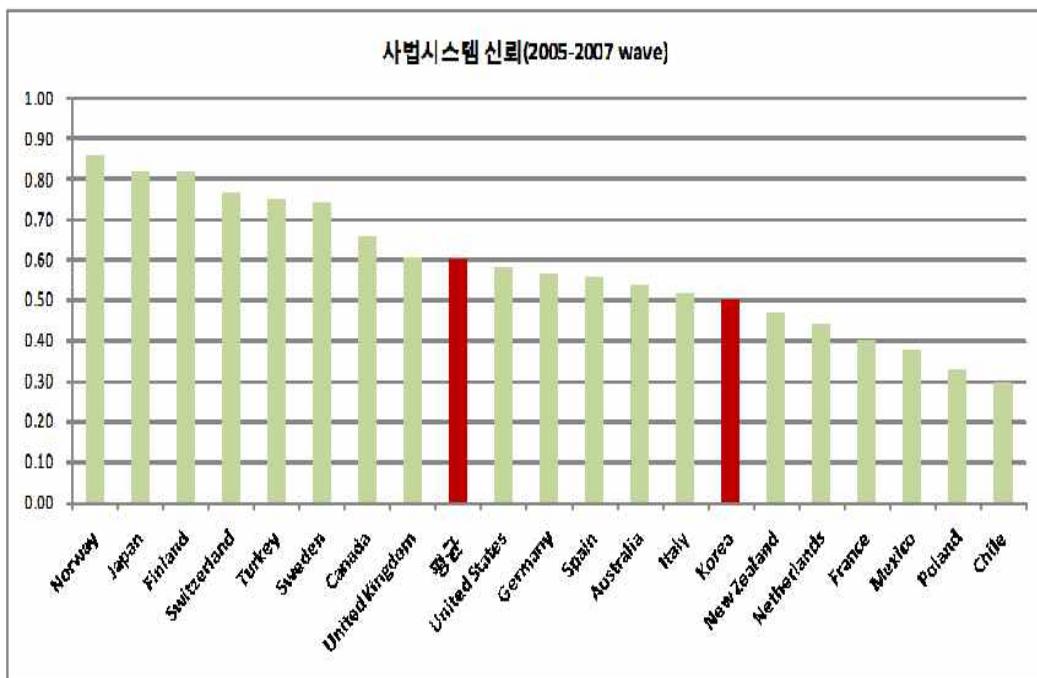
<부표 B-19>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Japan	0.8	1	Norway	0.86
2	Norway	0.7	2	Japan	0.82
3	Finland	0.69	2	Finland	0.82
4	Turkey	0.68	4	Switzerland	0.77
4	Switzerland	0.68	5	Turkey	0.75
6	Sweden	0.63	6	Sweden	0.74
7	Korea	0.59	7	Canada	0.66
	평균	0.54	8	United Kingdom	0.61
8	Poland	0.53		평균	0.6
9	Spain	0.47	9	United States	0.58
9	New Zealand	0.47	10	Germany	0.56
11	Chile	0.45	10	Spain	0.56
12	Germany	0.44	12	Australia	0.54
13	Mexico	0.41	13	Italy	0.52
14	United States	0.37	14	Korea	0.5
15	Australia	0.35	15	New Zealand	0.47
		16		Netherlands	0.44
		17		France	0.4
		18		Mexico	0.38
		19		Poland	0.33
		20		Chile	0.3

<부표 B-20>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부표 B-21>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부표 B-22>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Japan	0.80	1	Norway	0.86
2	Norway	0.70	2	Japan	0.82
3	Finland	0.69	2	Finland	0.82
4	Turkey	0.68	4	Switzerland	0.77
4	Switzerland	0.68	5	Turkey	0.75
6	Sweden	0.63	6	Sweden	0.74
7	Korea	0.59		평균	0.59
	평균	0.55	7	United States	0.58
8	Poland	0.53	8	Germany	0.56
9	Spain	0.47	8	Spain	0.56
9	New Zealand	0.47	10	Australia	0.54
11	Chile	0.45	11	Korea	0.50
12	Germany	0.44	12	New Zealand	0.47
13	Mexico	0.41	13	Mexico	0.38
14	United States	0.37	14	Poland	0.33
15	Australia	0.35	15	Chile	0.30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23>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81~1984	1989~1993	1994~1999	2005~2007
1	Norway	.	.	0.70	0.86
2	Japan	0.69	0.62	0.80	0.82
3	Finland	0.84	.	0.69	0.82
4	Switzerland	.	.	0.68	0.77
5	Turkey	.	0.64	0.68	0.75
6	Sweden	.	.	0.63	0.74
7	Canada	.	.	.	0.66
8	United Kingdom	.	.	.	0.61
9	United States	.	.	0.37	0.58
10	Germany	.	.	0.44	0.56
11	Spain	.	0.49	0.47	0.56
12	Australia	0.60	.	0.35	0.54
13	Italy	.	.	.	0.52
14	Korea	0.81	0.67	0.59	0.50
15	New Zealand	.	.	0.47	0.47
16	Netherlands	.	.	.	0.44
17	France	.	.	.	0.40
18	Mexico	0.53	0.53	0.41	0.38
19	Poland	.	0.48	0.53	0.33
20	Chile	.	0.45	0.45	0.30
21	Czech Republic	.	0.46	0.29	.
22	Hungary	0.89	.	0.52	.
23	Slovak Republic	.	0.38	0.42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기관신뢰 : 정부에 대한 신뢰

이 항목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값이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공정 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재의 공정 수준의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E069_11 항목이다.

질문: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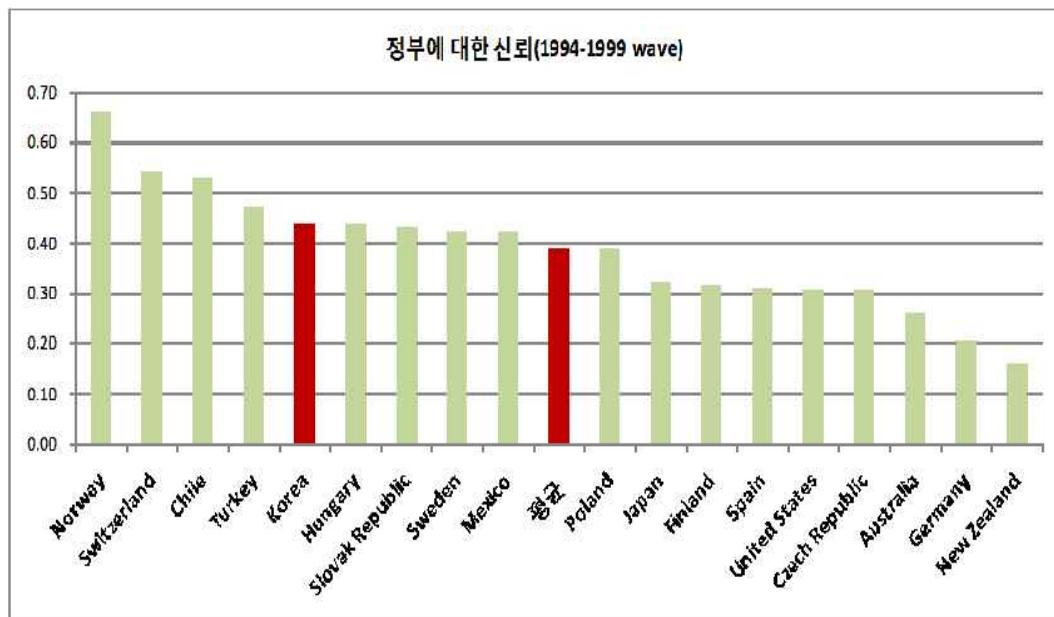
V 138 The government (in your nation's capital)

- ① A great deal / ② Quite a lot / ③ Not very much / ④ None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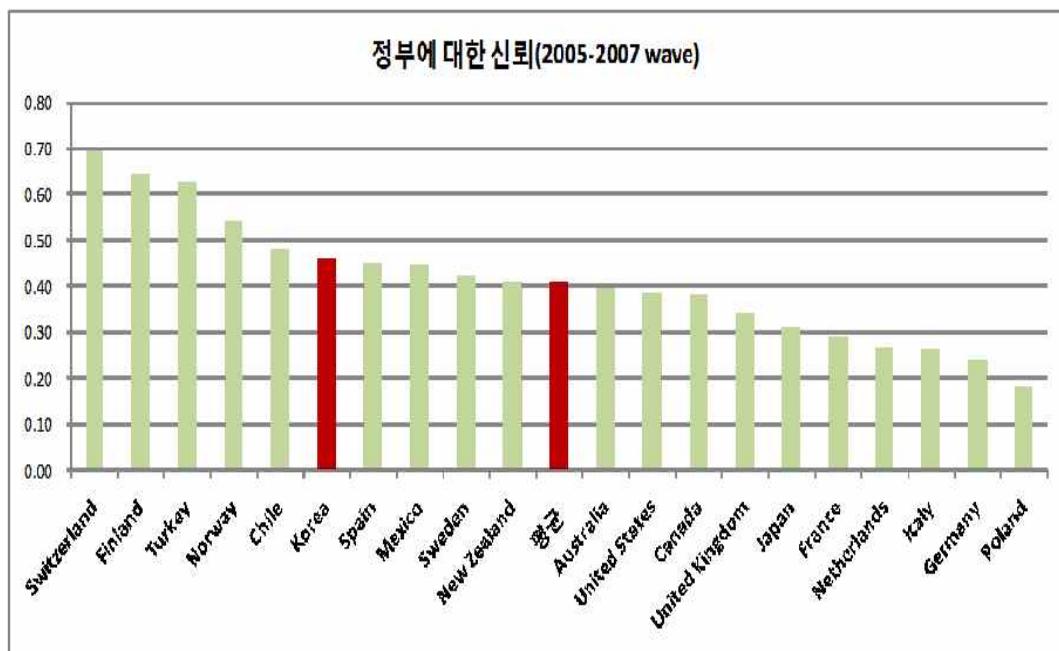
<부표 B-24> 정부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Norway	0.66	1	Switzerland	0.69
2	Switzerland	0.54	2	Finland	0.64
3	Chile	0.53	3	Turkey	0.63
4	Turkey	0.47	4	Norway	0.54
5	Korea	0.44	5	Chile	0.48
5	Hungary	0.44	6	Korea	0.46
7	Slovak Republic	0.43	7	Spain	0.45
8	Sweden	0.42	7	Mexico	0.45
8	Mexico	0.42	9	Sweden	0.42
평균		0.39	10	New Zealand	0.41
10	Poland	0.39	평균		0.41
11	Japan	0.32	11	Australia	0.4
11	Finland	0.32	12	United States	0.39
13	Spain	0.31	13	Canada	0.38
13	United States	0.31	14	United Kingdom	0.34
13	Czech Republic	0.31	15	Japan	0.31
16	Australia	0.26	16	France	0.29
17	Germany	0.21	17	Netherlands	0.27
18	New Zealand	0.16	18	Italy	0.26
			19	Germany	0.24
			20	Poland	0.18

<부표 B-25> 정부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부표 B-26> 정부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부표 B-27> 정부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Norway	0.66	1	Switzerland	0.69
2	Switzerland	0.54	2	Finland	0.64
3	Chile	0.53	3	Turkey	0.63
4	Turkey	0.47	4	Norway	0.54
5	Korea	0.44	5	Chile	0.48
6	Sweden	0.42	6	Korea	0.46
6	Mexico	0.42		평균	0.45
8	Poland	0.39	7	Spain	0.45
	평균	0.38	7	Mexico	0.45
9	Japan	0.32	9	Sweden	0.42
9	Finland	0.32	10	New Zealand	0.41
11	Spain	0.31	11	Australia	0.40
11	United States	0.31	12	United States	0.39
13	Australia	0.26	13	Japan	0.31
14	Germany	0.21	14	Germany	0.24
15	New Zealand	0.16	15	Poland	0.18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28>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Switzerland	.	0.54	.	0.69
2	Finland	.	0.32	.	0.64
3	Turkey	0.49	0.47	0.45	0.63
4	Norway	.	0.66	.	0.54
5	Chile	0.59	0.53	0.57	0.48
6	Korea	.	0.44	0.30	0.46
7	Spain	0.28	0.31	0.45	0.45
8	Mexico	0.24	0.42	0.37	0.45
9	Sweden	.	0.42	.	0.42
10	New Zealand	.	0.16	.	0.41
11	Australia	.	0.26	.	0.40
12	United States	.	0.31	0.39	0.39
13	Canada	.	.	0.42	0.38
14	United Kingdom	.	.	.	0.34
15	Japan	.	0.32	0.27	0.31
16	France	.	.	.	0.29
17	Netherlands	.	.	.	0.27
18	Italy	.	.	.	0.26
19	Germany	.	0.21	.	0.24
20	Poland	.	0.39	.	0.18
21	Hungary	.	0.44	.	.
22	Czech Republic	0.48	0.31	.	.
23	Slovak Republic	0.35	0.43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기관신뢰 :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이 항목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값이 클수록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재의 공정 수준의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E069_08 항목이다.

질문 WVS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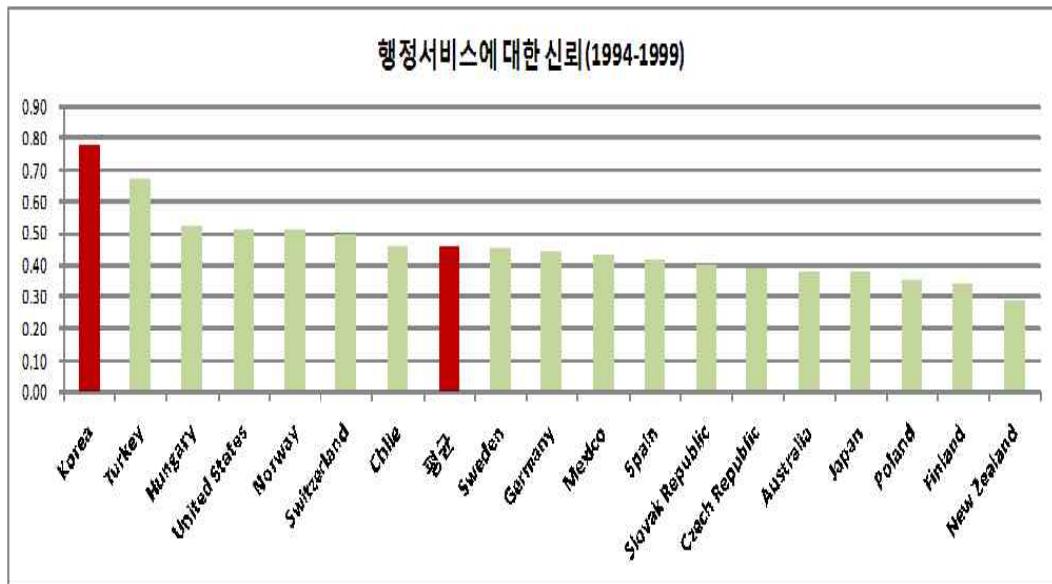
V 141 The Civil service

- ① A great deal / ② Quite a lot / ③ Not very much / ④ None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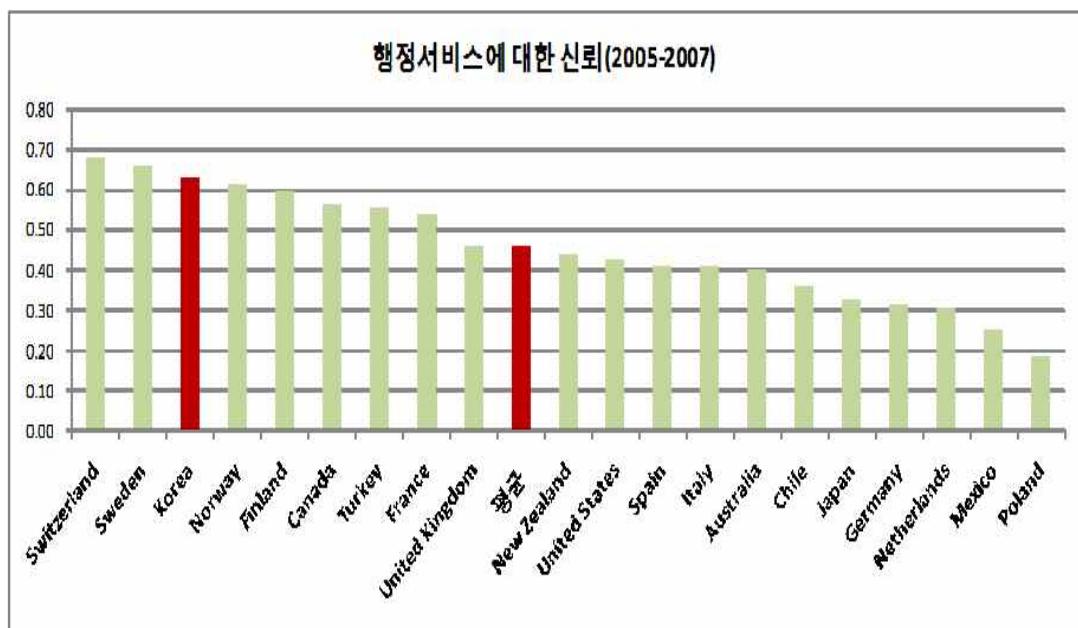
<부표 B-29>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Korea	0.78	1	Switzerland	0.68
2	Turkey	0.67	2	Sweden	0.66
3	Hungary	0.52	3	Korea	0.63
4	United States	0.51	4	Norway	0.61
4	Norway	0.51	5	Finland	0.6
6	Switzerland	0.5	6	Canada	0.56
7	Chile	0.46	7	Turkey	0.55
	평균	0.46	8	France	0.54
8	Sweden	0.45	9	United Kingdom	0.46
8	Germany	0.45		평균	0.46
10	Mexico	0.43	10	New Zealand	0.44
11	Spain	0.42	11	United States	0.43
12	Slovak Republic	0.4	12	Spain	0.41
13	Czech Republic	0.39	12	Italy	0.41
14	Australia	0.38	14	Australia	0.4
14	Japan	0.38	15	Chile	0.36
16	Poland	0.35	16	Japan	0.33
17	Finland	0.34	17	Germany	0.32
18	New Zealand	0.29	18	Netherlands	0.31
			19	Mexico	0.25
			20	Poland	0.18

<부표 B-30>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부표 B-31>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부표 B-32>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Korea	0.78	1	Switzerland	0.68
2	Turkey	0.67	2	Sweden	0.66
3	United States	0.51	3	Korea	0.63
3	Norway	0.51	4	Norway	0.61
5	Switzerland	0.50	5	Finland	0.60
6	Chile	0.46	6	Turkey	0.55
	평균	0.46		평균	0.46
7	Sweden	0.45	7	New Zealand	0.44
7	Germany	0.45	8	United States	0.43
9	Mexico	0.43	9	Spain	0.41
10	Spain	0.42	10	Australia	0.40
11	Australia	0.38	11	Chile	0.36
11	Japan	0.38	12	Japan	0.33
13	Poland	0.35	13	Germany	0.32
14	Finland	0.34	14	Mexico	0.25
15	New Zealand	0.29	15	Poland	0.18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33>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81~1984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Switzerland	.	.	0.50	.	0.68
2	Sweden	.	.	0.45	0.48	0.66
3	Korea	0.88	0.61	0.78	0.67	0.63
4	Norway	.	.	0.51	.	0.61
5	Finland	0.53	.	0.34	.	0.60
6	Canada	.	.	.	0.52	0.56
7	Turkey	.	0.50	0.67	0.62	0.55
8	France	0.54
9	United Kingdom	0.46
10	New Zealand	.	.	0.29	.	0.44
11	United States	.	.	0.51	0.55	0.43
12	Spain	.	0.33	0.42	0.42	0.41
13	Italy	0.41
14	Australia	0.47	.	0.38	.	0.40
15	Chile	.	0.49	0.46	0.40	0.36
16	Japan	0.31	0.34	0.38	0.32	0.33
17	Germany	.	.	0.45	.	0.32
18	Netherlands	0.31
19	Mexico	0.23	0.28	0.43	0.23	0.25
20	Poland	.	0.79	0.35	.	0.18
21	Czech Republic	.	0.34	0.39	.	.
22	Hungary	0.74	.	0.52	.	.
23	Slovak Republic	.	0.30	0.40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세금형평 : 탈세에 대한 의식¹⁵⁾

이 항목은 경제공정성과 관련하여 탈세에 대하여 시민들이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으로 값이 클수록 탈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 공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F116 항목이다.

질문 : Please tell me for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whether you think it can always be justified, never be justified, or something in between, using this card. Cheating on taxes if you have a ch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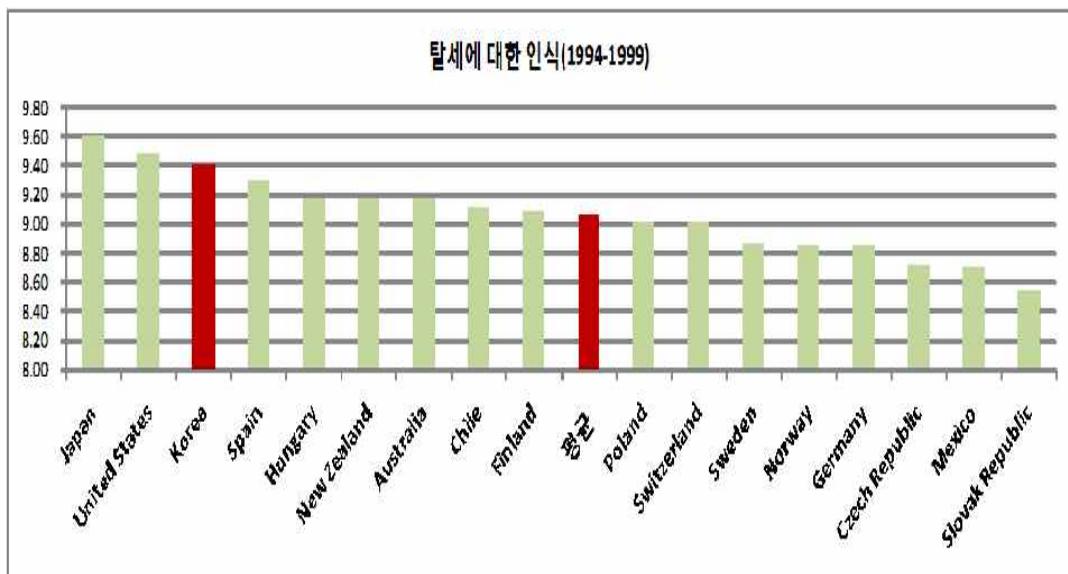


<부표 B-34> 세금형평 : 탈세에 대한 의식 1994~1999년/2005~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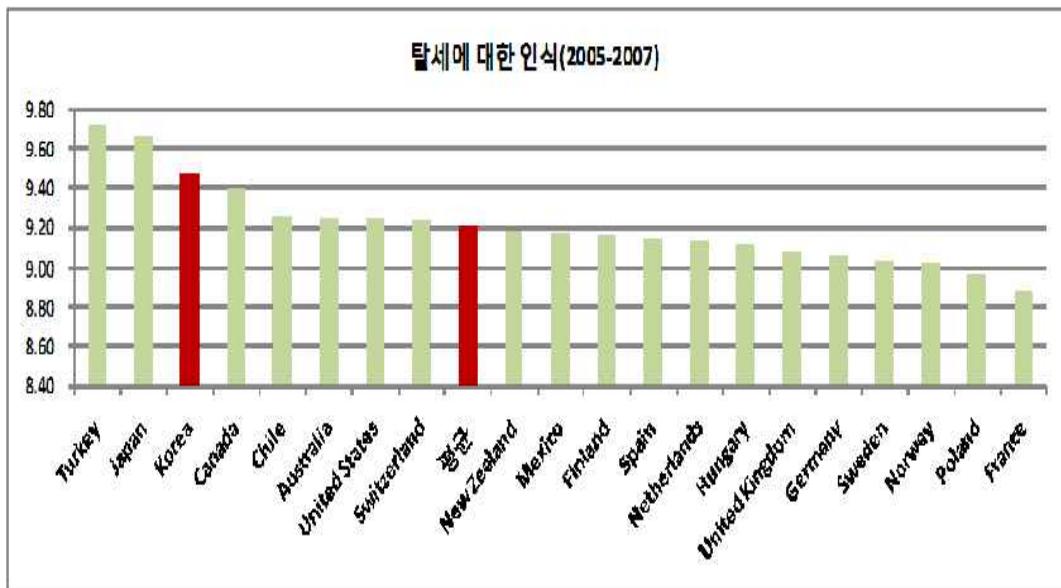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Japan	9.61	1	Turkey	9.72
2	United States	9.47	2	Japan	9.66
3	Korea	9.41	3	Korea	9.47
4	Spain	9.3	4	Canada	9.4
5	Hungary	9.18	5	Chile	9.26
6	New Zealand	9.17	6	Australia	9.25
6	Australia	9.17	6	United States	9.25
8	Chile	9.12	8	Switzerland	9.24
9	Finland	9.1		평균	9.21
	평균	9.07	9	New Zealand	9.18
10	Poland	9.01	9	Mexico	9.18
10	Switzerland	9.01	11	Finland	9.17
12	Sweden	8.87	12	Spain	9.14
13	Norway	8.85	12	Netherlands	9.14
13	Germany	8.85	14	Hungary	9.12
15	Czech Republic	8.72	15	United Kingdom	9.08
16	Mexico	8.71	16	Germany	9.06
17	Slovak Republic	8.55	17	Sweden	9.03
		18	Norway	9.02	
		19	Poland	8.96	
		20	France	8.88	

15)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게 나타나도록 응답에 대한 코딩을 역으로 하였음.

<부표 B-35> 탈세에 대한 인식 1994~1999 wave



<부표 B-36> 탈세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부표 B-37> 세금형평 : 탈세에 대한 의식 1994~1999년/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Japan	9.61	1	Japan	9.66
2	United States	9.47	2	Korea	9.47
3	Korea	9.41	3	Chile	9.26
4	Spain	9.30	4	Australia	9.25
5	Hungary	9.18	4	United States	9.25
6	New Zealand	9.17	6	Switzerland	9.24
6	Australia	9.17		평균	9.21
	평균	9.14	7	New Zealand	9.18
8	Chile	9.12	7	Mexico	9.18
9	Finland	9.10	9	Finland	9.17
10	Poland	9.01	10	Spain	9.14
10	Switzerland	9.01	11	Hungary	9.12
12	Sweden	8.87	12	Germany	9.06
13	Norway	8.85	13	Sweden	9.03
13	Germany	8.85	14	Norway	9.02
15	Mexico	8.71	15	Poland	8.96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38>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81~1984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Turkey	9.72
2	Japan	9.56	9.63	9.61	9.68	9.66
3	Korea	9.55	9.64	9.41	9.52	9.47
4	Canada	.	.	.	9.37	9.40
5	Chile	.	9.47	9.12	9.35	9.26
6	Australia	8.78	.	9.17	.	9.25
7	United States	.	.	9.47	9.20	9.25
8	Switzerland	.	9.09	9.01	.	9.24
9	New Zealand	.	.	9.17	.	9.18
10	Mexico	8.89	8.69	8.71	9.30	9.18
11	Finland	9.19	.	9.10	.	9.17
12	Spain	.	9.24	9.30	9.13	9.14
13	Netherlands	9.14
14	Hungary	.	.	9.18	.	9.12
15	United Kingdom	9.08
16	Germany	.	.	8.85	.	9.06
17	Sweden	.	.	8.87	8.89	9.03
18	Norway	.	.	8.85	.	9.02
19	Poland	.	8.86	9.01	.	8.96
20	France	8.88
21	Czech Republic	.	.	8.72	.	.
22	Italy
23	Slovak Republic	.	.	8.55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경제주체 신뢰 :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¹⁶⁾

이 항목은 경제공정성의 주요 주체인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값이 클수록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재의 공정 수준의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E069_13 항목이다.

질문 :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Major compan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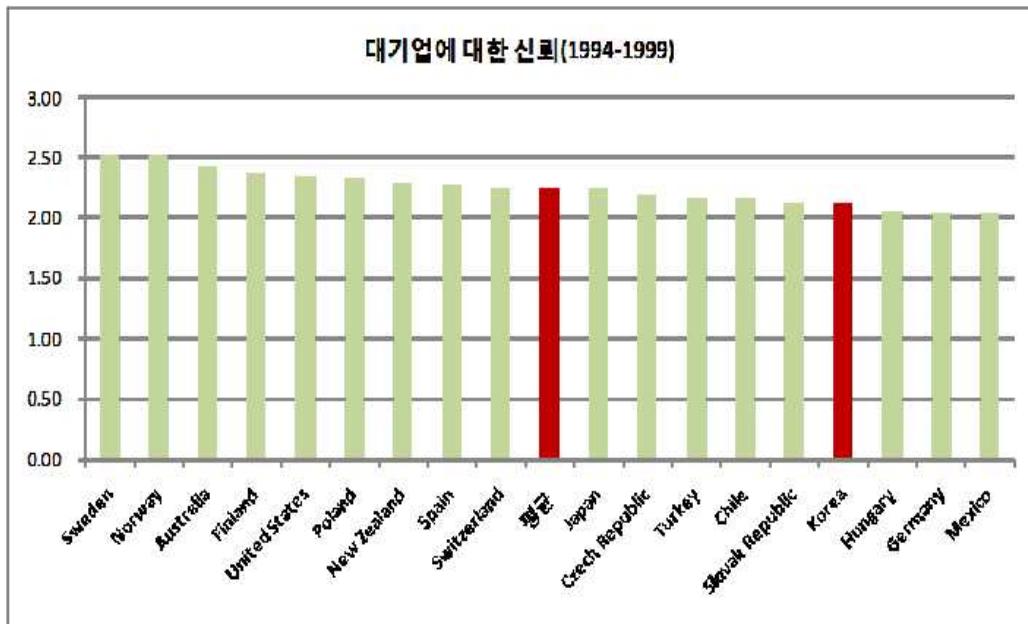
- ① A great deal / ② Quite a lot / ③ Not very much / ④ None at all

<부표 B-39>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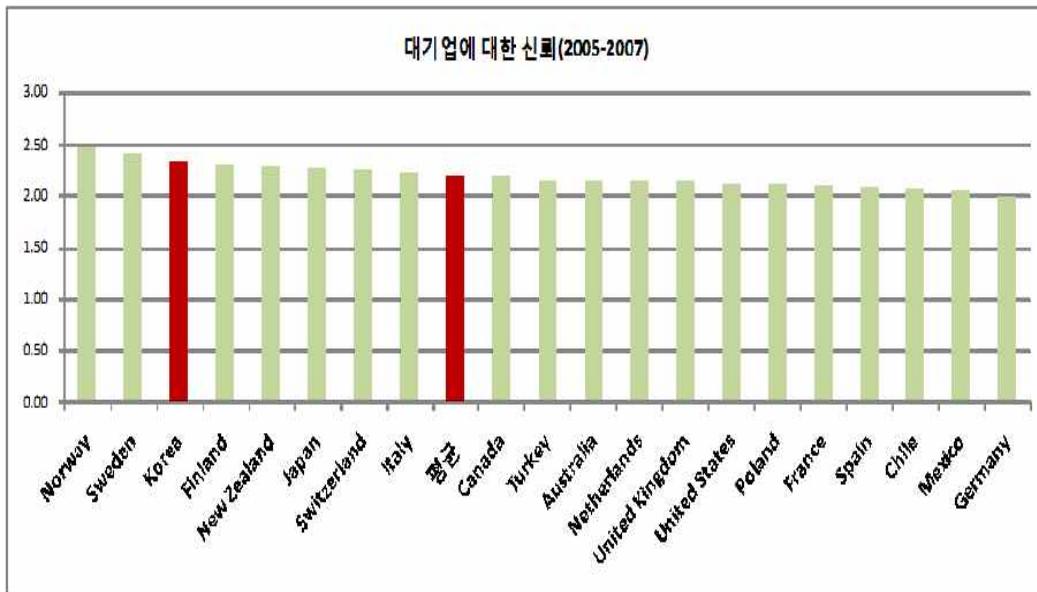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weden	2.52	1	Norway	2.48
1	Norway	2.52	2	Sweden	2.42
3	Australia	2.42	3	Korea	2.33
4	Finland	2.37	4	Finland	2.31
5	United States	2.35	5	New Zealand	2.3
6	Poland	2.33	6	Japan	2.27
7	New Zealand	2.29	6	Switzerland	2.27
8	Spain	2.27	8	Italy	2.23
9	Switzerland	2.25		평균	2.2
	평균	2.25	9	Canada	2.19
9	Japan	2.25	10	Turkey	2.16
11	Czech Republic	2.2	11	Australia	2.15
12	Turkey	2.16	11	Netherlands	2.15
12	Chile	2.16	11	United Kingdom	2.15
14	Slovak Republic	2.13	14	United States	2.11
15	Korea	2.12	14	Poland	2.11
16	Hungary	2.05	14	France	2.11
17	Germany	2.04	17	Spain	2.09
17	Mexico	2.04	18	Chile	2.08
			19	Mexico	2.06
			20	Germany	1.99

16)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게 나타나도록 응답에 대한 코딩을 역으로 하였음.

<부표 B-40>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1994~1999 wave



<부표 B-41>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부표 B-42>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weden	2.52	1	Norway	2.48
1	Norway	2.52	2	Sweden	2.42
3	Australia	2.42	3	Korea	2.33
4	Finland	2.37	4	Finland	2.31
5	United States	2.35	5	New Zealand	2.30
6	Poland	2.33	6	Japan	2.27
7	New Zealand	2.29	6	Switzerland	2.27
8	Spain	2.27		평균	2.21
	평균	2.27	8	Turkey	2.16
9	Switzerland	2.25	9	Australia	2.15
9	Japan	2.25	10	United States	2.11
11	Turkey	2.16	10	Poland	2.11
11	Chile	2.16	12	Spain	2.09
13	Korea	2.12	13	Chile	2.08
14	Germany	2.04	14	Mexico	2.06
14	Mexico	2.04	15	Germany	1.99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43>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81~1984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Norway	.	.	2.52	.	2.48
2	Sweden	.	.	2.52	.	2.42
3	Korea	2.12	2.01	2.12	2.09	2.33
4	Finland	2.30	.	2.37	.	2.31
5	New Zealand	.	.	2.29	.	2.30
6	Japan	2.07	2.13	2.25	2.12	2.27
7	Switzerland	.	.	2.25	.	2.27
8	Italy	2.23
9	Canada	.	.	.	2.35	2.19
10	Turkey	.	.	2.16	2.04	2.16
11	Australia	2.47	.	2.42	.	2.15
12	Netherlands	2.15
13	United Kingdom	2.15
14	United States	.	.	2.35	2.30	2.11
15	Poland	2.06	.	2.33	.	2.11
16	France	2.11
17	Spain	.	2.08	2.27	2.24	2.09
18	Chile	.	1.91	2.16	2.15	2.08
19	Mexico	1.79	2.01	2.04	1.97	2.06
20	Germany	.	.	2.04	.	1.99
21	Czech Republic	.	2.01	2.20	.	.
22	Hungary	.	.	2.05	.	.
23	Slovak Republic	.	2.07	2.13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고용 우선순위 :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이 항목은 고용 우선순위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전체 응답자의 Disagree 응답 비율을 지수화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라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와 관련한 질문이다. 이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C002 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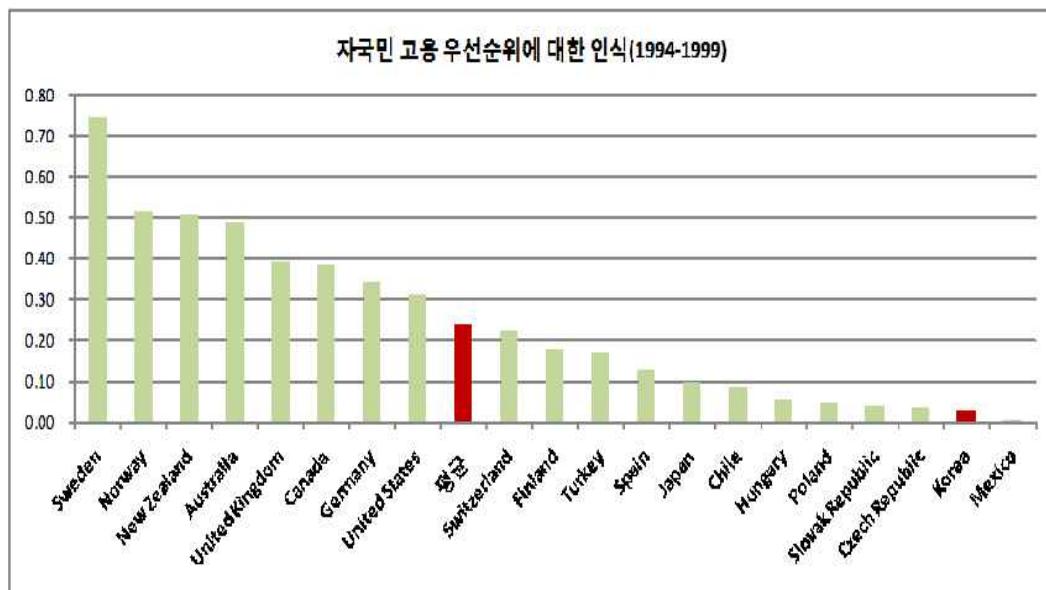
질문 :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When jobs are scarce, employers should give priority to [NATION] people over immigrants

① Agree / ② Disagree / ③ Nei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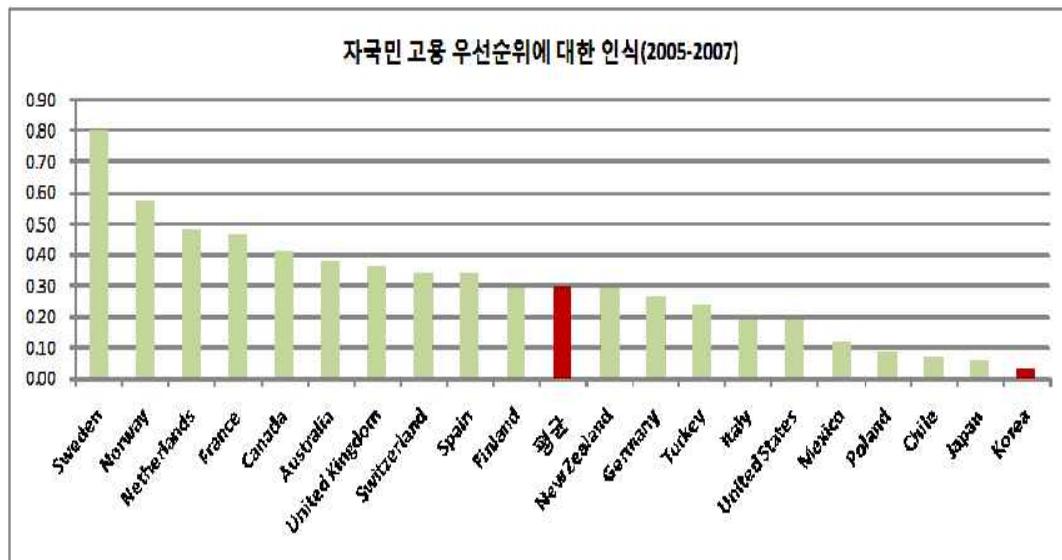
<부표 B-44>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1994~1999년/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weden	0.74	1	Sweden	0.8
2	Norway	0.51	2	Norway	0.57
2	New Zealand	0.51	3	Netherlands	0.48
4	Australia	0.49	4	France	0.46
5	United Kingdom	0.39	5	Canada	0.41
5	Canada	0.39	6	Australia	0.38
7	Germany	0.34	7	United Kingdom	0.36
8	United States	0.31	8	Switzerland	0.34
평균		0.24	8	Spain	0.34
9	Switzerland	0.22	10	Finland	0.3
10	Finland	0.18	평균		0.3
11	Turkey	0.17	11	New Zealand	0.29
12	Spain	0.13	12	Germany	0.27
13	Japan	0.1	13	Turkey	0.24
14	Chile	0.09	14	Italy	0.19
15	Hungary	0.05	14	United States	0.19
15	Poland	0.05	16	Mexico	0.12
17	Slovak Republic	0.04	17	Poland	0.08
18	Czech Republic	0.03	18	Chile	0.07
18	Korea	0.03	19	Japan	0.06
20	Mexico	0	20	Korea	0.03

<부표 B-45>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wave



<부표 B-46>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부표 B-47>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1994~1999년/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weden	0.74	1	Sweden	0.80
2	Norway	0.51	2	Norway	0.57
2	New Zealand	0.51	3	Canada	0.41
4	Australia	0.49	4	Australia	0.38
5	United Kingdom	0.39	5	United Kingdom	0.36
5	Canada	0.39	6	Switzerland	0.34
7	Germany	0.34	6	Spain	0.34
8	United States	0.31	8	Finland	0.30
평균		0.27	9	New Zealand	0.29
9	Switzerland	0.22	평균		0.29
10	Finland	0.18	10	Germany	0.27
11	Turkey	0.17	11	Turkey	0.24
12	Spain	0.13	12	United States	0.19
13	Japan	0.10	13	Mexico	0.12
14	Chile	0.09	14	Poland	0.08
15	Poland	0.05	15	Chile	0.07
16	Korea	0.03	16	Japan	0.06
17	Mexico	0.00	17	Korea	0.03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48>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Sweden	.	0.74	0.78	0.80
2	Norway	.	0.51	.	0.57
3	Netherlands	.	.	.	0.48
4	France	.	.	.	0.46
5	Canada	.	0.39	.	0.41
6	Australia	.	0.49	.	0.38
7	United Kingdom	.	0.39	.	0.36
8	Switzerland	.	0.22	.	0.34
9	Spain	0.19	0.13	0.29	0.34
10	Finland	.	0.18	.	0.30
11	New Zealand	.	0.51	.	0.29
12	Germany	.	0.34	.	0.27
13	Turkey	0.22	0.17	0.26	0.24
14	Italy	.	.	.	0.19
15	United States	.	0.31	0.40	0.19
16	Mexico	0.16	0.00	0.11	0.12
17	Poland	0.23	0.05	.	0.08
18	Chile	0.12	0.09	0.06	0.07
19	Japan	0.14	0.10	0.08	0.06
20	Korea	0.20	0.03	0.04	0.03
21	Czech Republic	0.07	0.03	.	.
22	Hungary	.	0.05	.	.
23	Slovak Republic	0.05	0.04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성 격차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이 항목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① Agree strongly, ② Agree'의 응답비율을 지수화하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라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D060 항목이다.

질문 : A university education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① Agree strongly

② Ag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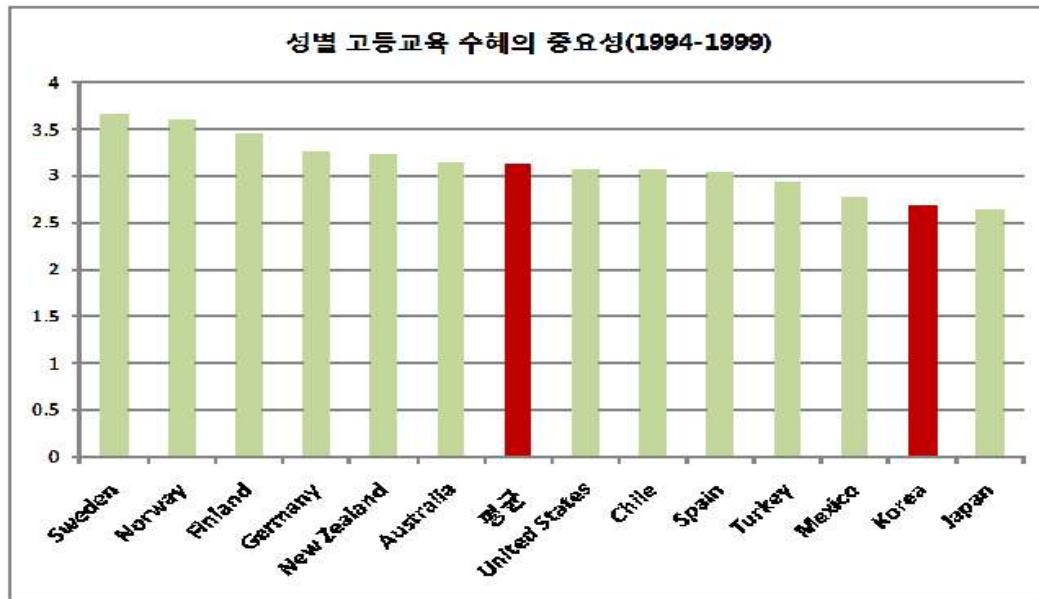
③ Disagree

④ Strongly disag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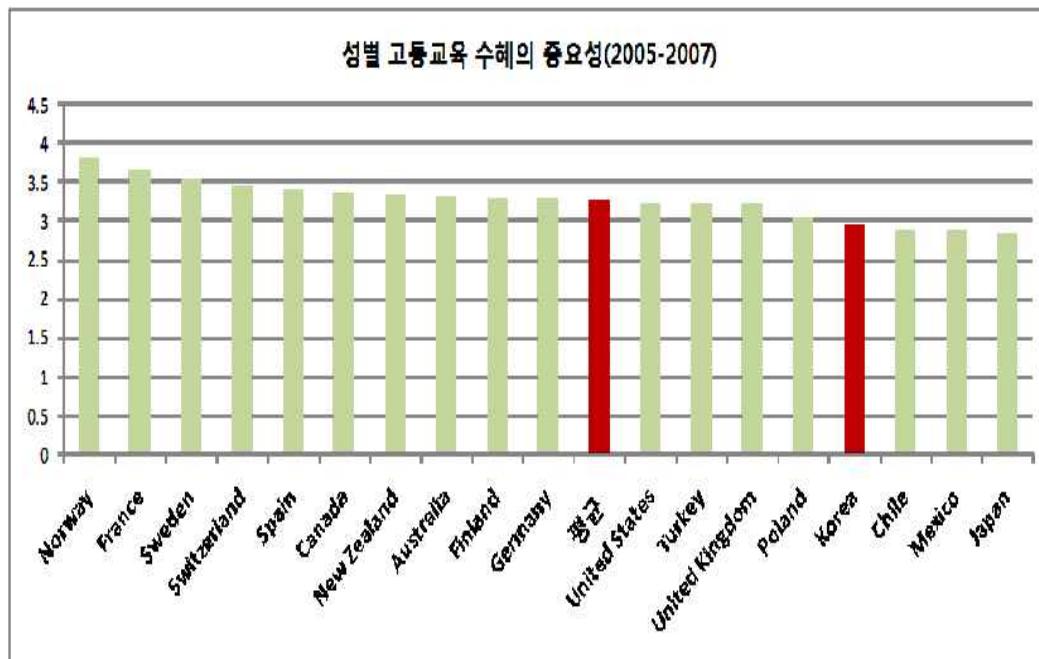
<부표 B-49>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1994~1999년/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weden	3.66	1	Norway	3.82
2	Norway	3.6	2	France	3.65
3	Finland	3.45	3	Sweden	3.54
4	Germany	3.26	4	Switzerland	3.44
5	New Zealand	3.22	5	Spain	3.4
6	Australia	3.13	6	Canada	3.36
평균		3.12	7	New Zealand	3.33
7	United States	3.07	8	Australia	3.31
8	Chile	3.06	9	Finland	3.29
9	Spain	3.04	9	Germany	3.29
10	Turkey	2.93	평균		3.26
11	Mexico	2.77	11	United States	3.23
12	Korea	2.68	11	Turkey	3.23
13	Japan	2.64	13	United Kingdom	3.22
			14	Poland	3.04
			15	Korea	2.96
			16	Chile	2.89
			17	Mexico	2.88
			18	Japan	2.85

<부표 B-50> 성 격차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1994~1999년 wave



<부표 B-51> 성 격차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2005~2007년 wave



<부표 B-52> 성 격차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1994~1999년/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weden	3.66	1	Norway	3.82
2	Norway	3.6	2	Sweden	3.54
3	Finland	3.45	3	Spain	3.4
4	Germany	3.26	4	New Zealand	3.33
5	New Zealand	3.22	5	Australia	3.31
6	Australia	3.13	6	Finland	3.29
	평균	3.12	6	Germany	3.29
7	United States	3.07	8	United States	3.23
8	Chile	3.06	8	Turkey	3.23
9	Spain	3.04		평균	3.23
10	Turkey	2.93	10	Korea	2.96
11	Mexico	2.77	11	Chile	2.89
12	Korea	2.68	12	Mexico	2.88
13	Japan	2.64	13	Japan	2.85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53>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Norway	3.60	.	3.82
2	France	.	.	3.65
3	Sweden	3.66	3.70	3.54
4	Switzerland	.	.	3.44
5	Spain	3.04	3.28	3.40
6	Canada	.	3.38	3.36
7	New Zealand	3.22	.	3.33
8	Australia	3.13	.	3.31
9	Finland	3.45	.	3.29
10	Germany	3.26	.	3.29
11	United States	3.07	3.31	3.23
12	Turkey	2.93	3.08	3.23
13	United Kingdom	.	.	3.22
14	Poland	.	2.72	3.04
15	Korea	2.68	3.02	2.96
16	Chile	3.06	2.88	2.89
17	Mexico	2.77	2.97	2.88
18	Japan	2.64	2.88	2.85
19	Hungary	.	3.33	.
20	Czech Republic	.	.	.
21	Netherlands	.	.	.
22	Slovak Republic	.	.	.
23	Italy	.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적합성

이 항목은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① Agree strongly, ② Agree’의 응답비율을 지수화하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공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라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와 관련한 질문이다. 이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D059 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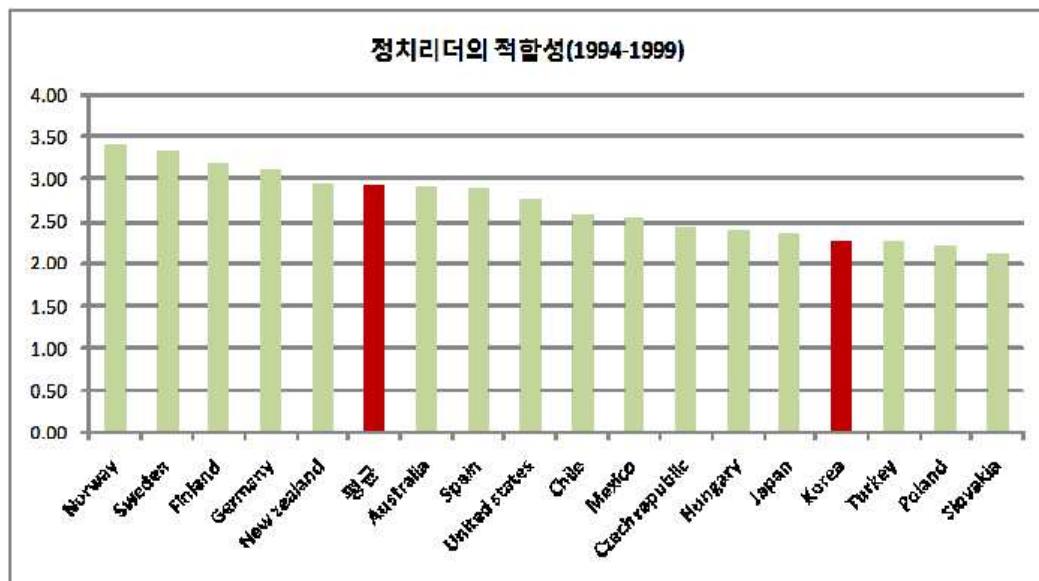
질문 : On the whole,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 than women do.

- ① Agree strongly
- ② Agree
- ③ Disagree
- ④ Strongly disag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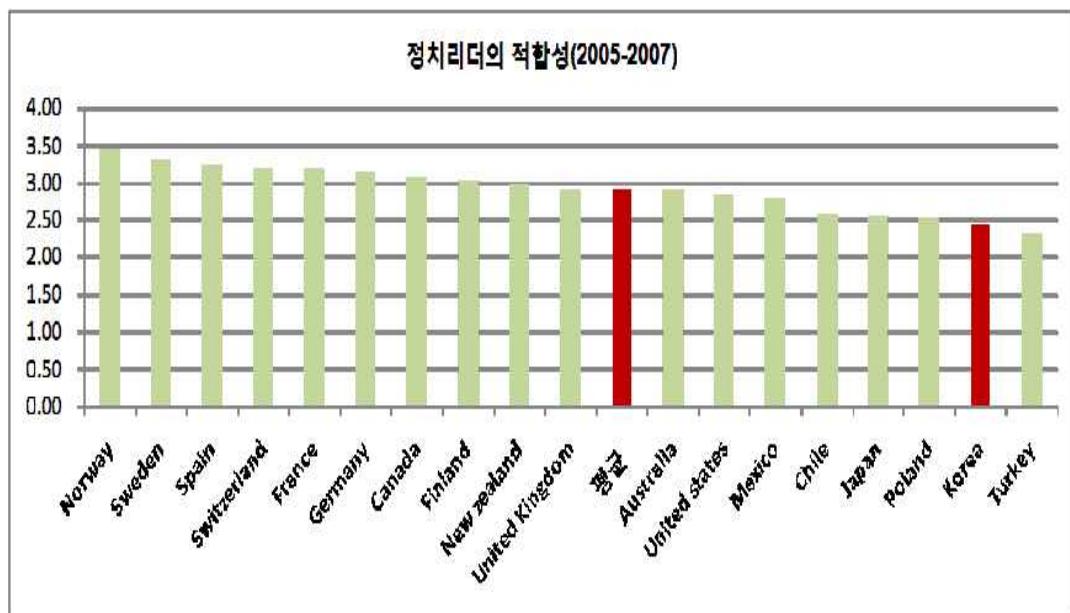
<부표 B-54>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적합성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Norway	3.41	1	Norway	3.45
2	Sweden	3.33	2	Sweden	3.31
3	Finland	3.2	3	Spain	3.24
4	Germany	3.13	4	Switzerland	3.2
5	New Zealand	2.95	4	France	3.2
6	Australia	2.9	6	Germany	3.15
7	Spain	2.89	7	Canada	3.08
8	United states	2.76	8	Finland	3.03
	평균	2.69	9	New Zealand	2.99
9	Chile	2.60	10	United Kingdom	2.93
10	Mexico	2.56		평균	2.92
11	Czech republic	2.43	11	Australia	2.91
12	Hungary	2.41	12	United states	2.86
13	Japan	2.35	13	Mexico	2.81
14	Korea	2.27	14	Chile	2.58
14	Turkey	2.27	15	Japan	2.56
16	Poland	2.21	16	Poland	2.54
17	Slovakia	2.12	17	Korea	2.44
			18	Turkey	2.33

<부표 B-55>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적합성 1994~1999년 wave



<부표 B-56>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적합성 2005~2007년 wave



<부표 B-57> 성 격차 : 정치리더의 적합성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Norway	3.41	1	Norway	3.45
2	Sweden	3.33	2	Sweden	3.31
3	Finland	3.20	3	Spain	3.24
4	Germany	3.13	4	Switzerland	3.20
5	New zealand	2.95	4	France	3.20
6	Australia	2.90	6	Germany	3.15
7	Spain	2.89	7	Canada	3.08
8	United states	2.76	8	Finland	3.03
	평균	2.69	9	New zealand	2.99
9	Chile	2.60		평균	2.96
10	Mexico	2.56	10	United Kingdom	2.93
11	Czech republic	2.43	11	Australia	2.91
12	Hungary	2.41	12	United states	2.86
13	Japan	2.35	13	Mexico	2.81
14	Korea	2.27	14	Chile	2.58
14	Turkey	2.27	15	Japan	2.56
16	Poland	2.21	16	Poland	2.54
17	Slovakia	2.12	17	Korea	2.44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58>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Norway	3.41	.	3.45
2	Sweden	3.33	3.30	3.31
3	Spain	2.89	3.13	3.24
4	Switzerland	.	.	3.20
5	France	.	.	3.20
6	Germany	3.13	.	3.15
7	Canada	.	3.07	3.08
8	Finland	3.20	.	3.03
9	New zealand	2.95	.	2.99
10	United Kingdom	.	.	2.93
11	Australia	2.90	.	2.91
12	United states	2.76	2.94	2.86
13	Mexico	2.56	2.76	2.81
14	Chile	2.60	2.69	2.58
15	Japan	2.35	2.60	2.56
16	Poland	2.21	.	2.54
17	Korea	2.27	2.53	2.44
18	Turkey	2.27	2.31	2.33
19	Czech republic	2.43	.	.
20	Hungary	2.41	.	.
21	Slovakia	2.12	.	.
22	Italy	.	.	.
23	Netherlands	.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언론자유 보장 :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

이 항목은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전체응답자의 '④ Protecting freedom of speech'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라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와 관련한 질문이다. 이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E003 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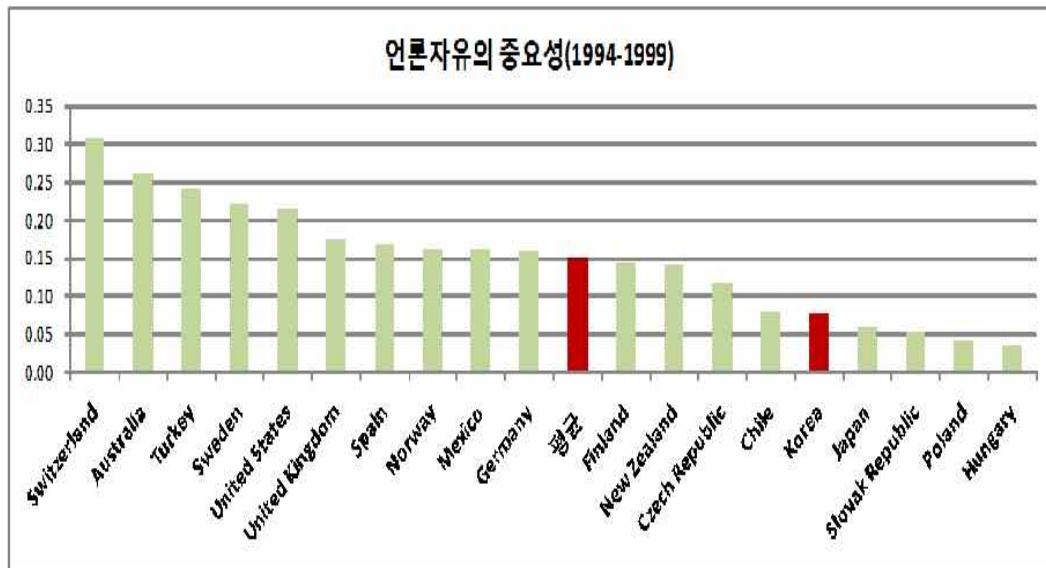
질문 : If you had to choose, which one of the things in this card would you say is most important?(Code one answer only under "first choice")

- ① Maintaining order in the nation
- ② Giving people more say in important government decisions
- ③ Fighting rising prices
- ④ Protecting freedom of spe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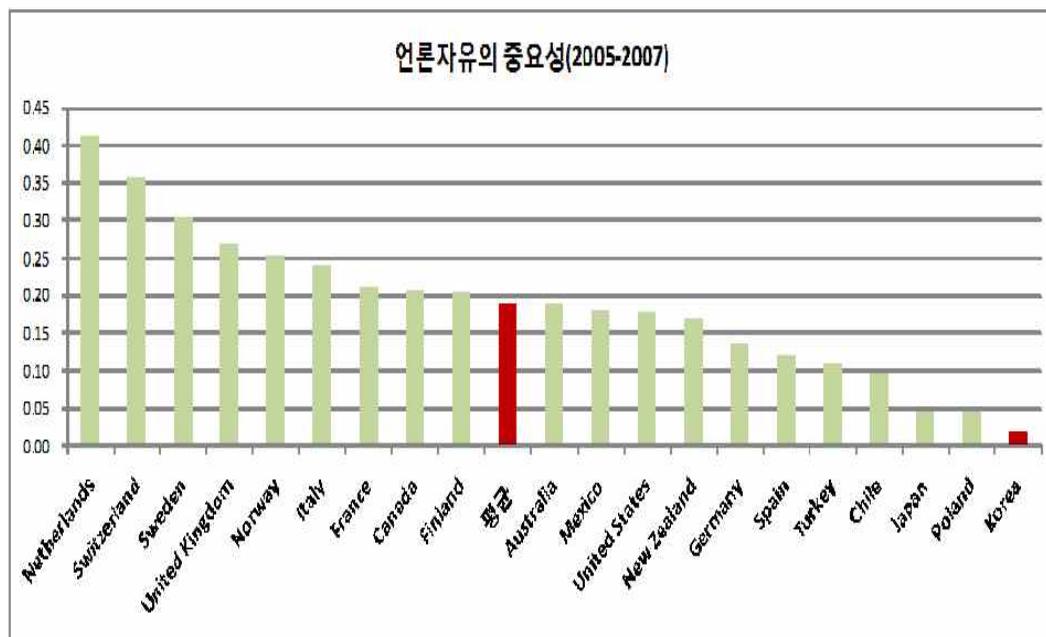
<부표 B-59>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witzerland	0.31	1	Netherlands	0.41
2	Australia	0.26	2	Switzerland	0.36
3	Turkey	0.24	3	Sweden	0.3
4	Sweden	0.22	4	United Kingdom	0.27
5	United States	0.21	5	Norway	0.25
6	United Kingdom	0.17	6	Italy	0.24
6	Spain	0.17	7	France	0.21
8	Norway	0.16	7	Canada	0.21
8	Mexico	0.16	7	Finland	0.21
8	Germany	0.16		평균	0.19
	평균	0.15	10	Australia	0.19
11	Finland	0.14	11	Mexico	0.18
11	New Zealand	0.14	11	United States	0.18
13	Czech Republic	0.12	13	New Zealand	0.17
14	Chile	0.08	14	Germany	0.14
14	Korea	0.08	15	Spain	0.12
16	Japan	0.06	16	Turkey	0.11
17	Slovak Republic	0.05	17	Chile	0.1
18	Poland	0.04	18	Japan	0.05
19	Hungary	0.03	18	Poland	0.05
		20		Korea	0.02

<부표 B-60>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wave



<부표 B-61>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부표 B-62>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94~1999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witzerland	0.31	1	Switzerland	0.36
2	Australia	0.26	2	Sweden	0.30
3	Turkey	0.24	3	United Kingdom	0.27
4	Sweden	0.22	4	Norway	0.25
5	United States	0.21	5	Finland	0.21
6	United Kingdom	0.17	6	Australia	0.19
6	Spain	0.17	7	Mexico	0.18
8	Norway	0.16	7	United States	0.18
8	Mexico	0.16		평균	0.17
	평균	0.16	9	New Zealand	0.17
8	Germany	0.16	10	Germany	0.14
11	Finland	0.14	11	Spain	0.12
11	New Zealand	0.14	12	Turkey	0.11
13	Chile	0.08	13	Chile	0.10
13	Korea	0.08	14	Japan	0.05
15	Japan	0.06	14	Poland	0.05
16	Poland	0.04	16	Korea	0.02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63>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81~1984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Netherlands	0.41
2	Switzerland	.	0.33	0.31	.	0.36
3	Sweden	.		0.22	0.20	0.30
4	United Kingdom	.	.	0.17	.	0.27
5	Norway	.	.	0.16	.	0.25
6	Italy	0.24
7	France	0.21
8	Canada	.	.	.	0.20	0.21
9	Finland	0.18	.	0.14	.	0.21
10	Australia	.	.	0.26	.	0.19
11	Mexico	0.07	0.14	0.16	0.16	0.18
12	United States	.	.	0.21	0.25	0.18
13	New Zealand	.	.	0.14	.	0.17
14	Germany	.	.	0.16	.	0.14
15	Spain	.	0.15	0.17	0.18	0.12
16	Turkey	.	0.22	0.24	0.23	0.11
17	Chile	.	0.09	0.08	0.12	0.10
18	Japan	0.05	0.09	0.06	0.05	0.05
19	Poland	.	0.06	0.04	.	0.05
20	Korea	0.10	0.11	0.08	0.04	0.02
21	Czech Republic	.	0.11	0.12	.	.
22	Hungary	0.03	.	0.03	.	.
23	Slovak Republic	.	0.05	0.05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인권보호 :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항목은 관용의 내용 중 인권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하였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E124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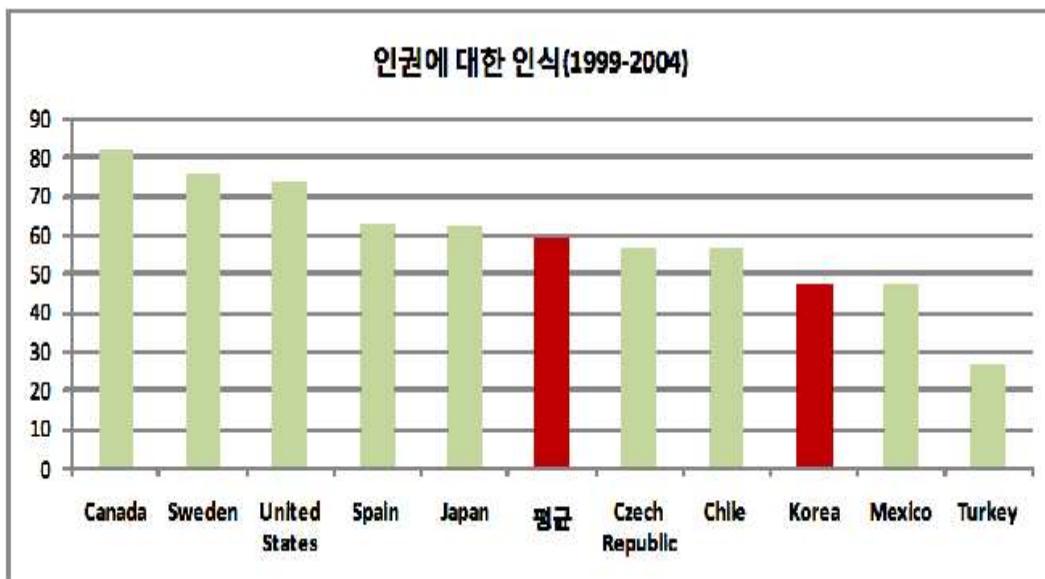
질문 : How much respect is there for individual human rights nowadays in this country? Do you feel there is

- ① A great deal of respect for individual human rights
- ② Fairly much respect
- ③ Not much respect
- ④ No respect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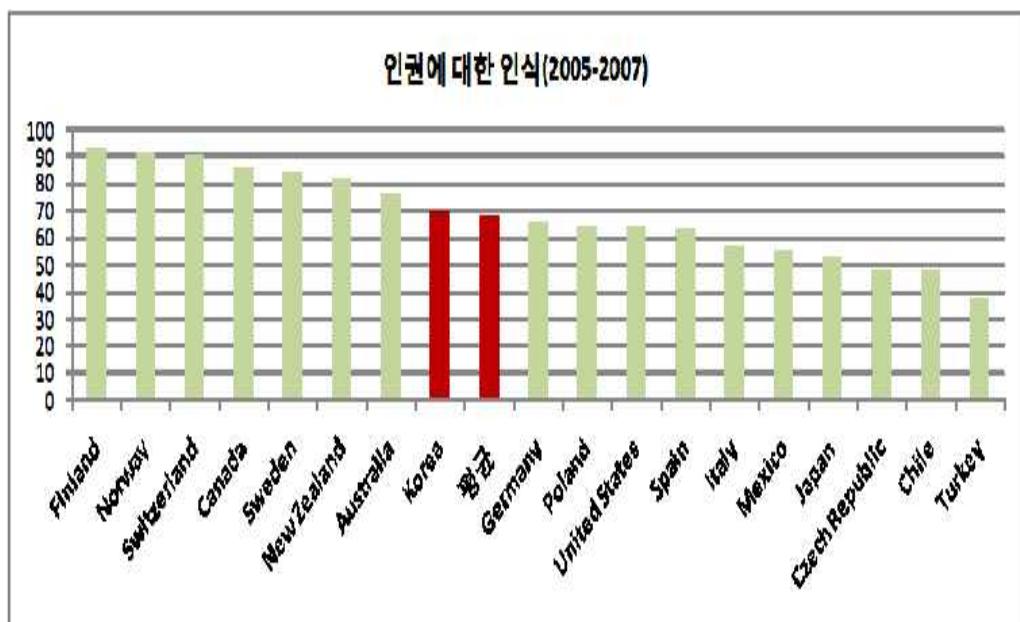
<부표 B-64> 인권보호 :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99~2004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9~2004	순위	국가명	2005~2007
1	Canada	0.82	1	Finland	0.93
2	Sweden	0.76	2	Norway	0.92
3	United States	0.74	3	Switzerland	0.9
4	Spain	0.63	4	Canada	0.86
5	Japan	0.62	5	Sweden	0.85
	평균	0.59	6	New Zealand	0.82
6	Czech Republic	0.57	7	Australia	0.76
6	Chile	0.57	8	Korea	0.7
8	Korea	0.47		평균	0.68
8	Mexico	0.47	9	Germany	0.66
10	Turkey	0.27	10	Poland	0.65
			11	United States	0.64
			12	Spain	0.63
			13	Italy	0.57
			14	Mexico	0.55
			15	Japan	0.53
			16	Czech Republic	0.48
			16	Chile	0.48
			18	Turkey	0.38

<부표 B-65> 인권에 대한 인식 1999~2004 Wave



<부표 B-66> 인권에 대한 인식 2005~2007 Wave



<부표 B-67> 인권보호 :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999~2004년/ 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9~2004	순위	국가명	2005~2007
1	Canada	0.82	1	Canada	0.86
2	Sweden	0.76	2	Sweden	0.85
3	United States	0.74	3	Korea	0.70
4	Spain	0.63	4	United States	0.64
5	Japan	0.62	5	Spain	0.63
	평균	0.59		평균	0.61
6	Czech Republic	0.57	6	Mexico	0.55
6	Chile	0.57	7	Japan	0.53
8	Korea	0.47	8	Czech Republic	0.48
8	Mexico	0.47	8	Chile	0.48
10	Turkey	0.27	10	Turkey	0.38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68>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Finland	.	.	0.93
2	Norway	.	.	0.92
3	Switzerland	.	.	0.90
4	Canada	.	0.82	0.86
5	Sweden	.	0.76	0.85
6	New Zealand	.	.	0.82
7	Australia	.	.	0.76
8	Korea	.	0.47	0.70
9	Germany	0.54	.	0.66
10	Poland	.	.	0.65
11	United States	.	0.74	0.64
12	Spain	.	0.63	0.63
13	Italy	.	.	0.57
14	Mexico	.	0.47	0.55
15	Japan	.	0.62	0.53
16	Czech Republic	.	0.57	0.48
17	Chile	.	0.57	0.48
18	Turkey	.	0.27	0.38
19	France	.	.	.
20	Hungary	.	.	.
21	Netherlands	.	.	.
22	Slovak Republic	.	.	.
23	United Kingdom	.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사회 구성원 신뢰 : 일반인에 대한 신뢰

이 항목은 일반인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전체 응답자의 '① Most people can be trusted'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한 것으로 수준이 높을수록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이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A165 항목이다.

질문 :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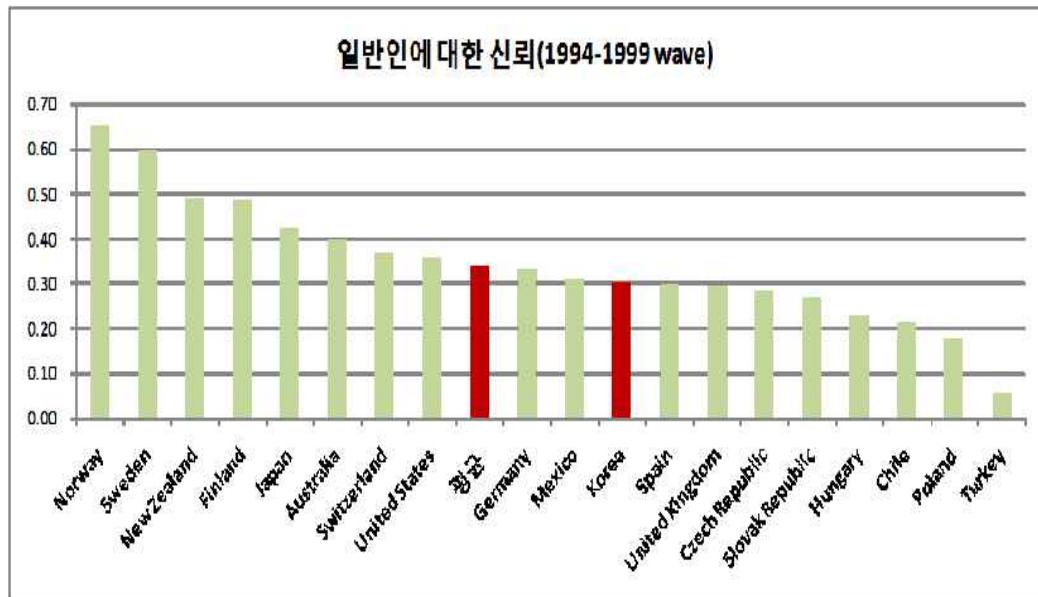
① **Most people can be trusted**

② **Can't be too care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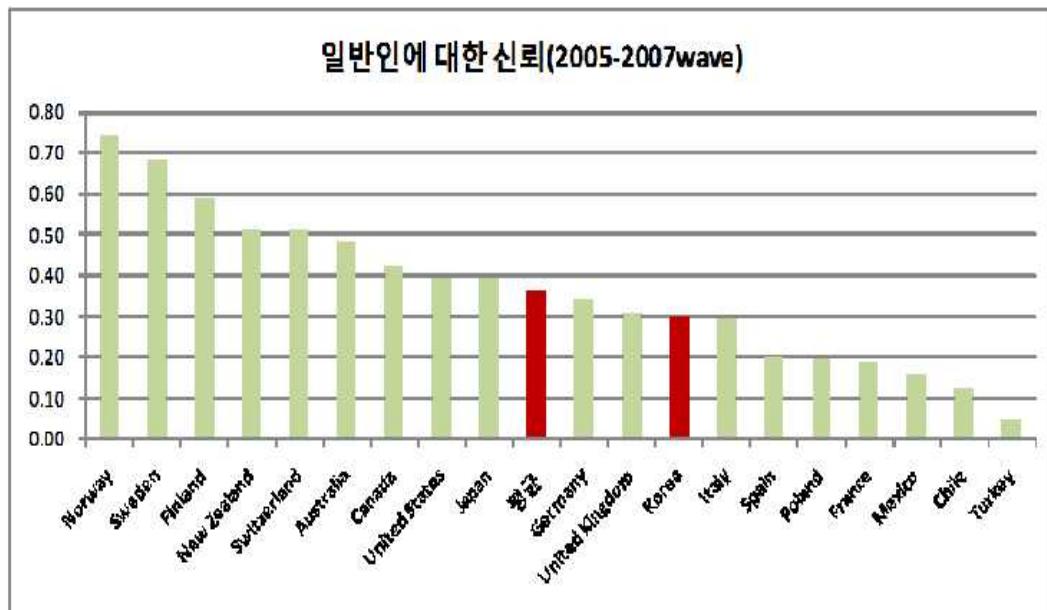
<부표 B-69> 일반인에 대한 신뢰 1994~1999년/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Norway	0.65	1	Norway	0.74
2	Sweden	0.6	2	Sweden	0.68
3	New Zealand	0.49	3	Finland	0.59
3	Finland	0.49	4	New Zealand	0.51
5	Japan	0.42	4	Switzerland	0.51
6	Australia	0.4	6	Australia	0.48
7	Switzerland	0.37	7	Canada	0.42
8	United States	0.36	8	United States	0.4
	평균	0.34	9	Japan	0.39
9	Germany	0.33		평균	0.36
10	Mexico	0.31	10	Germany	0.34
11	Korea	0.3	11	United Kingdom	0.3
11	Spain	0.3	11	Korea	0.3
11	United Kingdom	0.3	13	Italy	0.29
14	Czech Republic	0.29	14	Spain	0.2
15	Slovak Republic	0.27	15	Poland	0.19
16	Hungary	0.23	15	France	0.19
17	Chile	0.21	17	Mexico	0.16
18	Poland	0.18	18	Chile	0.12
19	Turkey	0.05	19	Turkey	0.05

<부표 B-70> 일반인에 대한 신뢰 1994~1999년 wave



<부표 B-71> 일반인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부표 B-72> 일반인에 대한 신뢰 1994~1999년/2005~2007년

순위	국가명	1994~1999	순위	국가명	2005~2007
1	Norway	0.65	1	Norway	0.74
2	Sweden	0.6	2	Sweden	0.68
3	New Zealand	0.49	3	Finland	0.59
3	Finland	0.49	4	New Zealand	0.51
5	Japan	0.42	4	Switzerland	0.51
6	Australia	0.4	6	Australia	0.48
7	Switzerland	0.37	7	United States	0.4
8	United States	0.36	8	Japan	0.39
	평균	0.36		평균	0.37
10	Germany	0.33	9	Germany	0.34
11	Mexico	0.31	10	United Kingdom	0.3
12	Korea	0.3	10	Korea	0.3
12	Spain	0.3	12	Spain	0.2
12	United Kingdom	0.3	13	Poland	0.19
15	Chile	0.21	14	Mexico	0.16
16	Poland	0.18	15	Chile	0.12
17	Turkey	0.05	16	Turkey	0.05

주)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들만 비교하였음.

<부표 B-73>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1981~1984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07
1	Norway	.	.	0.65	.	0.74
2	Sweden	.	.	0.60	0.66	0.68
3	Finland	0.57	.	0.49	.	0.59
4	New Zealand	.	.	0.49	.	0.51
5	Switzerland	.	0.43	0.37	.	0.51
6	Australia	0.48	.	0.40	.	0.48
7	Canada	.	.	.	0.37	0.42
8	United States	.	.	0.36	0.36	0.40
9	Japan	0.41	0.42	0.42	0.43	0.39
10	Germany	.	.	0.33	.	0.34
11	United Kingdom	.	.	0.30	.	0.30
12	Korea	0.38	0.34	0.30	0.27	0.30
13	Italy	0.29
14	Spain	.	0.31	0.30	0.52	0.20
15	Poland	.	0.35	0.18	.	0.19
16	France	0.19
17	Mexico	0.17	0.33	0.31	0.22	0.16
18	Chile	.	0.23	0.21	0.23	0.12
19	Turkey	.	0.10	0.05	0.19	0.05
20	Czech Republic	.	0.30	0.29	.	.
21	Hungary	0.34	.	0.23	.	.
22	Netherlands
23	Slovak Republic	.	0.23	0.27	.	.

주) 마지막 wave 점수 순

- 사회 구성원 신뢰 : 외국인들에 대한 신뢰

이 항목은 외국인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① Trust completely, ② Trust a little' 항목에 응답한 비율을 지수화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외국인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 공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공정사회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재의 공정 수준의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자료는 World values survey의 G007_36 항목이다. 이 자료는 2005~2007 wave 자료만 있다.

질문. I ' like to ask you how much you trust people from various groups.

Could you tell me for each whether you trust people from this group completely, somewhat, not very much or not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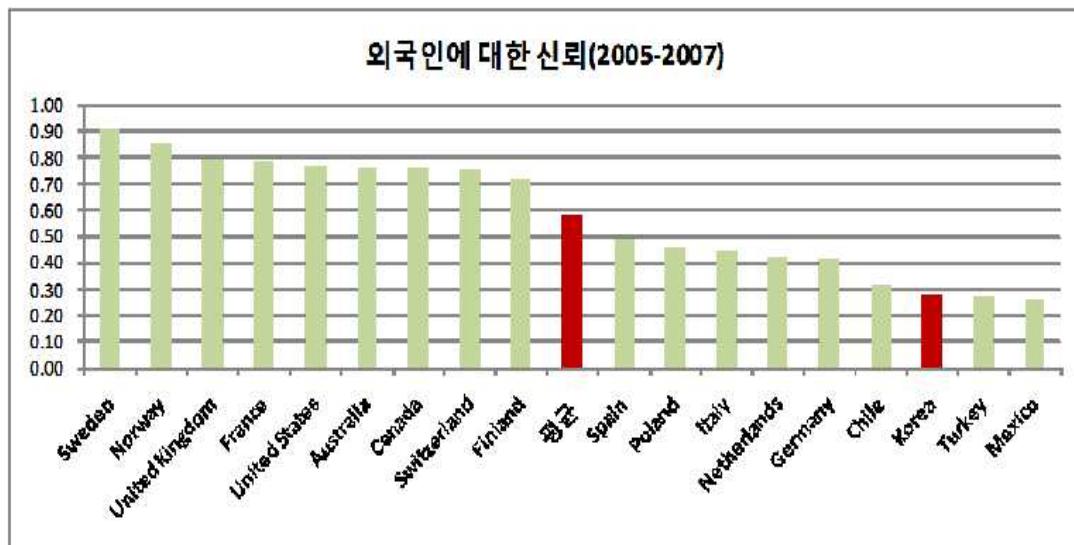
People of another nationality

Trust completely	Trust a little	Neither trust or distrust	Not trust very much	Not trust at all
1	2	3	4	5

<부표 B-74> 사회 구성원 신뢰 : 외국인들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순위	국가명	2005~2007
1	Sweden	0.91
2	Norway	0.85
3	United Kingdom	0.79
4	France	0.78
5	United States	0.77
6	Australia	0.76
6	Canada	0.76
8	Switzerland	0.75
9	Finland	0.71
	평균	0.58
10	Spain	0.49
11	Poland	0.46
12	Italy	0.44
13	Netherlands	0.42
14	Germany	0.41
15	Chile	0.32
16	Korea	0.28
17	Turkey	0.27
18	Mexico	0.26

<부표 B-75> 외국인에 대한 신뢰 2005~2007 wave



<부표 B-76> OECD국가 데이터

순번	국가명	2005-2007
1	Sweden	0.91
2	Norway	0.85
3	United Kingdom	0.79
4	France	0.78
5	United States	0.77
6	Australia	0.76
7	Canada	0.76
8	Switzerland	0.75
9	Finland	0.71
10	한국	0.58
11	Spain	0.49
12	Poland	0.46
13	Italy	0.44
14	Netherlands	0.42
15	Germany	0.41
16	Chile	0.32
17	Korea	0.28
18	Turkey	0.27
19	Mexico	0.26
19	Czech Republic	.
20	Hungary	.
21	Japan	.
22	New Zealan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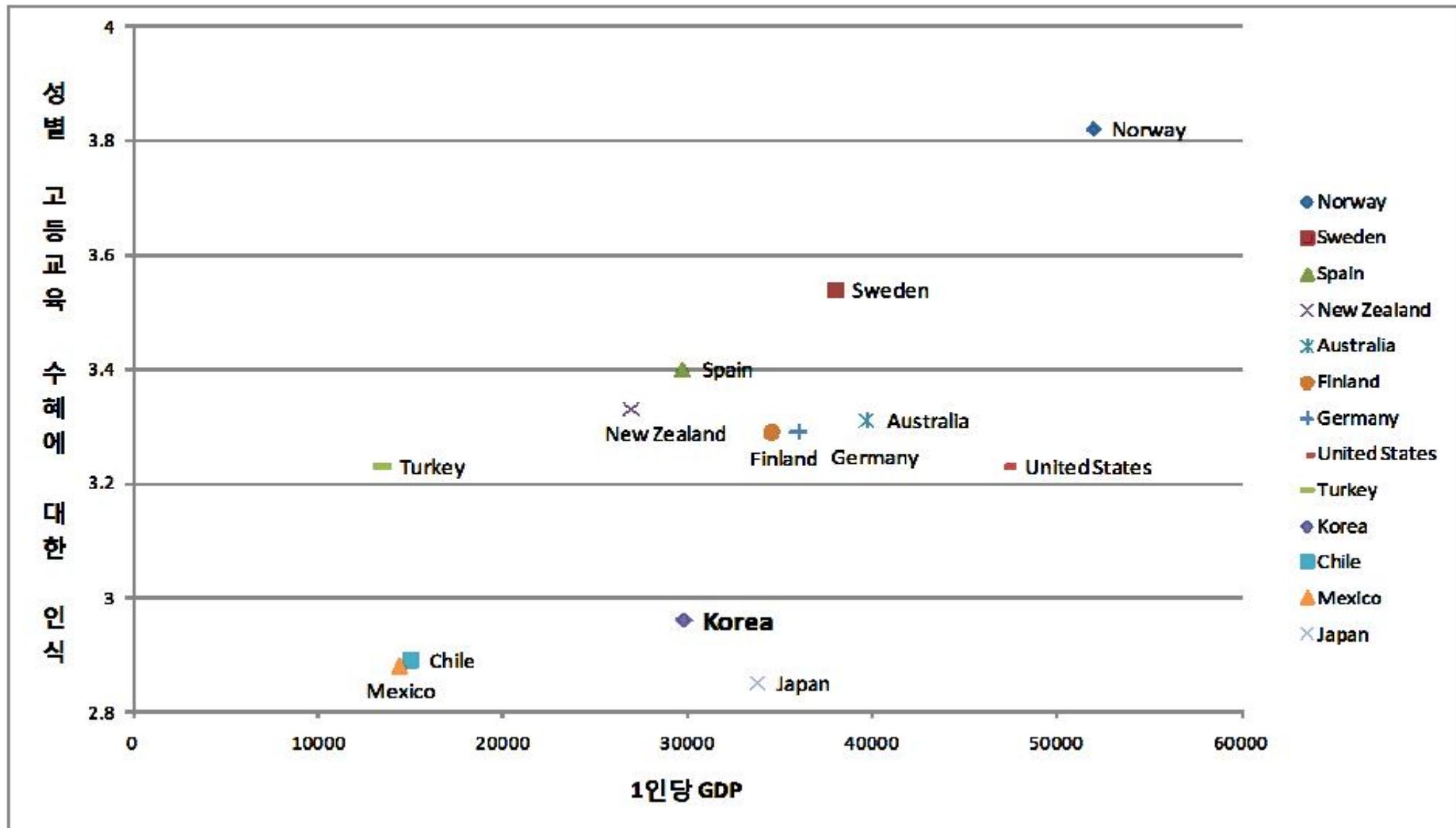
[부록 C] 1인당 GDP 대비 인식 비교 분석 세부내용

<부표 C-1> 1인당 GDP 대비 분석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순위	국가명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2005~2007 wave)	1인당 GDP ¹⁷⁾
1	Norway	3.82	52,013
2	Sweden	3.54	38,031
3	Spain	3.4	29,742
4	New Zealand	3.33	26,966
5	Australia	3.31	39,699
6	Finland	3.29	34,585
6	Germany	3.29	36,033
8	United States	3.23	47,284
8	Turkey	3.23	1,3464
평균		3.23	
10	Korea	2.96	29,836
11	Chile	2.89	15,002
12	Mexico	2.88	14,430
13	Japan	2.85	33,805

17) International Geary - Khamis dollar,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부표 C-2> 1인당 GDP 대비 분석 :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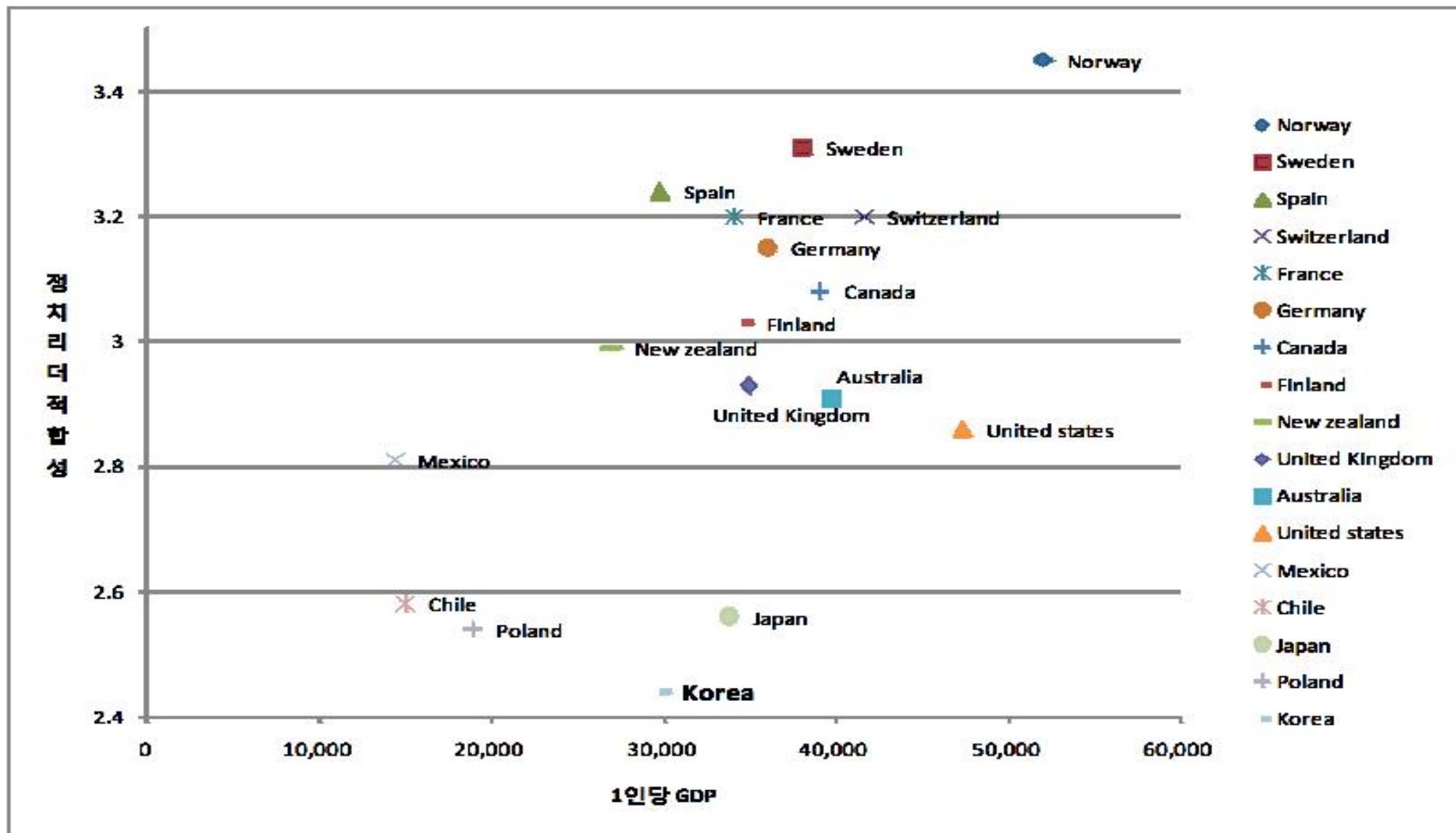


<부표 C-3>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치 리더의 적합성

순위	국가명	정치리더의 적합성(2005-2007)	1인당 GDP ¹⁸⁾
1	Norway	3.45	52,013
2	Sweden	3.31	38,031
3	Spain	3.24	29,742
4	Switzerland	3.2	41,663
4	France	3.2	34,077
6	Germany	3.15	36,033
7	Canada	3.08	39,057
8	Finland	3.03	34,585
9	New Zealand	2.99	26,966
	평균	2.96	
10	United Kingdom	2.93	34,920
11	Australia	2.91	39,699
12	United States	2.86	47,284
13	Mexico	2.81	14,430
14	Chile	2.58	15,002
15	Japan	2.56	33,805
16	Poland	2.54	18,936
17	Korea	2.44	29,836

18) International Geary - Khamis dollar,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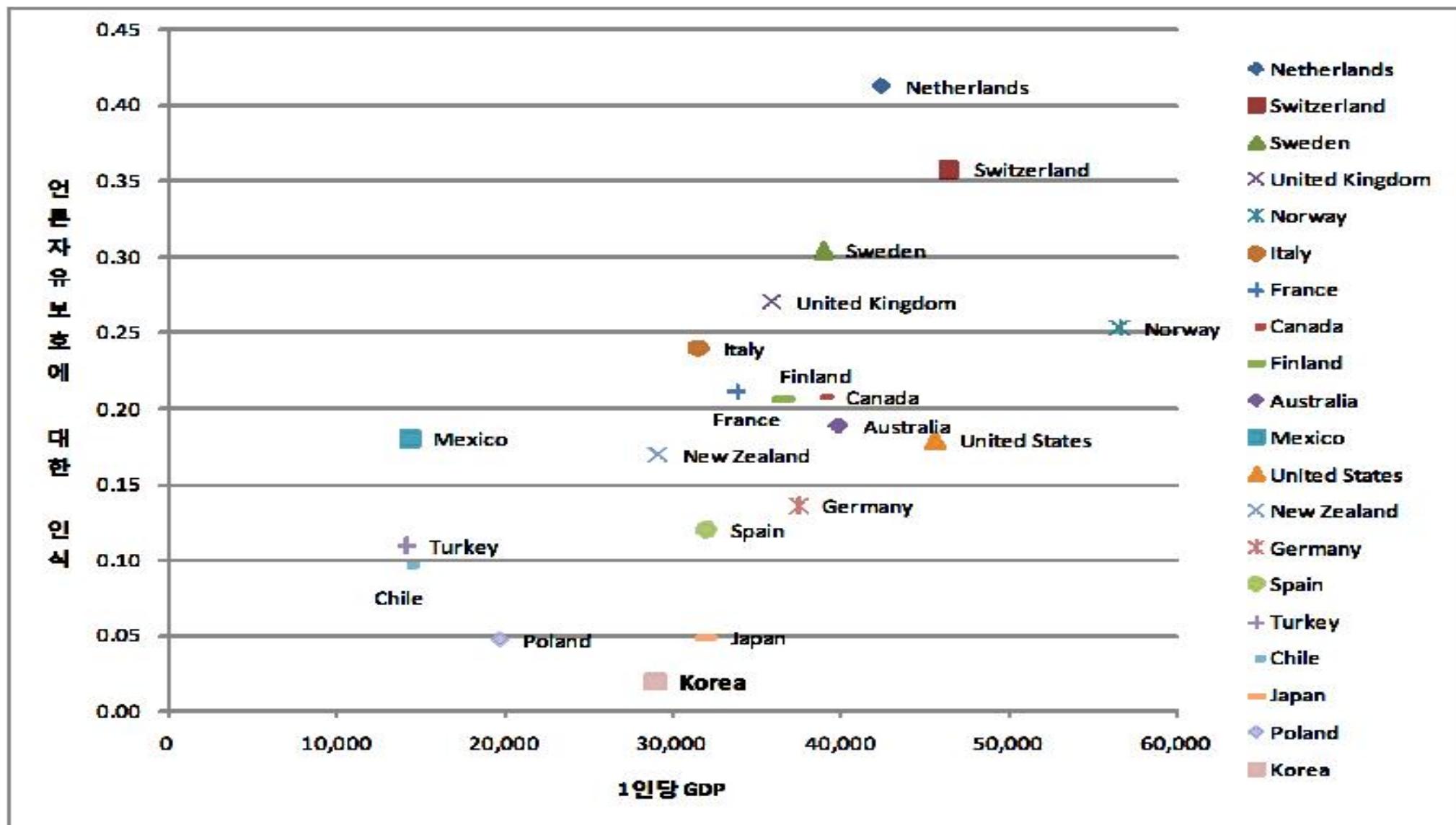
<부표 C-4>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치 리더의 적합성



<부표 C-5> 1인당 GDP 대비 분석 :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Netherlands	0.41	42,478
2	Switzerland	0.36	46,479
3	Sweden	0.30	39,013
4	United Kingdom	0.27	35,917
5	Norway	0.25	56,648
6	Italy	0.24	31,563
7	France	0.21	33,835
7	Canada	0.21	38,989
7	Finland	0.21	36,664
평균		0.19	
10	Australia	0.19	39,918
11	Mexico	0.18	14,388
11	United States	0.18	45,674
13	New Zealand	0.17	29,149
14	Germany	0.14	37,567
15	Spain	0.12	32,076
16	Turkey	0.11	14,218
17	Chile	0.10	14,321
18	Japan	0.05	32,018
18	Poland	0.05	19,784
20	Korea	0.02	29,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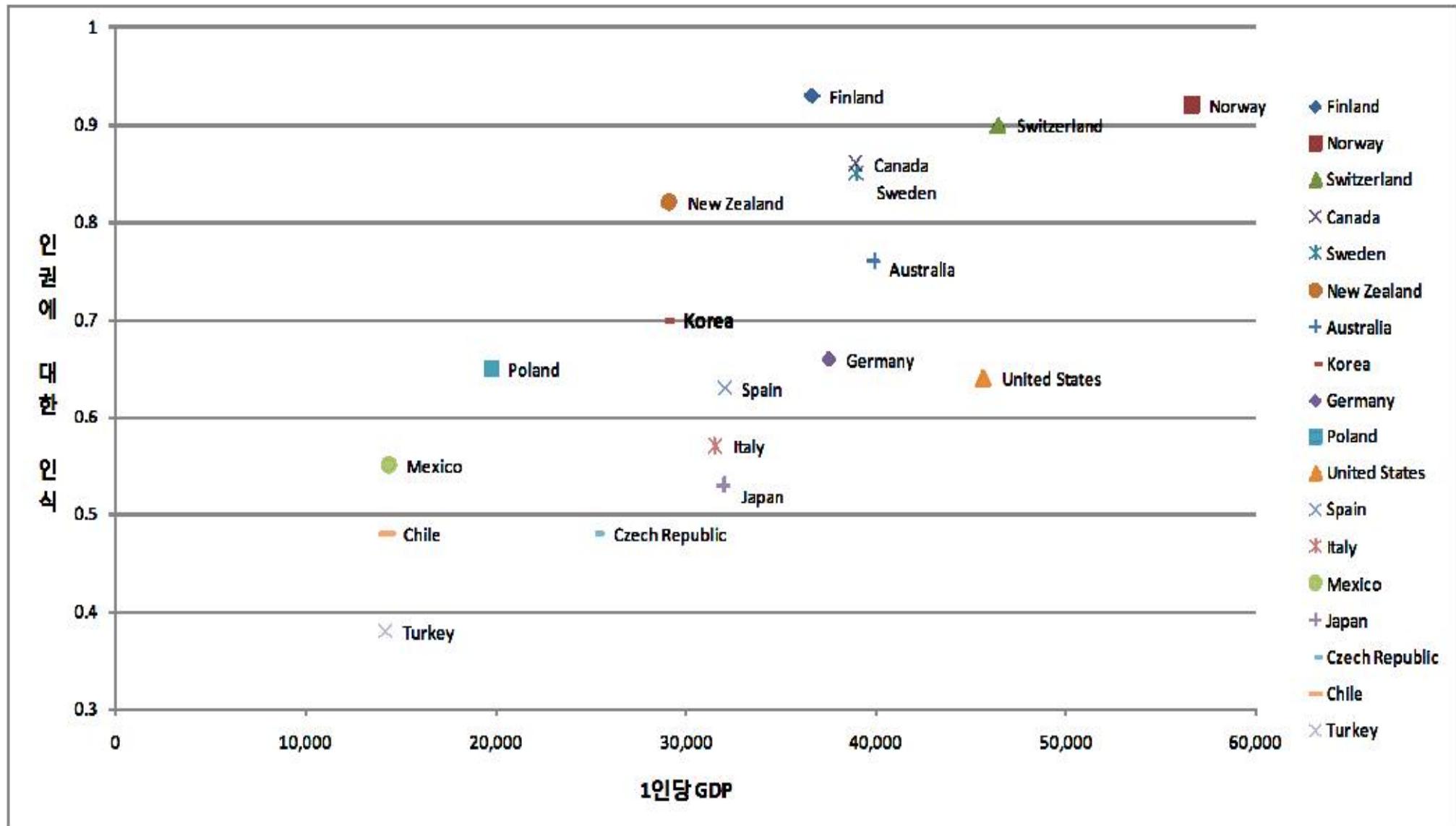
<부표 C-6> 1인당 GDP 대비 분석 :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표 C-7>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인권에 대한 인식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Finland	0.93	36,664
2	Norway	0.92	56,648
3	Switzerland	0.90	46,479
4	Canada	0.86	38,989
5	Sweden	0.85	39,013
6	New Zealand	0.82	29,149
7	Australia	0.76	39,918
8	Korea	0.70	29,004
	평균	0.69	
9	Germany	0.66	37,567
10	Poland	0.65	19,784
11	United States	0.64	45,674
12	Spain	0.63	32,076
13	Italy	0.57	31,563
14	Mexico	0.55	14,388
15	Japan	0.53	32,018
16	Czech Republic	0.48	25,299
16	Chile	0.48	14,321
18	Turkey	0.38	14,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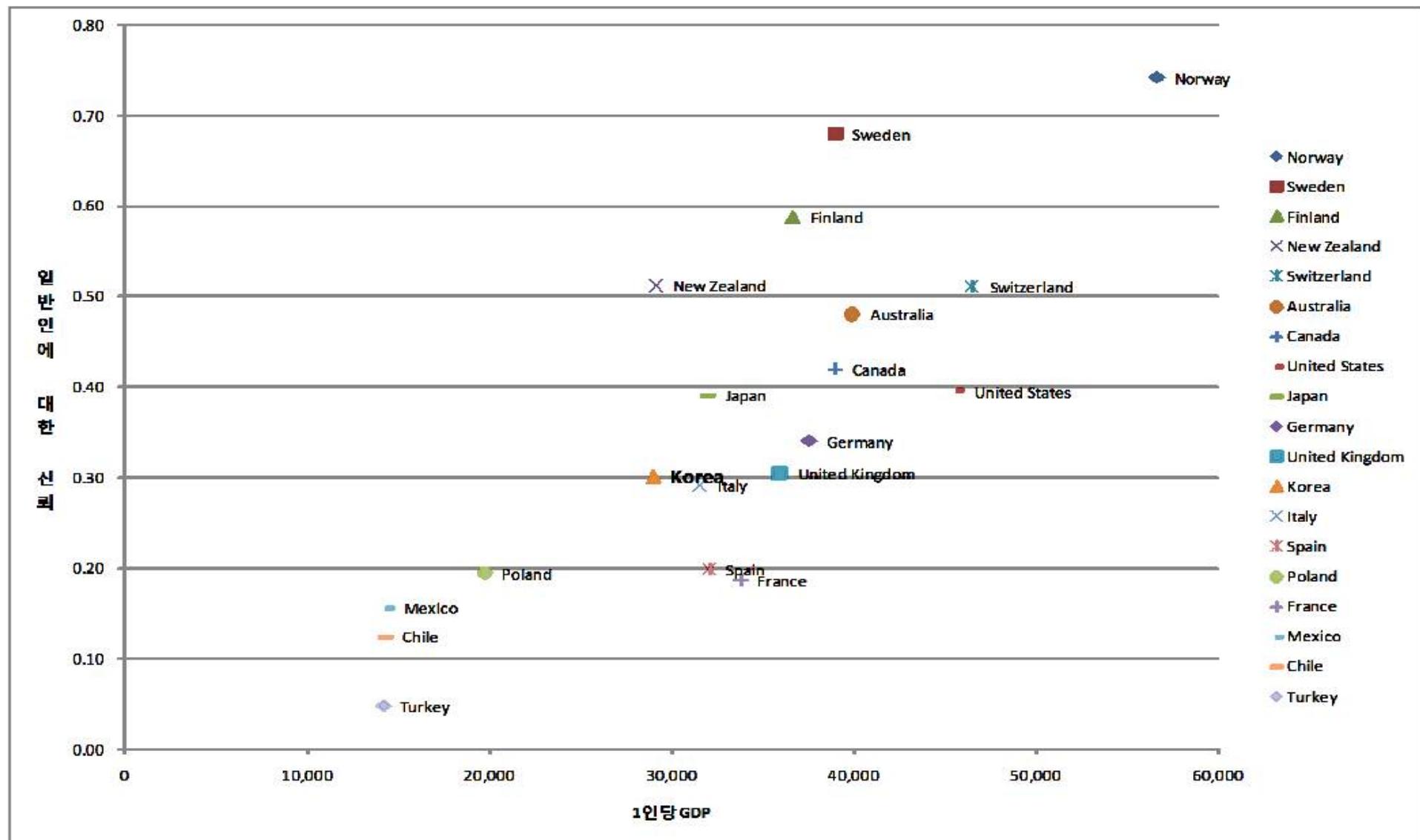
<부표 C-8>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인권에 대한 인식



<부표 C-9>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일반인에 대한 신뢰

순위	국가명	2005–2007 wave	1인당 GDP
1	Norway	0.74	56,648
2	Sweden	0.68	39,013
3	Finland	0.59	36,664
4	New Zealand	0.51	29,149
4	Switzerland	0.51	46,479
6	Australia	0.48	39,918
7	Canada	0.42	38,989
8	United States	0.40	45,674
9	Japan	0.39	32,018
	평균	0.36	
10	Germany	0.34	37,567
11	United Kingdom	0.30	35,917
11	Korea	0.30	29,004
13	Italy	0.29	31,563
14	Spain	0.2	32,076
15	Poland	0.19	19,784
15	France	0.19	33,835
17	Mexico	0.16	14,388
18	Chile	0.12	14,321
19	Turkey	0.05	14,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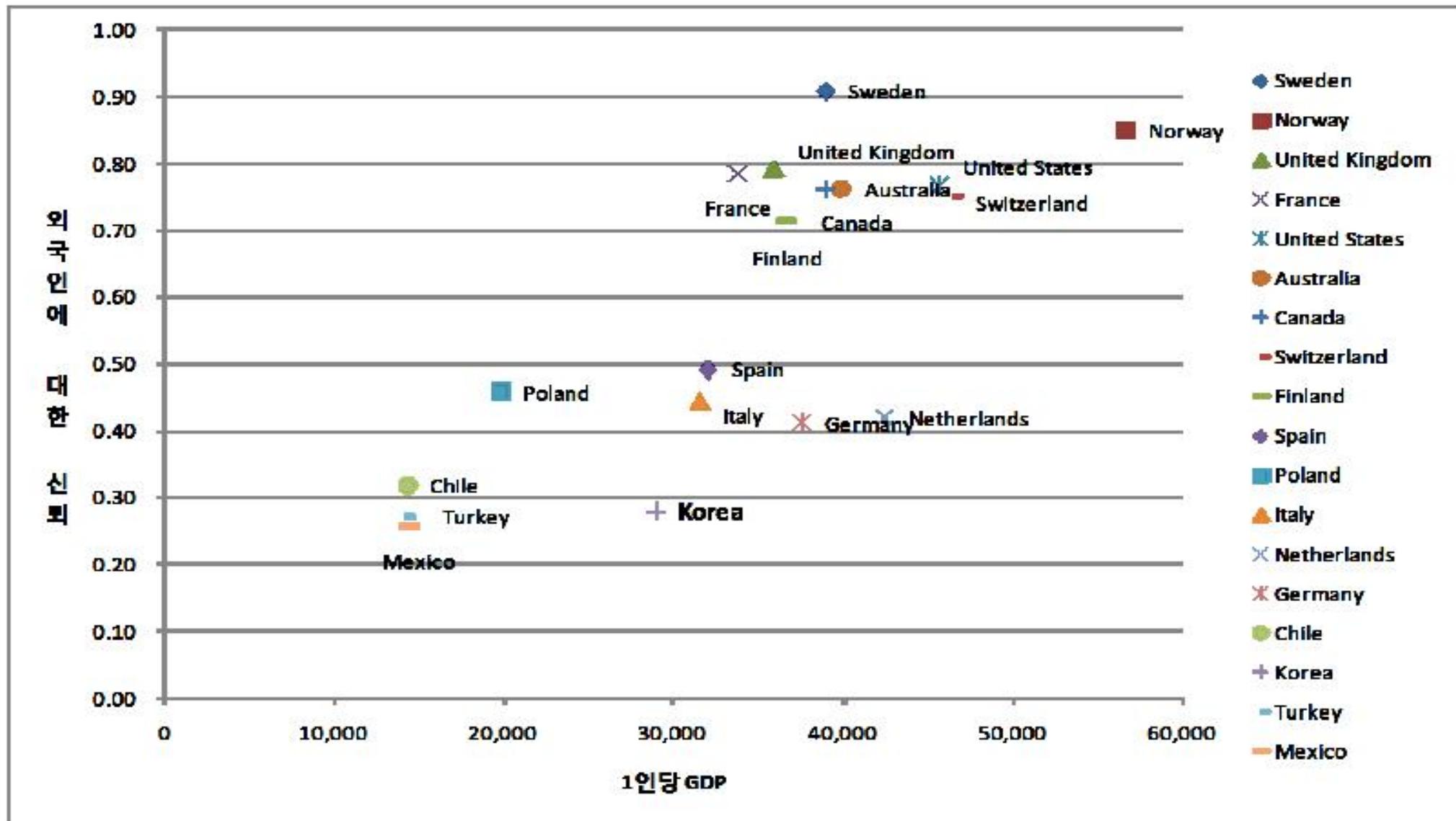
<부표 C-10>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일반인에 대한 신뢰



<부표 C-11> 1인당 GDP 대비 분석 :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Sweden	0.91	39,013
2	Norway	0.85	56,648
3	United Kingdom	0.79	35,917
4	France	0.78	33,835
5	United States	0.77	45,674
6	Australia	0.76	39,918
7	Canada	0.76	38,989
8	Switzerland	0.75	46,479
9	Finland	0.71	36,664
	평균	0.58	
10	Spain	0.49	32,076
11	Poland	0.46	19,784
12	Italy	0.44	31,563
13	Netherlands	0.42	42,478
14	Germany	0.41	37,567
15	Chile	0.32	14,321
16	Korea	0.28	29,004
17	Turkey	0.27	14,218
18	Mexico	0.26	14,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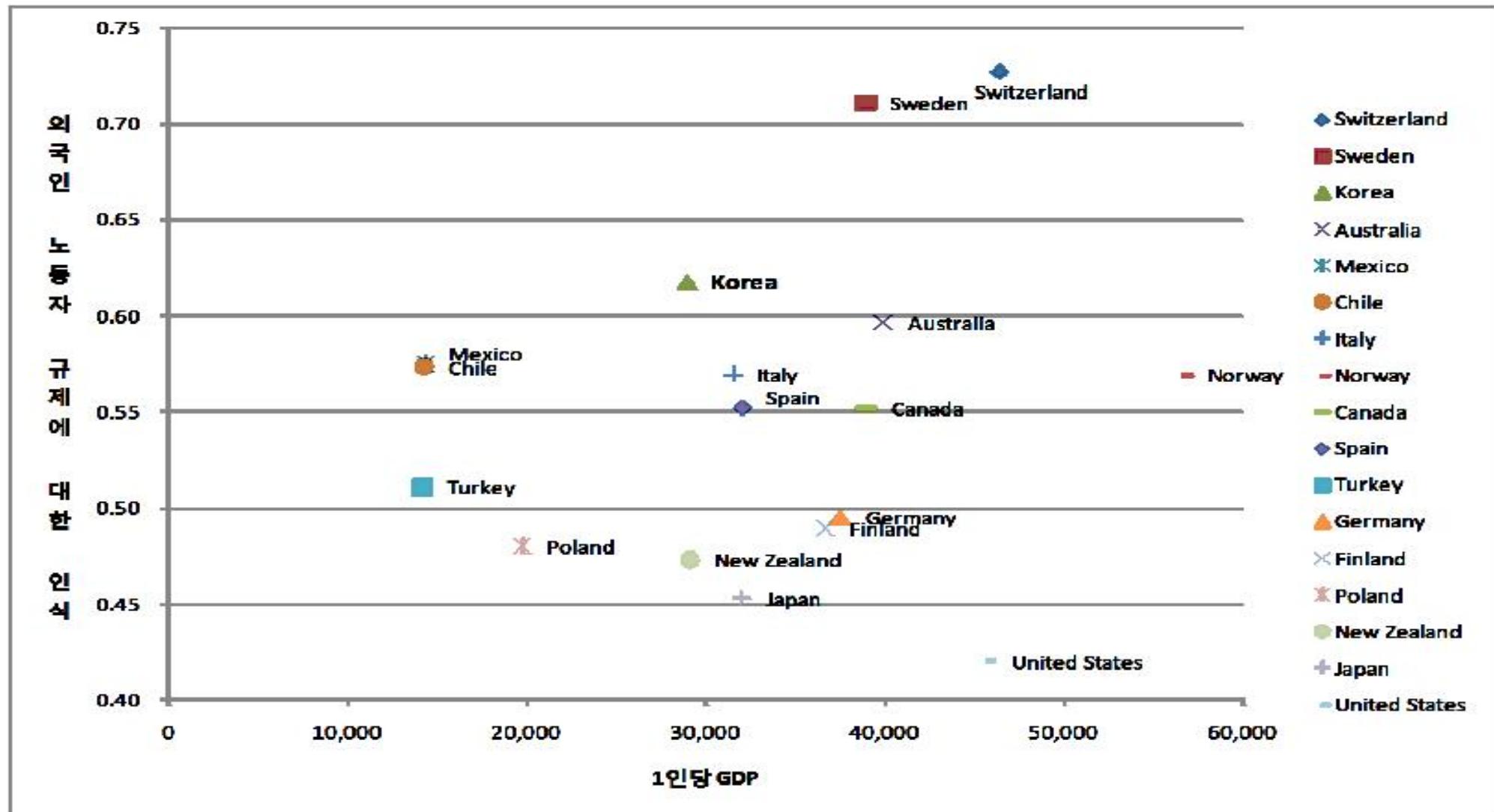
<부표 C-12> 1인당 GDP 대비 분석 : 외국인에 대한 신뢰



<부표 C-13> 1인당 GDP 대비 분석 : 외국인 노동자 규제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Switzerland	0.73	46,479
2	Sweden	0.71	39,013
3	Korea	0.62	29,004
4	Australia	0.60	39,918
5	Mexico	0.57	14,388
5	Chile	0.57	14,321
5	Italy	0.57	31,563
5	Norway	0.57	56,648
9	Canada	0.55	38,989
9	Spain	0.55	32,076
	평균	0.55	
11	Turkey	0.51	14,218
12	Germany	0.50	37,567
13	Finland	0.49	36,664
14	Poland	0.48	19,784
15	New Zealand	0.47	29,149
16	Japan	0.45	32,018
17	United States	0.42	45,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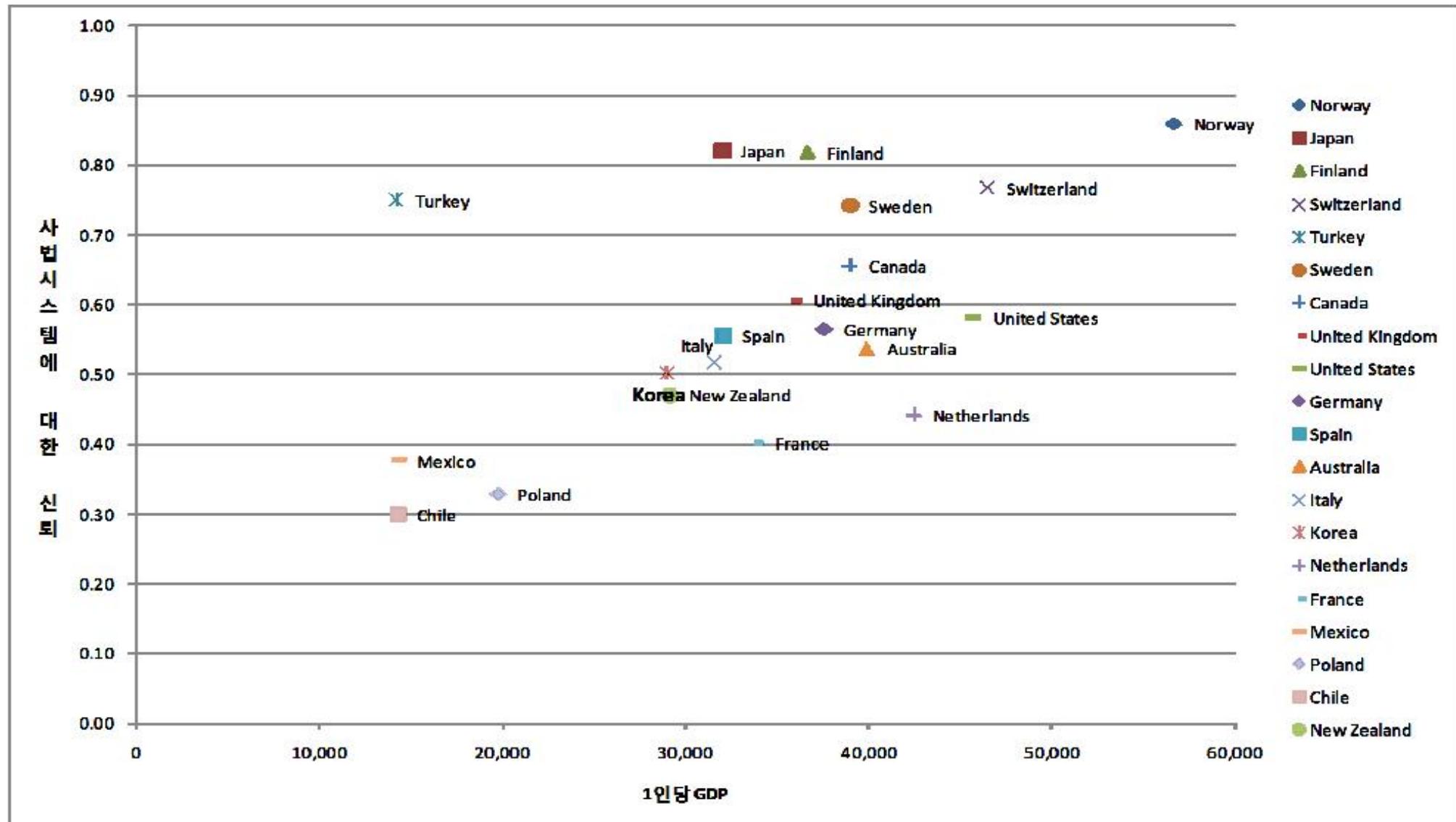
<부표 C-14> 1인당 GDP 대비 분석 : 외국인 노동자 규제



<부표 C-15> 1인당 GDP 대비 분석 :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순위	국가명	2005-2007 wave	1인당 GDP
1	Norway	0.86	56,648
2	Japan	0.82	32,018
2	Finland	0.82	36,664
4	Switzerland	0.77	46,479
5	Turkey	0.75	14,218
6	Sweden	0.74	39,013
7	Canada	0.66	38,989
8	United Kingdom	0.61	35,917
9	United States	0.58	45,674
평균		0.58	
10	Germany	0.56	37,567
10	Spain	0.56	32,076
12	Australia	0.54	39,918
13	Italy	0.52	31,563
14	Korea	0.50	29,004
15	New Zealand	0.47	29,149
16	Netherlands	0.44	42,478
17	France	0.40	33,835
18	Mexico	0.38	14,388
19	Poland	0.33	19,784
20	Chile	0.30	14,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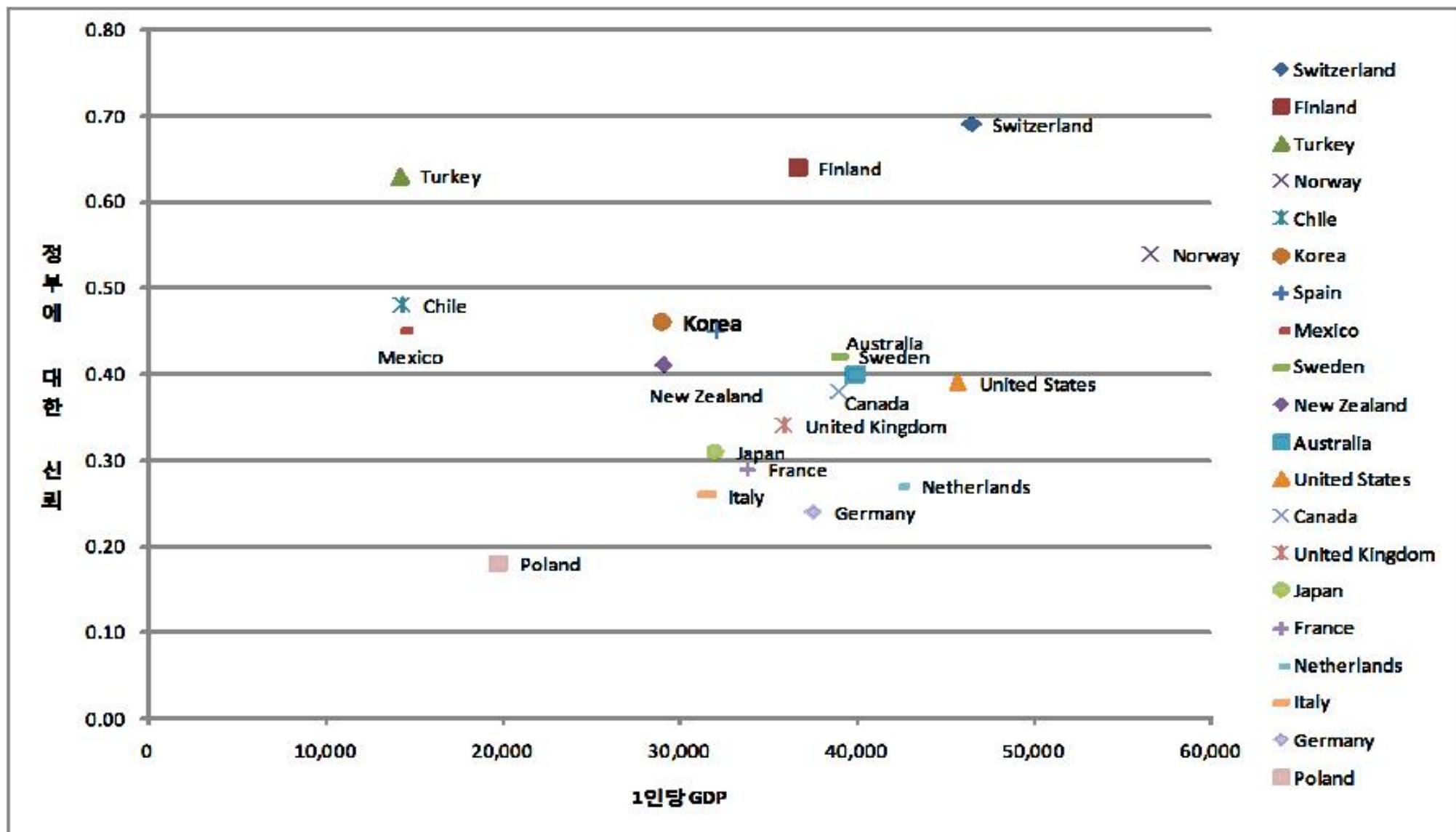
<부표 C-16> 1인당 GDP 대비 분석 :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표 C-17>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부에 대한 신뢰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Switzerland	0.69	46,479
2	Finland	0.64	36,664
3	Turkey	0.63	14,218
4	Norway	0.54	56,648
5	Chile	0.48	14,321
6	Korea	0.46	29,004
7	Spain	0.45	32,076
7	Mexico	0.45	14,388
9	Sweden	0.42	39,013
10	New Zealand	0.41	29,149
	평균	0.41	
11	Australia	0.40	39,918
12	United States	0.39	45,674
13	Canada	0.38	38,989
14	United Kingdom	0.34	35,917
15	Japan	0.31	32,018
16	France	0.29	33,835
17	Netherlands	0.27	42,478
18	Italy	0.26	31,563
19	Germany	0.24	37,567
20	Poland	0.18	19,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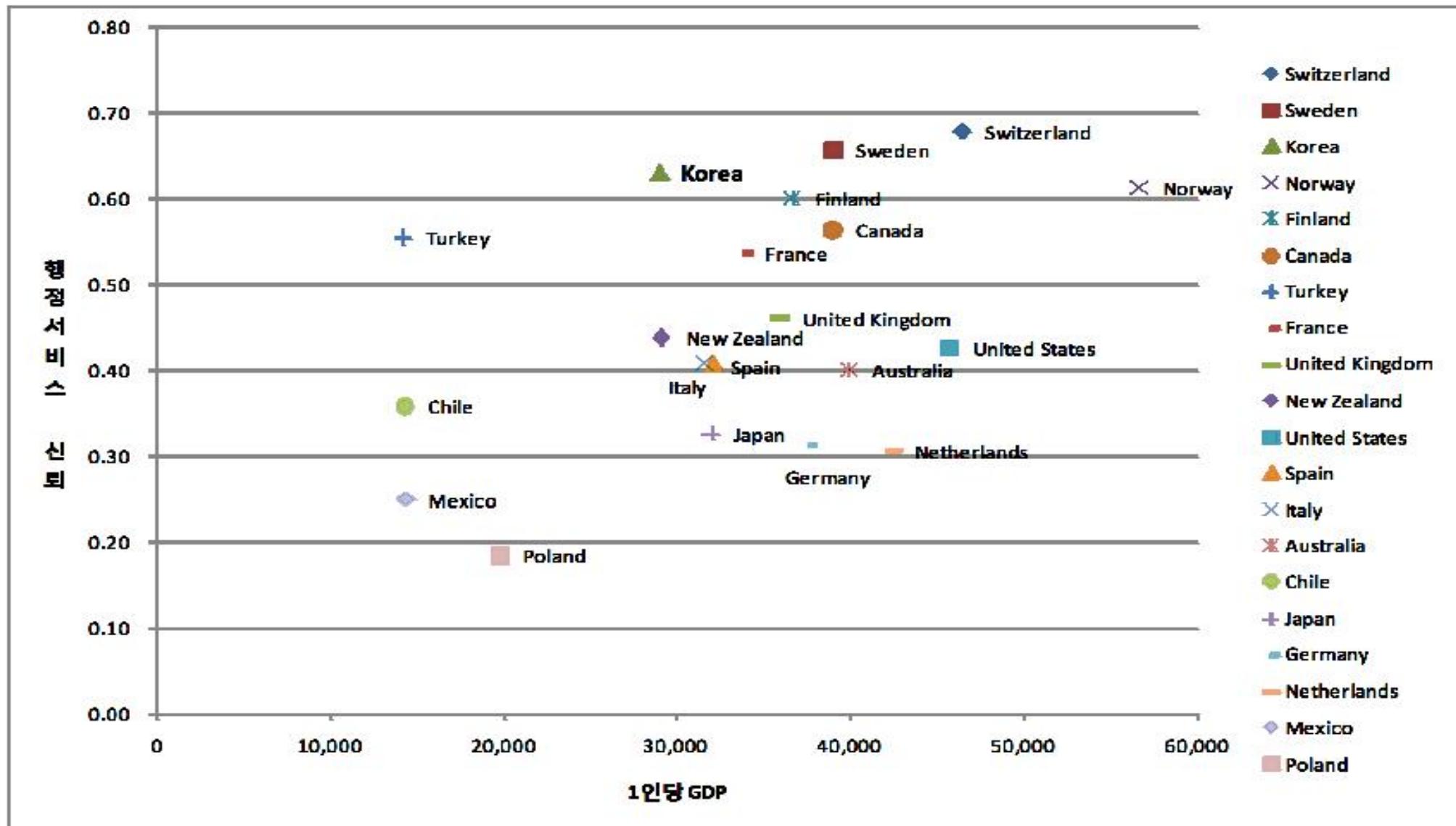
<부표 C-18>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부에 대한 신뢰



<부표 C-19> 1인당 GDP 대비 분석 :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Switzerland	0.68	46,479
2	Sweden	0.66	39,013
3	Korea	0.63	29,004
4	Norway	0.61	56,648
5	Finland	0.60	36,664
6	Canada	0.56	38,989
7	Turkey	0.55	14,218
8	France	0.54	33,835
9	United Kingdom	0.46	35,917
	평균	0.46	
10	New Zealand	0.44	29,149
11	United States	0.43	45,674
12	Spain	0.41	32,076
12	Italy	0.41	31,563
14	Australia	0.40	39,918
15	Chile	0.36	14,321
16	Japan	0.33	32,018
17	Germany	0.32	37,567
18	Netherlands	0.31	42,478
19	Mexico	0.25	14,388
20	Poland	0.18	19,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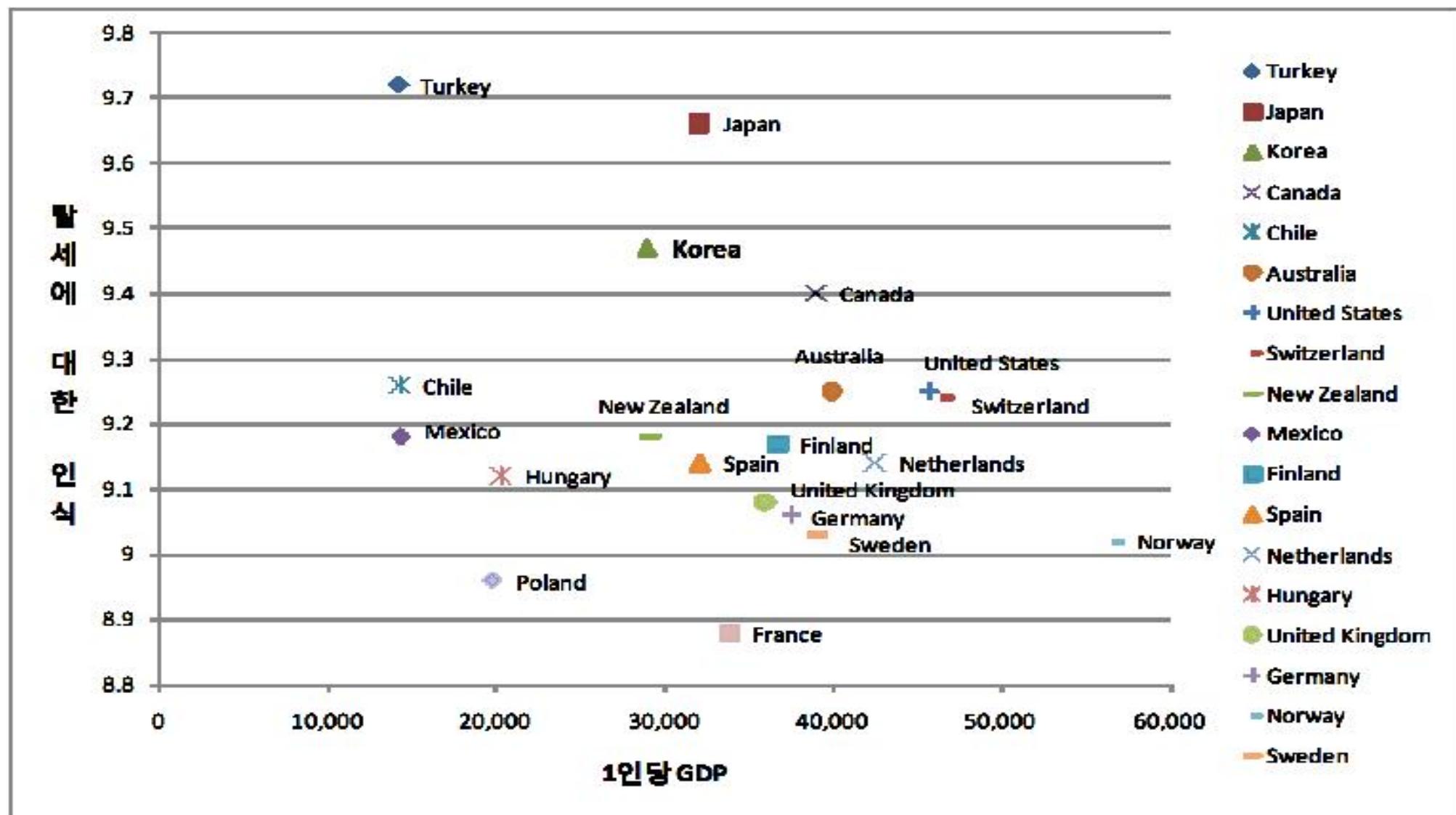
<부표 C-20> 1인당 GDP 대비 분석 :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부표 C-21> 1인당 GDP 대비 분석 : 탈세에 대한 인식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Turkey	9.72	14,218
2	Japan	9.66	32,018
3	Korea	9.47	29,004
4	Canada	9.40	38,989
5	Chile	9.26	14,321
6	Australia	9.25	39,918
6	United States	9.25	45,674
8	Switzerland	9.24	46,479
	평균	9.21	
9	New Zealand	9.18	29,149
9	Mexico	9.18	14,388
11	Finland	9.17	36,664
12	Spain	9.14	32,076
12	Netherlands	9.14	42,478
14	Hungary	9.12	20,325
15	United Kingdom	9.08	35,917
16	Germany	9.06	37,567
17	Sweden	9.03	39,013
18	Norway	9.02	56,648
19	Poland	8.96	19,784
20	France	8.88	33,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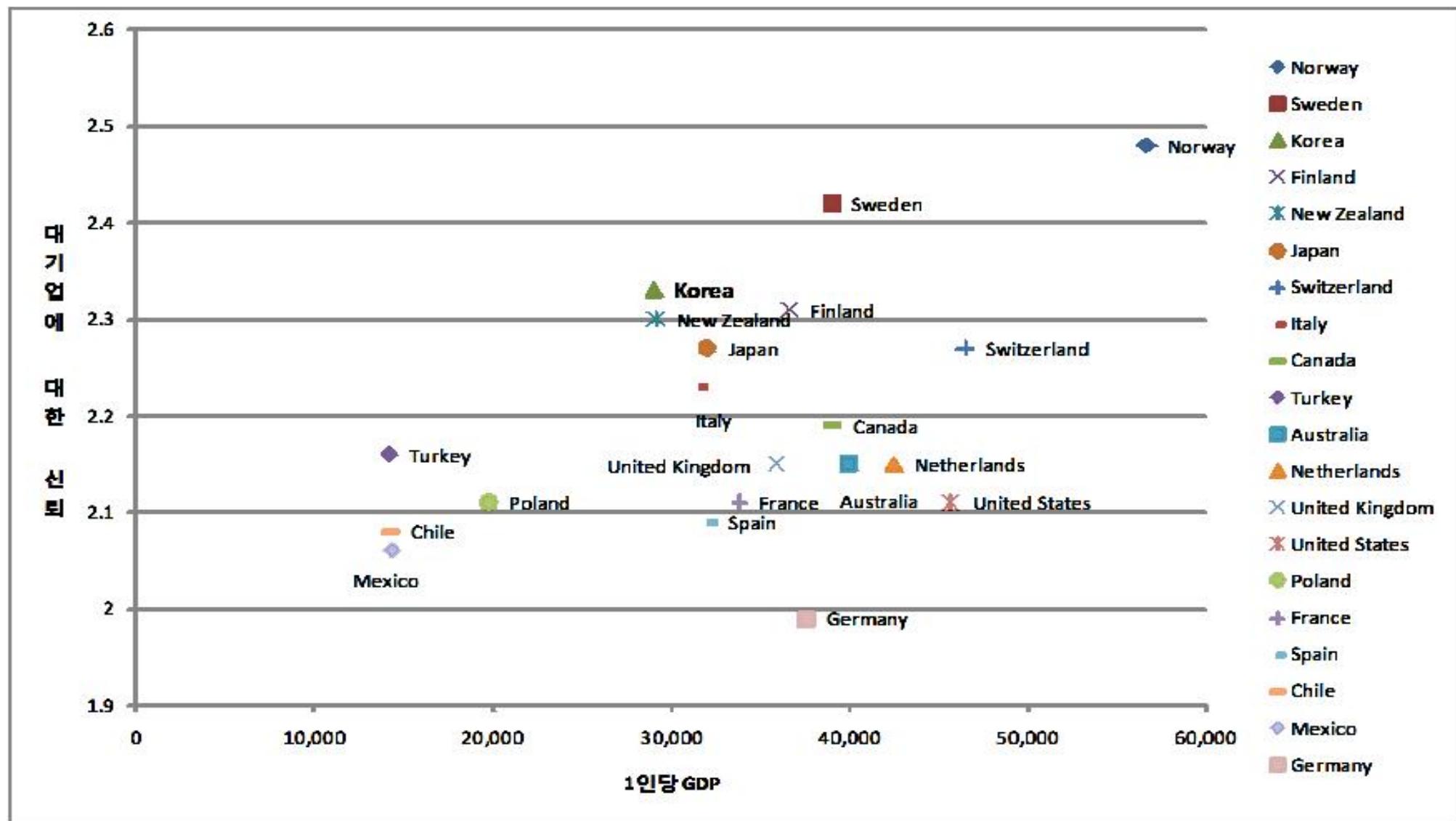
<부표 C-22> 1인당 GDP 대비 분석 : 탈세에 대한 인식



<부표 C-23> 1인당 GDP 대비 분석 :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Norway	2.48	56,648
2	Sweden	2.42	39,013
3	Korea	2.33	29,004
4	Finland	2.31	36,664
5	New Zealand	2.30	29,149
6	Japan	2.27	32,018
6	Switzerland	2.27	46,479
8	Italy	2.23	31,563
	평균	2.20	
9	Canada	2.19	38,989
10	Turkey	2.16	14,218
11	Australia	2.15	39,918
11	Netherlands	2.15	42,478
11	United Kingdom	2.15	35,917
14	United States	2.11	45,674
14	Poland	2.11	19,784
14	France	2.11	33,835
17	Spain	2.09	32,076
18	Chile	2.08	14,321
19	Mexico	2.06	14,388
20	Germany	1.99	37,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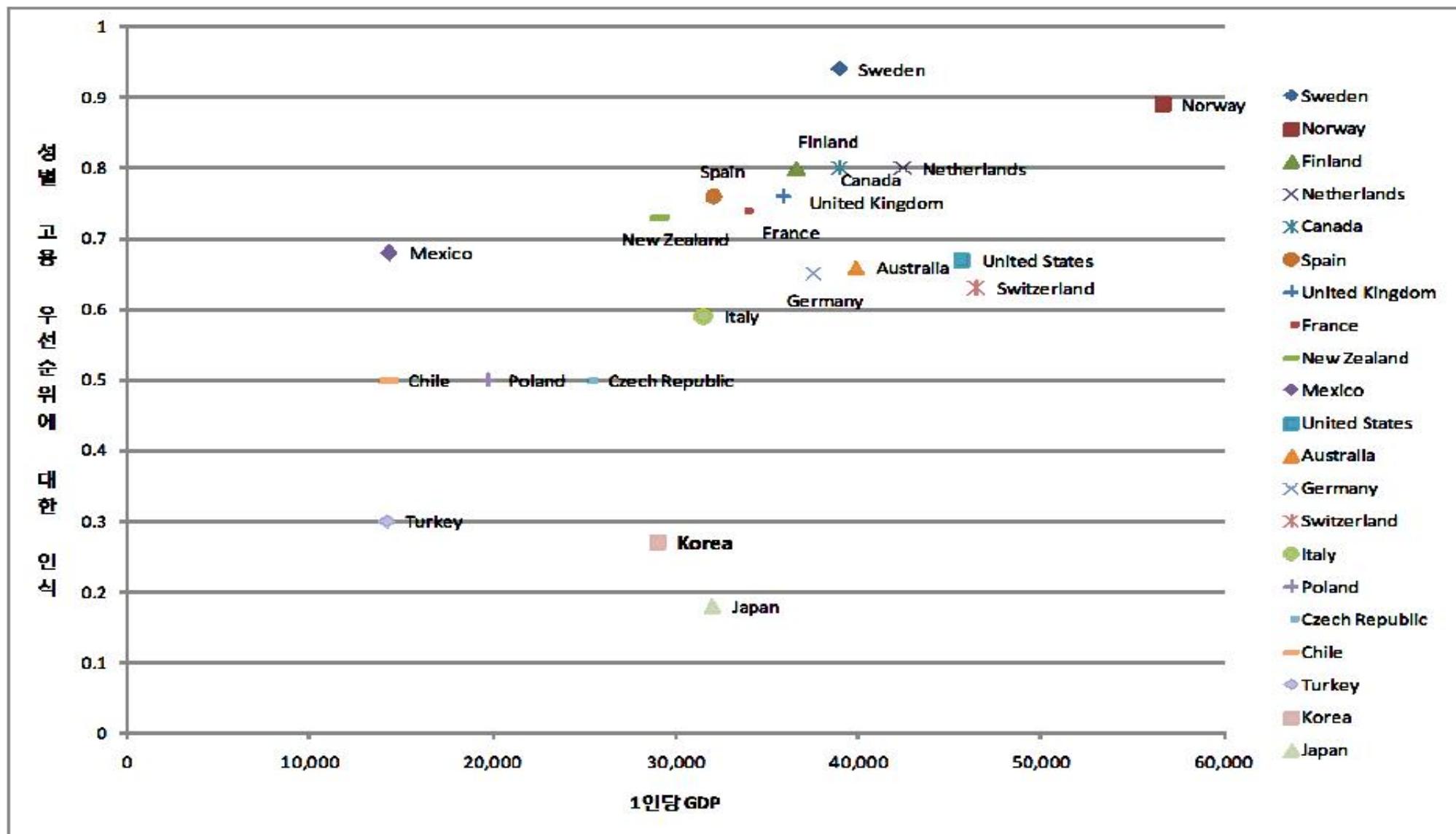
<부표 C-24> 1인당 GDP 대비 분석 :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부표 C-25> 1인당 GDP 대비 분석 : 성별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Sweden	0.94	39,013
2	Norway	0.89	56,648
3	Finland	0.80	36,664
3	Netherlands	0.80	42,478
3	Canada	0.80	38,989
6	Spain	0.76	32,076
6	United Kingdom	0.76	35,917
8	France	0.74	33,835
9	New Zealand	0.73	29,149
10	Mexico	0.68	14,388
11	United States	0.67	45,674
12	Australia	0.66	39,918
13	Germany	0.65	37,567
평균		0.64	
14	Switzerland	0.63	46,479
15	Italy	0.59	31,563
16	Poland	0.50	19,784
16	Czech Republic	0.50	25,299
16	Chile	0.50	14,321
19	Turkey	0.30	14,218
20	Korea	0.27	29,004
21	Japan	0.18	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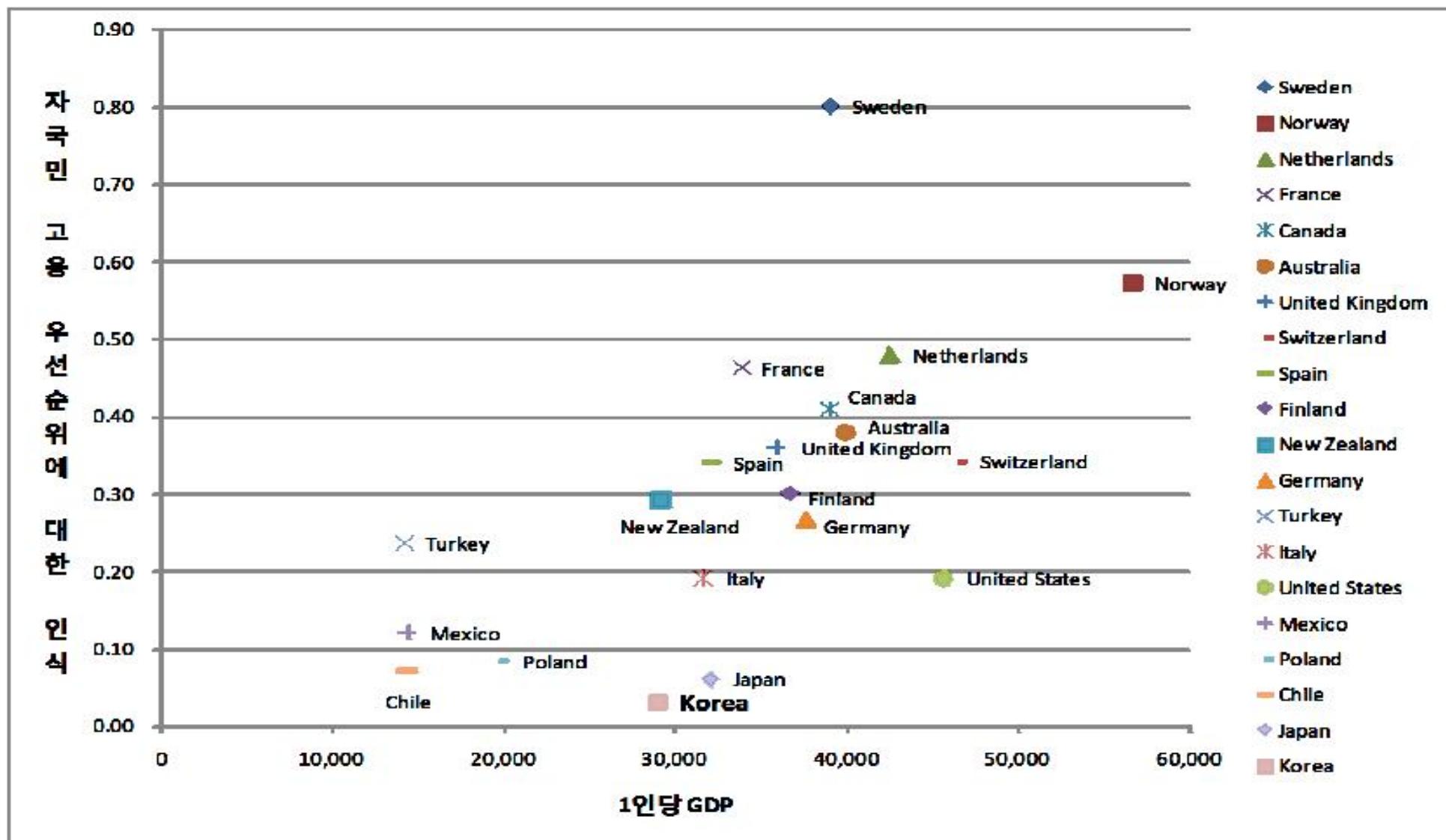
<부표 C-26> 1인당 GDP 대비 분석 : 성별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부표 C-27> 1인당 GDP 대비 분석 :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Sweden	0.80	39,013
2	Norway	0.57	56,648
3	Netherlands	0.48	42,478
4	France	0.46	33,835
5	Canada	0.41	38,989
6	Australia	0.38	39,918
7	United Kingdom	0.36	35,917
8	Switzerland	0.34	46,479
8	Spain	0.34	32,076
10	Finland	0.30	36,664
	평균	0.30	
11	New Zealand	0.29	29,149
12	Germany	0.27	37,567
13	Turkey	0.24	14,218
14	Italy	0.19	31,563
14	United States	0.19	45,674
16	Mexico	0.12	14,388
17	Poland	0.08	19,784
18	Chile	0.07	14,321
19	Japan	0.06	32,018
20	Korea	0.03	29,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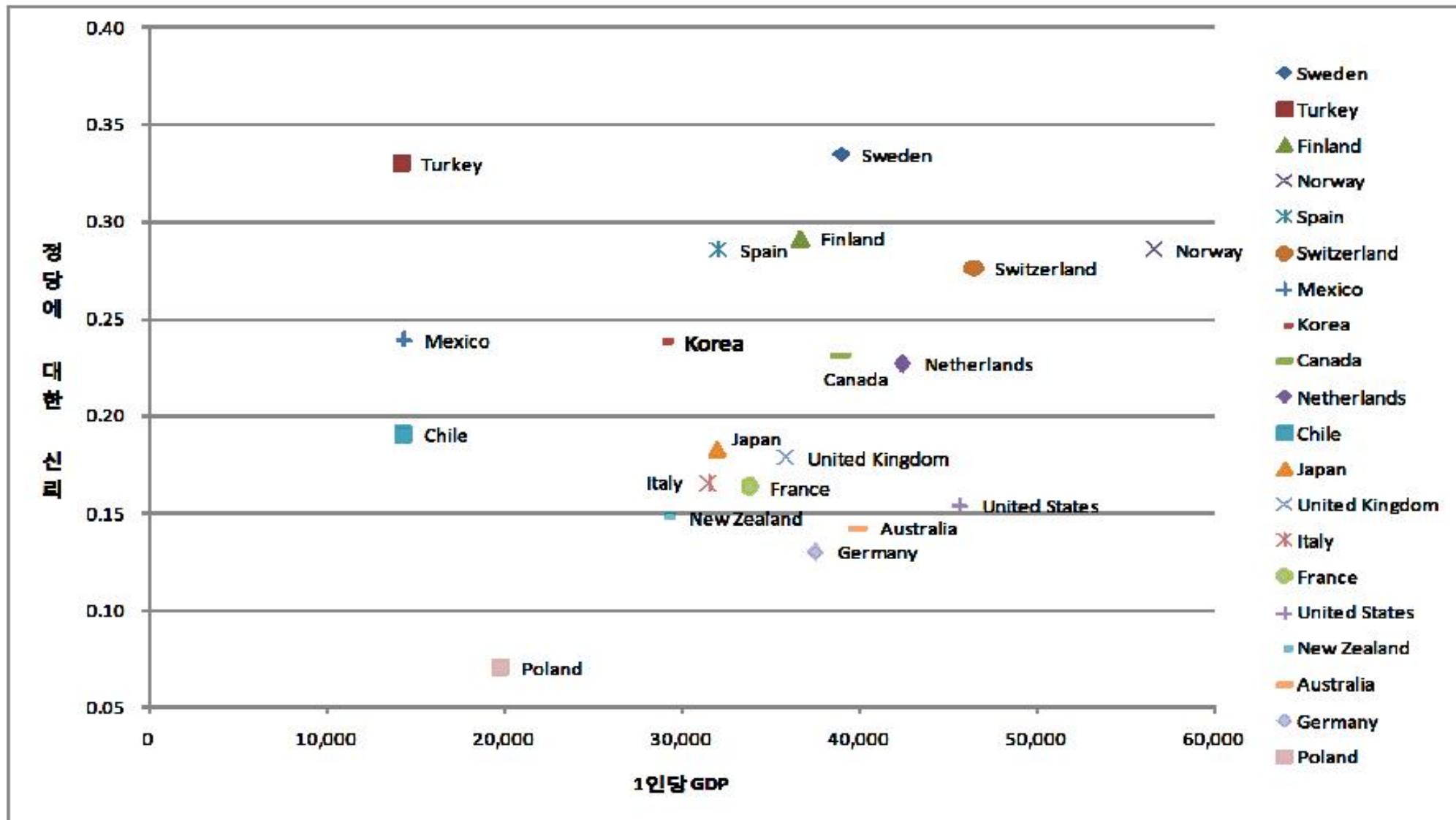
<부표 C-28> 1인당 GDP 대비 분석 : 자국민 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부표 C-29>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당에 대한 신뢰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Sweden	0.33	39,013
1	Turkey	0.33	14,218
3	Finland	0.29	36,664
3	Norway	0.29	56,648
3	Spain	0.29	32,076
6	Switzerland	0.28	46,479
7	Mexico	0.24	14,388
7	Korea	0.24	29,004
9	Canada	0.23	38,989
9	Netherlands	0.23	42,478
평균		0.21	
11	Chile	0.19	14,321
12	Japan	0.18	32,018
12	United Kingdom	0.18	35,917
14	Italy	0.17	31,563
15	France	0.16	33,835
16	United States	0.15	45,674
16	New Zealand	0.15	29,149
18	Australia	0.14	39,918
19	Germany	0.13	37,567
20	Poland	0.07	19,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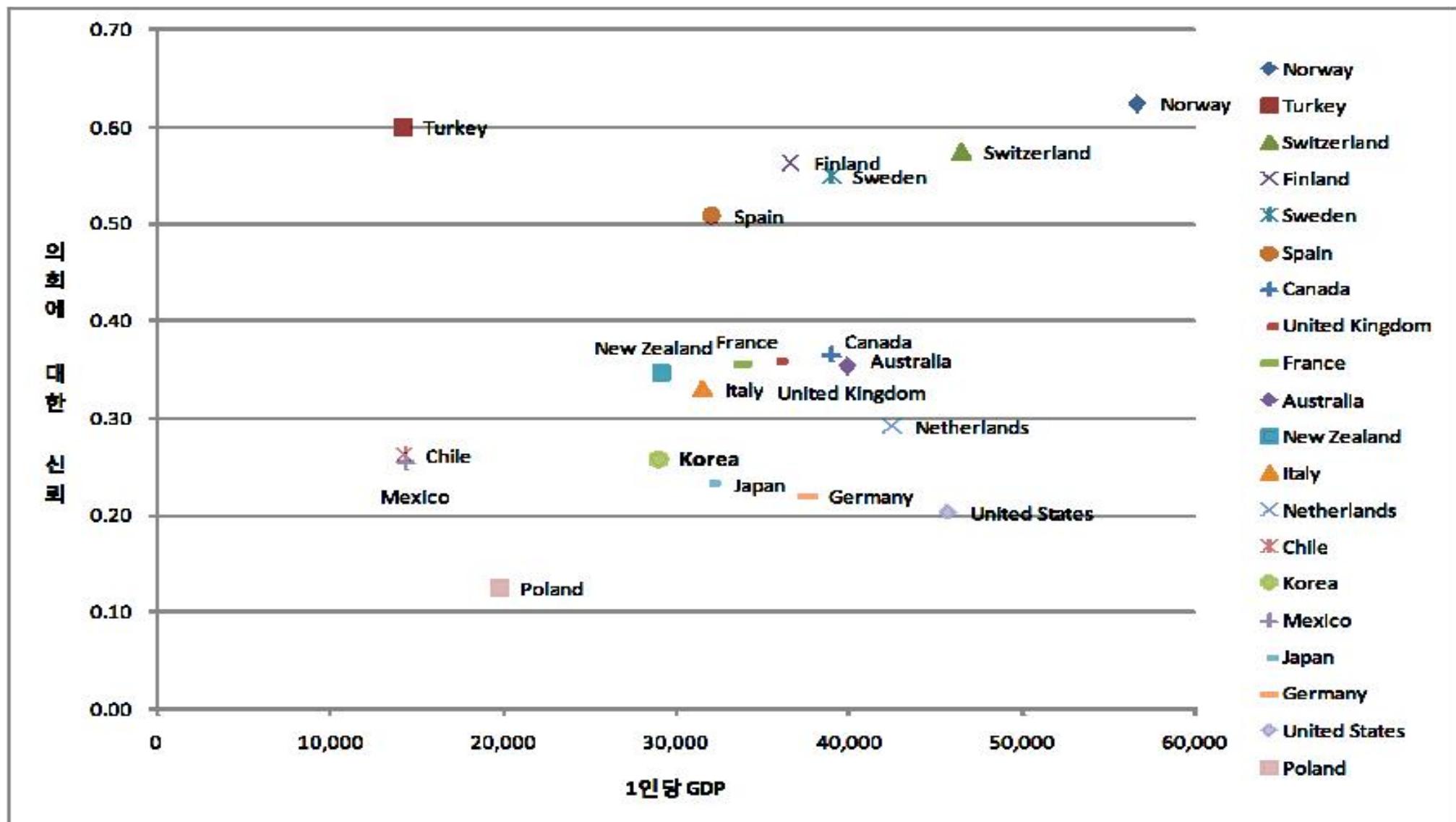
<부표 C-30>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당에 대한 신뢰



<부표 C-31>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의회에 대한 신뢰

순위	국가명	2005~2007	1인당 GDP
1	Norway	0.62	56,648
2	Turkey	0.60	14,218
3	Switzerland	0.57	46,479
4	Finland	0.56	36,664
5	Sweden	0.55	39,013
6	Spain	0.51	32,076
	평균	0.37	
7	Canada	0.37	38,989
8	United Kingdom	0.36	35,917
9	France	0.35	33,835
9	Australia	0.35	39,918
9	New Zealand	0.35	29,149
12	Italy	0.33	31,563
13	Netherlands	0.29	42,478
14	Chile	0.26	14,321
14	Korea	0.26	29,004
16	Mexico	0.25	14,388
17	Japan	0.23	32,018
18	Germany	0.22	37,567
19	United States	0.20	45,674
20	Poland	0.12	19,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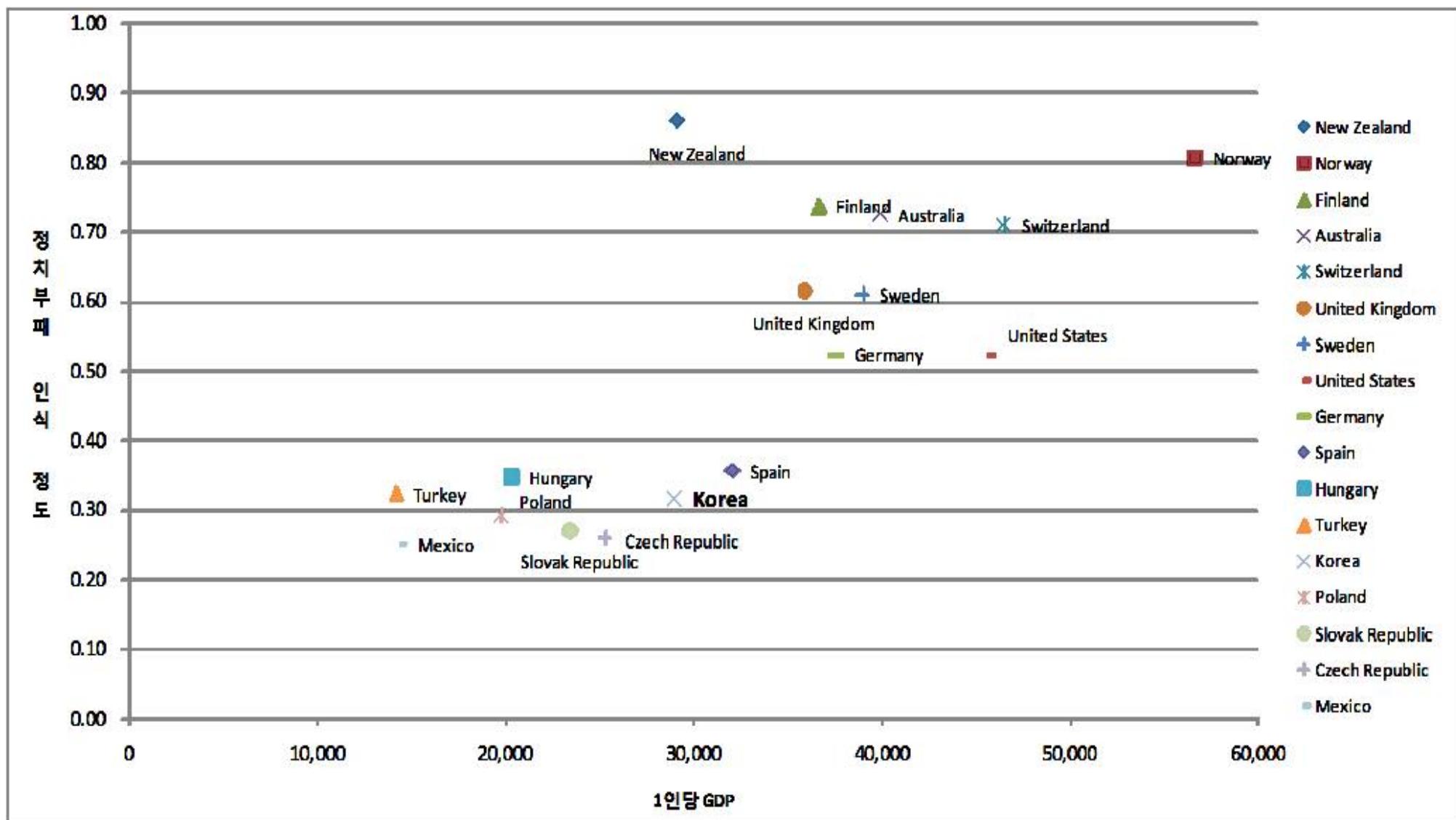
<부표 C-32> 1인당 GDP 대비 분석 : 의회에 대한 신뢰



<부표 C-33>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치부패 인식 정도

순위	국가명	1994-1999	1인당 GDP
1	New Zealand	0.86	29,149
2	Norway	0.81	56,648
3	Finland	0.74	36,664
4	Australia	0.73	39,918
5	Switzerland	0.71	46,479
6	United Kingdom	0.62	35,917
7	Sweden	0.61	39,013
8	United States	0.52	45,674
8	Germany	0.52	37,567
평균		0.50	
10	Spain	0.36	32,076
11	Hungary	0.35	20,325
12	Turkey	0.32	14,218
12	Korea	0.32	29,004
14	Poland	0.29	19,784
15	Slovak Republic	0.27	23,448
16	Czech Republic	0.26	25,299
17	Mexico	0.25	14,388

<부표 C-34> 1인당 GDP 대비 분석 : 정치부패 인식 정도



[부록 D] 공정사회의 제도/상태와 의식 비교 분석 세부내용

- 정치시스템 부패와 정치부패 정도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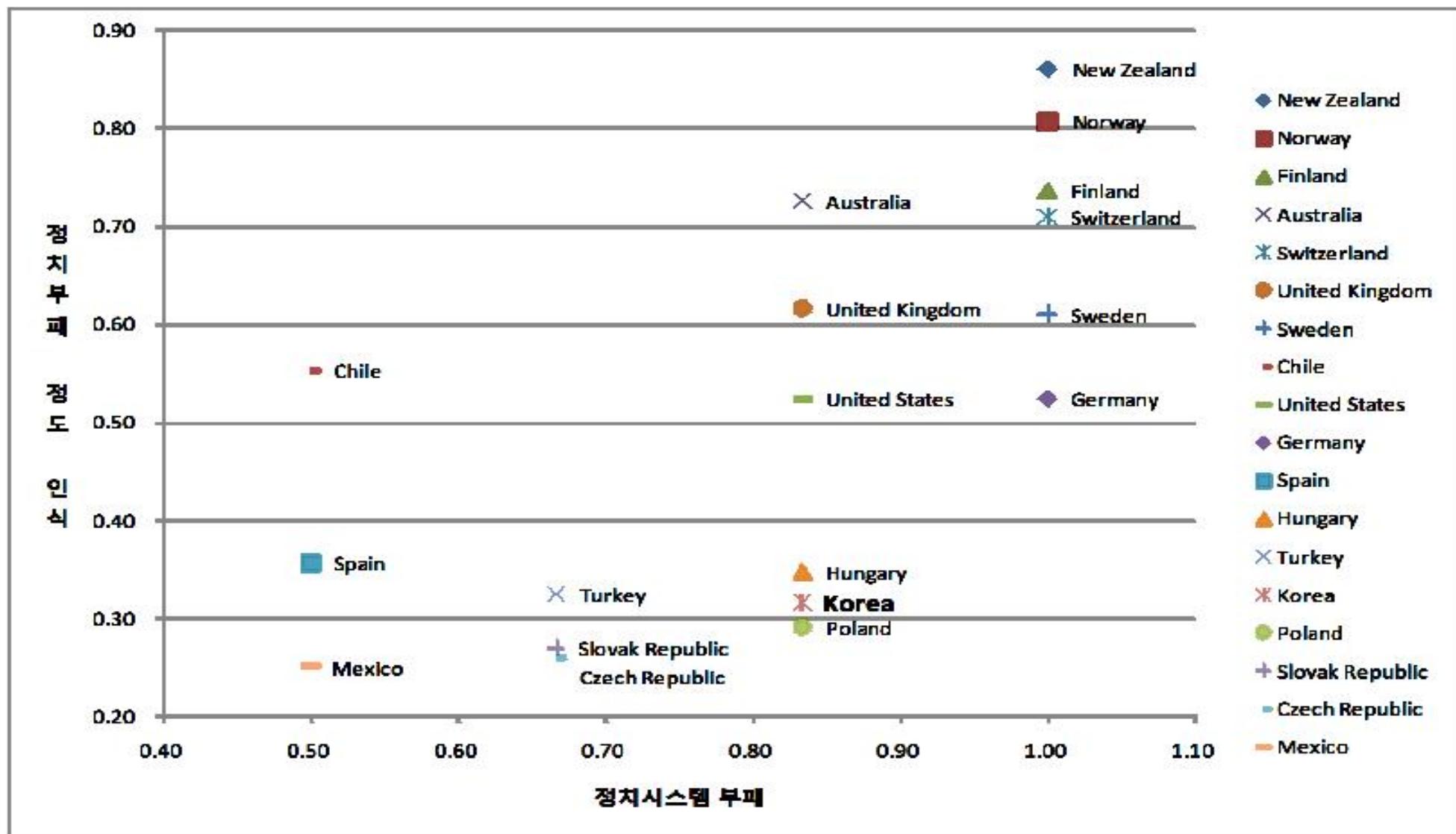
정치시스템 부패 지수는 값이 클수록 공정사회인 것이고

정치부패 인식 정도는 클수록 공정사회인 것임.

<부표 D-1> 정치시스템 부패와 정치부패 정도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정치시스템 부패 (1995)	순위	국가명	정치부패 정도인식 (1994-1999)
1	New Zealand	1.00	1	New Zealand	0.86
1	Norway	1.00	2	Norway	0.81
1	Finland	1.00	3	Finland	0.74
1	Switzerland	1.00	4	Australia	0.73
1	Sweden	1.00	5	Switzerland	0.71
1	Germany	1.00	6	United Kingdom	0.62
7	Australia	0.83	7	Sweden	0.61
7	United Kingdom	0.83	8	Chile	0.55
7	United States	0.83	9	United States	0.52
7	Hungary	0.83	10	Germany	0.52
7	Korea	0.83	11	Spain	0.36
7	Poland	0.83	12	Hungary	0.35
13	Turkey	0.67	13	Turkey	0.32
13	Slovak Republic	0.67	14	Korea	0.32
13	Czech Republic	0.67	15	Poland	0.29
16	Chile	0.50	16	Slovak Republic	0.27
16	Spain	0.50	17	Czech Republic	0.26
16	Mexico	0.50	18	Mexico	0.25

<부표 D-2> 정치시스템 부패와 정치부패 정도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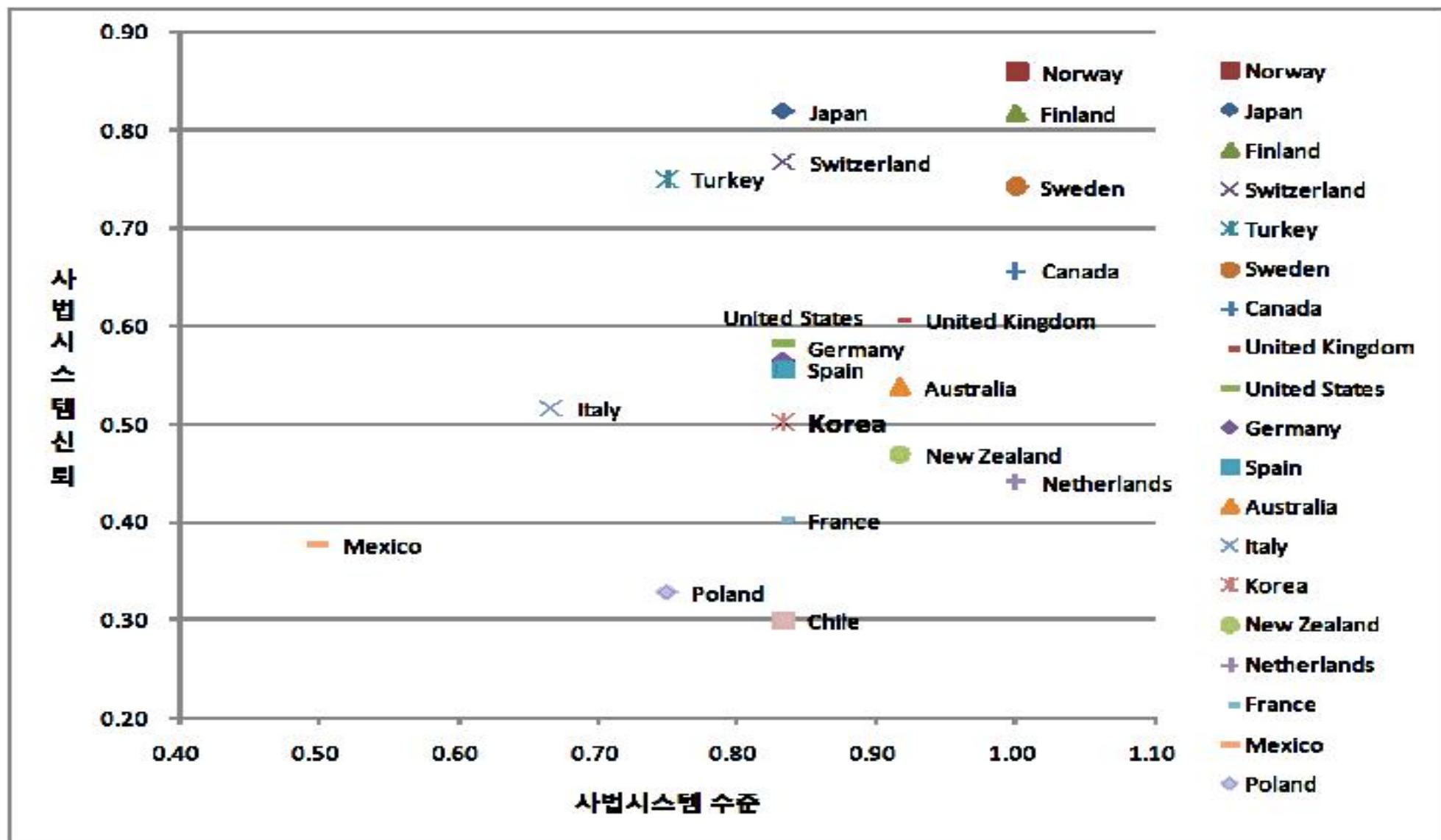


- 사법시스템 수준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비교
 사법시스템 수준 지수는 값이 클수록 공정한 사회인 것이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는 클수록 공정한 사회임.

<부표 D-3> 사법시스템 수준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비교

순위	국가명	사법시스템 수준 (2005)	순위	국가명	사법시스템 신뢰 (2005–2007)
1	Norway	1.00	1	Norway	0.86
1	Finland	1.00	2	Japan	0.82
1	Sweden	1.00	2	Finland	0.82
1	Canada	1.00	4	Switzerland	0.77
1	Netherlands	1.00	5	Turkey	0.75
6	United Kingdom	0.92	6	Sweden	0.74
6	Australia	0.92	7	Canada	0.66
6	New Zealand	0.92	8	United Kingdom	0.61
9	Japan	0.83	9	United States	0.58
9	Switzerland	0.83	10	Germany	0.56
9	United States	0.83	10	Spain	0.56
9	Germany	0.83	12	Australia	0.54
9	Spain	0.83	13	Italy	0.52
9	Korea	0.83	14	Korea	0.50
9	France	0.83	15	New Zealand	0.47
9	Chile	0.83	16	Netherlands	0.44
17	Turkey	0.75	17	France	0.40
17	Poland	0.75	18	Mexico	0.38
19	Italy	0.67	19	Poland	0.33
20	Mexico	0.50	20	Chile	0.30

<부표 D-4> 사법시스템 수준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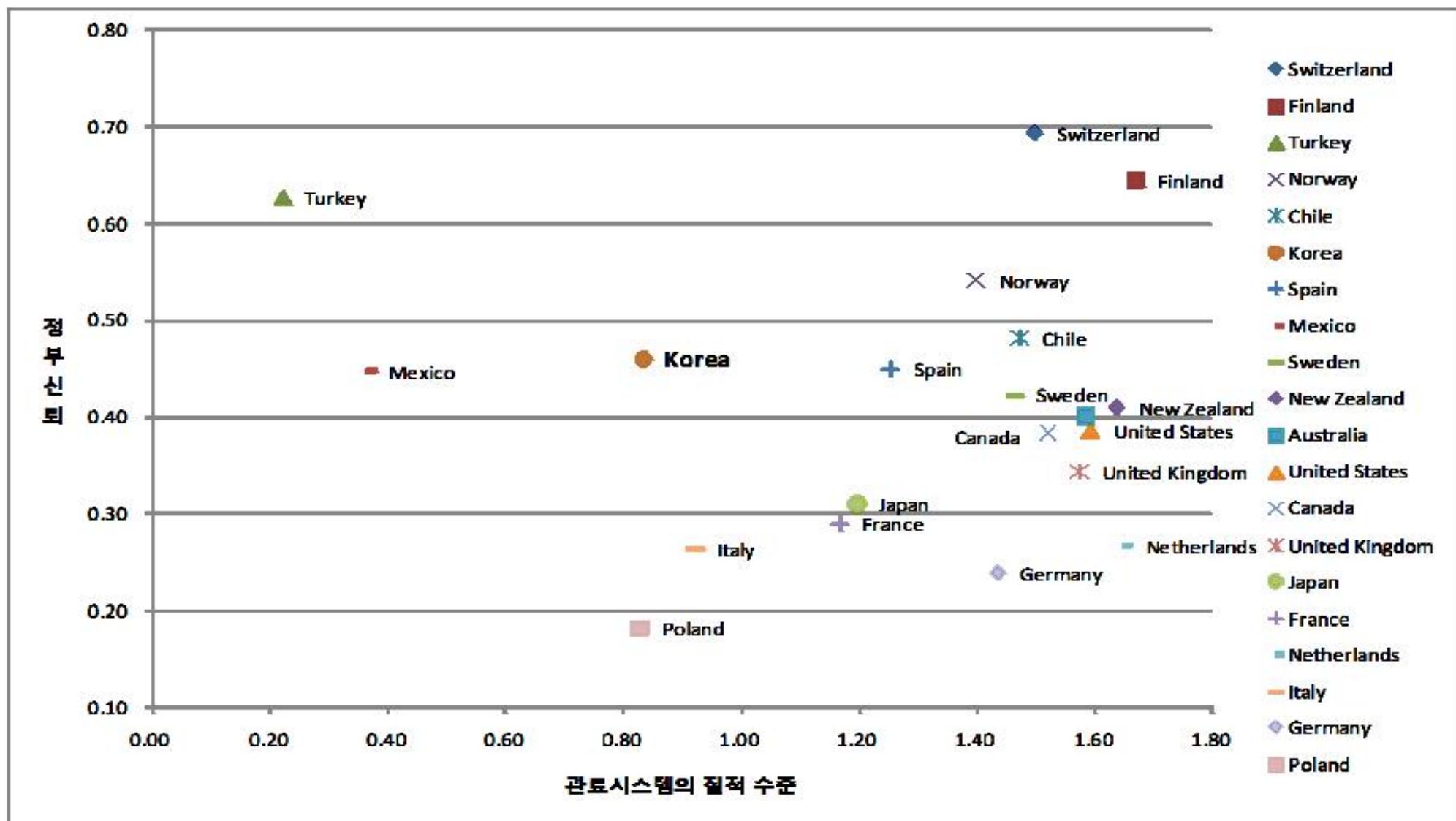
-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비교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사회인 것이고
정부 신뢰 수준은 높을수록 공정한 사회임.

<부표 D-5>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비교

순위	국가명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 (2005)	순위	국가명	정부신뢰 (2005~2007)
1	Finland	1.67	1	Switzerland	0.69
2	Netherlands	1.65	2	Finland	0.64
3	New Zealand	1.64	3	Turkey	0.63
4	United States	1.59	4	Norway	0.54
5	Australia	1.58	5	Chile	0.48
6	United Kingdom	1.57	6	Korea	0.46
7	Canada	1.52	7	Spain	0.45
8	Switzerland	1.50	8	Mexico	0.45
9	Chile	1.47	9	Sweden	0.42
10	Sweden	1.46	10	New Zealand	0.41
11	Germany	1.44	11	Australia	0.40
12	Norway	1.40	12	United States	0.39
13	Spain	1.26	13	Canada	0.38
14	Japan	1.20	14	United Kingdom	0.34
15	France	1.17	15	Japan	0.31
16	Italy	0.92	16	France	0.29
17	Korea	0.84	17	Netherlands	0.27
18	Poland	0.83	18	Italy	0.26
19	Mexico	0.37	19	Germany	0.24
20	Turkey	0.22	20	Poland	0.18

<부표 D-6> 관료시스템 질적 수준과 정부신뢰 비교



-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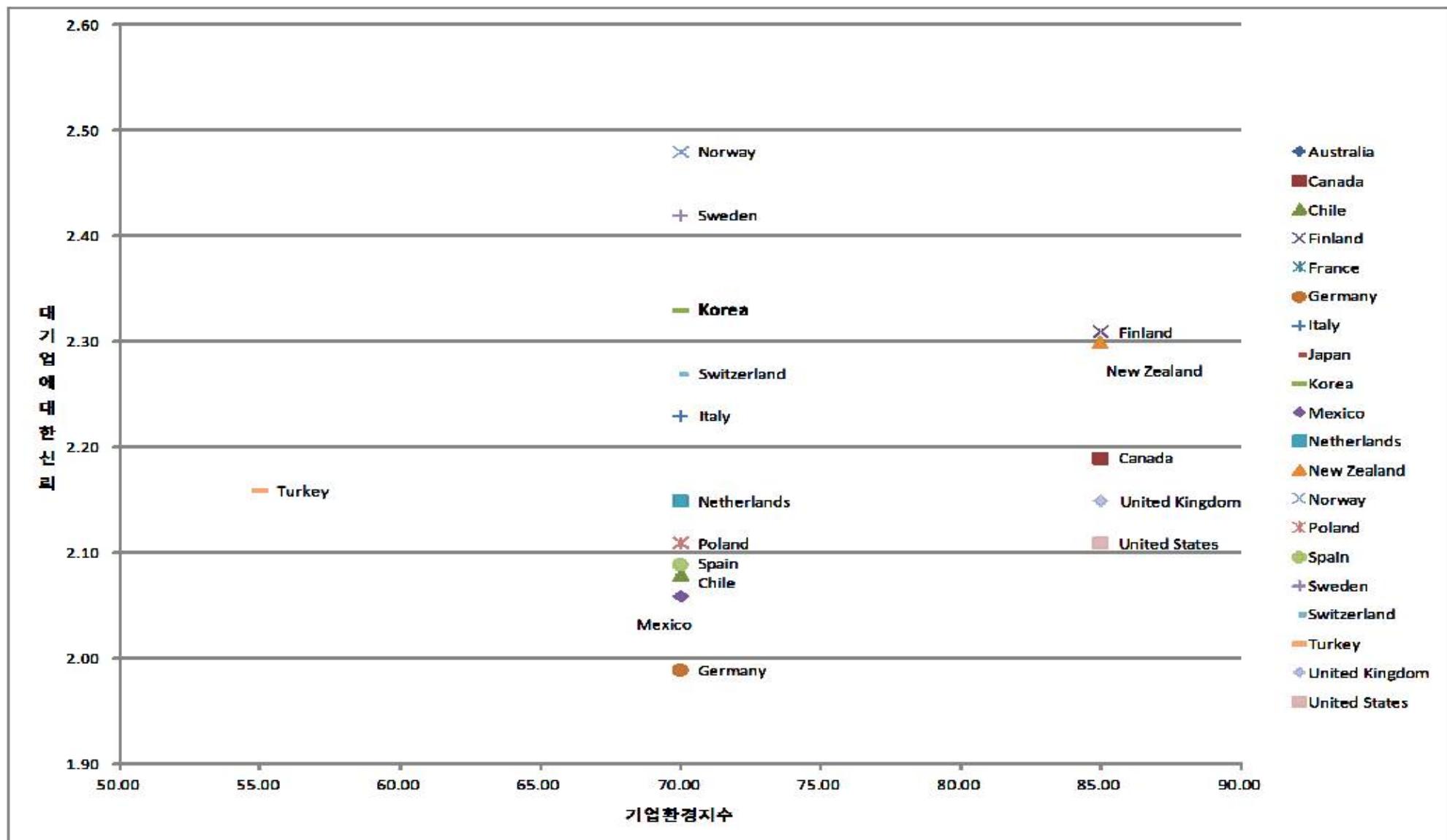
기업환경지수는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이고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부표 D-7>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비교

순위	국가명	기업환경지수 (2005)	순위	국가명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2005~2007)
1	Australia	85.00	1	Norway	2.48
1	Canada	85.00	2	Sweden	2.42
1	Finland	85.00	3	Korea	2.33
1	New Zealand	85.00	4	Finland	2.31
1	United Kingdom	85.00	5	New Zealand	2.30
1	United States	85.00	6	Japan	2.27
평균		70.35	6	Switzerland	2.27
7	France	70.00	8	Italy	2.23
7	Germany	70.00		평균	2.20
7	Italy	70.00	9	Canada	2.19
7	Japan	70.00	10	Turkey	2.16
7	Korea	70.00	11	Australia	2.15
7	Mexico	70.00	11	Netherlands	2.15
7	Netherlands	70.00	11	United Kingdom	2.15
7	Norway	70.00	14	France	2.11
7	Poland	70.00	14	Poland	2.11
7	Spain	70.00	14	United States	2.11
7	Sweden	70.00	17	Spain	2.09
7	Switzerland	70.00	18	Chile	2.08
7	Chile	70.00	19	Mexico	2.06
20	Turkey	55.00	20	Germany	1.99

<부표 D-8> 기업환경지수와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비교



-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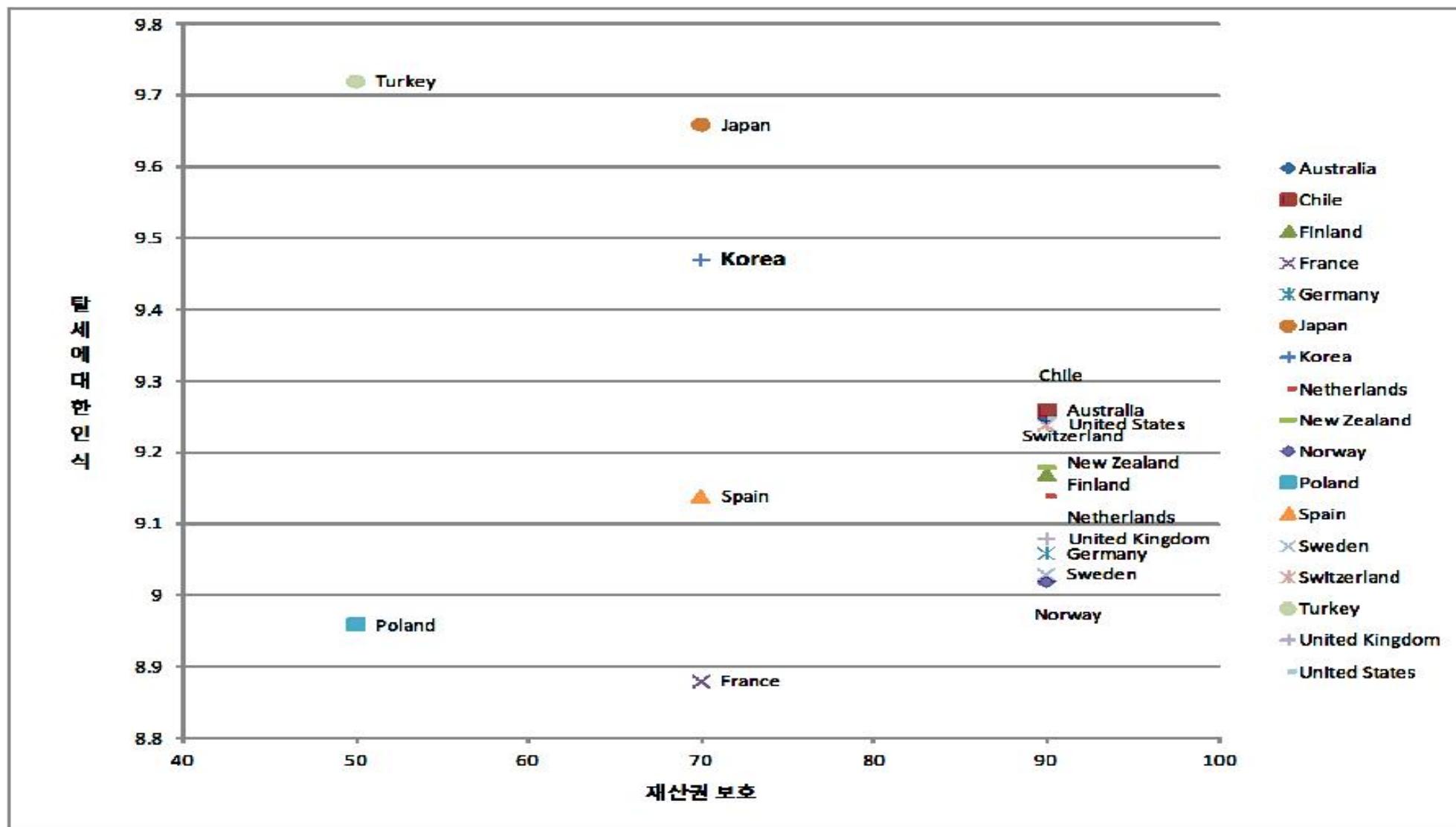
재산권 보호 지수는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이고

탈세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을 의미함.

<부표 D-9>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재산권 보호 (2005)	순위	국가명	탈세에 대한 인식 (2005-2007)
1	Australia	90	1	Turkey	9.72
1	Chile	90	2	Japan	9.66
1	Finland	90	3	Korea	9.47
1	Germany	90	4	Chile	9.26
1	Netherlands	90	5	Australia	9.25
1	New Zealand	90	5	United States	9.25
1	Norway	90	7	Switzerland	9.24
1	Sweden	90		평균	9.21
1	Switzerland	90	8	New Zealand	9.18
1	United Kingdom	90	9	Finland	9.17
1	United States	90	10	Netherlands	9.14
	평균	80.59	10	Spain	9.14
12	France	70	12	United Kingdom	9.08
12	Japan	70	13	Germany	9.06
12	Korea	70	14	Sweden	9.03
12	Spain	70	15	Norway	9.02
16	Poland	50	16	Poland	8.96
16	Turkey	50	17	France	8.88

<부표 D-10> 재산권 보호와 탈세에 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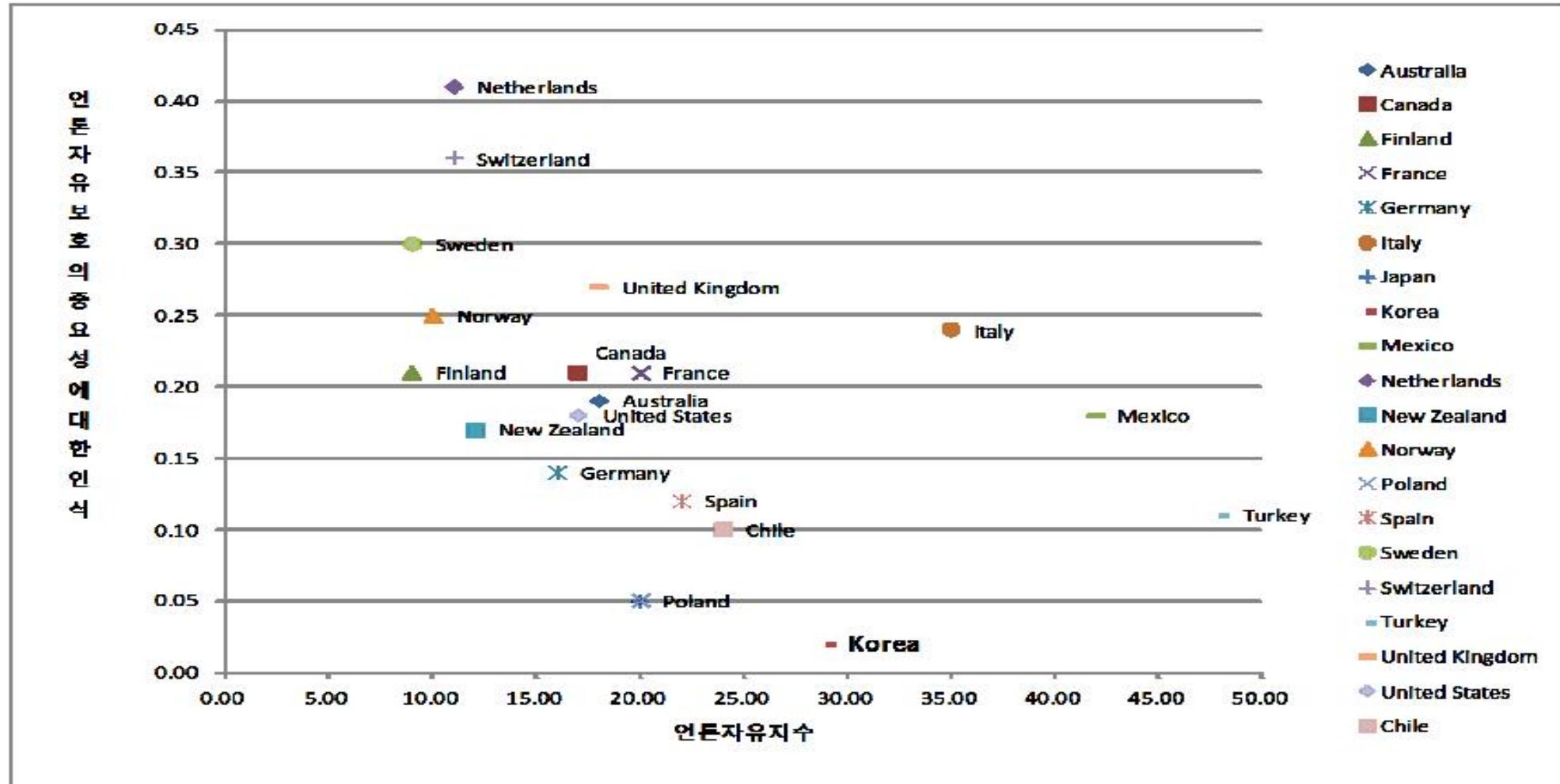


-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언론자유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공정한 것이며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임.

<부표 D-11>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언론자유지수 (2005)	순위	국가명	언론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2005~2007)
1	Finland	9.00	1	Netherlands	0.41
1	Sweden	9.00	2	Switzerland	0.36
3	Norway	10.00	3	Sweden	0.30
4	Netherlands	11.00	4	United Kingdom	0.27
4	Switzerland	11.00	5	Norway	0.25
6	New Zealand	12.00	6	Italy	0.24
7	Germany	16.00	7	Canada	0.21
8	Canada	17.00	7	Finland	0.21
8	United States	17.00	7	France	0.21
10	Australia	18.00	10	Australia	0.19
10	United Kingdom	18.00		평균	0.19
12	France	20.00	11	Mexico	0.18
12	Japan	20.00	11	United States	0.18
12	Poland	20.00	13	New Zealand	0.17
	평균	20.40	14	Germany	0.14
15	Spain	22.00	15	Spain	0.12
16	Chile	24.00	16	Turkey	0.11
17	Korea	29.00	17	Chile	0.10
18	Italy	35.00	18	Japan	0.05
19	Mexico	42.00	18	Poland	0.05
20	Turkey	48.00	20	Korea	0.02

<부표 D-12>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자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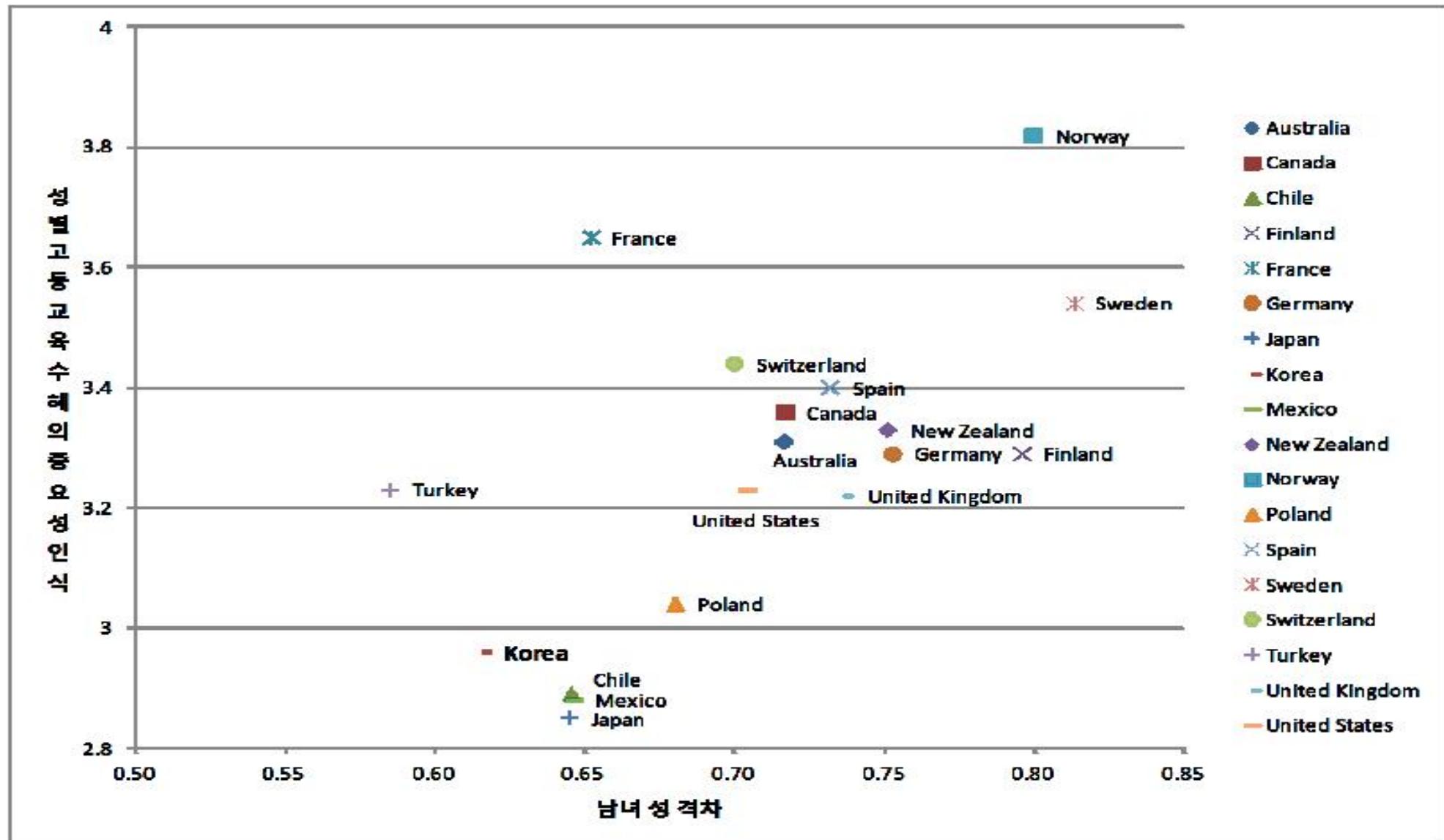
남녀 성 격차는 없이 클수록 공정한 것이며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없이 클수록 공정한 것임

<부표 D-13>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남녀 성 격차 (2005)	순위	국가명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2005~2007)
1	Sweden	0.81	1	Norway	3.82
2	Norway	0.80	2	France	3.65
3	Finland	0.80	3	Sweden	3.54
4	Germany	0.75	4	Switzerland	3.44
5	New Zealand	0.75	5	Spain	3.40
6	United Kingdom	0.74	6	Canada	3.36
7	Spain	0.73	7	New Zealand	3.33
8	Canada	0.72	8	Australia	3.31
9	Australia	0.72	9	Finland	3.29
10	United States	0.70	9	Germany	3.29
11	Switzerland	0.70		평균	3.26
	평균	0.70	11	Turkey	3.23
12	Poland	0.68	11	United States	3.23
13	France	0.65	13	United Kingdom	3.22
14	Mexico	0.65	14	Poland	3.04
15	Chile	0.65	15	Korea	2.96
16	Japan	0.64	16	Chile	2.89
17	Korea	0.62	17	Mexico	2.88
18	Turkey	0.59	18	Japan	2.85

<부표 D-14> 남녀 성 격차와 성별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 남녀 성 격차와 성별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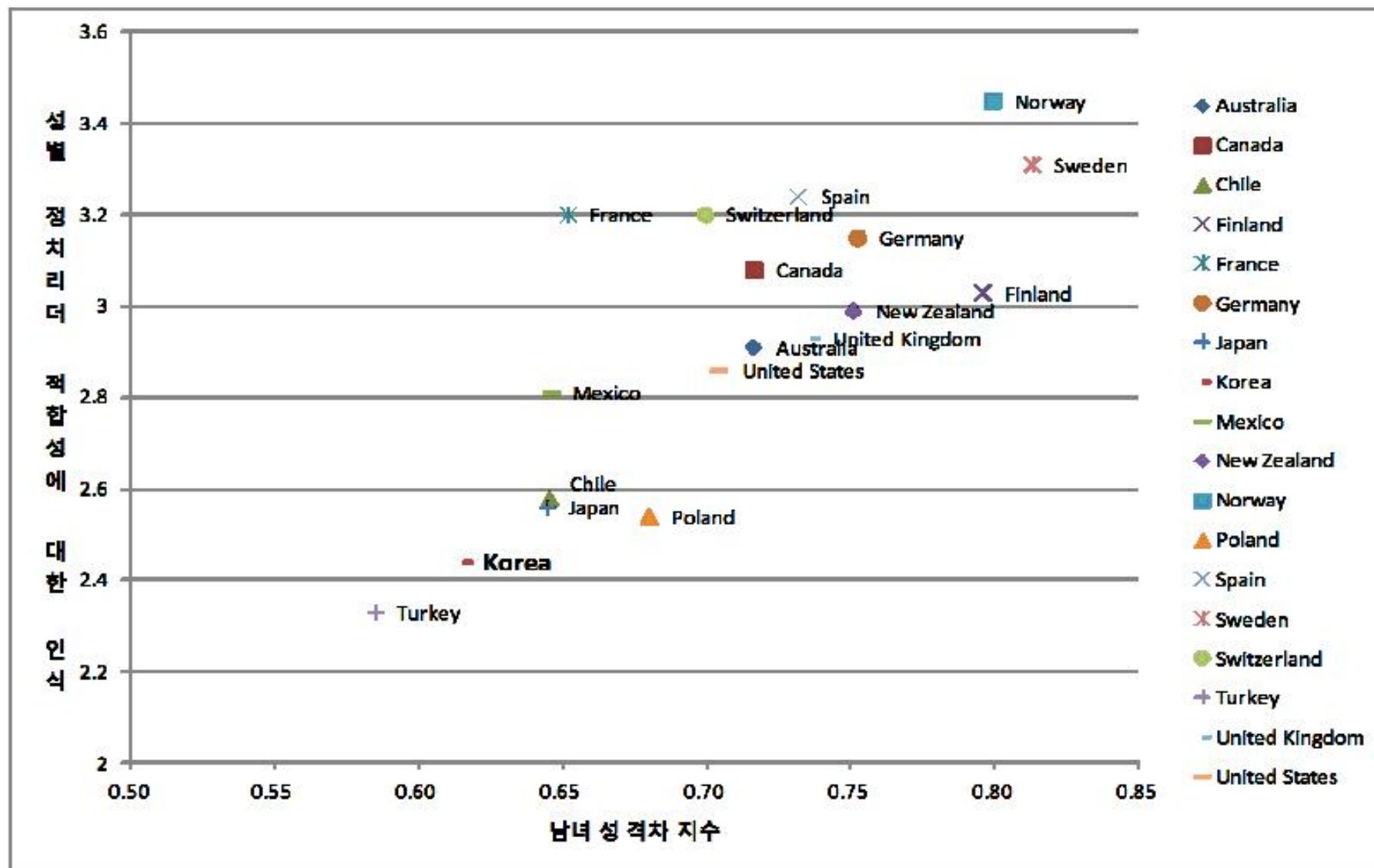
남녀 성 격차는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이며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은 값이 클수록 공정한 것임.

<부표 D-15> 남녀 성 격차와 성별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비교

순위	국가명	남녀 성 격차 (2005)	순위	국가명	성별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2005~2007)
1	Sweden	0.81	1	Norway	3.45
2	Norway	0.80	2	Sweden	3.31
3	Finland	0.80	3	Spain	3.24
4	Germany	0.75	4	Switzerland	3.20
5	New Zealand	0.75	4	France	3.20
6	United Kingdom	0.74	6	Germany	3.15
7	Spain	0.73	7	Canada	3.08
8	Canada	0.72	8	Finland	3.03
9	Australia	0.72	9	New Zealand	2.99
10	United States	0.70	10	United Kingdom	2.93
11	Switzerland	0.70		평균	2.92
	평균	0.70	11	Australia	2.91
12	Poland	0.68	12	United States	2.86
13	France	0.65	13	Mexico	2.81
14	Mexico	0.65	14	Chile	2.58
15	Chile	0.65	15	Japan	2.56
16	Japan	0.64	16	Poland	2.54
17	Korea	0.62	17	Korea	2.44
18	Turkey	0.59	18	Turkey	2.33

<부표 D-16> 남녀 성 격차와 성별 정치리더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비교



[부록 E] 공정사회 의식 총 데이터

- OECD 국가들 중 공정사회 의식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국가만 포함하였으며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은 본 비교에서 제외하였음.

<부표 E-1> 공정사회 의식 총계(2005~2007)

순위	국가명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총계
1	Sweden	0.88	2.53	3.25	4.45	11.11
2	Norway	0.91	2.58	2.98	4.57	11.05
3	Switzerland	0.85	2.87	2.46	4.18	10.37
4	Finland	0.85	2.55	2.59	4.02	10.02
5	Canada	0.60	2.15	2.70	3.86	9.31
6	Australia	0.49	1.94	2.50	3.75	8.68
7	Spain	0.80	1.97	2.54	3.10	8.41
8	United States	0.35	1.82	2.31	3.52	8.00
9	Turkey	0.93	2.44	2.05	2.20	7.62
10	Germany	0.35	1.62	2.32	3.16	7.45
11	Korea	0.50	2.21	1.83	2.65	7.19
12	Mexico	0.49	1.65	2.23	2.57	6.95
13	Chile	0.45	1.71	2.02	2.39	6.57
14	Poland	0.19	1.17	2.00	2.74	6.10

* 총계 순

<부표 E-2> 공정사회 의식 총계(1994~1999)

순위	국가명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총계
1	Sweden	1.34	1.92	3.18	3.32	9.76
2	United States	1.04	1.57	2.52	2.77	7.90
3	Spain	0.92	1.92	2.20	2.58	7.62
4	Chile	1.17	2.06	1.99	2.27	7.49
5	Korea	0.88	2.35	1.74	2.09	7.06
6	Mexico	1.05	1.88	1.44	2.27	6.64
7	Turkey	1.09	2.23	1.06	1.86	6.24

* 총계 순

<부표 E-3> 공정사회 의식 분야별 총계(2005~2007)

순위	국가명	정치공정성	순위	국가명	행정공정성	순위	국가명	경제공정성	순위	국가명	사회공정성
1	Turkey	0.93	1	Switzerland	2.87	1	Sweden	3.25	1	Norway	4.57
2	Norway	0.91	2	Norway	2.58	2	Norway	2.98	2	Sweden	4.45
3	Sweden	0.88	3	Finland	2.55	3	Canada	2.70	3	Switzerland	4.18
4	Finland	0.85	4	Sweden	2.53	4	Finland	2.59	4	Finland	4.02
5	Switzerland	0.85	5	Turkey	2.44	5	Spain	2.54	5	Canada	3.86
6	Spain	0.80	6	Korea	2.21	6	Australia	2.50	6	Australia	3.75
7	Canada	0.60	7	Canada	2.15	7	Switzerland	2.46	7	United States	3.52
8	Korea	0.50	8	Spain	1.97	8	Germany	2.32	8	Germany	3.16
9	Australia	0.49	9	Australia	1.94	9	United States	2.31	9	Spain	3.10
9	Mexico	0.49	10	United States	1.82	10	Mexico	2.23	10	Poland	2.74
11	Chile	0.45	11	Chile	1.71	11	Turkey	2.05	11	Korea	2.65
12	Germany	0.35	12	Mexico	1.65	12	Chile	2.02	12	Mexico	2.57
12	United States	0.35	13	Germany	1.62	13	Poland	2.00	13	Chile	2.39
14	Poland	0.19	14	Poland	1.17	14	Korea	1.83	14	Turkey	2.20

<부표 E-4> 공정사회 의식 분야별 총계(1994~1999)

순위	국가명	정치공정성	순위	국가명	행정공정성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사회공정성	경제공정성
1	Sweden	1.34	1	Korea	2.35	1	Sweden	1	Sweden	3.32	3.18
2	Chile	1.17	2	Turkey	2.23	2	United States	2	United States	2.77	2.52
3	Turkey	1.09	3	Chile	2.06	3	Spain	3	Spain	2.58	2.20
4	Mexico	1.05	4	Sweden	1.92	4	Chile	4	Mexico	2.27	1.99
5	United States	1.04	4	Spain	1.92	5	Korea	5	Chile	2.27	1.74
6	Spain	0.92	6	Mexico	1.88	6	Mexico	6	Korea	2.09	1.44
7	Korea	0.88	7	United States	1.57	7	Turkey	7	Turkey	1.86	1.06

<부표 E-5> 정치공정성 OECD 국가 간 비교

순위	국가명	정치공정성(1990년대)		총계	순위	국가명	정치공정성(2000년대)		총계	변동폭					
		정치행위자 신뢰					정치행위자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1	Norway	0.33	0.69	1.02	1	Turkey	0.33	0.60	0.93	0.16					
2	Mexico	0.35	0.45	0.80	2	Norway	0.29	0.62	0.91	-0.11					
3	Turkey	0.28	0.49	0.77	3	Sweden	0.33	0.55	0.88	0.15					
4	Switzerland	0.28	0.47	0.75	4	Finland	0.29	0.56	0.85	0.41					
5	Sweden	0.28	0.45	0.73	5	Switzerland	0.28	0.57	0.85	0.10					
6	Chile	0.24	0.38	0.62	6	Spain	0.29	0.51	0.80	0.24					
7	Hungary	0.20	0.39	0.59	7	Canada	0.23	0.37	0.60	.					
	평균			0.57	8	United Kingdom	0.18	0.36	0.54	.					
9	Spain	0.19	0.37	0.56		평균			0.54	-0.03					
9	Korea	0.25	0.31	0.56	9	Netherlands	0.23	0.29	0.52	.					
11	Slovak Republic	0.23	0.31	0.54	10	France	0.16	0.35	0.51	.					
12	United States	0.22	0.30	0.52	11	New Zealand	0.15	0.35	0.50	0.29					
13	Poland	0.13	0.35	0.48	11	Korea	0.24	0.26	0.50	-0.06					
14	Australia	0.16	0.31	0.47	11	Italy	0.17	0.33	0.50	.					
15	Japan	0.19	0.26	0.45	14	Australia	0.14	0.35	0.49	0.02					
16	Finland	0.13	0.31	0.44	14	Mexico	0.24	0.25	0.49	-0.31					
17	Germany	0.12	0.23	0.35	16	Chile	0.19	0.26	0.45	-0.17					
17	Czech republic	0.15	0.20	0.35	17	Japan	0.18	0.23	0.41	-0.04					
19	New Zealand	0.06	0.15	0.21	18	Germany	0.13	0.22	0.35	0.00					
					18	United States	0.15	0.20	0.35	-0.17					
					20	Poland	0.07	0.12	0.19	-0.29					

<부표 E-6> 행정공정성 OECD 국가 간 비교

<부표 E-7> 경제공정성 OECD 국가 간 비교

순위	국가명	경제공정성(1990년대)			총계	순위	국가명	경제공정성(2000년대)			총계	변동폭
		세금형평	경제 주체 신뢰	고용				세금형평	경제 주체 신뢰	고용		
		탈세에대한 인식 ¹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자국민고용우선순위에대한 인식 ¹				탈세에대한 인식 ¹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자국민고용우선순위에 대한인식 ¹		
1	Sweden	0.89	0.63	0.74	2.26	1	Sweden	0.90	0.61	0.80	2.31	0.05
2	Norway	0.89	0.63	0.51	2.03	2	Norway	0.90	0.62	0.57	2.09	0.06
3	Australia	0.92	0.61	0.49	2.02	3	Netherlands	0.91	0.54	0.48	1.93	.
4	New Zealand	0.92	0.57	0.51	2.00	4	Canada	0.94	0.55	0.41	1.90	.
5	United States	0.95	0.59	0.31	1.85	5	France	0.89	0.53	0.46	1.88	.
6	Germany	0.89	0.51	0.34	1.74	6	Australia	0.93	0.54	0.38	1.85	-0.17
	평균				1.70	7	Switzerland	0.92	0.57	0.34	1.83	0.15
8	Switzerland	0.90	0.56	0.22	1.68	8	United Kingdom	0.91	0.54	0.36	1.81	.
8	Finland	0.91	0.59	0.18	1.68	9	Finland	0.92	0.58	0.30	1.80	0.12
10	Spain	0.93	0.57	0.13	1.63	10	New Zealand	0.92	0.58	0.29	1.79	-0.21
11	Japan	0.96	0.56	0.10	1.62		평균				1.78	0.08
12	Chile	0.91	0.54	0.09	1.54	12	Spain	0.91	0.52	0.34	1.77	0.14
13	Poland	0.90	0.58	0.05	1.53	13	Turkey	0.97	0.54	0.24	1.75	.
14	Korea	0.94	0.53	0.03	1.50	14	Germany	0.91	0.50	0.27	1.68	-0.06
15	Hungary	0.92	0.51	0.05	1.48	15	United States	0.93	0.53	0.19	1.65	-0.20
16	Czech republic	0.87	0.55	0.03	1.45	16	Japan	0.97	0.57	0.06	1.60	-0.02
17	Slovak Republic	0.86	0.53	0.04	1.43	17	Mexico	0.92	0.52	0.12	1.56	0.18
18	Mexico	0.87	0.51	0.00	1.38	18	Korea	0.95	0.58	0.03	1.56	0.06
						19	Chile	0.93	0.52	0.07	1.52	-0.02
						20	Poland	0.90	0.53	0.08	1.51	-0.02

<부표 E-8> 사회공정성 OECD 국가 간 비교

순위	국가명	사회공정성(1990년대)					총계	순위	국가명	사회공정성(2000년대)					총계	변동폭
		성격차		언론 자유 보장	인권보호	사회구 성원신 뢰				성격차		언론 자유 보장	인권보호	사회구성 원신뢰		
		고등교육 수혜의중 요성	정치리더 의적합성	언론자유 보호의중 요성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인에 대한 신뢰				고등교육 수혜의중 요성	정치리더 의적합성	언론자유 보호의중 요성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인에 대한 신뢰		
1	Sweden	0.92	0.83	0.22	0.76	0.60	3.33	1	Norway	0.96	0.86	0.25	0.92	0.74	3.73	
2	United States	0.77	0.69	0.21	0.74	0.36	2.77	2	Sweden	0.89	0.83	0.30	0.85	0.68	3.55	0.22
3	Spain	0.76	0.72	0.17	0.63	0.30	2.58	3	Switzerland	0.86	0.80	0.36	0.90	0.51	3.43	
	평균						2.44	4	Finland	0.82	0.76	0.21	0.93	0.59	3.31	
4	Japan	0.66	0.59	0.06	0.62	0.42	2.35	5	Canada	0.84	0.77	0.21	0.86	0.42	3.10	
5	Chile	0.77	0.65	0.08	0.57	0.21	2.28	6	Australia	0.83	0.73	0.19	0.76	0.48	2.99	
6	Mexico	0.69	0.64	0.16	0.47	0.31	2.27	7	United States	0.81	0.72	0.18	0.64	0.40	2.75	-0.02
7	Korea	0.67	0.57	0.08	0.47	0.30	2.09		평균						2.80	0.49
8	Turkey	0.73	0.57	0.24	0.27	0.05	1.86	9	Germany	0.82	0.79	0.14	0.66	0.34	2.75	
								10	Spain	0.85	0.81	0.12	0.63	0.20	2.61	0.03
								12	Korea	0.74	0.61	0.02	0.70	0.30	2.37	0.28
								11	Poland	0.76	0.64	0.05	0.65	0.19	2.29	
								13	Mexico	0.72	0.70	0.18	0.55	0.16	2.31	0.04
								14	Chile	0.72	0.65	0.10	0.48	0.12	2.07	-0.21
								15	Turkey	0.81	0.58	0.11	0.38	0.05	1.93	0.07

<부표 E-9> 공정사회 의식 총합 2005~2007 wave

국가명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정치행위자 신뢰		정부 역할	기관신뢰		세금형평	경제 주체 신뢰	고용 우선순위		성격차		언론 자유 보장	인권보호	사회구성원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외국인 노동자 규제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	탈세에 대한 인식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성별 고용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자국민 고용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정치리더의 적합성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인에 대한 신뢰
Norway	0.29	0.62	0.57	0.86	0.54	0.61	9.02	2.48	0.89	0.57	3.82	3.45	0.25	0.92	0.74
France	0.16	0.35	.	0.40	0.29	0.54	8.88	2.11	0.74	0.46	3.65	3.20	0.21	.	0.19
Sweden	0.33	0.55	0.71	0.74	0.42	0.66	9.03	2.42	0.94	0.80	3.54	3.31	0.30	0.85	0.68
Switzerland	0.28	0.57	0.73	0.77	0.69	0.68	9.24	2.27	0.63	0.34	3.44	3.20	0.36	0.90	0.51
Spain	0.29	0.51	0.55	0.56	0.45	0.41	9.14	2.09	0.76	0.34	3.40	3.24	0.12	0.63	0.2
Canada	0.23	0.37	0.55	0.66	0.38	0.56	9.40	2.19	0.80	0.41	3.36	3.08	0.21	0.86	0.42
New Zealand	0.15	0.35	0.47	0.47	0.41	0.44	9.18	2.30	0.73	0.29	3.33	2.99	0.17	0.82	0.51
Australia	0.14	0.35	0.6	0.54	0.4	0.40	9.25	2.15	0.66	0.38	3.31	2.91	0.19	0.76	0.48
Finland	0.29	0.56	0.49	0.82	0.64	0.60	9.17	2.31	0.8	0.3	3.29	3.03	0.21	0.93	0.59
Germany	0.13	0.22	0.5	0.56	0.24	0.32	9.06	1.99	0.65	0.27	3.29	3.15	0.14	0.66	0.34
United States	0.15	0.20	0.42	0.58	0.39	0.43	9.25	2.11	0.67	0.19	3.23	2.86	0.18	0.64	0.40
Turkey	0.33	0.60	0.51	0.75	0.63	0.55	9.72	2.16	0.30	0.24	3.23	2.33	0.11	0.38	0.05
United Kingdom	0.18	0.36	.	0.61	0.34	0.46	9.08	2.15	0.76	0.36	3.22	2.93	0.27	.	0.30
Poland	0.07	0.12	0.48	0.33	0.18	0.18	8.96	2.11	0.50	0.08	3.04	2.54	0.05	0.65	0.19
Korea	0.24	0.26	0.62	0.50	0.46	0.63	9.47	2.33	0.27	0.03	2.96	2.44	0.02	0.70	0.30

국가명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정치행위자 신뢰		정부 역할	기관신뢰		세금형평	경제 주체 신뢰	고용 우선순위		성격차		언론 자유 보장	인권보호	사회구성원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외국인 노동자 규제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	탈세에 대한 인식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성별 고용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자국민 고용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정치리더의 적합성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인에 대한 신뢰
Chile	0.19	0.26	0.57	0.30	0.48	0.36	9.26	2.08	0.50	0.07	2.89	2.58	0.10	0.48	0.12
Mexico	0.24	0.25	0.57	0.38	0.45	0.25	9.18	2.06	0.68	0.12	2.88	2.81	0.18	0.55	0.16
Japan	0.18	0.23	0.45	0.82	0.31	0.33	9.66	2.27	0.18	0.06	2.85	2.56	0.05	0.53	0.39
Hungary	9.12
Czech Republic	0.50	0.48	.
Netherlands	0.23	0.29		0.44	0.27	0.31	9.14	2.15	0.80	0.48	.	.	0.41	.	.
Slovak Republic
Italy	0.17	0.33	0.57	0.52	0.26	0.41		2.23	0.59	0.19	.	.	0.24	0.57	0.29

<부표 E-10> 공정사회 의식 총합 2005~2007 wave(변환¹)

국가명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정치 행위자 신뢰		정부 역할	기관신뢰		세금 형평	경제 주체 신뢰	고용 우선순위		성격차		언론 자유 보장	인권보호	사회구성 원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외국인 노동자 규제 ¹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	탈세에 대한 인식 ¹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성별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¹	자국민과 용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¹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¹	정치리더의 적합성 ¹	언론자유 보호의 중요성 ¹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인에 대한 신뢰
Norway	0.29	0.62	0.57	0.86	0.54	0.61	0.90	0.62	0.89	0.57	0.96	0.86	0.25	0.92	0.74
France	0.16	0.35	.	0.40	0.29	0.54	0.89	0.53	0.74	0.46	0.91	0.80	0.21	.	0.19
Sweden	0.33	0.55	0.71	0.74	0.42	0.66	0.9	0.61	0.94	0.8	0.89	0.83	0.3	0.85	0.68
Switzerland	0.28	0.57	0.73	0.77	0.69	0.68	0.92	0.57	0.63	0.34	0.86	0.80	0.36	0.90	0.51
Spain	0.29	0.51	0.55	0.56	0.45	0.41	0.91	0.52	0.76	0.34	0.85	0.81	0.12	0.63	0.20
Canada	0.23	0.37	0.55	0.66	0.38	0.56	0.94	0.55	0.8	0.41	0.84	0.77	0.21	0.86	0.42
New Zealand	0.15	0.35	0.47	0.47	0.41	0.44	0.92	0.58	0.73	0.29	0.83	0.75	0.17	0.82	0.51
Australia	0.14	0.35	0.60	0.54	0.40	0.40	0.93	0.54	0.66	0.38	0.83	0.73	0.19	0.76	0.48
Finland	0.29	0.56	0.49	0.82	0.64	0.60	0.92	0.58	0.80	0.30	0.82	0.76	0.21	0.93	0.59
Germany	0.13	0.22	0.50	0.56	0.24	0.32	0.91	0.50	0.65	0.27	0.82	0.79	0.14	0.66	0.34
United States	0.15	0.20	0.42	0.58	0.39	0.43	0.93	0.53	0.67	0.19	0.81	0.72	0.18	0.64	0.40
Turkey	0.33	0.60	0.51	0.75	0.63	0.55	0.97	0.54	0.3	0.24	0.81	0.58	0.11	0.38	0.05
United	0.18	0.36	.	0.61	0.34	0.46	0.91	0.54	0.76	0.36	0.81	0.73	0.27	.	0.30

국가명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정치행위자 신뢰		정부 역할	기관신뢰			세금 형평	경제 주체 신뢰	고용 우선순위		성격차		언론 자유 보장	인권보호	사회구성 원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외국인노동자규제 ¹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	탈세에 대한 인식 ¹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성별고용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¹	자국민고용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¹	고등교육 수혜의 중요성 ¹	정치리더 의적합성 ¹	언론자유 보호의 중요성 ¹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인에 대한 신뢰
Kingdom															
Poland	0.07	0.12	0.48	0.33	0.18	0.18	0.90	0.53	0.50	0.08	0.76	0.64	0.05	0.65	0.19
Korea	0.24	0.26	0.62	0.5	0.46	0.63	0.95	0.58	0.27	0.03	0.74	0.61	0.02	0.70	0.30
Chile	0.19	0.26	0.57	0.3	0.48	0.36	0.93	0.52	0.50	0.07	0.72	0.65	0.10	0.48	0.12
Mexico	0.24	0.25	0.57	0.38	0.45	0.25	0.92	0.52	0.68	0.12	0.72	0.70	0.18	0.55	0.16
Japan	0.18	0.23	0.45	0.82	0.31	0.33	0.97	0.57	0.18	0.06	0.71	0.64	0.05	0.53	0.39
Hungary	0.91
Czech Republic	0.50	0.48	.
Netherlands	0.23	0.29		0.44	0.27	0.31	0.91	0.54	0.8	0.48	.	.	0.41	.	.
Slovak Republic
Italy	0.17	0.33	0.57	0.52	0.26	0.41	.	0.56	0.59	0.19	.	.	0.24	0.57	0.29

<부표 E-11> 공정사회 의식 총합 1994~1999 wave

국가명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정치행위자 신뢰		정부 역할	기관신뢰		세금형 평	경제 주체 신뢰	고용 우선순위	성격차		언론 자유 보장	관용	사회구 성원신 뢰		
	정당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외국인 노동자 규제 ¹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	탈세에 대한 인식 ¹	주요기업에 대한 인식 ¹	성별고용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¹	자국민고용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¹	고등교육수혜의 중요성 ¹	정치리더의 적합성 ¹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 ¹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인에 대한 신뢰
Norway	0.33	0.69	0.47	0.7	0.66	0.51	8.85	2.52	0.8	0.51	3.60	3.41	0.16	.	0.65
France
Sweden	0.28	0.45	0.42	0.63	0.42	0.45	8.87	2.52	0.92	0.74	3.66	3.33	0.22	75.7	0.60
Switzerland	0.28	0.47	0.58	0.68	0.54	0.50	9.01	2.25	0.55	0.22	.	.	0.31	.	0.37
Spain	0.19	0.37	0.72	0.47	0.31	0.42	9.3	2.27	0.57	0.13	3.04	2.89	0.17	62.68	0.30
Canada	0.77	0.39	.	.	.	81.88	.
New Zealand	0.06	0.15	0.59	0.47	0.16	0.29	9.17	2.29	0.64	0.51	3.22	2.95	0.14	.	0.49
Australia	0.16	0.31	0.57	0.35	0.26	0.38	9.17	2.42	0.67	0.49	3.13	2.90	0.26	.	0.40
Finland	0.13	0.31	0.4	0.69	0.32	0.34	9.10	2.37	0.77	0.18	3.45	3.20	0.14	.	0.49
Germany	0.12	0.23	0.56	0.44	0.21	0.45	8.85	2.04	0.64	0.34	3.26	3.13	0.16	.	0.33
United States	0.22	0.30	0.38	0.37	0.31	0.51	9.47	2.35	0.68	0.31	3.07	2.76	0.21	73.85	0.36
Turkey	0.28	0.49	0.41	0.68	0.47	0.67	.	2.16	0.35	0.17	2.93	2.27	0.24	26.59	0.05
United Kingdom	0.68	0.39	.	.	0.17	.	0.30
Poland	0.13	0.35	0.34	0.53	0.39	0.35	9.01	2.33	0.41	0.05	.	2.21	0.04	.	0.18
Korea	0.25	0.31	0.54	0.59	0.44	0.78	9.41	2.12	0.24	0.03	2.68	2.27	0.08	47.08	0.30
Chile	0.24	0.38	0.62	0.45	0.53	0.46	9.12	2.16	0.45	0.09	3.06	2.60	0.08	56.70	0.21
Mexico	0.35	0.45	0.62	0.41	0.42	0.43	8.71	2.04	0.06	0	2.77	2.56	0.16	47.05	0.31
Japan	0.19	0.26	0.5	0.8	0.32	0.38	9.61	2.25	0.19	0.10	2.64	2.35	0.06	62.30	0.42
Czech republic	0.15	0.2	0.38	0.29	0.31	0.39	8.72	2.20	0.45	0.03	.	2.43	0.12	56.70	0.29
Hungary	0.20	0.39	0.26	0.52	0.44	0.52	9.18	2.05	0.33	0.05	.	2.41	0.03	.	0.23
Slovak Republic	0.23	0.31	0.34	0.42	0.43	0.40	8.55	2.13	0.33	0.04	.	2.12	0.05	.	0.27

<부표 E-12> 공정사회 의식 총합 1994~1999 wave(변환¹)

국가명	정치공정성		행정공정성			경제공정성			사회공정성						
	정치행위자 신뢰		정부 역할	기관신뢰			세금형 평	경제 주체 신뢰	고용 우선순위		성격차		언론 자유 보장	관용	사회구 성원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외국인 노동자 규제 ¹	사법시스템	정부	행정서비스	탈세에 대한 인식 ¹	주요기업에 대한 신뢰	성별고용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¹	자국민고용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¹	고등교육수혜의 중요성 ¹	정치리더의 중요성 ¹	언론자유보호의 중요성 ¹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인에 대한 신뢰
Norway	0.33	0.69	0.47	0.70	0.66	0.51	0.89	0.63	0.80	0.51	0.90	0.85	0.16		0.65
France
Sweden	0.28	0.45	0.42	0.63	0.42	0.45	0.89	0.63	0.92	0.74	0.92	0.83	0.22	0.76	0.60
Switzerland	0.28	0.47	0.58	0.68	0.54	0.50	0.90	0.56	0.55	0.22	.	.	0.31		0.37
Spain	0.19	0.37	0.72	0.47	0.31	0.42	0.93	0.57	0.57	0.13	0.76	0.72	0.17	0.63	0.30
Canada	0.77	0.39	.	.	.	0.82	.
New Zealand	0.06	0.15	0.59	0.47	0.16	0.29	0.92	0.57	0.64	0.51	0.81	0.74	0.14		0.49
Australia	0.16	0.31	0.57	0.35	0.26	0.38	0.92	0.61	0.67	0.49	0.78	0.73	0.26		0.40
Finland	0.13	0.31	0.40	0.69	0.32	0.34	0.91	0.59	0.77	0.18	0.86	0.80	0.14		0.49
Germany	0.12	0.23	0.56	0.44	0.21	0.45	0.89	0.51	0.64	0.34	0.82	0.78	0.16		0.33
United States	0.22	0.30	0.38	0.37	0.31	0.51	0.95	0.59	0.68	0.31	0.77	0.69	0.21	0.74	0.36
Turkey	0.28	0.49	0.41	0.68	0.47	0.67	.	0.54	0.35	0.17	0.73	0.57	0.24	0.27	0.05
United Kingdom	0.68	0.39	.	.	0.17		0.30

